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분석
- 요약 -

2006. 11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목 차

2007년도 예산안 분석

제1부 총괄 분석

2007년도 재정규모 및 재정건전성 / 5

I. 2007년도 예산안 개요 및 총괄 평가	7
II. 경제전망	19
III. 재정운용기조 및 재정건전성 분석	24

2007년도 자원배분 분석 / 35

I. 자원배분 총괄 분석	37
II. 사회 분야 자원배분 분석	43
III. 경제 분야 자원배분 분석	47
IV. 교육 분야 자원배분 분석	51
V. 국방 분야 자원배분 분석	54
VI. 일반행정 및 기타 분야 자원배분 분석	57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 61

I. 세입예산안 분석	63
II. 예산총칙 등 분석	66

제2부 중점 분석

I. 프로그램예산제도 도입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75
II. 재정 성과에 따른 2007년도 예산안 분석	79
III. 저출산·고령사회대책 관련 재정분석	82
IV.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관련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86
V. 임대형(BTL) 민간투자사업의 분석과 개선방안	89
VI.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94
VII. 한국철도공사의 적자분석과 개선과제	100
VIII. 핵심인력 양성사업	104
IX. 전자정부사업 예산안 분석	107

제3부 분야별 분석

사 회 / 115

I. 보건복지재정과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운용의 과제	117
II. 보건복지 분야 재정분석	125
III. 노동 분야 재정분석	133
IV. 여성가족부 소관 재정분석	143
V. 환경 분야 재정분석	149
VI. 문화·관광 분야 재정분석	155

교 육 / 161

I. 교육 분야 재정분석	163
II. 산학협력지원 예산안 분석	171

경 제 / 177

I. 농림해양수산 분야 재정분석	179
II. 산업·중소기업 분야 재정분석	187
III. 수송·교통 및 지역개발 분야 재정분석	192
IV. 하천관리 및 홍수예보 사업 예산안 분석	197
V.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예산안 분석	201
VI. R&D 분야 재정분석	204
VII. 정보화 분야 재정분석	208

국 방 / 213

I. 국방 분야 재정분석	215
---------------------	-----

일반행정 및 기타 / 221

I. 통일·외교 분야 재정분석	223
II.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재정분석	229
III. 일반공공행정 분야 재정분석	237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분석

제1부 총론

I.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249
II. 수입 및 지출 계획	252
III. 분야별 운용 계획	254

제2부 경제 분야

I. 공적자금상환 관련 기금	261
II. 정부보증 관련 기금	268
III. 외국환평형기금	270
IV. 복권기금	275

제3부 산업 분야

I. 농림해양수산 관련 기금	281
II. 전력산업기반기금	285
III. 국민주택기금	289
IV. 과학기술진흥기금	292
V. 정보통신진흥기금	296

제4부 사회 분야

I. 국민연금기금	301
II. 특수직역 관련 연금기금	307
III. 국민건강증진기금	312
IV.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315
V. 문화·관광 관련 기금	318

제5부 행정 분야

I. 군인복지기금	323
II. 보훈기금	326
III. 남북협력기금	328
IV. 국제교류기금	331
V. 청소년육성기금	333

2007년도 예산안 분석

제1부 총괄 분석

2007년도 재정규모 및 재정건전성

I. 2007년도 예산안 개요 및 총괄 평가

1. 예산안 규모

가. 총지출규모

- 정부가 제출한 2007년도 예산안의 총 지출규모는 2006 예산 대비 6.4% 증가한 238.5조원이며 이는 정부가 전망하는 2007년도 잠정 경상 GDP 906.3조원의 26.3%에 해당함

[표 1] 총지출 규모

(단위: 조원)

	2006예산 ²⁾	2007예산안	증감률(%)
■ 총 지 출 ¹⁾	224.1	238.5	6.4
예 산	153.7	164.7	7.2
(일반회계 총계)	(148.9)	(158.0)	(6.1)
(특별회계 총계)	(57.3) ³⁾	(44.3)	-22.6
	(43.2) ⁴⁾		2.5
기 금	70.4	73.8	4.9
(사회보장지출)	(15.2)	(17.5)	(15.8)

주: 1) 예산·기금의 지출에서 정부내부지출 및 채무원금상환(보전지출)을 제외.

2) 이하 2006예산은 추경예산 기준.

3) 2006년 추경예산기준(특별회계·기금 정비 전 기준).

4) 특별회계 기금의 정비를 전제로 할 경우의 2006년 예산 및 2007년 예산안 증가율.
자료: 기획예산처.

나. 세입전망

□ 내년도 총수입은 2006 예산 대비 7.0% 증가한 251.8조원으로 전망됨

[표 2] 세입전망

(단위: 조원)

	2006예산	2007예산안	증감률(%)
■ 총 수 입	235.3	251.8	7.0
예 산	155.8	167.3	7.4
(국세)	(135.3)	(148.1)	(9.4) ¹⁾
기 금	79.5	84.4	6.2
(사회보장수입)	(41.2)	(44.5)	(8.2)

주: 1) 2006 전망 대비로는 7.3% 증가.

자료: 기획예산처.

다. 재정수지

□ 2007년도 예산안에 기초한 통합재정수지는 GDP대비 1.5% 흑자,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대상수지는 GDP대비 1.5%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

[표 3] 재정수지

(단위: 조원)

	2006예산	2007예산안
통합재정수지 (GDP대비, %)	-0.9 (-0.1) ¹⁾	13.3 (1.5)
관리대상수지 (GDP대비, %)	-14.9 (-1.7)	-13.7 (-1.5)
국가채무 (GDP대비, %)	283.5 (33.4)	302.9 (33.4)
일반회계 국채	9.3	8.7

주: 1) 재해추경(2.2조원) 결과 적자가 되었으나, 결산시 흑자 전환 가능성.

자료: 기획예산처.

2. 자원배분

가. 16개 분야별 자원배분

□ 2007년도 평균예산안 증가율 6.4% 보다 더 크게 증가한 분야

- 사회복지 11.4%, 일반공공행정 10.2%, 국방 7.9%, 교육 7.4%

□ 평균수준의 증가율을 나타낸 분야

- 과학기술 6.5%, 환경보호 6.4%

[표 4] 16개 분야별 자원배분 현황

(단위: 억원, %)

	분야	2006	2007	증감액	증감율
사회	사회복지	505,153	562,926	57,773	11.4
	보건	55,108	55,488	380	0.7
	문화및관광	27,972	28,693	721	2.6
	환경보호	37,927	40,337	2,410	6.4
	소 계	626,160	687,444	61,284	9.8
교육	교육	287,650	308,890	21,240	7.4
경제	수송및교통	152,862	155,439	2,577	1.7
	지역개발	31,374	26,792	-4,582	-14.6
	농림해양수산	155,121	159,254	4,133	2.7
	산업·중소기업	123,955	125,085	1,130	0.9
	통신	61,125	62,323	1,198	2.0
	과학기술	29,476	31,188	1,712	5.8
	소 계	553,913	560,081	6,168	1.1
국방	국방	222,906	240,485	17,579	7.9
일반행정 및기타	일반공공행정	388,821	428,668	39,847	10.2
	공공질서및안전	110,383	108,976	-1,407	-1.3
	통일·외교	25,514	24,489	-1,025	-4.0
	예비비	25,498	26,000	502	2.0
	소 계	550,216	588,133	37,917	6.9
합 계		2,241,082	2,385,033	143,951	6.4

주: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한 순계기준임.

자료: 기획예산처,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평균이하의 증가율을 기록한 분야

- 농림해양수산 2.7%, 문화관광 2.6%, 통신, 예비비 등이 2.0%대의 증가율
- 수송 및 교통, 산업·중소기업, 보건 분야가 2%이하의 낮은 증가율

□ 2006년도 예산보다 감소한 분야

- 지역개발 분야 14.6%, 통일·외교 분야 4.0%,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3% 각각 감소

나. 기타 분야

□ R&D 분야 10.5%, 균형발전특별회계 6.3%, 정보화 및 통신 분야 2.6% 증가

[표 5] 기타 분야별 자원배분안

(단위: 조원, %)

	2006	2007(안)	증감액	증감률(%)
1. R&D	8.9	9.8	0.9	10.5
2. 수송·교통·지역개발 (2006 재해추경 제외시)	18.4	18.2	-0.2	-1.4
(공공부문 건설투자)	(48.7)	(52.3)	(3.6)	(7.4)
3. 균형발전(균특)	6.3	6.7	0.4	6.3
4. 정보화 및 통신	7.6	7.8	0.2	2.6

주: 1. 분야별 자원배분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순계 기준.

2. 공공부문 건설투자에는 BTL, BTO, 공기업 투자 등 포함.

자료: 기획예산처,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3. 2007년도 예산안 총괄 평가

가. 대내·외 환경 변화와 재정의 과제

- 대외적으로는 세계화·개방화에 따른 세계 각국의 경쟁이 더욱 가속화 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경제의 세계시장으로의 편입은 더욱 심화됨
- 대내적으로는 외환위기 이후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성장률과 성장잠재력의 저하현상, 경제구조의 양극화가 심화, 국가의 경쟁력 저하현상, 저출산 고령화 문제 등이 해결을 기다리고 있음

나. 경제 전망

- 정부는 내년도 실질경제성장률을 4.6%(경상 성장률 6.7%)로 전망하고 2007년도 예산안을 편성함
- 국회예산정책처(NABO)는 2007년도 실질경제성장률을 2006년도 추정치 4.8%보다 0.5%p 감소한 4.3%로 전망

다. 재정규모

(1) 2007년 예산안의 총지출 및 수입규모

- 예산·기금을 포함한 2007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규모는 238.5조원으로 2006년도 예산 224.1조원 보다 6.4%증가(본예산 기준 7.5%)한 것이며 2007년도 예상 GDP 906.3조원의 26.3%의 수준
- 국회예산정책처는 2007년도의 실질GDP성장률을 4.3%로 전망하고 있으며

경상성장률을 5.8%로 예측하고 있어 2007년도 예산안은 2006년도 예산에 비해 실질규모가 확대

- 정부는 2007년도 총세입이 2006년도 예산 235.3조원 보다 7.0% 증가한 251.8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
- 국회예산정책처는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한 총수입도 정부보다 4.1조원 적은 247.7조원으로 전망

(2) 세입규모와 국민부담

- 정부는 2007년도의 조세부담률을 2006년도의 예상조세부담률 20.7% 보다 0.1%p 감소한 20.6%로 전망. 이와 같은 정부의 2007년도 조세부담률 전망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조세부담률 전망과 거의 일치
- 국민부담률은 2007년도 예산안 상 26.4%로 2000년대 이후 상승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국민부담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은 임금소득의 상승, 사회보장보험료의 인상, 가입자 수의 증가 등에 기인
- 우리나라의 조세부담율과 국민부담률은 다른 나라에 비하여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3) 재정의 범위와 재정규모의 국제 비교

- 정부는 재정의 범위를 IMF가 제시한 일반정부(General Government)를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범위를 둘러싸고는 여러 가지 이론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통일적인 기준의 설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

- OECD에서는 지방정부를 포괄하는 일반정부의 재정규모를 나타내는 국제통계를 발표하고 있는데 2005년도의 경우 우리나라의 일반정부재정규모는 GDP의 27.3% 수준으로 전체 OECD국가(평균)에서 가장 낮은 수준

(4) 재정운용 기초

- 국회예산정책처는 2007년도 예산안의 재정규모와 수지를 분석한 결과 내년도의 정부의 재정운용기조가 확장기조인 것으로 평가
- 분석결과에 따르면 2007년도의 확장적 재량정책 기조는 경기대응의 측면에서는 적절한 방향으로 보임

라. 재정건전성

(1) 2007년도 예산안의 재정수지

- 정부는 2007년도 예산안에서 통합재정수지는 GDP의 1.5%에 해당하는 13.3조원의 흑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대상수지는 GDP의 1.5%에 해당하는 13.7조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
- 국회예산정책처는 2007년도 통합재정수지 및 관리대상수지가 정부보다 4.1조원 낮은 것으로 전망
- 우리나라의 통합재정수지는 현재 사회보험을 비롯한 사회보장제도의 미성숙으로 OECD 선진국들에 비하여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향후 다양한 형태의 복지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통합재정수지는 점차 압박을 받을 것이 예상되므로 체계적인 통합재정수지의 관리가 요망

- 관리대상수지는 외환위기 이후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한 후 점차 개선되어 2002년과 2003년에는 흑자를 이루었으나 2004년 이후 적자를 다시 지속하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

(2) 국가채무의 증대와 재정건전성

- 2007년도 예산안에 따른 일반회계 국채발행액 8.7조원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규모는 2007년 말 기준 302.9조원에 이르게 되는데 이는 2007년 잠정 GDP의 33.4%에 이르는 수준임. 국회예산정책처는 2007년도 국가채무 규모를 정부보다 4.1조원 많은 307.0조원으로 예상
- 정부는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규모는 충분히 관리가능한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국가채무를 보다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 국가의 위기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공적 연금, 사회보험지출 증대, 통일비용 등 잠재적 재정부담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국가채무의 감소가 필요함
 - 금융성채무의 증가는 주로 외국환평형기금운영 적자 등 외환의 관리과정에서 생겨난 것으로 정부의 외환관리능력의 부재에 따른 것임
 - 추세적으로 증가하는 사회복지수요는 향후 재정건전성을 위협하는 중요한 요인

마. 재원배분

- 5대 기능별 재원배분
 - 16개 분야의 재원배분의 증감내역을 사회 분야, 교육 분야, 경제 분야, 국방 분야, 일반행정 및 기타 등 5대 기능별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사회 분야가 9.8%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국방 분야가 7.9%, 교육

분야가 7.4%, 일반행정 및 기타 분야가 6.9% 증가하여 평균 증가율(6.4%)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경제 분야만 1.1%의 낮은 증가율을 기록하여 평균증가율(6.4%)에 훨씬 못 미치고 있음

□ 재원배분에 대한 평가

- 경제 분야에 대한 재원투입이 상대적으로 크게 줄어들고 사회복지를 중심으로 사회 분야에 대한 재원투입이 크게 증가.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에 경제개발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사회복지 및 삶의 질과 관련된 재원투입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가운데 경제 분야에 대한 재원투입이 크게 이루어져 왔다는 점에서 근년에 이루어지는 이러한 재원투입구조의 변화는 바람직한 현상으로 판단
- 교육 분야가 우리나라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타 분야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폭의 변동을 보인 것과는 달리 70년대 이래 중앙정부 통합재정기준으로 15%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 향후 국가적으로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고등교육부문의 재정투자를 증가시키되, 특히 대학생 학자금보증, 기초연구역량강화, 산학협력지원 등에 재정투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GDP 대비 교육재정의 비중을 OECD 평균수준인 5% 초반까지 높일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 통합재정에서 국방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1.6%로 미국을 제외한 여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국방비는 국가안보와 직결되어 있는 관계로 남북관계를 비롯한 대내외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일반행정 및 기타 분야는 대통령선거비용이 계상된 관계로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10.2%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6.9%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타 분야는 평균보다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이 분야의 재정은 직접사업보다는 조직운영 등 간접비 중심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지출규모를 늘리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나 여타 분야와의 적절한 균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바. 재정시스템 개편

(1) 4대 재정개혁

(가) 국가재정운용계획

- 그 동안의 제도시행과정에서 분류체계의 부적절성, 연동계획으로서의 일관성과 연속성 부족, 예측능력의 부족으로 인한 내용의 잦은 변경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바, 분류체계의 합리적 개편, 계획의 일관성과 연속성 유지, 예측능력의 향상을 통한 계획내용의 안정성 유지 등을 위한 노력이 필요
-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중기국가재정계획으로서의 역할을 명실상부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계획의 수립, 시안마련, 계획의 완성에 이르는 과정에서 국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는 필요

(나) 총액배분자율편성(Top Down) 제도

- 이 제도가 성공하기 위한 관건은 중앙예산기관과 각 부처가 예산편성과정에서의 역할을 적절히 분담하여 기능상의 분화와 통합을 얼마나 달성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음. 중앙예산기관은 변화된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관련조직을 개편할 필요가 있으며 부처의 예산편성과정에서의 자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다) 성과관리에산 제도

- 우리나라의 재정부문 성과관리제도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 평가가 체계적으

로 연계된 실질적인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아니고 예산과정에서 성과를 강조하고 성과관리와 예산편성의 연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다양한 시도를 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음

- 2007년부터 프로그램예산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성과주의 예산(Performance Budgeting)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기반이 강화되었으므로 정부는 지금까지 축적된 성과관리기법을 발전시켜 일반적인 성과관리와 적절하게 연계된 실질적인 성과주의 예산체계의 구축을 위한 노력이 필요

(라) 프로그램예산제도 등

- 새롭게 도입된 프로그램예산제도는 향후 정부의 재정운용이나 국회의 예산심의 및 결산심사 그리고 감사원의 감사활동 등에 이르기까지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됨
- 프로그램예산제도는 예산을 운용하는 부처에게 자율성을 대폭 부여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프로그램 단위로 재정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 필수적임
- 프로그램단위로 예산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면 정책위주의 예산심의를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전통적 의미에서의 재정에 대한 통제기능이 약화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2) 특별회계 및 기금정비

- 정부는 재정구조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2004년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등 7개의 특별회계와 방위산업육성기금 등 6개의 기금을 줄여 일반회계 등으로 관리 전환하는 정비방안을 마련 시행을 추진 중임

- 정부가 마련한 특별회계·기금정비방안은 한계가 있다고 보이는 바, 재정구조를 단순하고 명확하게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작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

(3) 임대형 민자사업(BT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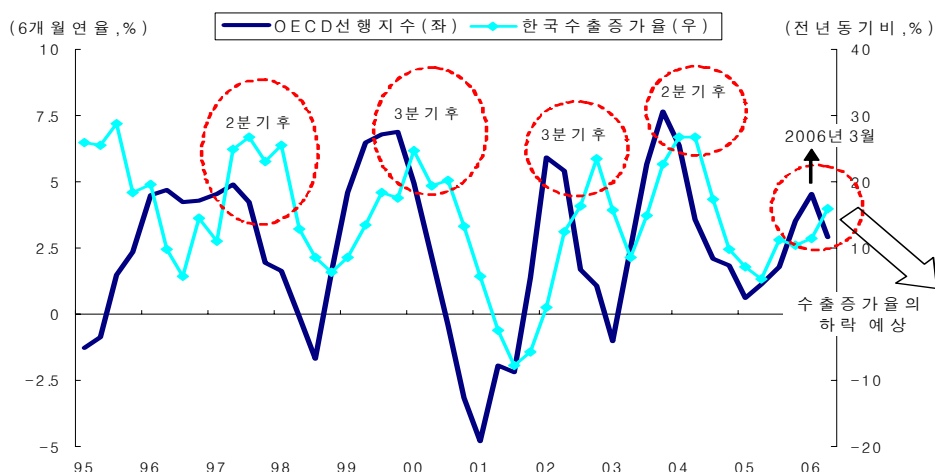
- 임대형 민자사업(BTL)은 사업에 참여한 민간이 최종 사용자에게 사용료 부가로 투자비 회수가 어려운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종전의 민자유치사업과는 성격을 다르며 사실상 재정이 담당해야 할 사업을 민간이 담당토록 하고 민간의 수요위험이 배제된 가운데 정부가 시설임대료 형태로 장기간에 걸쳐 민간의 투자비를 보전하는 형태임
- BTL사업은 2005년에는 3.8조원의 실적을 보였고 2007년도에는 2006년 계획 8.3%보다 19.3% 증가된 9.9조원을 계획하고 있어 빠른 규모로 증가하는 추세임
- 지금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BTL사업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음
 - BTL사업은 도입초기에는 재정사업을 융통성 있게 집행하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나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연간 지불해야 할 임대료 부담의 누적으로 재정의 경직성을 초래할 수 있음
 - BTL사업은 본질적으로 재정사업이라는 점에서 투자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여타 재정사업과 동일한 선상에서 비교하고 검토될 필요가 있으나 현재 BTL사업은 재정사업의 결정절차와 다른 방식으로 사업이 결정됨으로써 투자의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이 BTL사업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며 재정규모의 확대에 이어질 수 있음
- 이와 같은 문제점들에 비추어 볼 때 BTL사업은 대상, 적정규모, 관리주체 및 관리방식, 재정에 준한 관리, 국회의 사전심의 등 제도전반에 대한 신중하고 충분한 검토가 필요

II. 경제전망

1. 2006년 국내경제 현황 및 전망

- 2006년 중 국내경제(GDP)는 4.8%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여 2005년의 4.0% 보다는 높을 것으로 보임(행정부 2006년 국내 경제 실질성장률을 5.0%로 예상함).
 - 2006년 상반기 중 5.7% 성장한 국내경제는 하반기 중 4.1% 성장하여, 성장세가 하반기에 약화될 것으로 예상됨.
 - 이는 선진국 경기 둔화로 인한 수출둔화, 부동산 투기억제 정책에 따른 건설경기 부진 및 일자리 창출 지연으로 인한 소비의 약화 때문임.
 - 고유가의 지속 및 국제금리 인상으로 주요국 및 OECD 경기선행지수가 2006년 2/4분기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올해 4/4분기 이후 우리나라 수출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

[그림 1] OECD 경기선행지수와 우리나라의 수출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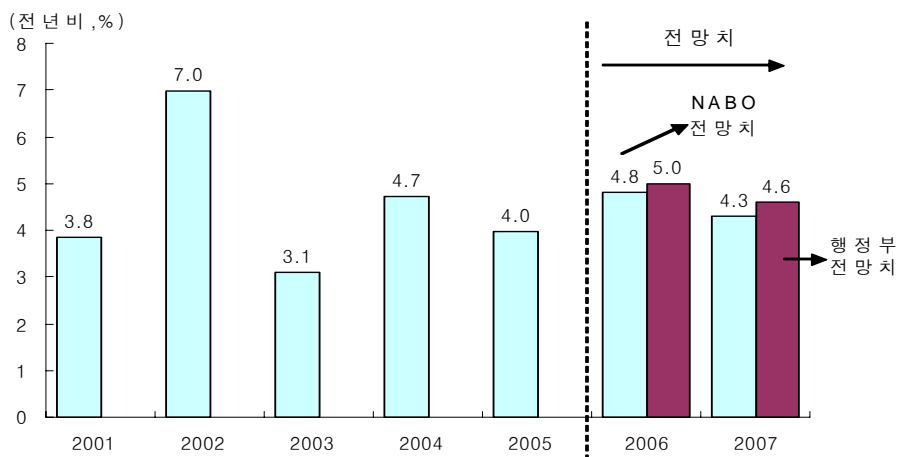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OECD.

- 2006년 경상GDP성장률은 5.4%로 2005년(3.6%)보다 1.8%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행정부는 2006년 경상GDP성장률을 5.3%로 예상함). 이는 실질GDP성장률의 상승과 GDP디플레이터의 상승(2005년: -0.4% → 2006년: 0.6%) 때문임.

2. 2007년 국내경제 전망

- 2007년 국내경제실질성장률(GDP)은 4.3%로 2006년의 추정치(4.8%)보다 0.5%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행정부는 2007년 국내경제실질성장률을 4.6%로 예상함).
 - 이는 미국의 경기둔화로 인한 수출 증가세 위축, 원화가치 절상 및 고유가 국면의 지속으로 인한 설비투자의 증가세 둔화 및 부동산 경기의 위축에 따른 건설경기의 부진 때문임.
 - 또한 일자리 창출지연으로 인해 소비 회복세가 둔화되어 내수경기의 회복세도 약화될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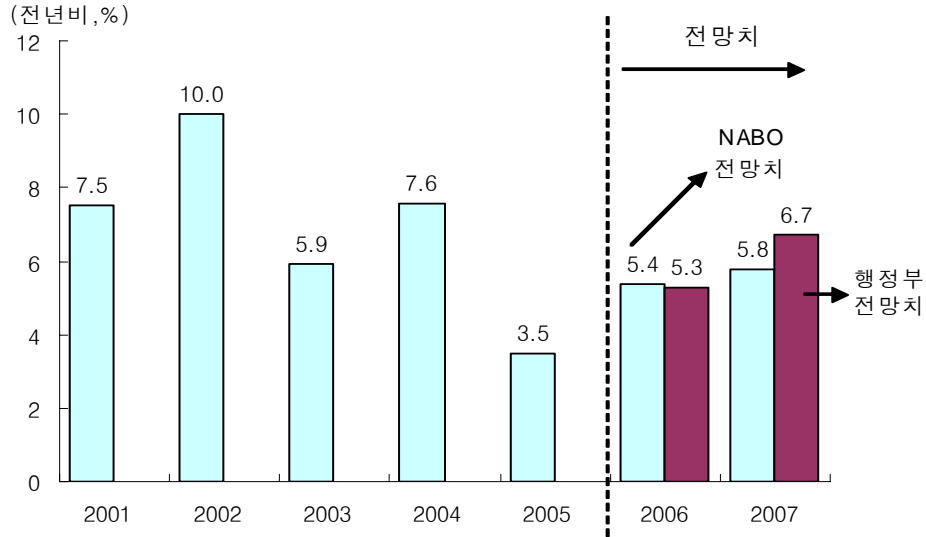
[그림 2] 2007년 실질 GDP성장률 전망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기획예산처.

- 민간소비는 일자리 창출 지연과 임금 상승률 둔화로 가처분 소득 증가세가 둔화되고 자산가격의 안정과 해외소비 확대 등으로 인해 3.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건설투자는 신도시개발 등 공영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기업도시 착공 및 정부의 공공기관 투자 지출 확대에도 불구하고 민간건축의 부진으로 0.4% 감소할 것으로 보이나 2006년(-2.9%)에 비해 감소폭이 축소될 전망이다.
- 설비투자는 기대성장률 둔화 및 내수부진, 수입자본재 비중 증가, 해외투자 확대 등으로 인해 3.4% 증가하여 2006년(5.7% 예상)보다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
- 수출은 미국의 경기둔화에 따른 대미수출둔화와 동아시아에 대한 수출둔화로 9.8%(통관기준) 증가하여 2006년(14.7% 예상)보다 증가율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
- 원/달러 환율은 경상수지 적자 전환에도 불구하고 달러화 약세 및 위안화 절상 등 동아시아 통화강세로 인해 2006년 보다 소폭 절상된 945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국회예산정책처(NABO)와 정부의 거시경제지표 전망.
 - 2007년중 실질경제성장률(GDP성장률)이 4.3%로 행정부안(4.6%)보다 0.3%포인트 낮을 것으로 전망됨. 2007년중 경상경제성장률은 5.8%로 행정부안(6.7%)보다 0.9%포인트 낮음.
 - 2007년중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은 1.5%로 행정부안(2.1%)보다 0.6%포인트 낮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원화가치 상승과 대외여건의 악화로 수출디플레이터와 설비투자 디플레이터의 상승속도가 완만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그림 3] 2007년 경상 GDP성장률 전망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기획예산처.

[표 1] 국회예산정책처(NABO)와 정부의 거시경제지표 전망비교

(단위: %)

	2005	2006(전망)		2007(전망)	
		국회예산정책처 (NABO)	행정부안	국회예산정책처 (NABO)	행정부안
실질GDP	4.0	4.8	5.0	4.3	4.6
GDP디플레이터	-0.5	0.6	0.3	1.6	2.0
경상GDP	3.5	5.4	5.3	5.8	6.7
원/달러	1024.3	960	1010	945	950

주: 1. 정부안의 원/달러 환율은 2006년과 2007년 예산안의 전체수치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기획예산처, 한국은행, Datastream.

[표 2] 2007년 국내경제 전망

(단위: %)

	2004	2005	2006			2007
			상반기	하반기	연간	
경제성장률	4.6	4.0	5.7	4.1	4.8	4.3
민간소비	-0.5	3.2	4.6	4.1	4.4	3.9
설비투자	3.1	4.7	7.1	4.4	5.7	3.4
건설투자	1.1	0.4	-1.9	-3.9	-2.9	-0.4
소비자물가	3.6	2.7	2.4	2.9	2.7	2.9
실업률	3.7	3.7	3.6	3.5	3.5	3.6
경상수지 (억 \$)	276	166	-4.3	12.1	7.8	-27.8
상품수출 (통관기준)	31.0	12.0	13.8	15.5	14.7	9.8
상품수입 (통관기준)	25.5	16.4	19.4	19.1	19.2	9.9
국고채수익률 (평균)	4.1	4.3	4.9	4.7	4.8	4.6
원/달러 환율 (평균)	1,145	1,024	965	955	960	945

주: 1) 설비투자에 무형 고정자산 포함.

2) 실업률은 구직기간 4주 기준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III. 재정운용기조 및 재정건전성 분석

1. 재정운용기조 분석

- 경상성장률 대비 정부지출 증가율과 GDP 대비 관리대상수지 비율의 변화 방향을 살펴볼 때 2007년도 예산(안)은 2006년도 본예산 대비 확장 기조를 나타내고 있음

[표 1] 경상성장률 대비 지출증가율 변화의 방향

(단위: 조원, %포인트)

	재정지출 규모	전년대비 지출증가율(A)	NABO 추계 경상성장률(B)	증가율 차이 (A-B)
2006 본예산	222.0	6.8	5.4	1.4
2007	238.5	7.4	5.8	1.6

- 2006년도 추경은 재해로 인한 우발적인 것이므로 본예산 대비가 타당함
- 전년대비 재정지출증가율이 경상성장률을 상회하는 정도를 살펴보면, 2006년도의 경우 재정지출증가율이 경상성장률을 1.4%포인트 상회하고 있으나 2007년도에는 1.6%포인트로서 증가율차이가 확대되고 있음
- GDP 대비 관리대상수지의 비율도 2006년도 본예산의 경우 -1.4%였으나 2007년에는 -2.0%로 적자폭이 0.6%포인트만큼 확대되고 있음

[표 2] 통합재정수지 및 관리대상재정수지 추이

(단위: 조원, %)

	2005 결산	2006		2007 추계	
		본예산	추경	NABO	정부
통합재정수지 ¹⁾ (GDP대비, %)	5.1 (0.6)	1.3 (0.1)	-0.9 (-0.1)	9.2 (1.0)	13.3 (1.5)
관리대상수지 ²⁾ (GDP대비, %)	-6.5 (-0.8)	-12.7 (-1.4)	-14.9 (-1.7)	-17.8 (-2.0)	-13.7 (-1.5)

주: 1) 통합재정수지는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을 모두 포괄하고,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채무상환 등을 제외한 세입·세출의 차이를 의미.
 2) 관리대상수지는 통합재정수지 중 사회보장성 기금과 공적상환소요를 제외한 재정수지.

- 경기변동 등 외부적 영향을 배제하고 재량적 재정정책에만 기인하는 재정수지의 변화를 블랑샤르 재정정책기조지표를 통해 살펴볼 때, 2007년도는 -0.26% 포인트로 확장 기조를 나타냄
 - 재정정책에만 기인하는 2007년도 GDP대비 재정수지 비율이 본예산 기준으로 2006년도의 -0.26%에서 2007년도에는 -0.52%로 그 적자폭이 확대되고 있음은 행정부가 확장적인 재량정책을 취하고 있음을 의미함
 - 2006년도 추경예산에 대비할 경우, 2007년도 블랑샤르지표는 0.02% 포인트로 재량적 재정정책이 중립적임을 보여주고 있음

[표 3] 재정정책기조 지표

(단위: 조원, %)

	2004 결산	2005 결산	2006		2007 예산(안)
			본예산	추경예산	
관리대상수지(A) (대 GDP 비중)	-3.6 (-0.46)	-6.5 (-0.81)	-12.7 (-1.52)	-14.9 (-1.78)	-17.8 (-2.02)
잠재성장률에서의 관리대 상수지(B)	-3.6	-6.2	-13.9	-16.3	-17.4
이자 지출(C)	8.3	10.2	11.6	11.6	12.6
조정 기초관리대상수지 (D=B+C)	4.7	4.0	-2.3	-4.7	-4.8
잠재성장률에서의 GDP(E)	815.9	840.4	871.4	871.4	918.7
비중(F=D/E, %)	(0.57)	(0.48)	(-0.26)	(-0.54)	(-0.52)
블랑샤르지표 (G=Ft-Ft-1, %p)	-	-0.09	-0.74	-1.02	-0.26 (0.02) ^{주1}
관리대상수지의 전년대비 비중변화	-	-0.35	-0.71	-0.97	-0.50 (-0.24) ^{주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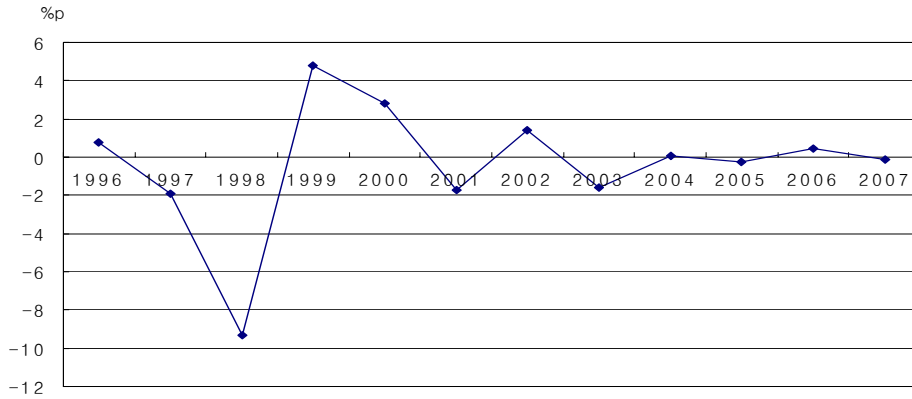
주: 1. -0.26%p는 2006년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한 2007년도 블랑샤르지표이며 괄호 안의 0.02%p는 기준을 2006년 추경예산으로 변경했을 때의 지표를 말한다.

2. 관리대상수지의 전년대비 비중변화도 -0.5%p는 본예산 기준이며, -0.24%p는 추경 예산 대비임.

자료: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및 국회예산정책처 추계 자료들에서 제작성.

□ 성장률 갭(실제성장률-잠재성장률) 추이를 통해 2007년 경기 국면을 판단해 보면, 2007년 성장률 갭은 -0.11%포인트로 실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0.11% 정도 낮은 약한 하강 국면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그림 1] 성장률 갭 추이



- 2007년도의 약한 하강국면 예상은 2007년도의 확장적 재정정책기조가 경기 대응의 측면에서는 일단 방향이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함
 - 잠재성장률 추계상의 한계를 감안할 때, 재정정책의 경기대응성에 대한 여기에서의 판단은 잠정적인 것이며 조심스럽게 해석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2004년 이후 경기 국면은 상승과 하강으로 교체되고 있으나 재정정책은 계속 확장 기조를 보여주고 있어 2004년 이후 재정정책이 경기대응의 방향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재정정책 기조와 폭을 심의할 때, 경기대응 방향 이외에 재정지출 확대가 경제에 미칠 민간투자의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 등과 같은 장·단기적 영향과 미시적 효율성을 저해하는 왜곡효과 등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재정지출 확대가 국민부담을 늘린다는 점에서 재정투입 없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규제 의 획기적 완화 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재정건전성 분석

가. 통합재정수지 분석

□ 국회예산정책처는 2007년 통합재정수지 및 관리대상수지를 행정부보다 4.1조원 적게 전망

- 국회예산정책처의 2007년도 경상성장률에 대한 전망이 행정부(경상 6.7%)보다 국회예산정책처(경상 5.8%)가 더 낮기 때문

[표 4]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에 따른 2007년 예산안의 통합재정수지

(단위: 조원, %)

		2006 예산		2007 예산(안)
		본예산	추경	
통합재정수지 (GDP 대비 비율)	NABO 전망	-1.8 (-0.2)	-3.8 (-0.4)	9.2 (1.0)
	행정부 전망	1.3 (0.1)	-0.9 (-0.1)	13.3 (1.5)
관리대상수지 (GDP 대비 비율)	NABO 전망	-15.8 (-1.9)	-17.8 (-2.1)	-17.8 (-2.0)
	행정부 전망	-12.7 (-1.4)	-14.9 (-1.7)	-13.7 (-1.5)
총수입	NABO 전망	232.4		247.7
	행정부전망	235.3		251.8
총지출	공적자금 상환 포함	233.9	236.1	238.5
	공적자금 상환 제외	221.9	224.1	

주: 1. NABO는 2006년 경상 GDP(경상성장률 5.4%)를 850.2조원, 2007년 경상GDP(경상성장률 5.8%)를 900.3조원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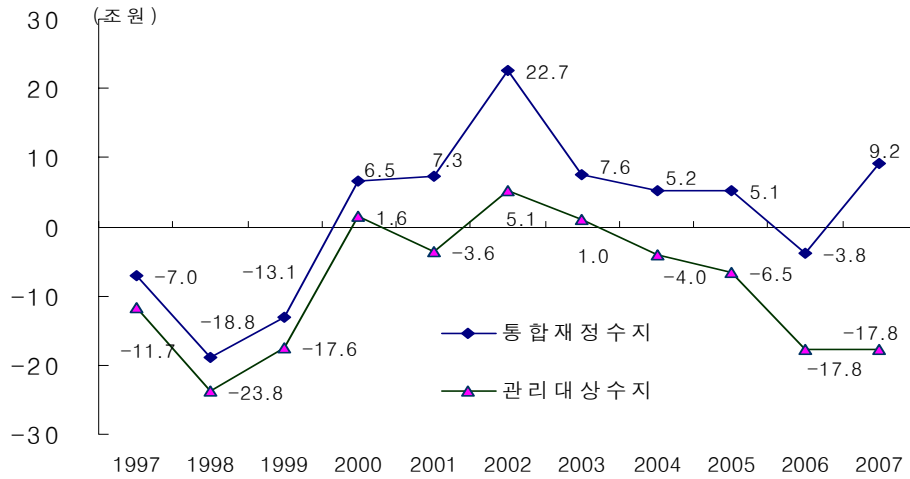
2. 행정부는 2006년 경상 GDP(경상성장률 5.3%)를 849.4조원, 2007년의 경상GDP(경상성장률 6.7%)를 906.3조원으로 보고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기획예산처, 「2007년 나라살림 주요내용」, 2006. 9.

재정경제부 결산자료.

[그림 2] 최근 10년간 통합재정수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재정경제부.

- 최근 10년간의 관리대상수지는 1998년부터 2002년까지 개선되다가 2003년부터 악화되고 있음
 - 2007년에 통합재정수지가 개선된 것으로 보이는 이유는 공적자금의 국채전환이 2006년도에 종료되었기 때문
 - 2007년의 관리대상수지는 2006년과 같은 수준

나. 국가채무 분석

- 국회예산정책처는 행정부가 제출한 2007년도 세입 및 세출구조가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2007년 국가채무 규모를 행정부보다 4.1조원 많은 307.0조원 (GDP 대비 34.1%)으로 추계
 -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수지 전망의 차이(4.1조원)와 더불어 행정부에 비하여 국내총생산을 낮게 전망

- 행정부는 2007년의 국내총생산(GDP)을 906.3조원(경상성장률 6.7%)으로 예측, 국회예산정책처는 900.3조원(경상성장률 5.8%)으로 전망
- o 다만, 4.1조원 중 국제 전망 차이 1.1조원을 제외한 3.0조원은 사업조정이나 회계처리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2007년도 국가채무는 **304.0조원(GDP대비 33.8%)**가 될 수도 있음

[표 5] 국회예산정책처와 행정부의 국가채무 전망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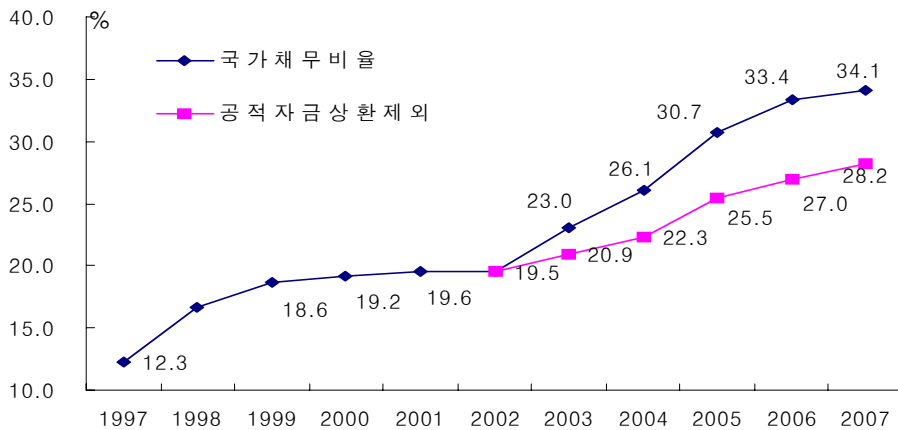
(단위: 조원)

		2006 예산		2007 예산(안)
		본예산	추경	
국가채무 (GDP대비, %)	NABO 전망	279.4 (32.9)	283.5 (33.4)	307.0 (34.1)
	행정부 전망	278.7 (32.1)	283.5 (33.4)	302.9 (33.4)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기획예산처, 「2007년 나라살림 주요내용」, 2006. 9.

- 최근 10년간의 국가채무를 살펴보면 국가채무는 2002년 이후 빠르게 증가
 - o 2003~06년에 이루어진 공적자금 국채전환분을 차감해도 국가채무 증가

[그림 3]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의 변화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기획예산처.

- 국가채무가 급격히 증가한 원인은 ① 공적자금상환계획에 따른 재정부담
② 일반회계 재정적자보전용 국채발행과 ③ 외국환시장 안정용 자금 조달

[표 6] 최근 10년간 국가채무의 변화

(단위: 조원, %)

	1997	2002	2007	2003~2007 증가액
국가채무 (GDP 대비)	60.3 (12.3%)	133.6 (19.5%)	307.0 (34.1%)	173.5 (14.6%p)
일반회계적자보전	-	26.4	58.9	32.5
공적자금	-	-	53.0	53.0
외환시장안정용	4.2	20.7	89.7	69.0
국민주택기금	16.4	34.0	44.6	10.6
기타	39.7	52.5	60.8	8.3

주: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과 행정부안과의 차이는 기타에 포함시켰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기획예산처.

- 2005년 국가채무 이자부담은 10.2조원(GDP 대비 1.26%)으로 추계되고, 2006년과 2007년에는 각각 11.6조원(GDP 대비 1.36%), 12.6조원(GDP 대비 1.40%)이 될 것으로 전망
 - 이 중 지방정부 부담을 제외하면 중앙정부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이자비용은 2006년 11.3조원, 2007년 12.3조원으로 추계
 - 이자비용이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5.0%, 2007년에는 5.2%로 예상됨
- 국가채무는 ① 국가채무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② 불요불급한 지출을 억제하고 분야별 우선순위를 조정한 후 ③ 경제성장 및 조세감면 축소를 통하여 세입기반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리되어야 함

3. 종합

- 국회예산정책처는 2007년 경상GDP성장률을 5.8%로 전망했으나 행정부는 6.7%로 0.9%포인트 높게 전망했음.

- 국회예산정책처는 2007년 국세수입을 146조 9,686억원으로 전망했으나 행정부는 148조 1,211억원으로 당초보다 1조 1,525억원이 많을 것으로 전망했음.
 - 2007년 경상GDP성장률 전망치의 차이로 당초와 행정부의 국세수입 전망치도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

- 2007년 통합재정수지 전망치를 보면 국회예산정책처는 9.2조원(GDP대비, 1.0% 흑자), 행정부는 13.3조원 흑자(GDP대비 1.5% 흑자)가 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2007년 관리대상수지 전망치를 보면 당초는 17.8조원 적자(GDP대비 2.0% 적자), 행정부는 13.7조원 적자(GDP대비 1.5% 적자)가 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2007년 국가채무 전망치를 비교해보면 당초는 307조원(GDP대비 34.1%)으로 전망한 반면에 행정부는 302.9조원(GDP대비 33.4%)으로 예상하고 있음.

[표 7] 국회예산정책처(NABO)와 행정부의 거시경제, 국세수입, 통합재정수지, 국가채무 전망비교

	2006(전망)		2007(전망)	
	국회예산정책처(NABO)	행정부안	국회예산정책처(NABO)	행정부안
실질GDP(%)	4.8	5.0	4.3	4.6
경상GDP(%)	5.4	5.3	5.8	6.7
국 세(십억원)	137,726.5	138,027.2	146,968.6	148,121.1
- 일반회계	132,192.4	132,770.5	140,815.0	142,481.0
- 특별회계	5,534.1	5,256.7	6,153.6	5,640.1
조세부담률(%)	20.6	20.7	20.6	20.6
- 국세부담률	16.2	16.3	16.3	16.3
- 지방세부담률	4.4	4.4	4.3	4.2
통합재정수지(조원)	-3.8	-0.9	9.2	13.3
(GDP대비, %)	(-0.4)	(-0.1)	(1.0)	(1.5)
관리대상수지(조원)	-17.8	-14.9	-17.8	-13.7
(GDP대비, %)	(-2.1)	(-1.7)	(-2.0)	(-1.5)
국가채무(조원)	283.5	283.5	307.0	302.9
(GDP대비, %)	(33.4)	(33.4)	(34.1)	(33.4)

주: 1) 2006년 통합재정수지, 관리대상수지, 국가채무 등은 추경을 포함한 수치임.

2) 2007년 수치는 예산안 기준 수치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행정부.

2007년도 자원배분 분석

I. 자원배분 총괄 분석

1. 2007년도 자원배분의 현황과 특징

가. 2007년도 자원배분의 현황

□ 2007년도 총지출 규모는 2006년도 대비 6.4% 증가한 238조 5,033억원임

[표 1] 2007년도 분야별 자원배분 현황

(단위: 억원, %)

		2006	2007(안)	증감액	증감율
사회	사회복지	505,153	562,926	57,773	11.4
	보건	55,108	55,488	380	0.7
	문화및관광	27,972	28,693	721	2.6
	환경보호	37,927	40,337	2,410	6.4
	소 계	626,160	687,444	61,284	9.8
교육	교육	287,650	308,890	21,240	7.4
경제	수송및교통	152,862	155,439	2,577	1.7
	지역개발	31,374	26,792	-4,582	-14.6
	농림해양수산	155,121	159,254	4,133	2.7
	산업·중소기업	123,955	125,085	1,130	0.9
	통신	61,125	62,323	1,198	2.0
	과학기술	29,476	31,188	1,712	5.8
	소 계	553,913	560,081	6,168	1.1
국방	국방	222,906	240,485	17,579	7.9
일반행정 및 기 타	일반공공행정	388,821	428,668	39,847	10.2
	공공질서및안전	110,383	108,976	-1,407	-1.3
	통일·외교	25,514	24,489	-1,025	-4.0
	예비비	25,498	26,000	502	2.0
	소 계	550,216	588,133	37,917	6.9
합 계		2,241,082	2,385,033	143,951	6.4

주: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한 순계 기준임.

자료: 기획예산처,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06. 10.

□ 16개 분야별 재원배분

- 2007년도 평균 예산안 증가율 6.4% 보다 더 크게 증가한 분야
 - 사회복지 11.4%, 일반공공행정 10.2%, 국방 7.9%, 교육 7.4%
- 평균 수준의 증가율을 나타낸 분야
 - 과학기술 6.5%, 환경보호 6.4%
- 평균 이하의 증가율을 나타낸 분야
 - 농림해양수산 2.7%, 문화 및 관광 2.6%, 통신, 예비비 분야 등이 2.0% 대의 증가율
 - 수송 및 교통, 산업·중소기업, 보건 분야가 2% 이하의 낮은 증가율
- 2006년도 예산보다 감소한 분야
 - 지역개발 분야 14.6%, 통일·외교 분야 4.0%,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3% 각각 감소

□ 기타 분야

- R&D 10.5%,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6.3%, 정보화 및 통신 분야 2.6% 각각 증가

나. 분야별 재원배분의 특징

- 경제 분야는 감소, 사회 분야는 증가, 국방 및 교육 분야는 소폭 증가됨

[표 2] 2007년도 총지출 대비 각 분야별 재원배분 비중 현황

(단위: 억원, %, %p)

	2006		2007(안)		증감액	증감 (B-A)
	금액	비중(A)	금액	비중(B)		
사회	626,160	27.94	687,444	28.82	61,284	0.88
교육	287,650	12.84	308,890	12.95	21,240	0.12
경제	553,913	24.72	560,081	23.48	6,345	-1.23
국방	222,906	9.95	240,485	10.08	17,579	0.14
일반행정 및 기타	550,216	24.55	588,133	24.66	37,917	0.11
합 계	2,241,082	100.00	2,385,033	100.00	143,951	0

자료: 기획예산처,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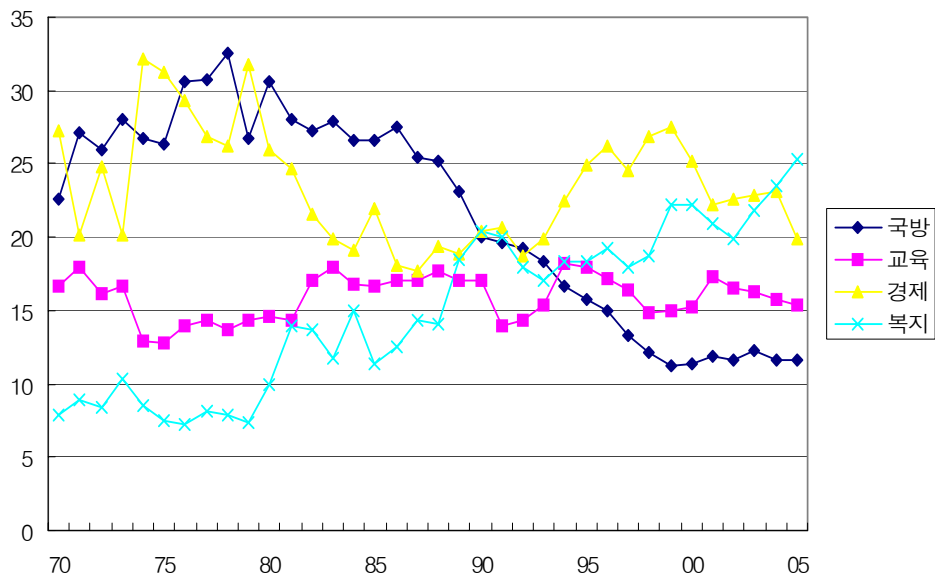
- 사회 분야: 9.8% 증가로 가장 높은 증가를 보임
- 교육 분야: 7.4% 증가로 비교적 높은 증가를 보임
- 경제 분야: 1.1% 증가로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임
- 국방 분야: 7.9% 증가로 비교적 높은 증가를 보임

2. 자원배분의 추세 분석

가. 우리나라의 분야별 자원배분 추이

- 시대가 요구하는 재정적 과제를 반영

[그림 1] 분야별 자원배분 추이



자료: 기획예산처, 국회예산정책처.

- 경제 분야: 70년대 중시, 80년대 이후 감소, 90년대 중반이후 증가, 2000년 이후 다시 감소함
- 복지 분야: 70년대에 낮은 수준을 보이다 80년 이후 지속적 증가 추세
- 교육 분야: 전시대를 거쳐 비교적 안정적 추세를 보임
- 국방 분야: 70년대에서 80년대 중반까지 가장 높은 비중이었으나 80년대 중반이후 지속적 감소추세

나. 분야별 자원배분의 국제비교

□ 분야별 자원배분을 국제 비교한 결과, 대체로 복지 및 삶의 질 분야의 지출 비중은 낮고, 경제, 국방 분야는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3] 분야별 자원배분의 국제 비교(중앙정부 통합재정 기준)

(단위: %)

	미국 (2004)	호주 (2004)	스웨덴 (2004)	이태리 (2003)	벨기에 (2003)	OECD 평균	한국 (2005)
국 방	20.2	5.9	5.5	3.4	2.7	4.8	11.6
경 제	6.5	6.4	9.9	3.9	5.2	9.1	19.9
복지 및 삶의 질	57.2	52.0	54.1	49.3	59.8	54.7	25.2
교 육	2.8	9.3	6.1	10.2	2.7	8.5	15.4
기 타	13.3	26.4	24.4	33.2	29.6	22.9	27.9

자료: IMF,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2005.

[표 4] 분야별 자원배분의 국제비교(일반정부 기준)

(단위: GDP 대비, %)

	국방	경제사업	복지 및 삶의 질	교육	기타	계
오스트리아	0.9	4.9	30.7	5.9	9.7	52.1
벨기에	1.3	4.7	26.7	6.3	12.0	51.0
덴마크	1.7	3.9	33.0	8.4	9.9	56.9
핀란드	1.6	5.0	30.0	6.6	7.8	51.0
프랑스	2.4	5.0	31.6	6.1	7.7	52.8
독 일	1.2	4.2	31.0	4.2	7.5	48.1
그리스	4.3	5.7	26.0	3.4	11.9	51.3
이탈리아	1.2	3.8	27.7	5.2	11.9	49.8
룩셈부르크	0.3	4.4	26.5	4.9	5.8	41.9
포르투갈	1.5	5.4	24.9	7.3	8.9	48.0
스페인	1.2	4.4	21.9	4.3	7.5	39.3
스웨덴	2.3	4.8	34.1	7.5	10.8	59.5
영 국	2.7	2.9	24.6	5.1	7.1	42.4
미 국	3.6	3.8	15.0	6.3	7.5	36.2
평 균	2.0	4.1	27.5	5.6	8.9	48.1
한 국	2.6	8.4	7.1	4.4	7.6	30.2

주: 1. 외국은 1999~2003년 평균이며, 한국은 2003년임.

2. 평균은 연방제 국가(미국, 독일, 오스트리아)를 제외한 11개국을 대상으로 GDP를 가중치로 하여 계산.

자료: OECD, *National Accounts of OECD Countries*, 2005.

한국은행, 「국민계정」, 2006.

3. 2007년도 예산안 자원배분의 적정성 분석

가. 분야별 자원배분의 방향에 대한 분석과 평가

- 사회복지와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 분야의 자원투입의 규모와 비중이 늘어나고 이렇게 늘어나는 재원을 경제 분야 예산의 축소로 충당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자원투입구조의 변화는 OECD 선진국들의 자원배분 구조와 일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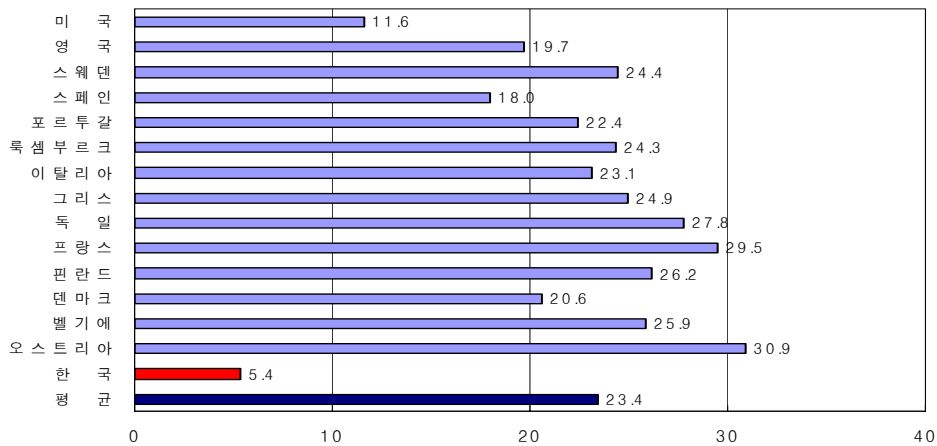
- 사회복지 분야의 증액은 불가피하나, 복지지출이 또 다른 ‘복지의 늪’에 빠지지 않고 복지가 생산과 일자리 증대와 연계되도록 설계되어야 함
- 교육 분야는 70년대 이래 중앙정부 통합재정기준 15%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하여 온 재정투입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우리나라의 교육재정은 GDP 대비 4.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OECD 평균인 5.2%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임
 -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고등교육부문에 대한 재정 확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향후 교육재정의 부문별 비중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국방 분야가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대 이후 통합재정기준 11%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국가안보와 직결되어 있는 관계로 남북관계를 비롯한 대내외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일반행정 및 기타는 6.9%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직접사업보다는 조직 운영 등 간접비 중심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지출규모를 늘리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나 여타 분야와의 적절한 균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II. 사회 분야 자원배분 분석

1. 사회 분야 자원배분의 현황

- 2007년도 사회 분야 재정지출은 총 68조 7,444억원으로 정부 총지출 238조 5,102억원의 28.8%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9.8% 증가한 규모임
 - 이 중 사회복지·보건 분야의 재정지출은 61조 8,414억원으로 정부 총지출의 25.9%를 차지하며, 전년에 비해서는 10.4% 증가한 규모임.
 - 외국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사회 분야의 재정지출은 최근 그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향후 저출산·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됨

[그림 1] GDP 대비 중앙정부의 사회 분야 재정지출 국제비교



- 주: 1. 외국은 1999~20003년 평균, 한국은 2003년 중앙정부 기준임.
 2. 평균은 연방제 국가(미국, 독일, 오스트리아)를 제외한 11개국을 대상으로 GDP를 가중치로 하여 계산.
- 자료: 1. OECD, *National Accounts of OECD Countries*, 2005; 한국은행, 『국민계정』, 2005.
 2. 문형표, 고영선, 「중장기 정책우선순위와 재정운영방향」, 한국개발연구원, 2005에서 재구성.

2. 사회 분야 재원배분의 주요 쟁점

- 2007년도의 사회 분야 재원배분에 관한 주요 쟁점으로는 첫째, **사회 분야 재원배분 규모의 적정성**에 관한 논의임
 - 우리나라의 복지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외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
 - 그러나 단순히 OECD 평균 수준의 복지지출이 우리나라의 여건에 가장 적절한 수준으로 보기 어려우며, 비교에 사용된 자료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복지지출 확대의 합리적인 근거로 보기는 어려움
 - 향후 인구구조가 급속하게 고령화되고 연금제도가 성숙됨에 따라 **복지 분야의 재정지출은 자동적으로 확대(automatically increase)**될 것으로 전망됨

- 둘째, 사회복지 분야 재정지출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공적연금 제도는 **저부담·고급여의 구조**로 인해 향후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연금재정이 지속가능하지 못하며,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은 **재정적자가 가시화**되고 있음
 - 2007년 공적연금의 지출 규모는 총 15조 1,176억원이며,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에 대한 2007년의 국고보전액이 1조 9,064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 셋째, 사회 분야 재정지출에 14조원 규모의 **주택부문을 포함하는 분류체계**는 국제기준에 부합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정부는 이와 같은 분류체계의 변화에 대해서 일반 국민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게 구체적이고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임

- 넷째, 확대되는 사회복지·보건 분야 지출이 효과적으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분야 내 재원배분**에 관한 검토가 필요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부문에서 의료급여의 비중이 큰 것은 의료급여시스템의 문제로 인한 재정 부담으로 저소득계층의 다양한 복지서비스의 제공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음
- 사회복지·보건 분야의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것은 향후 고령화의 진전에 따른 공적연금지출 확대로 인해 재정운용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노동 분야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인 고용보험기금과 산재보험을 통해서 급여비 지출 외에 과도하게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재정운용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3. 향후 개선 과제

- 사회 분야 자원배분에 대한 국회의 예산 심의과정을 통해 논의되어야 할 정책과제로는 첫째,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분리하는 것임
 - 사회 분야의 재정지출은 연금제도와 사회보장 프로그램에 의해 지속적으로 지출이 발생하는 의무지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국회의 단년도 예산안 심의로는 향후 지속적으로 재정지출을 발생시키는 제도적 측면에 대한 심의가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따라서 최근 변화된 재정제도에 따라서 국회가 효과적으로 재정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한 별도의 심의가 필요하며, 정부 지출에 대한 심의도 의무지출과 재량지출로 분리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연금재정의 안정을 위해서 현행 연금법에 규정하고 있는 ‘재정계산제도’를 활용하여 적정 보험료율과 급여수준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해야 함
 - 연금제도의 전면적인 개혁을 위해서 국회에 ‘연금제도발전을 위한 기구’를 설치하여 제도개선을 이루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임

- 셋째,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될 사회 분야 재정지출에서 있어서, 국민 부담과 세대간 형평,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공공부문이 전담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민간부문의 역할 분담을 충분히 고려한 사회복지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할 것임**

III. 경제 분야 자원배분 분석

1. 2007년도 경제 분야 자원배분 현황

-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자원배분 분야 중 경제 분야로 분류할 수 있는 부분은 수송 및 교통, 지역개발,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통신, 과학기술 분야 등임.
 - 2007년도 경제 분야 자원배분은 2006년도에 비하여 1.1% 증가한 56조 81억원인 바, 이는 사회 분야(9.8%), 국방 분야(7.9%), 교육 분야(7.4%), 일반행정 및 기타 분야(10.2%)의 증가율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임.

[표 1] 2007년도 경제 분야 자원배분 현황

(단위: 억원)

	2006년 예산	2007년 예산안	증감액	증감율
수송 및 교통	152,862	155,439	2,577	1.7
지역개발	31,374	26,792	-4,582	-14.6
농림해양수산	155,121	159,254	4,133	2.7
산업·중소기업	123,955	125,085	1,130	0.9
통신	61,125	62,323	1,198	1.9
과학기술	29,476	31,188	1,712	5.8
합 계	553,913	560,081	6,168	1.1

자료: 대한민국정부, 「2006 - 2010 국가재정운용계획」, 2006. 10.

- 세부 분야별 자원배분은 과학기술 분야(2006년 대비 5.8% 증가)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분야가 그 증가율이 미미하거나 감소한 편이며, 특히 분야내 부분의 경우에는 2006년 대비 예산이 감소하는 부문이 많이 있음.

2. 경제 분야 자원배분의 쟁점 분석

- 1970년대까지 높은 비율을 차지하던 경제 분야에 대한 지출 비중은 1980년대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1994년 이후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2000년 이후 다시 축소되는 추세에 있으며, 2004년 이후에는 복지 분야 지출비중이 경제 분야 지출비중을 앞서고 있음.
- 2005년도 기준 우리나라의 경제 분야 지출비중은 19.9%로 OECD 평균 9.1%에 비하여 10.8%나 더 높은 수준이며, 이는 국제비교에 있어서도 그동안 우리나라가 경제 분야 지출에 높은 정책우선순위를 두고 있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것임
- 복지 분야의 지출 중에서도 고등교육, 보육, 사회적일자리 창출 등과 관련된 부문은 생산적 복지 예산 지출이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으므로 전체 재정지출에서 경제 분야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속단하기는 어렵다고 봄.
 - 또한 경제 분야 예산이 줄어들었더라도 민자사업(BTL, BTO)과 공기업 투자의 증가도 고려하면 실제로 경제 분야에 투입되는 공공투자규모가 줄어들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경제 분야 재정운용은 경기순환에 대응하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 시 재정지출을 늘리는 등 지출규모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것임.
 - 한편, 경제 분야 전체의 지출규모의 다소보다도 부문간이나 부문내의 투자의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임.

3. 세부 분야별 재정투자의 적정성

- 현재의 SOC 스톡 수준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견해와 어느 정도 충족되었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지만 정부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이 어느 정도 확충되었다고 보고 SOC재정투자 증가율을 적정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부문간·부문내 투자 우선순위 조정을 통하여 재원을 배분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음.
 - 또한, 정부는 향후 SOC 투자방향을 재정에 의한 직접투자보다는 민간자본·공기업 등으로 투자재원을 대체하려는 것으로 보임.
 - 하지만, BTO나 BTL을 통한 SOC 분야 재정투자의 민간대체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이나 미래의 재정부담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며, 민간투자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경쟁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운영수입보장제도를 조정하거나 정부부담의 상한액을 미리 설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임.

- 2007년도 농업·농촌 부문 예산안 증가율은 1.2% 수준으로 농업생산기반 및 농산물수급부문의 지출을 감소시키고, 농촌개발 및 복지 분야 지출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음
 - 최근에 농업예산 중에서 농가의 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직접지불제의 비중이 증대하고 있는데, 농림부의 2007년도 직접지불관련 사업 예산안은 2조 4,239억원으로 2006년도보다 4,798억원(24.7%) 증가한 규모이며, 농림예산 일반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7.9%로 2006년 대비 4.2% 증가하였음.
 - 직불제 확충 등 농업인 소득보전정책은 농업인의 소득을 증진시키는데는 직접적인 효과가 크지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는 바, 농업인의 소득증진을 위한 다른 정책과 연계하여 신중하게 추진해야 할 것임.

- 또한 직접지불제를 실시함에 있어서 농가에 대한 소득지원효과 및 농가 간 소득 불평등 완화효과를 높이려면 그 지급액의 최종적 귀착이 농가에게로 얼마만큼 돌아가는지를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농가에의 귀착이 더 커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할 것임.
- 2007년도 산업·중소기업 분야 예산안 증가율은 0.9% 수준으로 무역 및 투자유치, 산업금융지원 부문 예산은 2006년도 보다 10% 이상 감소한 반면, 에너지 및 자원개발, 산업기술지원 부문은 대폭 확대된 것이 특징임.
- 특히, 산업금융지원 부문의 경우 2007년에는 전년 대비 12.9% 감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신용보증기관 출연이 2006년 9,000억원에서 2007년 3,300억원으로 대폭(5,700억원) 감소한데 기인함.
 - 양극화가 심화되는 환경에서 중소기업 지원 등의 지출을 감축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지만, 향후 금융지원 부문은 민간금융시장의 가용자금 여력 확대, 저금리 상황을 감안하여 적정규모로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 이용기업, 중견기업, 한계기업보다는 금융기관의 활용이 어려운 초기 창업·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을 확대·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임.

IV. 교육 분야 자원배분 분석

- 2007년 정부예산안의 총 지출은 238조 5,102억원이며, 이중 **교육 분야 재정은 전년대비 7.4% 증가한 30조 8,890억원**(순계 기준)
 - 총 지출 대비 교육재정의 비중은 **12.95%**로 2006년의 12.84%에 비해 0.11% 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유아및초중등교육부문은 전년대비 **7.8% 증가한 26조 8,783억원**이며, **고등교육부문은 전년대비 4.9% 증가한 3조 5,308억원**임
 - 전체 교육재정 대비 유아및초중등교육부문의 비중이 전년대비 0.3%p 상승한 87.0%이며, 고등교육부문의 비중은 전년대비 0.3%포인트 하락한 11.4%임
 - 정부는 **방과후학교, 깨끗한 학교 만들기 등 신규사업**을 만드는 등 **유아및초중등교육부문**에서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의 재정을 크게 증가시킨 반면, **고등교육부문**은 소폭 증가시킴

[표 1] 2007년도 분야별 자원배분 현황

(단위: 억원, %)

		2006	2007(안)	증감액	증감률
교 육	유아및초중등	249,424	268,783	19,359	7.8
	고등교육	33,666	35,308	1,642	4.9
	평생교육	3,052	3,071	19	0.6
	교육일반	1,507	1,728	221	14.7
	소계	287,650 (12.84)	308,890 (12.95)	21,240	7.4
총지출		2,240,737 (100.00)	2,385,102 (100.00)	144,365	6.4

주: 1.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한 순계 기준임.

2. ()는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기획예산처, 2006.

- 2006년도에 발표된 GDP 대비 학교교육비 비중은 7.5%(2003년)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나, 정부부담률은 4.6%로 OECD 국가평균인 5.2%보다 0.4%p 낮은 수준임
 - 반면 민간부담률은 2.9%로 OECD 평균인 0.7%보다 2.2%p 높은 수준이며, 특히 고등교육단계의 민간부담률은 OECD 국가평균의 5배에 달하고 있음
 - 고등교육단계의 민간부담률이 높은 것은 사립교육기관 재학생 비율이 80% 이상이고, 사립교육기관의 재정이 학생의 수업료¹⁾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

- GDP 대비 교육재정의 비중을 다소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고등교육부문에 대한 정부부담률을 높일 필요가 있음
 - 대학재정의 등록금 의존율이 국공립 42.5%, 사립 66.8%에 달하고 있어,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재정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우선, 총 지출 대비 교육재정비중을 확대하되,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교육 분야 중 고등교육부문에 대한 지출을 확대하는 지출구조조정이 필요함

[표 2] 교육단계별 GDP 대비 학교교육비 구성(2003)

(단위: %)

	전체 교육단계			초중등교육단계			고등교육단계		
	정부	민간	계	정부	민간	계	정부	민간	계
한 국	4.6	2.9	7.5	3.5	0.9	4.4	0.6	2.0	2.6
독 일	4.4	0.9	5.3	2.9	0.6	3.5	1.0	0.1	1.1
미 국	5.4	2.1	7.5	3.9	0.3	4.2	1.2	1.6	2.9
영 국	5.1	1.0	6.1	4.0	0.6	4.6	0.8	0.3	1.1
일 본 ¹⁾	3.5	1.2	4.8	2.7	0.3	3.0	0.5	0.8	1.3
프랑스	5.8	0.5	6.3	4.0	0.3	4.2	1.1	0.2	1.4
핀란드	6.0	0.1	6.1	3.9	n	4.0	1.7	0.1	1.8
국가평균	5.2	0.7	5.9	3.6	0.3	3.9	1.1	0.4	1.4

자료: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06.

1) 고등교육기관의 연평균수업료(2003~2004학년도 기준)는 국공립의 경우 3,623달러이 나, 사립의 경우에는 6,953달러로 OECD 국가 중 각각 네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교육인적자원부 보도자료, 2006. 9.12).

- 2006~2010년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교육예산은 연평균 7.9% 증가하고, 유아및초중등교육부문은 연평균 8.5%, 고등교육부문은 연평균 5.5% 증가할 듯
 - 전체 교육재정 중 유아및초중등교육부문과 고등교육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87.0 : 11.4 에서 2010년에는 87.9 : 10.6으로 변화될 전망

- 유아및초중등교육부문의 98.1%를 차지하는 지방재정교육교부금은 2010년까지 연평균 8.7% 증가하여 재정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시킬 계획임²⁾
 - 반면, 학령기 아동수가 급격히 감소됨에 따라 유아및초중등교육부문의 재정수요는 점진적으로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보임
 - 이러한 환경적 변화를 반영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2010년까지 연평균 8.7% 증가시키겠다는 정부의 재정운영방향은 재검토될 필요가 있음

- 총 지출에서 교육재정의 비중을 GDP 5% 수준까지 확대하되, 지식기반사회의 기초가 되는 창의적 지식을 창출하는 고등교육부문에 대한 비중 확대 필요
 - 고등교육부문의 등록금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을 증대하고, 기초연구 및 산학협력을 지원하는 재정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표 3] 교육 분야 중기 재정투자계획

(단위: 억원, %)

	2006	2007	2008	2009	2010	연평균 증가율
유아및초중등교육부문	249,424	268,783	294,958	319,162	345,143	8.5
고등교육부문	33,666	35,308	37,140	39,340	41,655	5.5
평생·직업교육부문	3,052	3,071	3,201	3,375	3,741	5.2
교육일반부문	1,507	1,728	1,804	1,911	2,026	7.7
합계 (증가율)	287,650 -	308,890 (7.4)	337,104 (9.1)	363,788 (7.9)	392,565 (7.9)	8.1

자료: 대한민국정부,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06.

- 2) 이를 위해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비율은 2008년 19.8%, 2009년 19.9%, 2010년 20.0%로 인상할 계획임.

V. 국방 분야 자원배분 분석

1. 국방비 규모

- 1990년대 냉전체제 해체와 문민정부 등장 이후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정부재정에서 국방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감소하여 온 반면 사회복지 및 보건에 대한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음.
 - 1998년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IMF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 및 복지부문의 지출 증대와 햇볕정책에 따른 남북간의 긴장완화로 정부재정 대비 국방비 비중은 1998년 18% 수준에서 2002년에는 14.9% 수준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음.
 - 그러나 2003년 참여정부 출범 이후에는 국방에 대한 비중이 다소 커져 15%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2007년도 국방 예산안은 총 24조 6,967억원으로 정부재정 대비 15.6%를 차지하고 있음([표 1] 참조).

[표 1] 최근 10년간 국방비 추이

(단위: 억원, %)

	1998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안)
국방비 ¹⁾	138,000	144,774	153,884	163,640	175,148	189,412	211,026	225,129	246,967
정부재정 대비 ²⁾	18.3	16.3	15.5	14.9	14.8	15.8	15.6	15.3	15.6
GDP 대비	2.9	2.5	2.5	2.4	2.4	2.4	2.6	2.6	2.6

주: 1) 기금은 포함되지 않았음.

2) 일반회계 기준.

자료: 국방부.

- 국민 1인당 국방비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2004년도 기준 335달러로 일본이나 러시아보다 낮은 수준임. 국민 1인당 국방비 부담액은 1980년 5만 9,000원, 1990년 15만 4,000원에서 2004년 39만 4,000원, 2005년에는 43만원으로 상승하였으며, 2007년에는 50만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됨.
- 우리나라의 국방비 규모는 2004년도에 163억 달러로서 GDP 대비 비중에 있어 OECD 회원국 평균 1.9%보다는 높은 편이나 동아시아(16개국) 평균 4.7%보다는 낮은 수준임.
 - 일본의 경우,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은 1.0%를 유지하고 있으나 절대규모면에서 한국의 약 3배에 달하는 354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으며 한반도 주변의 주요 군사 강국인 중국 및 러시아도 각각 GDP 대비 4~5% 수준의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음.

[표 2] 북한 및 주변국의 국방비 규모 (2004년도 기준)

	한국	북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국방비(억달러)	163	55 ¹⁾	4,550	451	625	619
GDP비중(%)	2.4	25.0	3.9	1.0	3.7	4.4
1인당 국방비(달러)	335	243	1,580 ²⁾	354	48	432

주: 1) 북한의 공식적인 국방비는 약 18억 달러 수준임.

2) 미국인구는 2002년 기준 약 2억 8,800만 명임.

자료: 국제전략문제연구소(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The Military Balance」, 2005~2006.

2. 자원배분 방향

- 한반도 주변의 안보환경 변화, 즉, 가령 북한의 핵개발로 인한 비대칭 전력의 확산에 대비한 국방비 증액이 요구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복지예산 확대에 대한 필요성과 국방비 증액요구를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와 이에 따른 자원마련이 정부예산 편성의 주요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정부의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북한의 핵실험 이전에 수립된 것으로서, 북핵실험으로 인해 향후 전개될 한반도 안보여건의 변화와 이에 따른 국방 분야의 재원배분 재조정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재원배분의 조정을 통해 투자의 우선순위를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정부는 낙관적인 경제성장 전망에 근거하여 국방개혁을 추진하기 보다는 현재의 경제여건과 향후 예상되는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및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북한 핵실험의 요소 등을 고려하여 보다 현실에 맞게 중기재정계획을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국방비 증가요인이 커진 만큼 이를 고려한 중기재정의 수립도 필요하므로 경기하락과 같은 국방재원 확보의 제약요소와 국방비 증가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재정계획의 수립이 요망됨.

VI. 일반행정 및 기타 분야 자원배분 분석

1. 2007년도 일반행정 및 기타 분야 자원배분 현황

- 2007년도 예산안에서는 재원을 총 16개 분야로 배분하는데 이 분야들 중 일반행정 및 기타 분야로 재분류할 수 있는 분야는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통일·외교, 예비비 등 4개 분야임.
- 2007년도 일반행정 및 기타 분야 재정지출은 총 58조 8,133억원으로 전년 대비 3조 7,917억원(6.9%) 증가하였음.
 - 총지출(238조 5,033억원)의 24.6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잠정 GDP(906조 2,808억원) 대비로는 6.49%의 비중을 보이고 있음.
 - 세부 분야별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만 전년 대비 10.2% 증가하고 있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3%(2006년도 재해 추경 제외 시 7.0% 증가), 통일·외교 분야는 4.0%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음.

[표 1] 2007년도 일반행정 및 기타 분야 자원배분 현황

(단위: 억원, %)

	2006	2007(안)	증감액	증감률
일반공공행정	388,821	428,668	39,847	10.2
공공질서및안전	110,383	108,976	-1,407	-1.3
통일·외교	25,514	24,489	-1,025	-4.0
예비비	25,498	26,000	502	2.0
합 계	550,216	588,133	37,917	6.9

자료: 대한민국정부, 「2006 - 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06. 10.

2. 2007년도 일반행정 및 기타 분야 자원배분 적정성 검토

가. 전체적인 자원배분 적정성 검토

(1) 일반행정 및 기타 분야 자원배분 과거 추세치 분석

- 1970년대 이후 계속적으로 2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여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음.
 - 1970년대에는 경제 분야와 국방 분야의 지출 확대로 그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1980년대에 들어서는 현재까지 약 10%p 정도 증가하여 완만한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음. 단, 단기적으로는 매우 큰 폭의 증감 변화를 보여주고 있음.

(2) 2007년도 일반행정 및 기타 분야 자원배분의 적정성 검토

- 2007년도 일반행정 및 기타 분야의 전체적인 자원배분의 적정성을 검토하면 동 분야는 우선순위를 두고 자원배분을 증가시키기보다는 평균적인 지출 증가율에 따라 지출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판단됨.
 - 그런데 동 분야는 장기적으로 경제성장과 사회 안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각 세부 분야별로 중요성을 가지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자원 투입이 유지될 필요성이 있음.
 - 그리고 각 세부 분야별 특성에 따라 수요 변화를 정확히 예측하여 적기에 반영하는 자원배분을 할 필요가 있음. 특히 각 분야의 자원배분과 균형을 이루는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됨.

나. 세부 분야별 재원배분 적정성 검토

(1) 일반공공행정 분야

- 정부의 효율성·투명성 향상을 위해 정부 혁신 관련 예산의 증가는 필요하다고 봄. 단, 혁신 정도에 대한 적절한 평가 장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함.
- 우리나라의 향후 5년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인 2007년도 대통령 선거를 공정하게 치루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대해야 함. 또한 국회의원의 원활한 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 재원배분이 요구됨.
- 지방재정 지원과 관련하여서는 우리나라의 지방재정 지원비중은 중앙정부 일반회계에서 약 26%³⁾를 차지하고 있는데 13~18%대에 이르고 있는 OECD 국가에 비교해 보면 다소 높은 수준으로 평가됨.
 - 따라서 지방재정 지원 수준의 적정성, 운용체계 및 성과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함.

(2) 통일·외교 분야

-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DA)의 규모는 ODA/GNI(0.09%)가 OECD DAC 국가 평균(0.33%)에 1/4 정도이고, 1인당 ODA 규모(15.40달러)도 OECD DAC 국가 평균(130.19달러)에 약 1/8 수준에 불과함.
 - 따라서 상대적으로 작다고 평가받는 우리나라의 ODA 규모를 가능한 재원 안에서 경제적 규모와 국제적 위상에 맞게 증액할 필요가 있음.
 - 적정한 ODA 규모는 보다 많은 논의를 통해 정해야 하겠지만 점진적으로 UN의 권고 목표치 0.7%나 최소 OECD DAC 국가 평균과 유사한 수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3) 2004년도 예산기준임.

(3)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 21세기 해양 시대를 맞아 독도 분쟁 등에 적절히 대응하려면 해양 주권이 강화 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해양 경찰 부문의 자원 배분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 신체적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사법서비스를 양적·질적으로 향상시키며, 최근 급증하는 침단 범죄 및 사이버 범죄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동 범죄 수사를 위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재해예방투자에 있어서는 현재 정부가 재해예방투자에 대하여 강력한 정책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데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재해예방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임.**
 - 단, 현재 재해예방투자의 범위가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적절한 범위를 정하는 것이 필요함.**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I. 세입예산안 분석

- 2006년도 국세수입은 NABO는 137조 7,265억원으로, 행정부는 138조 272억원으로 전망
 - 2006년 예산의 국세수입 목표 135조 3,336억원을 상회하는 수준
 - NABO와 행정부의 국세수입 전망 규모의 차이는 약 3,007억원으로 행정부가 NABO보다 약 0.2% 높게 전망하고 있음

[표 1] NABO와 행정부의 2006년 국세수입 전망 비교

(단위: 십억원, %)

	2005 실적	2006 예산	2006 전망			
			NABO(A)	행정부(B)	차이 (B-A)	차이율 (%)
국 세	127,465.7	135,333.6	137,726.5	138,027.2	300.7	0.2
일반회계	122,402.2	130,038.8	132,192.4	132,770.5	578.1	0.4
특별회계	5,074.1	5,294.8	5,534.1	5,256.7	-277.4	-5.0

- 2007년도 국세 수입규모에 대해서는 NABO는 146조 9,686억원으로, 행정부는 148조 1,211억원으로 전망하고 있음
 - NABO와 행정부 간 2007년 국세수입 전망의 차이는 약 1조 1,525억원으로, 행정부가 NABO보다 약 0.8% 높게 전망하고 있음

[표 2] NABO와 행정부의 2007년 국세수입 전망 비교

(단위: 십억원, %)

	NABO (A)	행정부 (B)	차이 (B-A)	차이율 (%)
국 세	146,968.6	148,121.1	1,152.5	0.8
일반회계	140,815.0	142,481.0	1,666.0	1.2
특별회계	6,153.6	5,640.1	-513.5	-8.3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을 모두 포함한 총수입에 대해 NABO는 2006년 232.4조원, 2007년 247.7조원으로, 행정부는 235.3조원과 251.8조원으로 각각 전망하고 있음

- 행정부의 전망치는 NABO의 전망치와 비교할 때 2006년은 2.8조원, 약 1.2%, 2007년은 4.1조원, 약 1.7% 높은 수준
- 2006~2007년 기간 중 총수입 증가율은 NABO는 6.6%로 전망하는데 비해 행정부는 이보다 0.4%포인트 높은 7.0%로 전망하고 있음

[표 3] NABO와 행정부의 총수입 전망 비교

(단위: 조원, %)

	NABO(A)	행정부(B)	차이(B-A)	
	총수입	총수입	차이	%
2006년	232.4	235.3	2.9	1.2
2007년	247.7 (6.6)	251.8 (7.0)	4.1	1.7

주: ()는 전년대비 증가율을 의미함.

자료: 대한민국정부,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06. 10.

□ 2006~2007년 기간 중 조세부담률은 20.6~20.7% 수준으로 전망됨

- NABO는 2006~2007년 기간 중 조세부담률을 20.6% 수준으로 전망
- 행정부는 2006년 조세부담률을 20.7%로, 2007년 조세부담률을 20.6%로 전망

[표 4] 2006~2007년 조세부담률 비교

(단위: 조원, %)

	NABO			행정부		
	조세	부담률		조세	부담률	
		국세 부담률	지방세 부담률		국세 부담률	지방세 부담률
2006	20.6	16.2	4.4	20.7	16.3	4.4
2007	20.6	16.3	4.3	20.6	16.3	4.2

주: 지방세 부담률은 행정부의 협조를 얻어서 계산함.

자료: 대한민국정부,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06. 10.

II. 예산총칙 등 분석

1. 예산총칙 분석

가. 세입·세출예산안 총액(제1조)

-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액은 일반회계는 157조 9,873억원, 16개 특별회계는 44조 2,846억원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경 대비 일반회계는 11조 248억원(7.5%)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12조 9,674억원(22.6%) 감소하였음.

[표 1] 2007년도 회계별 예산안 총액

(단위: 억원, %)

	2006(제1회 추경)	2007예산(안)	증감액	증감률
일반회계	1,469,625	1,579,873	110,248	7.5
특별회계	572,520	442,846	-129,674	-22.6

자료: 대한민국정부, 「2007년도 예산안」, 2006.

- 2006년도와 비교하여 2007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이 증가하고, 특별회계 예산안이 대폭 감소한 것은 2007년도에 8개의 특별회계 및 4개 기금이 통폐합되고, 폐지된 일부 특별회계 및 기금이 일반회계 등으로 통합된 것이 주요 원인임
- 2007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정부가 일부 특별회계 및 기금을 정비한 것은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예산체계의 단순화로 재원배분의 파악을 용이하게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 하지만 특별회계나 기금의 정비는 관련 법률의 개정을 전제로 하는데 국회에 관련 법률이 계류 중인 바, 정부는 관련 법률안의 개정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나. 국가의 차입금 한도액 또는 국채발행 한도액(제9조)

- 2007년도 예산안 예산총칙에 재정차관도입 등에 따른 국가의 차입금 한도액 또는 국채발행한도액은 공공자금관리기금 52조 6,000억원, 국민주택기금(국민주택채권) 11조 5,000억원, 교통시설특별회계 600억원 등 총 64조 1,600억원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경(81조 8,600억원) 대비 17조 7,000억원이 감소하였음.
 - 2007년도에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차입금 및 국채발행한도액의 규모가 많이 줄어 든 것은 2006년도에 공적자금의 국채전환이 완료되어 공적자금상환기금의 국채발행한도액이 대폭 감소한데 주로 기인함.
 - 한편, 2007년도 일반회계 적자보전용 국채발행규모가 8조 7,000억원으로 계획되어 있는 바, 최근에 국가채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일반회계 적자보전용 국채발행 한도액에 대한 보다 신중한 검토와 국가채무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다. 목적예비비(제13조)

- 2007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중 목적예비비 규모는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과 같은 1조 5,000억원임.
 - 정부는 재해추경을 제외한 최근 5년간('02~'06)의 목적예비비 평균금액으로 2007년도 목적예비비 예산안을 편성하였는데, 재해복구비 일부를 각 소관부처 일반회계에 나누어 계상하거나 재해복구기금을 신설하는 등 재해복구비를 본예산에 계상함으로써 재해대책예비비를 가급적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참고로 2007년부터 시행되는 「국가재정법」에서는 일반예비비의 지출한도를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으로 한도를 설정해 놓고 있으며, 공무원의 보수 인상을 위한 인건비 충당용 목적예비비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향후에는 기존의 봉급조정수당 등을 목적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될 것임.

2. 국고채무부담행위

가. 2007년도 국고채무부담행위 예산안 개요

□ 2007년도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총 2조 6,889억원으로서 2006년도 예산 대비 2,766억원(11.4%)이 증가함. 일반회계에서 1,766억원, 특별회계에서 1,000억원이 증가함

- 일반회계에서는 국방부의 장비유지·병영시설 등 경상운영비 사업에 1조 7,853억원(81.6%), 외교통상부의 재외공관국유화 사업에 230억원(1.1%), 방위사업청의 방위력개선비 사업에 207억원(0.9%), 해양경찰청의 함정 건조 사업에 3,598억원(16.4%)이 편성됨.
- 특별회계에는 전액 일반국도·국도대체우회도로·일반공항 건설사업 5,000억원이 편성됨.

나. 2007년도 국고채무부담행위 문제점

- 국가채무는 1996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일정한 규모로 유지하고 있어 국고채무부담행위가 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1995년 6.32%에서 2007년 0.89%)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국고채무부담행위의 증가는 전체 국가예산 측면에서 볼 때 차기연도에 지불해야 할 상환금이 증가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예산 운영상의 부담감을 줄 수 있음.

- 건설교통부 소관 국고채무부담행위가 2006년도에 이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볼 때, 과다하게 커지는 현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있음.

3. 명시이월비

가. 2007년도 명시이월비 개요

□ 2007년도 명시이월비는 총 869억원으로서 2006년도 예산 대비 454억원 (34.3%)이 감소함

- 해외여건 변동으로 인한 외자장비 도입지연 및 신장비 개별지연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전력투자비에 전액 편성되었음.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명시이월비는 향후 정세변화에 따라 당해연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편성되는 예산으로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볼 수 있음. 매년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국방부의 명시이월비 규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 있음.

4. 계속비

가. 2007년도 계속비 예산안 개요

□ 2007년도 예산안 기준으로 계속사업 연부액(총액 10조 4,606억원)은 2006년도 예산 기준 계속사업 연부액(총액 7조 6,499억원)보다 총 2조 8,107억원 (36.7%) 증가하였음

- 2007년도 계속비 사업은 모두 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편성되었는데, 건설교통부 소관 국도건설·철도개량사업과 해양수산부 소관 항만건설 사업에 총 6개 사업이 편성되었음.
- 기간국도10차건설 사업, 지역간선국도 사업 등 4개 사업이 2006년보다 예산이 감소하였고, 장항선개량 사업은 2006년과 동일한 예산을 유지하였으며, 지역간선국도3차건설 사업이 2007년도에 신설되었음.

나. 계속비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우리나라의 경우 계속비 예산제도가 잘 활용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 계속비 제도는 중·장기 대형사업의 계획성과 일관성을 확보해 주고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해주는 장점이 있음.
 - 그러나 계속비 예산이 많아질수록 재정의 경직성이 높아지면서 재원의 합리적 배분을 어렵게 하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음.
 - 따라서 계속비 예산제도로 인해 재정의 경직성이 높아지는 것을 적절히 고려하면서 계속비 예산으로 편성된 사업 수 및 그 금액을 증가시키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계속비 예산으로 편성되는 사업의 성격이 매우 제한적인 측면이 있음.
 - 「예산회계법」 제22조에 따르면 계속비 예산은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 사업’을 그 대상으로 하는데 현재 건설공사인 SOC사업만이 편성되고 있음.
 - 따라서 현재 계속비 예산제도의 장점을 적절히 활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계속비 예산으로 편성되는 사업을 중·장기 대형 제조 사업이나 연구개발 사업들로 다양화할 필요성이 있음

5. 총액계상예산사업

가. 2007년도 총액계상사업 예산안 개요

- 2007년도에 총액계상예산사업은 총 3조 2,235억원이 편성되어 전년대비 0.5%의 감소율을 보였음. 특히 산업자원부에 편성된 예산이 42.2%의 높은 감소율을 보여 총액계상예산사업 예산의 감소를 초래했음.
 - 7개 부처에서 16개 사업이 편성되었는데 2006년도에 비해 방위사업청의 편제장비 보강 사업이 국방부로 통합되면서 사업수가 3개 감소하였음.
 - 최근 국회의 예산심의를 제한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그 편성 사업 수 및 금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나. 총액계상예산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총액계상예산사업은 총액만으로 국회의 예·결산심사를 거치게 되면서 국회의 예산에 대한 통제권을 제약하는 문제점이 있음.
 - 내년 시행되는 「국가재정법」 제37조에서는 예산배정 후 사업의 세부시행계획을 제출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세부집행실적을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제58조에서는 국회의 결산제출 시 세부사업별 집행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회계연도 중간에도 집행과정을 파악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총액계상예산사업의 대상사업에 대한 근거 규정의 의미가 다소 모호하고 포괄적인 측면이 있음.
 - 2006~2007년도에 편성된 대상사업을 분석해보면 ‘기타 대규모 투자 또는 보조사업’이 사업 수 및 사업금액에 있어 70% 이상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현재 기획예산처에서는 내년 「국가재정법」 시행을 앞두고 「국가재정법 시행령」에 규정될 총액계상예산사업의 대상사업 기준을 연구 중인데, 기준을 결정할 때는 「예산회계법」과 달리 보다 제한적이고 엄격한 선정 기준이 정해져야할 것임.

제2부 중점 분석

I. 프로그램예산제도 도입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1. 프로그램예산제도의 의의 및 유용성

- 프로그램예산제도는 현재의 투입위주 품목별 예산운영 방식과 달리 정책목표를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 단위로 운영하는 예산제도를 말함.
 - 프로그램예산제도에서 프로그램이란 동일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위사업(activity)들을 묶은 상위사업을 의미하며, 단위사업은 현행 세세항을 사업성격별로 통합·단순화한 단위이거나 그 자체만으로 의미 있는 세세항을 말함.

- 프로그램 예산제도 도입으로 인하여 국가재정운용이나 국회의 예결산심의시 기존의 예산제도에 비하여 유용한 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첫째, 프로그램예산제도는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재정개혁 과제인 국가재정운용계획,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 등을 프로그램을 공통된 기본단위로 하여 상호 연계·운영함으로써 전략적 재원배분과 효과적인 성과관리를 가능하게 함.
 - 둘째, 현재는 중기예산구조(분야-부문-…)와 단년도 예산구조(장-관-항-…)가 상이한데, 프로그램예산제도는 예산구조를 하나로 통일(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하여 중기와 단기의 연계가 가능해짐.
 - 셋째, 현재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는 세세항 중심의 재원배분을 회계·기금의 구분 없이 유사사업으로 통합한 프로그램, 단위사업으로 재원배분을 함으로써 유사·중복 사업 검토와 성과중심의 재원배분을 용이하게 함.
 - 넷째, 예산과 결산을 모두 동일한 프로그램 및 단위사업 단위로 운용하고 예산시스템과 회계시스템을 통합 구축하여 예산과 결산을 프로그램과 단위사업을 기본 단위로 연계·환류가 가능해 짐.

2. 2007년도 프로그램예산안 편성구조

□ 정부가 편성하여 제출한 2007년도 프로그램예산안은 현행 “장·관·항·세항·세항” 체계를 “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 체계로 개편한 것인데, 이를 비교하여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음.

[표 1] 현행 예산구조와 프로그램예산구조의 비교

현행		개편	
①	장(28개)	대기능	① 분야(16개) (현행)장·관·항 → (개편)분야·
②	관(76개)	중기능	② 부문(68개) 부문
③	항(963개)	소기능	③ 프로그램(771개) (현행)항·세항 → (개편)프로그램
④	세항(2,413개)	실·국	④ 단위사업 (3,431개) (현행)세항·세세항·세사업 → (개편)단위사업
⑤	세세항(8,041개)	세부사업	단위사업은 예산서 체계 및 예산심의의 최소단위
⑥	세사업	세부사업 (세세항의 지역별 분류 등)	
⑦	목(49개)		⑤ 목(23개)
⑧	세목(102개)		세목(90개)

자료: 기획예산처 디지털예산·회계기획단.

3. 프로그램예산제도 도입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가. 프로그램예산구조 측면

- 첫째, 현행 조직구조 하에서 운용되도록 설계된 프로그램예산구조를 다부처 사업의 파악도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 둘째, 부처별로 적절한 포괄범위에 입각한 적정 수의 프로그램을 설정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며,
- 셋째,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한 프로그램에 어느 정도의 단위사업이 포함 되는 지가 적정한지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야 할 것임.

나. 다른 재정개혁과의 연계성 측면

- 첫째, 프로그램에 기반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운용하는 각 부처와 자원배분 방향과 규모를 결정하는 재정당국은 긴밀하게 협의해야 할 것임.
- 둘째, 프로그램예산제도의 근본취지가 부처에게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하는데 있는 것이므로 지출한도의 설정은 종전대로 부처별·분야별·부문별로 하고, 프로그램단위의 예산편성은 사업부처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임.
- 셋째, 프로그램예산제도 도입초기부터 성과관리제도와 연계시키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프로그램별이나 단위사업별로 올바른 성과목표나 성과지표를 개발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임.

- 넷째,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은 프로그램예산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는데 필수불가결한 기술적 장치이므로 시스템의 개발 및 보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다. 제도개선과제

- 첫째, 프로그램예산제도가 도입되면 종전보다 정부의 예산편성이나 집행의 자율성이 커지게 되는데, 이에 대응하여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예결산 심의대상인 입법과목을 단위사업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둘째, 프로그램예산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운영에 따른 구체적인 피드백이나 인센티브 제도를 개발해야 할 것임.
- 셋째, 프로그램예산제도 하에서 사업부처의 재정운용의 자율성 제고에 대응하여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부사업별 지출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철저히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를 국회에도 공개해야 할 것임.
- 프로그램예산제도의 도입으로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부처의 자율성 제고에 대응한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의 개발이 중요함.
 - 성과측정 지표는 성과목표의 달성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현행 투입(input), 과정(process), 산출량(output) 중심의 성과지표를 결과(outcomes), 영향(impact) 위주의 지표로 개발해야 할 것임.
- 2006년 4월부터 발효되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과 2007년 시행되는 국가재정법[제8조(성과중심의 재정운용)]에 의하여 재정의 성과관리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되는데 프로그램예산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을 통하여 재정의 성과목표 달성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

II. 재정 성과에 따른 2007년도 예산안 분석

- 2006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중심으로 -

1. 2006년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개요

- 최근 정부는 중기 재정운용과 예산의 총액배분 자율편성과 더불어 성과관리제도의 도입을 포함한 재정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5년도에 이어 2006년에도 40개 부·처·청의 577개 사업, 예산액으로 35.3조원 규모의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음
- 2007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결과를 활용하여 세출 구조조정을 하였다고 발표한 바 있음
 - 미흡 등급을 받은 65개 사업에 대해서는 10% 삭감 원칙
- 평가 결과, 우수 등급이 30개, 다소우수가 94개, 보통등급이 388개 그리고 미흡등급이 65개 사업으로 나타났음
 - 분야별로는 최근 재정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 분야가 경제 분야에 비해 평가 점수가 낮게 나타났으며, 사업유형별로는 직접수행 방식보다 민간·지자체 보조 등의 간접수행 방식의 사업이 점수가 낮게 나타났음

2. 2007년도 예산안 반영 점검

-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평가결과가 각 부처의 예산요구액과 편성액에 전반적으로 반영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미흡 등급을 받은 1조 1,462억원 규모의 65개 사업은 2007년에 5,428억원 규모로 편성되었으나 이런 큰 폭의 감액 편성은 4,920억원 규모의 건설교통부 기간국도 8차 건설사업이 사업 종료로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이를 제외하면 전년대비 약 17% 정도 감액 편성된 수준임
- 미흡등급을 받은 65개 사업 중 10개 사업은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못한 반면 16개 사업은 전년과 같은 수준이거나 오히려 증액 편성되었음
- **분야별**로 보면, 사회 분야의 미흡 등급을 받은 사업 24개 중 4개 사업이 예산편성 되지 않았으며 이것은 모두 문화·관광 분야의 사업이며, 국방 분야의 5개 사업은 2007년에 예산을 52.7% 증액 요구하였으나 집행 실적이 부진한 2개 사업이 반영되지 않아 전년대비 9.6% 감액·편성되었음
- **사업유형별**로 보면, 미흡 등급을 받은 사업 중 직접수행 방식보다 간접수행방식의 사업이 많으며, 간접수행방식 중에서 민간·자치단체에 대한 보조사업의 예산은 각각 전년대비 3.8%, 9.4% 감액·편성되었으며, 출연·용자 방식의 사업은 각각 56.9%, 38.0% 감액·편성되었음

[표 1] 평가대상 사업의 2007년도 예산안 편성 현황

(단위: 개, 억원, %)

	사업수	2006	2007(안)		2007(안)	
			요구액	비율(a)	편성액	비율(b)
우수 (85점이상)	30	8,894	9,467	6.4	9,337	4.9
다소우수 (84~70점)	94	33,086	35,525	7.4	35,254	6.6
보통 (69~50점)	388	299,516	296,902	-0.9	290,563	-3.0
미흡 (50점 미만)	65	11,462	6,066	-47.1	5,428	-52.6
합	577	352,958	347,960	-1.4	340,582	-3.5

주: 1. 비율(a) = (2007년 예산요구액 - 2006년 예산액) / 2006년 예산액.

2. 비율(b) = (2007년 예산편성액 - 2006년 예산액) / 2006년 예산액.

자료: 기획예산처.

3.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연차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2006년 평가 대상이었던 577개 사업의 예산 규모는 35조원 수준이며 2006년에 정부 총지출 규모 224조원의 15.7% 수준임
 - 2006년까지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 10억원 미만 사업을 포함하는 등, 향후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대상사업 범위를 확대해 갈 필요가 있음.

-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결과가 부처의 재정운용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평가결과의 신뢰도를 높여 이에 대한 부처의 동의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의 역할과 사업의 특성이 잘 반영될 수 있는 합리적인 지표의 개발이 필수적임**

- 평가 결과와 예산의 연계는 성과관리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효과적인 측면이 있으나 차년도 예산편성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보다는 예산편성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평가결과로 나타나는 **제도개선 제안(recommendation)**을 부처가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 **부처의 인식 제고와 참여**를 위해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유인구조를 갖추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임
 - 성과관리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각 부처의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성과 관리와 평가, 예산과의 연계에 대한 부처의 인식은 아직 낮은 수준임

III. 저출산·고령사회대책 관련 재정분석

1. 2007년도 저출산·고령사회대책 관련 재정현황

- 정부는 세계 최저수준의 합계출산율과 2050년경에 세계 최고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노인인구비율 등 저출산·고령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06년에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발표하였고, **2007년에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총 5조 844억원을**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에 투자할 계획임
 - ‘기본계획’은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저출산·고령사회의 성장동력 확보 등 3대 분야에 걸쳐 70대 이행과제, 236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총 32조 722억원 규모**의 재정을 투자할 계획임
 - 2007년도 저출산·고령화대책 관련 재정은 기본계획상의 2007년도 투자 규모보다 **6,135억원 삭감된 5조 844억원으로** 편성됨

[표 1] 저출산·고령사회 대책관련 재정 현황: 2006~2007년

(단위: 억원, %)

	기본계획상 재정투자계획			2007(안)
	2006	2007	구성비율	
저출산 분야	21,051	32,489	57.0	31,545
고령화 분야	8,378	12,809	22.5	10,129
성장동력확보	8,039	11,614	20.4	9,137
교육·홍보 분야	9	67	0.1	33
기존사업	37,477	53,776	90.2	(-)
신규사업	-	3,203	9.8	(-)
합 계	37,477	56,979	100.0	50,844

주: 1)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상의 계획으로, 「국가재정운용계획」과는 상이함.

2) 2007년도(안)은 국비(예산 및 기금)와 지방비를 합산한 금액임.

자료: 저출산고령사회대책본부 내부자료(국회예산정책처 재구성).

2. 재정소요 증가에 대비한 재원확보방안의 미흡

- 저출산·고령화대책의 재원확보와 관련하여 향후 저출산·고령화의 진전으로 정부의 재정지출소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정부는 세출구조 조정이나 조세감면의 축소 등 원론적 대책만 제시할 뿐 **2007년도 예산안을 통하여 구체적인 재원확보방안을 제시하지 않음**
 - 기본계획 수립시 재원확보방안을 신중히 검토하지 않고, 예산안 편성시 관련사업들이 부처 우선순위에서 밀려남에 따라, **대다수 사업에서 기본계획상의 투자규모보다 2007년도 실제 편성금액이 삭감되었음**
 - 특히 저소득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사업 534억원(건교부), 외국적동포의 활용강화 24억원(법무부), 학교건강관리기능강화 14억원(교육부, 복지부), 아동학대예방 및 방임아동보호 6억원(복지부) 고령친화제도 표준화 확대 5억원(산자부)은 재정투자계획이 2007년도 예산안 편성시 삭제됨

- 조세감면의 축소는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검토되어야 함. 우선 **사업필요성이 낮거나 성과가 미진한 사업들에 대한 세출구조조정 및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과약을 제고 등이 선행되어야 추가재원확보를 위한 국채발행이나 조세신설 등에 있어 국민적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임**

3.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정책개발노력의 부족

-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을 위한 정책개발노력과 관련하여, **2007년도 저출산·고령화 대책관련 재정을 보면 90% 이상이 기존사업들에 투자되는데 반해, 신규사업은 방과후학교 내실화 2,239억원, 국내입양활성화 274억원 및 민간보육시설 서비스개선지원 3,213억원 등을 포함하여 10% 미만임**
 - 특히 2007년 저출산·고령화대책 관련 **총재정규모의 56%가 보육과 양육**

등 특정사업에 지출되어 저출산·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새롭게 대두되는 정책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노력이 부족함

- 현행 저출산·고령화대책은 신규사업 53개를 포함한 최초의 종합계획임에도 **사업들간의 중복과 연계부족** 등으로 인하여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한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개발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음. 또한 기존의 사업규모에 근거해 점증적으로 재정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합리적인 자원 배분이 결여됨은 물론 관련 제도에 대한 개선 노력이 부족함

4. 타당성 있는 사업선정 및 제도개선 노력의 필요

- 타당성 있는 사업선정과 관련된 문제로서, 저출산은 혼전·결혼·출산·양육 등 생애경로의 각 단계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영향을 미쳐서 발생하는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포괄적 접근이 부족함
 - 저출산 대책이 **보육기반구축에만 집중되어 있어**,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데 필요한 모성보호제도의 강화가 미흡한 실정임. 그리고 민간 보육시설에 대한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노력이 부진함
 - **고령화대책 역시 노후소득보장, 의료보장 및 노인일자리 창출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향후 막대한 재정지출이 예상되는 국민연금제도의 개혁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대책이 제외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다른 고령화대책사업을 수행하는데 제약이 될 수 있음
 -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경제활동인구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성장동력 확보대책이 요구되며**, 또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들이 제시되어야 함에도 기존사업들을 단순히 종합함으로써 재정투자규모에 비해 사업효과가 반감될 수 있음

- 정부, 기업 및 가계 3자 간에 합리적 재원분담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사업수행과정에서 이에 대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또한 혼인 및 출산, 양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에도 이를 위한 제도개선 및 국민적 공감대형성노력이 미흡함

IV.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관련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1. 삶의 질 향상 관련사업 현황

- 삶의 질 향상 관련사업은 농산어촌의 열악한 생활여건을 개선할 목적으로 2009년까지 20조 2,731억원이 투입되는 다부처사업이며, **2007년도에 4조 1,960억원이 투입될 예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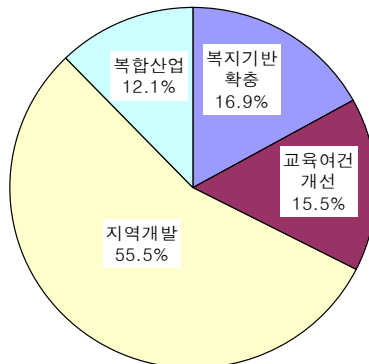
[표 1]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의 자원조달

(단위: 억원, %)

	2004	제1차 삶의질 향상 5개년 투용자					합계
		2005	2006	2007	2008	2009	
국비	14,895	15,101	18,981	23,938	27,117	30,390	115,527
119조원 자원 관련재원	5,767	8,778	12,361	15,958	18,304	21,461	76,862
지방비	9,128	6,323	6,620	7,980	8,813	8,929	38,665
기타	382	675	1,179	1,210	1,238	1,243	5,545
합 계	24,860	28,140	35,854	41,960	46,101	50,676	202,731

자료: 농림부, “제1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 (2005~09)”, 2005. 6.

[그림 1] 부문별 투용자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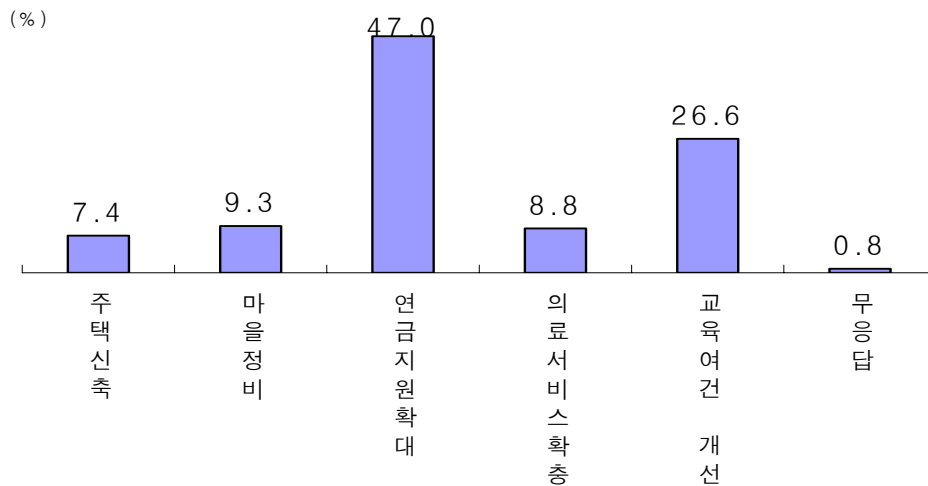


자료: 농림부, “제1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 (2005~09)”, 2005. 6.

2. 삶의 질 향상 관련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농산어촌의 열악한 생활여건을 고려할 때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사업집행 체계의 이원화, 사업내용이 유사한 사업이 여러 부처에서 동시에 실시됨으로 인해 비효율성 문제가 발생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
 - 첫째, 삶의 질 향상 관련사업은 새로운 재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아니며, 119조원 투융자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37.9%에 달함.
 - 둘째, 부문간 자원배분과 농림어업인이 바라는 사업([그림 2] 참조)과는 괴리가 있고, 자원배분이 농림어업인들이 덜 원하는 ‘지역개발’ 부문에 편중되어있음([그림 1] 참조). 농림어업인들의 정책적 수요를 감안하여 자원배분을 재편성할 필요가 있음.

[그림 2] 농촌정책 중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자료: 농림부, “농업·농촌종합대책 점검관련 여론조사 관련 보도자료”, 2006. 8.

- 셋째, 사업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성과 소액분산지원으로 인한 사업효과가 미비하므로, 사업을 통폐합하고, 필요사업에 대한 집중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정책 및 사업을 총괄·조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구로 ‘삶의 질 향상 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주무부처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사업추진체계를 정비한 후, 지역개발 관련사업과 농촌관광마을사업의 경우 각 부처의 사업을 기능별로 통폐합할 필요가 있음.
 - 농림어업인의 수요를 고려하여 복지기반확충 관련사업과 교육여건 개선 관련사업의 자원배분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넷째, 상향식 정책집행이 실시되기 위해서 지역의 주체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지역 형평성을 고려할 때 농산어촌의 기초생활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지만, 개선하는 방식이 지금까지의 하향식 보조사업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음.
 - 지역에서 원하는 정책을 상향식으로 전달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나, 장기간 하향식 보조사업에 익숙해져 있어 지역주민들의 자율적 참여의식이 부족한 현실을 고려할 때, 지역의 주체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먼저 해결될 필요가 있음.

V. 임대형(BTL) 민간투자사업의 분석과 개선방안

1. BTL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현황

- 2007년도 BTL 한도안은 9.9조원으로 전년대비 19.3% 증가되었고, 집행규모로는 2007년(안)에는 3.5조원으로 전년대비 133.3% 증가될 것임
 - 2007년도에 실시할 BTL 대상시설별 한도액은 16개 사업 분야에 총 9.9조원 규모인데, 국가사업은 일반철도 2개 노선을 비롯한 7개 분야에 총 6조 6,105억원, 국고보조 지자체 사업은 노후 하수관거 정비 사업을 비롯한 8개 분야에 총 1조 5,122억원이고, 예비 사업한도액은 4,061억원임

[표 1] 2007년도 BTL한도(안) 및 집행전망

	2005 실적	2006 계획 A	2007 계획(안) B	증감률(%) (B-A)/A
BTL 고시규모 (집행규모)	3.8조원 (0.13조원)	8.3조원 (1.5조원)	9.9조원 수준 (3.5조원)	19.3 (133.3)

자료: 기획예산처, 「2007년 나라살림 주요내용 - 예산·기금·국가재정운용계획」, 2006. 10.

2. 고시 및 협약체결의 실적 부진

- 2005년도의 고시 대비 협약체결 실적, 2006년도의 계획 대비 고시 실적이 저조하므로 정부는 대상사업 선정원칙을 확립하여 실적을 제고시켜야 함
 - 2005년에 고시된 BTL 민간투자사업은 총 86개 사업으로 사업 규모는 총 3조 7,924억에 이르는데, 실시협약이 체결된 사업은 60개 사업으로 사업 규모는 2조 6,378억원이었고, 협약체결 실적을 고시 실적에 대비하여 보면 사업수로는 69.8%, 금액으로는 69.6%에 불과한 실정임

- 한편, 2006년에 계획된 BTL 사업은 총 163개 사업으로 사업 규모는 총 8조 3,147억원에 이르는데, 고시된 BTL 사업은 사업수로는 45개(27.6%), 금액으로는 3조 7,599억원(45.2%)으로 집계되었음

[표 2] BTL 민간투자사업의 부처별 추진 현황

(단위: 10억원, 건, %)

	2005년 사업				2006년 사업			
	고시		협약체결 실적		계획		고시 실적	
	금액	사업수	금액	사업수	금액	사업수	금액	사업수
교육부	1,883.1	48	1,542.0 (81.9)	40 (83.3)	2,676.0	81	750.6 (28.0)	17 (21.0)
국방부	358.3	6	48.0 (13.4)	2 (33.3)	1,317.8	28	423.5 (32.1)	7 (25.0)
문화부	398.6	12	70.0 (17.6)	1 (8.3)	303.7	15	14.0 (4.6)	1 (6.7)
복지부	59.8	2	0.0 (0.0)	0 (0.0)	131.7	4	0.0 (0.0)	0 (0.0)
환경부	1,052.8	17	938.1 (89.1)	16 (94.1)	2,307.0	29	1,408.9 (61.1)	18 (62.1)
노동부	39.8	1	39.8 (100.0)	1 (100.0)	65.1	1	0.0 (0.0)	0 (0.0)
건교부	-	-	-	-	1,162.9	2	1,162.9 (100.0)	2 (100.0)
과기부	-	-	-	-	79.4	3	0.0 (0.0)	0 (0.0)
합 계	3,792.4 (100.0)	86 (100.0)	2,637.9 (69.6)	60 (69.8)	8,314.7 [100.0]	163 [100.0]	3,759.9 [45.2]	45 [27.6]

주: 1. 2006년 10월 9일 기준임.

- 2. ()안은 2005년에 고시된 사업 중에서 실시협약이 체결된 사업의 비중이고, []안은 2006년에 계획된 BTL 사업 중에서 고시된 사업의 비중임.

3. BTL 민간투자사업의 계획성 제고 필요

- 지역 주민이 사업계획 수립 이전에 BTL 민간투자사업 전과정에 참여하는 방안에 대한 내용을 「국가재정법」 제100조의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와 유사한 규정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BTL 사업계획을 보면 알 수 있듯이 BTL 민간투자사업은 토목이나 건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아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은 당연함¹⁾
- 주무관청이나 주무부처는 사업계획 수립 이전에 전문가 등의 협조를 구해 예비타당성조사에 준하는 기초 수요조사를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면, 국방부의 군인 아파트 및 독신자 숙소와 교육부의 기능대학 기숙사의 경우 신축해야 하는가를 조사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지방의 경우 임대와 분양이 제대로 되지 않는 아파트와 주택 등도 많이 있을 것이므로, 해당 지역의 ‘수요의 적정성’을 파악해야 함
- 기획예산처의 「2007년도 예산안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에 대상사업의 선정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기되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 첫째, 대상사업 선정원칙이 2006년에 확립되어 시행 초기이므로 주무관청, 주무부처, 기획예산처의 선정업무 실적을 현재 전혀 알 수 없음
 - 둘째, 대상사업 선정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자료가 종합 정리되어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절차가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임
- 따라서 주무관청이나 주무부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신청할 때 대상사업의 선정원칙을 준수해야 하고, 이와 관련된 자료는 종합보고서의 형태로 국회에 제출하는 제도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음

1) 기획예산처, “BTL사업 전과정에 주민이 참여한다”, 보도자료, 2006. 10. 17.

4. BTL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국회의 통제기능 강화 필요

- 감사원에 의하면 “BTL 방식으로 8조원의 민자사업을 추진할 경우 상환기간에 매년 5,500억~7,000억원의 리스료 예산(매년 8조원 규모의 BTL 추진시, 20년 차에는 연간 11~14조원의 리스료 예산 필요)이 필요하다”²⁾고 함
 - BTL 민간투자사업은 재정부담의 이연과 민간의 창의성 활용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주무관청·주무부처·기획예산처가 계획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가까운 장래에 큰 재정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단점도 내포하고 있음.

- 현재 「헌법」 제89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의2에 의해 BTL 민간투자사업의 한도액은 국회에 보고만 하는 절차가 있는데, 적정 한도액에 대한 상세한 자료 제출 및 한도액에 대한 심의를 「국가재정법」에 법제화시켜 국가재정의 통제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음

- BTL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상 「타당성 및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를 수행한 다음, 그리고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에 BTL 민간투자의 개별사업이 국회의 심의를 받아야 할 것임

- BTL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조항을 「국가재정법」과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명시해야 함
 - 종합보고서의 내용은 ①계획·고시·협약체결 실적, ②사업계획 수립 이전의 주민참여 실적, ③주무관청·주무부처의 기초 수요조사 실적, ④주무관청·주무부처가 기획예산처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⑤한도액 설정에 관한 사항, ⑥타당성 및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에 관한 사항, ⑦기타 BTL 사업추진절차에 있는 관련 서류 등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임

2) 문화일보, “정부 주도 10兆 민자사업 제동”, 2006. 9. 19.

- BTL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해 국회가 BTL 민간투자사업을 심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문기관을 국회 내에 수립할 필요가 있음.
 - 국회예산정책처의 기능보강을 통하여 동 업무를 수행하는 방안도 구상할 수 있음.

가. 학교 BTL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에 대한 개선 필요

- 학교시설 공사에 대하여 BTL 민간투자사업 방식의 적용은 기업 규모간 수주 물량의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켰고, 특히 지방 건설업 및 중소 건설업의 생존 기반을 크게 위축시킨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교육인적자원부를 비롯한 중앙정부는 지방에 소재한 중소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첫째, 50억원 미만의 소규모 학교시설 사업에 대해서는 BTL 민간투자사업 방식보다는 기존과 같은 재정사업 방식으로 추진해야 함.
 - 둘째, 학교 BTL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참여 자격 및 조건을 제한하여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참여를 일정 수준 보장해야 할 필요가 있음.

VI.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1. 2007년도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 예산안

- 2007년도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 관련 예산안은 총 2조 8,270억원으로 전년대비 15.3% 감액되었음.
 - 혁신형 중소기업 금융지원 예산안은 2조 4,260억원으로 전년대비 20.3% 감소한 반면, 혁신형 중소기업 연구개발 예산안은 4,010억원으로 전년대비 36.4% 증가했음.

[표 1]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 예산안

(단위: 억원, %)

	2006예산	2007예산안	증가율
중소기업 금융 지원	30,430	24,260	-20.3
응자사업	19,280	19,510	1.2
신용보증기금 출연	9,000	3,300	-63.3
모태펀드 출자	2,150	1,450	-32.6
혁신형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	2,939	4,010	36.4
합 계	33,369	28,270	-15.3

자료: 대한민국정부, 「프로그램예산체계에 의한 2007년도 예산안 설명서」, 2006.

- 금융지원 예산안이 감소한 것은 최근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 대출이 증가하고 기업의 연체율 하락하는 등 민간금융시장의 중소기업금융 사정이 호전된 것을 반영하고 있음.

2. 혁신형 중소기업 금융지원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융자사업 성과 분석

-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융자사업 성과 분석 관련 연구용역보고서에 따르면 개발및특허기술사업화 융자사업과 중소벤처창업지원 융자사업은 매출영업이익률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는 반면, 경영혁신지원 융자사업의 세부사업인 구조개선사업과 협동화사업은 매출영업이익률을 개선시키는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왔음.¹⁾
 - 개발및특허기술사업화 융자사업의 매출영업이익률 개선효과는 지원 후 2년 동안만 있었고, 그 이후에는 개선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 그러므로 중소기업청의 융자사업 예산안의 재원배분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과 창업초기 벤처기업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함.

[표 2] 중소기업진흥공단 융자사업 매출영업이익률 개선 효과

	구조개선	협동화	개발기술	중소벤처
총 효과	0.0158	0.1142	0.1601**	0.3481**
1년 후	0.0306	0.1794*	0.1677**	0.4089**
2년 후	0.0036	0.0749	0.1775**	0.3311**
3년 후	0.0135	0.0456	0.0917	0.3352**
4년 후	0.0141	0.0738	0.1749	0.0946
5년 후	-0.0430	0.1537	-	0.4011**
6년 후	0.0344	0.0890	-	0.1439

주: ** 유의수준 5% 이내, * 유의수준 10% 이내에서 통계적 유의도.

1) 김준기 외, 「중소기업 정책자금 성과분석 및 역할 재정립 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06.

나. 중소기업 지원 용자사업의 사고율과 재정부담 문제

□ 중소기업 지원 용자사업의 재정부담 비교를 보면 **재정용자사업의 직접대출의 손실은 결국 전액 정부 재정 부담으로 귀결됨.**

- 이에 반해, 대리대출은 대손금을 은행이 부담함

[표 3] 중소기업 지원 용자사업의 재정부담 비교

	직접대출	대리대출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출자
대상기업	혁신형기업	일반기업	경영혁신형기업, 일반기업	기술혁신형기업, 일반기업	벤처기업
신용평가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은행	신보	기보	투자조합
손실부담기관	정부	은행	신보 85%, 민간 15%	기보 85%, 민간 15%	정부·민간
재정부담	대손발생 전액	이차보전(수수료)	대손발생 일부	대손발생 일부	투자손실분

주: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 지역신보의 손실부담 비율은 연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음.

-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의 용자사업은 시중은행의 중소기업대출 금리보다 낮은 정책금리로 장기간 대출되는 유리한 조건임.**

-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의 용자사업과 신용보증사업은 모두 민간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임
- 그러나 양 사업의 지원조건이 크게 다른 경우 역선택(adverse selection)원리에 의해서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에는 우량중소기업들이 몰려드는 반면, 신용보증기관에는 상대적으로 덜 우량한 중소기업들이 신청할 가능성이 높음.)

2) 중소기업진흥공단 용자사업은 2006년도에 4.4% 기준금리로 대출되는데 반해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으로 대출을 받는 경우 평균 6% 정도의 대출금리(2006년도 8월 예금

- 더욱이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신용이 좋은 기업에게는 신용대출을 하고 부동산담보 대출로 위험을 어느 정도 회피할 수 있음.
 - 따라서 중소기업청의 융자사업은 신용보증사업에 비 우량중소기업을 확보하기 쉬운 편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접대출 중 신용대출의 사고율은 신용보증기금의 사고율이 비슷한 수준임.
- 신용대출 비중이 높은 직접대출은 담보대출 비중이 높은 대리대출에 비해서 정책자금 본연의 기능을 더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의 직접대출 중 신용대출의 대손금은 향후 정부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중소기업청은 직접대출의 사고율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함.

3. 혁신형 중소기업 연구개발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청의 연구개발 2007년 예산안은 3,600억원임.

[표 4] 2007년 중소기업청 연구개발 지원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억원, %)

	2006 예산 (A)	2007 예산안		
		금액 (B)	증감 (C=B-A)	증감률 (C/A)
기술개발지원(R&D)	2,679	3,600	921	34.4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1,596	1,995	399	25.0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	250	392	142	56.8
기업협동형기술개발	62	100	38	61.3
생산환경혁신기술개발	240	260	20	8.3
산학연공동기술개발	461	803	342	74.2
연구장비공동이용클러스터	0	50	순증	-
산학협력실설치지원	70	0	순감	-

은행 가중평균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6.3%임)에 신용보증 수수료율 1.5%를 더하면 기업이 부담하는 대출금리 비용은 7.5%에 달함.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의 경우, 예산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나 신청업체 또한 증가하고 있어 신청액 대비 지원금액 비율이 2004년 35.6%, 2005년 15.2% 수준인 바, 실질적인 R&D 파급 및 확산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 혁신형 중소기업의 지원수요 충족 및 지원금액의 상향 조정이 필요하므로, 향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이전기술개발사업의 경우 지원대상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의 경우 구매가능성을 고려하여 개발기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가가치 발생 정도를 성공 판정기준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음.
 - 이전기술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³⁾ 특히,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완료 또는 테스트를 마친 기술, 각종 학회지·논문·간행물 등에 수록된 문서화된 기술, 기술 소유권을 가진 기관(대학, 연구기관)과 계약 체결된 기술 등은 지원대상 범위로 설정하기에는 곤란한 측면이 있음.
 -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기술개발 성공판정 후 구매로 이어지기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되며, 경기상황 등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존재함.
 - 이로 인해 성공판정과 구매시점간에 명확한 관계가 설정되어 있지 못하여 기술개발 성공제품에 대해서도 구매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일부 제품의 경우 성공판정과 구매가능성이 연계되지 못한 채, 먼저 성공판정 한 후 사업화 단계를 거쳐 구매를 추진함에 따라 성공판정 제품이 구매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3) 조용현·홍운선, 「중소기업지원 상용화기술개발사업 제도개선 방안」, 중소기업연구원, 2005. 12.

- 동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성공률 기준의 변경을 통해 연구개발 성과에 대하여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하여 연구개발 성과의 실질적 상업화 및 사업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사업성공을 위해서는 연구개발·생산·경영 및 판매에 이르는 종합적인 자문체제 구축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중소기업청의 연구개발사업은 2007년 예산이 대폭 증가되었으며, 향후 타 부처에 비해 열악한 지원과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등으로 인해 꾸준히 증가될 것으로 기대되는 바, 연구개발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 및 평가체계가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음.

VII. 한국철도공사의 적자분석과 개선과제

1. 정부의 한국철도공사 예산지원 현황

- 정부가 한국철도공사에 2007년도에 지원할 예산(안)은 총 1조 586억 원으로서, 2006년 9,093억 원보다 1,493억 원이 증가하였음.

[표 1] 정부의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지원 예산안 내역

(단위: 억 원, %)

	2005년	2006년	2007년	증감액 (B-A)	증감률
	집행	예산(A)	예산(안) (B)		
PSO 보상	3,000	3,486	2,850	-636	-18.2
일반유지보수	1,517	1,486	1,982	496	33.4
시설개량	2,097	2,052	568	-1,484	-72.3
자본재구입 등	1,970	1,069	615	-454	-42.5
경영개선지원	1,000	1,000	4,571	3,571	357.1
시설자동화	-	-	1,000	1,000	순증
일반선로사용료	-	-	1,321	1,321	순증
부채 이차지원 등	1,000	1,000	2,250	1,250	125.0
소 계	9,584	9,093	10,586	1,493	16.4

자료: 한국철도공사 내부자료.

2. 한국철도공사 경영성과

- 철도운영의 만성적인 경영적자와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철도구조개편”에 따라 한국철도공사를 설립하였지만 2005년도 경영실적을 분석한 결과 경영 개선의 효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음.

- 2005년도 영업수익 3조 1,030억원, 영업비용 3조 9,410억원으로 영업손실이 8,380억원이며, 정부지원금을 반영하더라도 4,380억원의 순손실이 발생함. 전 노선의 영업수지가 (-)이며, 일반철도의 수지가 더욱 악화되고 있으며, 원가 대비 운임수준이 평균 68.9%에 그치고 있음.

[표 2] 2005년 경영성과 요약

(단위: 억원)

영업수입	31,030
여객운송	18,517
화물운송	3,119
수탁사업 등	9,394
영업비용	39,410
영업이익	-8,380
정부지원금	4,000
지원금 반영 영업이익	-4,380
영업외손익	-1,689
이자비용	-2,383
당기순이익	-6,069

자료: 한국철도공사 내부자료.

3. 한국철도공사 경영에서 나타난 문제점

- 공익적 특수성을 감안할 필요성이 많은 철도산업의 특성상 공익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적자노선에 대해 정부가 충분히 보상하지 않은 점이 있음.
 - 현재 일반철도 전 노선에서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 공익적 운영으로 발생한 것인지, 비효율적 운영으로 발생한 것인지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으나, 현재 공익적 부분의 보상체계가 공익적 부분의 범위 설정이나 보상근거가 명확하지 못한 면이 있음.

- 철도공사가 부담하고 있는 운영부채 4.5조원 이외에도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시설부채 5.5조원의 원리금 상환을 위해 지급하는 선로사용료 체계는 한국 철도공사의 경영성과와 재무구조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됨.
 - 선로사용료는 2002년 당시 유지보수비와 철도시설 부채를 30년 동안 상환하기 위해 회수해야 할 개념으로 경부선 영업수입의 31%로 산정되었음. 고속철도 실제 수요가 2002년 예측치의 50%수준에 이르고 있고, 부채조달 비율이 타 교통수단보다 상당히 높고, 일반철도와 고속철도 노선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재검토 될 필요가 있음.

- 조직과 인력의 비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 지적되고 있음.
 - 영업비용 40% 이상을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고 1인당 매출액이 1억원으로 공기업 평균 매출액 7억 4,500만원에 비해 상당히 낮고, 1인당 평균임금이 4,500만원으로 국민 평균임금의 1.7배 수준에 이르고 있음.

4. 정부의 「한국철도공사 경영개선 종합대책(안)」 검토

- 정부는 공사 자구노력을 강조하면서 자동화현대화 시설투자 및 고속철도 부채이자 지원에 확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한국철도공사 경영개선 종합대책(안)」을 수립하고 2007년 예산에 반영하였음.
 - 정부는 경영적자의 주된 원인이 과도한 인건비에 있다고 보고 인력운영 효율화 등 한국철도공사의 자구노력을 강조하고 있음.
 - 경영정상화 목표를 2015년에 두고 수지를 맞추기 위한 방식에 기반을 둔 지원방안은 철도운영에서 직면하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철도공사는 평가하고 있음.
 - 정부와 한국철도공사 간 재정분담기준 원칙이나 고속철도 선로사용료에 대한 검토 없이 한국철도공사의 근본적인 적자문제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

5. 철도운영 효율화를 위한 향후 개선과제

- 국가교통체계 차원에서 철도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철도투자를 확충하여 철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할 것임.

- 철도경영에 대해 정부와 공사간의 책임관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기업적 영역과 공공적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업적 영역에서는 시장원리에 따라 공사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고 공공적 영역에서는 분명한 재정부담 원칙 정립과 규제를 통해 정부의 역할을 충분히 할 필요가 있음.

- 정부의 재정부담이 충분치 않고 비수익노선의 유지가 경영을 제약할 경우 한국철도공사는 비수익노선에 대한 합리적인 자구방안을 마련하고 나아가 적자노선을 폐지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적절한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철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철도경영의 자립화 기반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해외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철도경영자에게 철도부채나 선로사용료 부담을 적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철도경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국철도공사의 자구노력에 대한 의지가 중요하므로 조직과 인력운영을 슬림화하고, 자회사를 정비하고, 다양한 수익원을 창출하는 등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할 것임.

VIII. 핵심인력 양성사업

- 제2차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을 중심으로 -

1. 문제 제기

- 제2차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2006~2010)은 국가경쟁력 있는 핵심인재 양성, 전 국민의 평생 학습능력 향상 등 4가지 정책영역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정책영역별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음.
 - 21C 지식기반사회에서는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가 되는 분야별 창의적인 핵심인력의 체계적 육성과 활용이 관건이며,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융합형 인재육성과 지원시책이 절실하다는 관점에서 ‘미래 유망산업을 이끄는 핵심인력 양성’에 포함된 26개 세부 추진과제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됨.
- 본 중점분석에서는 ‘미래 유망산업을 이끄는 핵심인력 양성’으로 분류된 부처별 사업들과 현행 국가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한 법령과 제도상의 여러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2. 예산안 개요

- ‘미래 유망산업을 이끄는 핵심인력 양성’ 26개 세부사업의 2007년 예산안은 2006년 예산 8,171억 7,000만원 대비 7.3% 증액된 8,770억 7,000만원이며, 과학기술·정보통신·산업자원 분야는 전반적으로 2006년과 비교하여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는 반면, 교육 분야의 예산안이 2006년 5,987억 6,000만원 대비 10.4% 증액된 6,614억 5,000만원으로 책정됨.

[표 1] 미래 유망산업을 이끌 핵심인력 양성사업 총괄

(단위: 백만원, %)

	2006년 예산	2007년 예산안	증감액	증감율
교육 분야(7)	598,760	661,450	62,690	10.4
과학기술 분야(4)	101,300	98,250	△3,050	△3
정보통신 분야(3)	40,900	40,100	△800	△2
산업자원 분야(7)	44,910	44,190	△720	△1.6
기타 분야(5)	31,289	33,060	△1,771	5.7
합 계(26)	817,170	877,070	59,900	7.3

3. 분야별 핵심인력 양성사업에 대한 검토

- 교육 분야의 경우, 고부가가치산업인력 특별양성과정 사업의 예산투자 대비 효과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두뇌한국(BK)21 사업은 많은 대학의 참여를 배려한 연합사업단 체제로 인한 비효율성의 문제를 개선해야 할 것임.
-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의 경우, 과학기술부의 과학/공학연구센터는 정보통신부의 대학ITRC육성지원사업의 ITRC(Information Technology Research Center)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 2000년 이후 9개의 IT관련 공학연구센터가 신규로 선정된 것은 관련 부처간 유사 사업의 조정과 통합에 대한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로 해석됨.
- 산업자원 분야의 전력산업인력 양성 중 기초인력 양성사업의 경우, 인력양성 효과 측면에서 지속성이 있는 연구기자재 구입비·시설비의 비중이 총 정부지원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어, 그 비율을 재조정할 필요성이 있음.

- 기타 분야의 해양생물연구센터건립사업의 경우,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 부지 조성계획, 센터 활용계획 및 운용주체의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확정하지 않고 서둘러 추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업시행 이후에도 관련 사업주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4. 정책적 시사점

- 본 중점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음.
 - 첫째, 고급과학기술인력과 같은 이공계 핵심인력에 대한 연금제도의 도입 및 세제혜택 등 보다 충분한 보상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함.
 - 둘째, 인적자원개발회의의 권한 제고 방안을 강구함에 있어 각 행정부처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검토·심의를 통해 실질적인 예산편성권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연구개발 분야의 과학기술기본법과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넷째, 사업과 관련한 성과평가에 있어 정량적 목표위주의 평가보다는 사업의 진정한 효과를 반영할 수 있는 성과평가체계의 구축이 필요함.
 - 다섯째, 사업 초기단계의 ‘나눠주기’식 예산집행을 방지하고, 사업개시 이후 예산집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진행여부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임.

IX. 전자정부사업 예산안 분석

1. 문제제기

- 참여정부는 “세계 최고수준의 열린 전자정부” 구현을 목표로 ‘정부의 일하는 방식 혁신, 대국민 서비스 혁신, 정보자원관리 혁신, 법제도 정비’ 등의 4대 추진방향과 10개 아젠다, 31개 로드맵, 45개 세부과제 및 주관기관을 선정하여 2007년까지 추진하고 있음.

- 참여정부는 31대 로드맵을 연도별로 목표를 설정해서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음.
 - 2004년에 각 로드맵 과제별로 업무재설계(BPR: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와 정보화전략계획수립(ISP: Information Strategy Planning)하였고,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스템 구축, 프로세스 및 서비스 개선을 진행하였고, 2006년부터 시스템 통합과 프로세스 및 서비스 혁신을 추진하여 2007년에는 정부혁신과 추진성과의 평가라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음.

- 그러나 2006년부터 전자정부 로드맵 과제가 시스템 통합 단계로 진행됨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 첫째, 전자정부 로드맵 과제의 추진과정에서 시스템의 구축 및 확장에만 치중하여 실제로 통합을 위한 전자정부 주관부서 간 의사결정체계와 추진체계 및 법·제도적 기반이 미비하여 통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둘째, 2007년이면 끝나게 되는 전자정부 31대 로드맵 과제 이후의 차세대 전자정부 비전에 대한 청사진이 구체화되어야 한다는 것임.
 - 셋째, 2006년부터 전자정부 로드맵 과제가 서비스 통합 단계로 진행함에 따라 성과평가가 필요하며 성과관리 및 평가체계를 확립, 투자중심에서 성과중심으로 사업관리체계를 전화하여 사업관리를 효율화할 시점이 2007년임.

2. 전자정부 관련 예산편성 현황 및 문제점

- 전자정부지원사업 예산을 포함한 전자정부사업의 주관기관인 행정자치부의 2007년 전체 전자정부 관련예산은 4,246억원으로 전년대비 4.1% 증가하였음.

[표 1] 행정자치부 전자정부 관련 사업 예산 및 개요

(단위: 백만원, %)

	2006년 예산(A)	2007년 예산안(B)	증감 (B-A)	증가율
전자정부본부 기본경비	416	547	135	32.7
자치정보화 전산운영경비	184	164	-20	-10.8
전국행정전화망 보강	1,239	1,157	-82	-6.6
전자정부사업지원	275,700	290,700	15,000	5.4
행정정보DB구축	70,000	56,500	-13,500	-19.3
지방행정정보화	23,558	32,496	8,908	37.7
지역정보화	6,423	5,537	-886	-13.7
정보화마을조성	6,227	8,542	2,315	37.1
정부고속망 등 전산경비	13,403	14,675	1,272	9.5
전자정부 기반확충	7,219	8,766	1,547	21.4
전자정부 표준화체계 구축	515	2,349	1,834	356.3
국가행정정보화	871	798	-73	-8.4
행정정보공유 확대	2,176	2,362	186	8.5
합 계	407,931	424,593	16,636	4.1

자료: 행정자치부, 「2007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설명자료」를 재구성.

-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연계과제 예산은 예산항목 혹은 프로그램의 일관성이 없고 총액으로 계상되기 때문에 예산·결산에 대한 국회의 통제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음.
 - 31대 로드맵과제 예산 이외에 로드맵 연계과제 예산편성은 로드맵 수립 당시(2003.7)와 시간이 진행된 이후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고 기 구축된 정보시스템을 통합하고 연계하려는 예산임.

- 로드맵 연계과제 예산을 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의 연계과제 일부는 로드맵 과제의 고도화와 통합에 관한 과제라기보다는 시스템 구축 이전에 계획 설계에 해당하는 BPR/ISP에 관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음.
- 2007년도 6개의 로드맵 연계과제 예산을 150억의 총액으로 책정하고 개별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내역이 없음.
- 이는 전자정부 세부 계획 수립과 집행 과정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냄.

3. 전자정부관련 사업 추진체계의 문제점

- 행정자치부와 정보통신부로 전자정부의 로드맵 추진체계가 분산되어 있음.
 - 전자정부 31대 로드맵 사업의 ‘기획·관리·예산’의 주관은 행정자치부이지만 31대 로드맵 과제중 전자정부의 ‘기술·인프라’의 핵심에 해당하는 정보자원관리 로드맵의 주관기관은 정보통신부임.
 - 행정자치부와 정보통신부는 전자정부의 기획관리, 기술인프라의 범위 등에 관하여 입장차이가 있어서 전자정부 로드맵의 구축과정에 어려움이 있었고, 구축이후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이 더디게 진행되었음.
 - 2006년부터 진행된 전자정부 구축 시스템의 통합추진과정에서 범정부통합전산환경 구축, 전자정부통신망고도화, 범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 적용 등과 같은 정보자원관리부분의 핵심 로드맵과제의 실제적인 통합사업이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거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정보화부분의 인프라에 대한 중기투자계획이 「IT839전략」이라는 부분으로 정보통신부에 의해 계획되어 있지만 전자정부 주관부서인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능기반사회를 대비한 구체적인 차세대 전자정부 비전제시가 없는 상태임.
 - 정보통신부가 기획·추진하고 있는 지능기반(U-Korea)이라는 인프라에

행정자치부가 채워야 되는 전자정부 콘텐츠(contents) 비전이 빠져 있는 것임.

- 이는 전자정부성과평가에 기초하여 차기 전자정부의 비전과 로드맵을 제시해야 할 시기인 2007년이 자칫 2004년에 계획한 전자정부 31대 로드맵 과제의 집행만으로 그칠 가능성을 높게 함.

4. 전자정부 인프라구축의 효율성

- 범정부 통합전산센터의 구축은 가능한 모든 중앙행정기관과 산하기관의 정보시스템과 운용인력을 통합전산센터에 집중시켜 정보자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자정부 로드맵의 핵심사업이지만 각 중앙행정기관과 산하기관의 정보시스템의 이전이 부분적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러한 통합의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음.
 - 이는 정보시스템 이전 대상 중앙행정기관의 조직·인력·예산에 대한 이해관계가 각기 달라서 지금과 같이 전자정부의 추진체계가 분산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도출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임.
- 정보통신부는 정보기술아키텍처(Information Technology Architecture:ITA) 도입을 촉진하고 정보시스템 감리제도 정비 등을 위해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및운영에관한법률(ITA법)’을 2005년 12월에 제정하였음.
 -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ITA도입계획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음.
 - 정보통신부와 행정자치부는 각기 구축된 ‘ITA지원시스템(ITAMS)’과 ‘범정부 정보자원통합관리(IRM: Information Resource Management)’의 효율적인 연계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5. 전자정부 대국민 서비스 혁신과 정보기술산업

- 인터넷 민원서비스(G4C) 고도화사업을 통해서 이루어진 성과, 즉, 인터넷 민원발급 서비스 이용실적이 현저히 낮아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수준의 서비스 향상을 느끼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음.
 - 주민등록등·초본 발급민원의 경우 2005년 전체 발급건수 대비 인터넷 발급건수 비율이 0.83%에 지나지 않았고 건축물대장등·초본 발급 및 열람신청 민원도 인터넷 발급건수 비율이 전체의 3.4%임.
 - 인터넷에 익숙하지 못한 민원인들을 위하여 시스템을 개선해 인터넷 민원서비스의 이용률을 제고해야 할 것임.

- 전자정부지원사업이 대규모 시스템통합업체 위주로 사업자가 선정되어 중소기업의 전자정부지원사업 참여가 저조함.
 -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사업자 선정에 있어 관계법령에 따른 성능인증을 획득한 제품을 채택한 경우 기술성 평가 시 가산점을 높게 부여하여 중소기업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함.

제3부 분야별 분석

사 회

I. 보건복지재정과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운용의 과제

1. 2007년도 보건복지재정 운용규모

- 2007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재정계획에 의하면, 재정운용규모는 일반회계, 4개 특별회계 및 2개 기금을 합하여 순계 19조 3,060억원(총계 19조 5,416억원)으로, 정부 총지출에서 8.1%를 차지
 - 보건복지재정의 전년대비 증가율은 16.1%로, 정부 총지출 증가율 6.4%의 2.5배, 정부의 「사회복지·보건 분야」 지출(61.8조원) 증가율 10.4%의 1.5배 수준

[표 1] 보건복지부 소관 재정지출과 정부 총지출: 2003~2007년

(단위: 억원, %)

	2003	2004	2005	2006	2007(안)	2006~2007년간	
						증가액	증가율
[보건복지부 지출: A] (총 계)	120,374 (124,519)	136,509 (139,373)	143,314 (148,073)	166,282 (168,824)	193,060 (195,416)	26,778 (26,592)	16.1 (15.8)
- 예 산	88,292	96,467	91,551	101,339	117,504	16,165	16.0
- 기 금	32,082	40,042	51,763	64,948	75,556	10,608	16.3
[사회복지·보건분야지출(조원) (주택 제외사: B)	41.7 (30.3)	44.1 (33.1)	51.9 (38.4)	56.0 (42.5)	61.8 (47.9)	5.8 (5.4)	10.4 (12.7)
사회복지·보건분야지출(주택제외) 대비 복지부 지출(A/B)	39.7	41.3	37.4	39.1	40.3	-	-
[정부 총지출: C](조원)	-	196.2	208.7	224.1	238.5	14.4	6.4
정부총지출 대비 복지부지출(A/C)	-	7.0	6.9	7.4	8.1	-	-

주: ‘총지출’은 예산과 기금(사업비) 지출에서 정부내부지출 및 채무원금상환을 제외한 순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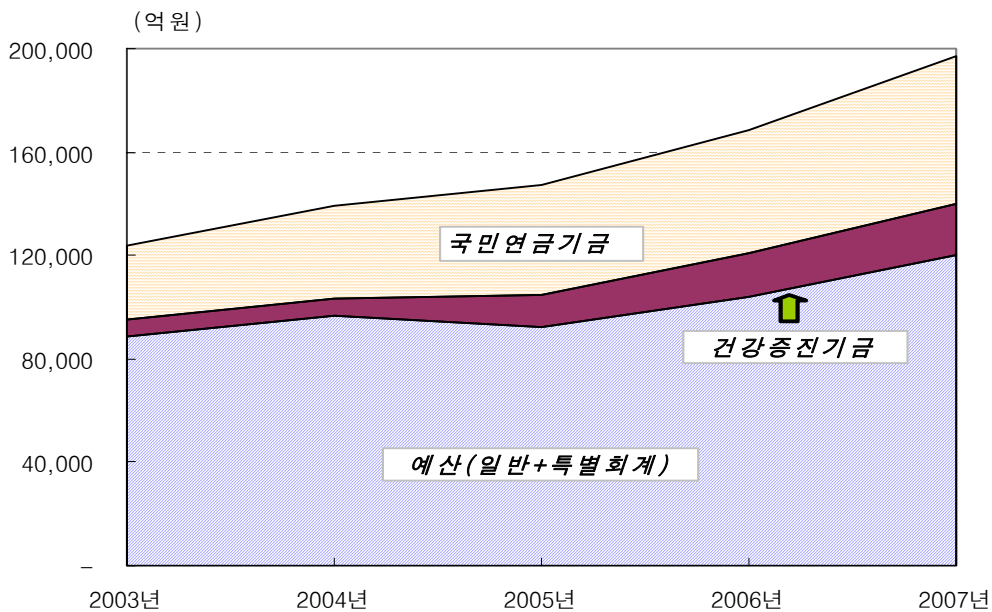
자료: 1. 대한민국정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IV」, 2006. 10.

2. 대한민국정부,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06. 10.

2. 기금을 통한 재정운용 비중 증가

- 보건복지재정 운용구조에 의하면, 최근에 올수록 기금(국민연금기금,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통한 재정운용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데, 복지부 총지출에서 ‘국민연금기금’과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26.7%에서 **2007년 39.1%**로 4년간 12.4%p 증가
 - 2007년도에는 국민연금급여(5조 1,916억원)가 전년대비 **21.1%** 증가하며, 담배부담금 수입 증가(1조 6,446억원 → 2조 1,204억원)에 따라 건강증진기금 사업비(1조 9,091억원)는 전년대비 **11.8%** 증가

[그림 1] 보건복지재정 운용구조의 변동: 2003~2007년



주: 보건복지부 소관 재정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각 연도.

3. 의무적 지출비중이 90%에 이르는 보건복지재정

- 2007년도 보건복지재정 운용에서는 기초생활보장, 건강보험 지원, 경로연금 등 의무적 지출(mandatory expenditure)이 17조원 규모로 총지출의 약 90%를 차지하므로, 예산안 심의를 통하여 복지부 지출을 통제하는 데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

[표 2] 보건복지재정의 부문별 지출구조: 2005~2007년

(단위: 억원, %)

	2005	2006	2007(안)	2006~2007년간	
				증가액	증가율
[보건복지부 총지출: A]	143,314	166,282	193,060	26,778	16.1
■ 사회복지	92,940	113,413	139,507	26,094	23.0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43,671 (22,148)	53,418 (26,623)	65,835 (35,778)	12,417 (9,155)	23.2 (34.4)
취약계층 지원	4,230	5,633	7,404	1,771	31.4
공적연금	38,861	48,031	56,470	8,439	17.6
보육 가족 및 여성 노인	260 3,444	385 4,355	473 6,542	88 2,187	22.9 50.2
사회복지 일반	2,474	1,591	2,783	1,192	74.9
■ 보건	48,024	52,869	53,553	684	1.3
보건의료	7,649	9,907	10,639	732	7.4
건강보험	40,375	42,962	42,914	-48	-0.1
■ 내부거래	2,347	-	-	-	-
[의무적 지출: B]	125,940	147,698	170,803	23,105	15.6
총지출 대비 의무적지출 비중(B/A)	87.9	88.8	88.5	-	-
[재량적 지출: A-B]	173,744	18,584	22,257	3,673	19.8

주: '의무적 지출'은 기초생활보장, 공적연금, 경로수당,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건강보험 지원에 한정하여 합산(이외, 의사상자 지원 등 있음).

자료: 대한민국정부, 「2007년도 예산안 설명서 IV」, 2006. 1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의료급여법」에 근거를 두는 **의료급여비**의 경우, 2006년도 소요액이 4조원을 상회(예산총액 3조 4,600억원, **부족액 5,600억원**)하고, 2007년도 **예산안 총액이 4조 4,242억원(국비 3조 5,778억원, 전년대비 34.4% 증, 복지부예산의 30.4%)** 규모

- 의무적 지출 비중이 높을 경우, ‘Top-down’ 방식으로 배분된 부처의 ‘지출한도’(sectoral ceiling) 내에서 저출산·고령화 등 경제·사회적 여건변화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복지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재정운용이 매우 제약적**이며, **세출구조조정은 재량적 지출의 감축으로 한정되는** 문제를 야기함
 - 복지부는 2007년도에 재정의 11% 수준인 2조 2,000억원 내외의 사업비를 통하여 아동·장애인·노인 등의 취약계층 지원, 저출산·고령화 관련 사업, 각종 복지서비스, 보건의료 등의 재량적 지출사업을 수행
 - 단, **2007년도에는 복지부 재정지출 증가율이 정부재정지출 증가율을 2.5배 이상 상회하면서, 장애인복지 27.4%, 노인복지 54.0%, 사회복지 일반 78.9%의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인다는** 점에서 다른 회계연도와는 차별화됨

- 고령사회의 진전과 더불어 향후 급속하게 늘어날 복지재정지출과 관련하여, 국회의 재정통제가 실효성을 거두도록 하자면, ‘지출한도’ 설정 및 ‘재정지출 점검’(scorekeeping) 등 국회 차원에서 정부지출을 관리하는 제도적 장치 필요
 - 미국 의회는 의무적 지출에 대해서는 자기부담규칙인 ‘PAYGO’(특정지출 증가는 지출삭감/조세증가로 대체), 재량적 지출에 대해서는 ‘지출한도’(spending caps) 설정을 통하여 정부지출을 통제

4. 의료보장 재정부담 증가와 타 복지재정 운용의 한계

- 정부는 2007년도에 의료급여비(3조 5,778억원)와 건강보험 지원(4조 2,914억 원)을 합한 의료보장 재정지출을 위하여, 전년대비 13.1% 늘어난 총 8조원 (보건복지부 7조 8,692억원, 농림부 1,272억원)을 부담할 계획

[표 3] 보건복지부 소관 의료보장 재정지출: 2003~2007년

(단위: 억원, %)

	2003	2004	2005	2006	2007(안)	연평균 증가율
보건복지부 재정지출(A) [국민연금 제외]	94,769 (11.2)	103,113 (8.8)	104,453 (1.3)	118,251 (13.2)	136,590 (15.5)	10.0
의료보장 재정지출(B)	54,459 (9.5)	56,653 (4.0)	62,523 (10.4)	69,585 (11.3)	78,692 (13.1)	9.7
- 의료급여(예산)	17,617 (4.2)	18,810 (6.8)	22,148 (17.7)	26,623 (20.2)	35,778 (34.4)	16.7
- 건강보험(예산+기금)	36,842 (12.3)	37,843 (2.7)	40,375 (6.7)	42,962 (6.4)	42,914 (-0.1)	5.6
복지부 재정지출(연금제외) 대비 의료보장 재정지출 비중(B/A)	57.5	54.9	59.9	58.8	57.6	-

주: 지출액은 순계기준이며, 괄호 내는 전년대비 증가율.

자료: 대한민국정부, 「2007년도 예산안 설명서 IV」, 2006.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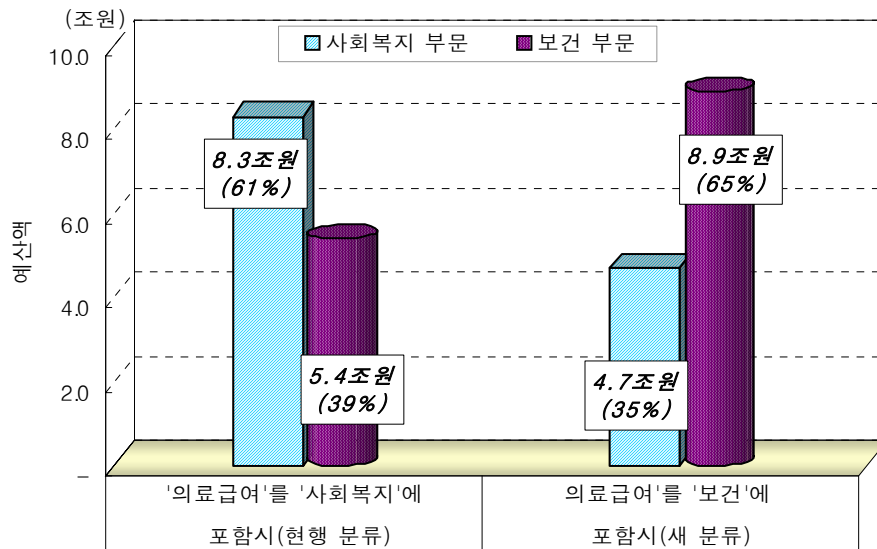
- 고령사회일수록 국가재정에서 의료보장부담이 늘어나게 되지만, 연금을 제외한 복지부 총 지출(13.7조원)의 약 60%에 이르는 과중한 의료보장 지출은 ‘사전예방의 강화’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재정부담이 줄어들도록 한다는 정부의 자원배분원칙에 부합되지 않음
- 2007년부터 건강보험에 대한 지원기준을 ‘지역급여비의 50%’에서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로 변경한다는 전제 하에 예산안이 편성되었는

데, '보험료 수입' 역시 연 15% 이상 증가하는 '급여비 지출'과 연동될 수밖에 없으므로, 향후 건강보험 지원액 증가율은 정부재정지출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여 복지재정운용을 더욱 제한하게 될 것임

- 의료보장 재정부담 증가는 상대적으로 타 부문의 지출을 제약(보건의료사업 예산은 3,993억원으로, 의료보장예산의 6%)하게 되므로, 사전예방적인 국민건강증진을 통하여, 사후적 성격의 의료비지출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은 저출산·고령사회의 국가보건의료정책에서 매우 우선순위가 높은 과제임

- 프로그램예산체계에 따른 복지부 총지출(국민연금 제외)의 부문간 재원배분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 보건' 부문 지출이 '61 : 39' 수준이나, 사회복지부문에 포함된 의료보장지출인 '의료급여비'(3조 5,778억원)를 보건부문으로 이동하여 분류하면 '사회복지 : 보건' 부문 지출이 '35 : 65'로 역전되어, 재정운용에서 의료보장이 차지하는 높은 비중이 확연히 드러남

[그림 2] 2007년도 보건복지재정 지출(국민연금 제외)의 부문별 규모와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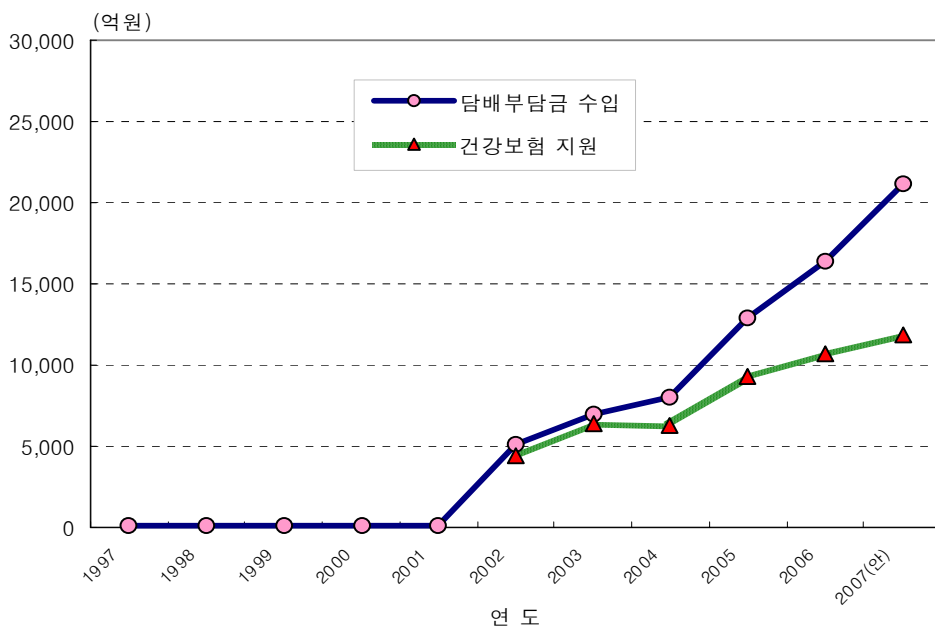


자료: 대한민국정부, 「2007년도 예산안 설명서 IV」, 2006. 10.

5.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수입 증가와 운용상 과제

- 건강증진기금 운용계획안에서는 담배 값 500원 인상을 전제로, 1997년 59억 원의 담배부담금 수입을 10년이 경과한 2007년에 360배 팽창한 2조 1,204억 원으로 예상(담배갑당 부담금 558원, 현행대비 58% 인상)하고 사업계획 수립
 -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도 하반기 담배 값 인상을 전제로 편성되었으나 동 계획이 실현되지 않아, 건강보험은 담배부담금 지원 부족(계획대비 1,500억원 감소 예상) 등으로 2006년말 1,800억원 규모의 당기수지 적자 발생 예상

[그림 3] 담배부담금 수입 증가와 건강보험 지원: 1997~2007년



주: 2000년 이전 담배부담금 수입은 1997년 59억원, 1998년 98억원, 1999년 83억원임.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기금운용계획(안)」, 각 연도.

- 담배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건강증진기금사업은 2007년도에 ‘건강보험 지원’ 1조 1,804억원, ‘예산에서 기금으로 이관된 45개 사업’ 5,213억원, ‘건강증진 등의 사업’ 2,074억원으로, 세 가지 유형의 사업에 약 ‘6 : 3 : 1’로 지출계획 수립
 -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의 한시적 적용과 관련하여, 2002~2006년간 기금사업비의 77%에 해당하는 총 3조 7,066억원이 건강보험에 지원되었음
 - 예산에서 기금으로 이관된 보건산업육성 R&D 사업(1,567억원), 질병관리본부 지원(1,465억원), 암 및 희귀질환 지원(1,444억원), 공공보건의료 확충(704억원) 등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기금의 사용’을 확대적용하였거나 기금의 당초 설치목적에 부적합

- 따라서 “급증하는 보건복지재원의 조달과 부담금 인상을 전제로 한 2조원대의 담배부담금 수입 간에 어떠한 관계를 설정할 것인가”는 2007년도 예산안 및 건강증진기금 운용계획안 심의를 통하여 숙고되어야 할 과제임
 - 기금의 설치목적, 부담금부과의 수익자 부담원칙, 부담금 인상을 규정하는 「국민건강증진법개정법률안」, 기금의 건강보험 지원을 5년간 더 연장하는 「국민건강보험법개정법률안」(2011. 12. 31까지 한시적용), 현행 건강보험료율의 적정성과 건강보험 지원방식, 국민보건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 등을 고려한 ‘사회적 합의’와 이에 바탕을 둔 판단과 결정 필요

II. 보건복지 분야 재정분석

1. 2007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 분석

- 2007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4개 특별회계(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균형발전특별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책임운영기관특별 회계)를 합쳐 총 11조 9,860억원으로 전년대비 15.1% 증가하여, 사회복지· 보건 분야 재정규모 증가율 10.4%보다 높은 수준의 증가율을 기록함
 - 2007년도 복지부 예산안의 특징을 보면 969억원 규모의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이 신규로 편성되었고, 의료급여와 생계급여에서 9,154억원과 3,009억원이, 장애인복지 및 아동복지에서 1,363억원과 516억원이, 보육· 여성부문에서 49억원이, 노인복지부문에서 2,195억원이 증액됨
 - 사회복지 분야 재정규모 증가율에 비해 보건의료부문(건강보험지원 제외)은 5.4%, 식약행정 관련부문(식약청 소관)의 증가율은 6.9%에 불과함

[표 1] 2007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

(단위: 억원, %)

	2006	2007(안)	2006~2007	
			증감액	증감율
사회복지 분야	65,301	82,401	17,100	26.2
- 기초생활보장	53,418	65,835	12,416	23.2
- 취약계층지원	5,353	7,259	1,906	35.6
- 공적연금	673	5	-667	-99.3
- 보육·가족 및 여성	269	318	49	18.4
- 노인복지	4,065	6,260	2,195	54.0
- 사회복지일반	1,522	2,723	1,201	78.9
보건 분야(건강보험 포함)	36,038	35,103	-935	-2.6
내부거래지출	2,805	2,356	-449	-16.0
합 계	104,145	119,860	15,716	15.1

자료: 보건복지부,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2006. 9.

2.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지원 예산 분석

가. 2007년도 의료보장 예산안 현황

- 2007년도 의료보장예산안은 6조 6,887억원(건강증진기금의 건강보험지원 제외)으로 2006년도 예산규모 5조 8,873억원에 비해 13.6% 증가함

[표 2] 2007년도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지원 재정 현황

(단위: 억원, %)

	2006	2007(안)	증감액	증감율
의료급여(A)	26,623	35,777	9,154	34.4
건강보험	42,962	42,914	-48	-0.1
- 예산(B)	32,250	31,110	-1,140	-3.5
(급여비지원)	(27,565)	(27,042)	-523	(-1.9)
- 기금	10,712	11,804	1,092	10.2
합계(A+B)	58,873	66,887	8,014	13.6
복지부 일반회계 대비 비중	60.7	57.8	-	-

자료: 보건복지부,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2006. 9.

나. 의료보장 재정지원의 문제점 및 대책

- 의료급여비 지출증가는 사후관리 및 DB구축 등 의료급여 관리체계의 부실, 1종 본인부담금 면제 및 365일 급여일수 연장승인의 형식적 운영,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및 행위별 수가제의 폐해, 자치단체의 재정절감 유인 부족에 따른 일부 수급권자와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에 기인할 수 있어 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 건강보험에 대한 예산지원은 감소하였으나, 기금에서의 지원이 전년대비 10% 증가함. 건강보험은 총재정규모의 약 18%만 국회심의를 받으므로 향후 기금화 등을 통해 수입과 지출이 연동된 운용계획수립이 요구되며, 보험료 체납액 감축과 부당급여비 환수(현재 급여비 총지출액의 0.5%)의 내실화를 위해 철저한 사후관리대책이 필요함

3. 취약계층지원 및 노인복지사업 분석

가. 2007년도 취약계층지원 및 노인복지사업 예산안 현황

- 2007년도의 복지부 예산안에는 저소득장애인·아동 등 취약계층지원 및 노인복지 확충을 위해 기존사업의 확대는 물론 다양한 신규사업의 도입으로 인해, 전년대비 증가율이 취약계층지원은 36%, 노인복지는 54%라는 매우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표 3] 아동·장애인 등 취약계층지원 및 노인복지 예산안 현황

(단위: 억원, %)

	2006	2007(안)	증가액	증가율
취약계층지원부문	5,353	7,259	1,906	35.6
노인부문	4,065	6,260	2,195	54.0

자료: 보건복지부,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2006. 9.

나. 취약계층지원 및 노인복지사업의 문제점 및 대책

- 독거노인도우미 412억원, 노인돌보미바우처 390억원 등 사회적서비스일자리 사업을 포함하여 유사사업들이 분산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 및 사업성과 제고를 위하여 사업구조의 개선이 필요함

- 사회복지사업의 사후관리가 의료급여, 자활사업, 아동복지, 장애인지원, 노인복지 등 사업별로 운영되고 있어, 복지서비스전달의 효율화를 위해 이를 통합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사회복지일반에 1,000억원 규모로 신규 편성된 ‘지역사회복지혁신사업’은 구체적 재정계획에 토대를 둔 명확한 정책과제 개발이 부족하며, 관련부문이 아닌 사회복지일반에 편성되어 예산편성구조가 부적절함
- 노인복지부문의 경우 노인 주거형태에 따른 사업운영이 요구되며, 향후 재정소요 증가가 예상되는 노인수발보험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함

4.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자활지원사업 분석

가. 2007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예산안 현황

- 의무지출인 기초생활보장 예산안은 2007년에 6조 5,907억원 규모로서 복지부 총 예산안의 55%이며, 급여비지출의 증가에 따라 2001~2005년 동안 기초생활급여비는 매년 당초 예산액보다 평균 7%를 초과함. 생계급여는 167만명, 의료급여는 198만명을 대상으로 하지만 비수급빈곤층의 문제는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음

[표 4] 2007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억원, %)

	2006	2007(안)	증감액	증감율
- 생계급여	20,077	23,086	3,009	15.0
- 주거급여	2,208	2,455	247	11.2
- 교육/해산·장제급여	910	933	23	2.5
- 자활소득공제	216	223	7	3.0
- 의료급여	26,623	35,778	9,155	34.4
- 긴급복지지원/운영지원	647	439	-208	-32.1
- 자활서비스지원	2,736	2,993	257	9.4
합 계	53,418	65,907	12,488	23.4

자료: 보건복지부,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2006. 9.

나. 2007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문제점 및 대책

- 기초수급권자에 대한 실지원액은 가구당 최저생계비에서 타법령 지원액 및 소득인정액을 공제한 금액이므로, **최저생계비와 함께 평균실지원액도 발표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는 생계급여비의 전달과정에 대한 복지부의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됨
- 2007년도 자활근로사업 예산안은 시장진입형 일자리를 60%로 확대하는 대신에 단순근로유지형 일자리를 40%로 축소하는 등 자활사업을 내실화하고자 하였으나, 2007년에 노동시장진입에 따른 실질적 자활성공률이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를지는 불확실함

5. 보건의료사업 분석

가. 2007년도 보건의료사업 예산안 현황

- 2007년 보건의료부문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등 3,993억원으로 2006년에 비해 5.4% 증액됨. 취약계층지원에 편성되어 있는 국립재활원지원 예산안 208억원을 합하면 보건의료부문 예산안은 총 4,201억원임
- 건강증진기금의 보건의료사업비를 합쳐도 복지부 소관의 보건의료사업 재정규모는 총 1조 47억원으로, 주택부문을 제외한 2007년도 사회복지·보건 분야의 재정규모 47조 8,552억원의 2.1%에 불과함

[표 5] 2007년도 복지부 소관 보건의료부문 재정 현황

(단위: 억원, %)

	2006	2007(안)	증감액	증감율
예 산	3,788	3,993	205	5.4
※ 국립재활원지원(책특)	(186)	(208)	(22)	(11.9)
기 금	5,611	6,647	1,034	18.4
합 계	9,400	10,639	1,239	13.2

주: 국립재활원지원은 취약계층지원부문이므로 보건의료부문 '합계'에서는 제외함.

자료: 보건복지부,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2006. 9.

나. 2007년도 보건의료사업의 문제점 및 대책

- 공공의료기관 관리체계가 복지부, 교육부, 국방부 등 소관부처별로 분산되어 있어 효율적인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이 제약되고, 공공보건사업의 재정규모도 보건소의 사전적 건강관리기능을 강화하기에 한계가 있음

- 공공보건기관에 대한 국고지원액의 시·도별 비중은 부산과 인천에 비해 전남과 경북이 약 5%p 높고, 보건소 이용인원 1인당 지원규모는 서울과 경기도가 약 7,000원으로, 도시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서비스 확대가 요구됨
-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최소한의 국민건강 확보를 위한 의료서비스의 공급, 국가보건의료체계의 통합과 조정, 시장성이 낮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종합적 관리체계가 요구됨

6. 식품의약품안전청 소관 예산안 분석

가. 2007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청 소관 예산안 현황

- 2007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청 소관 예산안은 1,655억원으로, 정부총지출의 0.06%로서 정부가 4,800만 국민의 식품·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해 1인당 약 3,000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음

[표 6] 2007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예산안 현황

(단위: 억원, %)

	2006	2007(안)	증감액	증감율
사업비	953	894	-59	-6.1
기본경비	126	129	3	2.4
인건비	470	632	162	34.5
합계	1,548	1,655	106	6.9
※R&D(사업비에 포함)	452	491	39	8.7

주: 2005년도 식약청의 세출결산액은 1,308억원임.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2006. 9.

나. 2007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청 소관 예산안의 문제점 및 대책

- 정부의 식품안전을 위한 강력한 정책의지를 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노력이 재정계획을 통해 개선되어 나가는 성과는 찾기 어려움

- 식약청 사업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R&D사업의 2007년도 예산안은 491 억원으로, R&D사업의 70% 이상이 학계, 연구계 및 산업계 등 외부용역으로 지출되어 식·의약품 안전관리 기준설정 및 규격화 등에 요구되는 자체 연구역량과 인력개발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

- 의약품 허가 수수료를 수익자부담원칙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합리화하고, 허가·심사 분야 제도개선을 통해 의약품의 품질을 제고함은 물론 심사 내실화를 통한 전문인력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III. 노동 분야 재정분석

1. 2007년도 노동 분야 재정현황

- 2007년도 노동부 소관 재정운용방향은 일자리 만들기와 노동시장 양극화 완화에 초점을 두며, 재정지출규모는 10조 5,122억원으로서 2006년도 9조 5,704억원 대비 9.8% 증가
 - 회계별 재정규모를 보면, 예산안은 8,966억원, 5개 기금의 사업비 규모는 9조 6,156억원(운용규모는 18조 1,152억원)으로 계상
 - 기금 사업비는 고용보험기금 4조 5,118억원, 산재보험기금 4조 5,435억원으로, 2개 사회보장성기금의 사업비 비중은 총 기금사업비의 94.2%임

[표 1] 2007년도 노동부 재정지출규모

(단위: 억원, %)

	2006	2007(안)	증감액	증감률
[예 산]	7,392	8,966	1,574	21.3
[기 금]	88,312	96,156	7,844	8.9
고용보험기금	41,081	45,118	4,037	9.8
산업재해보상 및 예방기금	41,293	45,435	4,142	10.0
임금채권보장기금	1,896	1,963	67	3.5
장애인고용촉진 및 재활기금	2,482	2,518	36	1.4
근로자복지진흥기금	1,560	1,122	-438	-28.1
합 계	95,704	105,122	9,418	9.8

주: 2006년도 기금 사업비는 수정계획 기준.

자료: 노동부, 「2007년도 세입·예산안」,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6. 10.

2. 2007년도 사회서비스일자리지원사업 분석

가. 재정현황

- 2007년도에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회서비스일자리지원사업」의 재정규모는 총 1조 4,442억원으로서, 2006년도 6,777억원 대비 113.1% 증가
 - 동 사업은 11개 부처가 39개 사업([부표 1] 참조)을 통하여 총 21만 2,514개¹⁾(바우처 제외 17만 5,842개)의 일자리를 지원할 계획

[표 2] 사회서비스일자리지원사업의 부처별 재정규모현황

(단위: 억원, %)

	2006		2007(안)		증가액	증가율
		비중		비중		
복 지 부	1,132	16.8	4,035	27.9	2,904	256.6
여 성 부	2,972	44.0	3,868	26.8	896	30.2
산 립 청	1,622	23.7	2,511	17.4	889	56.9
노 동 부	517	7.7	1,527	10.6	1,010	195.3
교 육 부	87	1.3	1,518	10.5	1,431	1,645.2
문화관광부	281	4.2	583	4.0	301	106.6
청소년위원회	93	1.4	146	1.0	53	57.0
환 경 부	73	1.1	124	0.9	51	68.9
행 자 부	-	-	63	0.4	63	100.0
문 화 재 청	-	-	48	0.3	48	100.0
농 립 부	-	-	19	0.1	19	100.0
합 계	6,777	100.0	14,442	100.0	7,665	113.1

자료: 기획예산처 내부자료.

1) 바우처 지원 1인당 1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가정함.

나. 문제점 및 개선방향

- 2007년도 사회서비스일자리지원사업 중 월 평균임금 40~69만원 수준의 일자리 수는 총 지원일자리 수 17만 5,842개의 14.2%인 2만 4,888개이고, 총 지원액 1조 2,586억원의 11.3%인 1,418억원이 계획됨²⁾
 - 동 임금수준의 일자리는 2007년도 월 최저임금인 72만 7,320원에 미치지 못하며, 계약기간도 1~3년으로서 단기·저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임

- 사업 형태별로 살펴보면, 정부 지원금으로만 추진되는 「공익형 지원」을 통한 일자리 수는 전체 21만 2,514개의 92.9%인 19만 7,514개이고, 총 지원액 1조 4,442억원의 89.4%인 1조 2,915억원으로서 민간부문의 수익금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수익형 지원」의 비중은 매우 낮음³⁾

- 2007년도 사회서비스일자리지원사업에 대한 재정규모가 113.1%나 증액된 것과 관련하여, 연도별로 명확한 목표 설정 및 세부적 사업시행계획이 반영된 중기재정운용계획은 아직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 개선방향으로는 수익형 사업을 확대하는 민간시장 육성 방안과 부처별 역할분담, 민간시장 성숙단계에 따른 정부 재정투입규모와 정부역할의 단계적 감소에 대한 중기재정운용계획 설정, 노동시장 여건과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에 토대를 두는 계획성 있는 사업추진이 필요함

2) 바우처 지원을 통한 일자리의 경우 월 평균임금수준별로 구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원인원 및 지원금액에 대한 비중 계산 시 바우처 지원 제외.

3) 보건복지부의 바우처 지원은 모두 「공익형 지원」으로서 형태별 구분이 가능하여 비중 계산 시 포함. 바우처 지원을 제외할 경우, 「공익형 지원」의 일자리 수는 전체 17만 5,842개의 91.5%인 16만 842개, 지원금액은 1조 2,586억원의 87.9%인 1조 1,059억원임.

[표 3] 11개 부처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의 형태별·평균임금별 세부내역

(단위: 억원, 명, %)

		월 평균임금	2006	2007(안)	증감액	증감률
지 원 금 액	공익형	40~69만원	809	1,418	609	75.3
		70~99만원	1,233	2,073	840	68.1
		100~180만원	4,284	7,568	3,284	76.7
	수익형	70~99만원	414	1,527	1,113	268.8
		소 계	6,740	12,586	5,846	86.7
		바우처	38	1,856	1,818	4,784.2
		합 계(바우처포함)	6,777	14,442	7,664	113.1
지 원 인 원	공익형	40~69만원	13,308	24,888	11,580	87.0
		70~99만원	38,379	49,790	11,411	29.7
		100~180만원	53,220	86,164	32,944	61.9
	수익형	70~99만원	6,000	15,000	9,000	150.0
		소 계	110,907	175,842	64,935	58.5
		바우처	864	36,672	35,808	4,144.4
		합 계(바우처포함)	111,771	212,514	100,743	90.1

주: 1) 「공익형」은 사업수행과정에서 수익의 발생 없이 정부 및 지자체가 지급하는 임금만을 받는 형태이고, 「수익형」은 수혜자 부담 등을 통하여 자체적으로 수익을 발생케 하는 사업을 의미함.

2) 바우처는 보건복지부 사업으로서 바우처를 포함한 지원인원 합계는 바우처지원 1인당 일자리가 1개 증가한다는 가정에 근거함.

자료: 기획예산처 내부자료.

3. 2007년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재정분석

가. 재정현황

□ 2007년도 노동부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위한 재정규모는 2조 6,170억원으로서 2006년도 2조 2,089억원 대비 18.5% 증가함

- 동 사업은 예산안 5,265억원, 기금 2조 906억원⁴⁾으로 기금사업 비중이 79.9%를 차지하며, 기금의 경우 고용보험기금 사업비는 1조 9,181억원, 장애인고용촉진기금 사업비는 1,725억원임

4) 예산과 기금사업비 비중의 격차는 2006년도부터 고용보험기금의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 계정이 통합되면서 2005년도 대비 5,101억원 증가하였기 때문임.

[표 4] 노동부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재정규모

(단위: 억원, %)

		2006	2007(안)	증감액	증감률
고용 안정	[예 산]	1,750	2,719	969	55.4
	[기 금]	8,608	9,660	1,052	12.2
	고용보험기금	6,905	8,054	1,149	16.6
	장애인고용촉진기금	1,703	1,606	-97	-5.7
	소 계	10,358	12,379	2,021	19.5
직업 능력 개발	[예 산]	2,363	2,546	183	7.7
	[기 금]	9,369	11,246	1,877	20.0
	고용보험기금	9,257	11,127	1,870	20.2
	장애인고용촉진기금	112	119	7	6.3
	소 계	11,731	13,791	2,060	17.6
합 계		22,089	26,170	4,081	18.5

자료: 노동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6. 10.

- 2007년도 고용안정사업 재정규모는 1조 2,379억원(19.5% 증가), 직업능력개발사업은 1조 3,791억원(17.6% 증가)임
-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 재정규모는 4,992억원으로 2006년도 5,098억원 대비 2.1% 감소하였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633억원, 고용보험기금 2,634억원, 장애인고용촉진기금 1,725억원임

나. 문제점 및 개선방향

- 일반회계의 ‘외국인취업자관리사업’(16억원)과 고용보험기금의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운영지원사업’(69억원)은 사업의 성격이 비슷하다는 점과 외국인은 고용보험의무가입대상자가 아니라는 점, 중소기업의 구직난 해소를 위하여 국가가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일반회계로 통합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고용촉진사업’을 위하여 200억원이 고용보험기금에 신규로 계상되었지만, 동 사업은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장애인고용촉진기금에서 수행하는 것이 적합함
-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과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은 2006년도 3/4분기까지의 집행실적이 매우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2007년도 사업비가 증가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의 경우 2006년 13억원에서 2007년 28억원,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은 2006년 59억원에서 2007년 147억원으로 증가함
 - 2006년도 3/4분기까지의 집행실적은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 0%, 임금피크제보전수당 6.5%임
- 고용보험기금 사업 중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과 ‘교대제전환지원금’은 2006년도에 당초계획 대비 사업비의 변경 규모가 커서 재정의 과도한 재량적 운용 소지가 있으므로 사업수요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통하여 적절한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함
 - 2006년도 사업비 계획변경 규모를 보면,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은 81억원에서 401억원(395.3%), 교대제전환금은 115억원에서 230억원(99.9%) 증가함
-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수혜는 중소기업 보다 **대기업에 편중되어** 중소기업의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실질적인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방안이 필요함
 - 훈련비용단가 조정, 대기업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지원요건 완화 등이 고려되어야 함
- 2007년도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 예산안 증가에 따른 청년 및 장기구직자들의 일자리 수 증가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청년 및 장기구직자

지원 재정 감소에 따른 효과를 충분히 보전할 만큼의 사업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불투명해 보이므로, 국회 예산 심의 시 재원배분의 효율성 측면에서의 고려가 필요함

- 2007년도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재정규모 5,354억원 중 청년 및 장기구직자 등에 대한 재정규모는 1,854억원으로 2006년도 2,269억원 대비 18.3% 감소한 반면, 사회적일자리창출예산은 2006년도 517억원 대비 195.2% 증가한 1,527억원임
-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의 **청년층 일자리 비중**은 2005년도 24.0%(1,193명)에서 2006년 8월 현재 19.0%(1,381명)로 5.0%p 감소함

[표 5] 2007년도 노동부 취약계층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재정규모

(단위: 억원, %)

	2006	2007(안)	증감액	증감률
고령자	565	630	65	11.5
여 성	353	466	113	32.0
장애인	1,911	2,051	140	7.3
청년	1,771	1,457	-314	-17.7
기타 ¹⁾	498	388	-110	-22.1
합 계	5,098	4,992	-106	-2.1

주: 1) 장기구직자 및 자활대상자, 새터민, 영세자영업자 등 구분이 불가능한 계층.
자료: 노동부 내부자료.

[표 6] 노동부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 실적

(단위: 명)

	2005	2006. 8
[연령별]		
청년(15~29세)	1,193	1,381
중·장년(30~54세)	2,962	4,644
고령자(55세 이상)	816	1,256
[취약대상별]		
여 성	3,812	5,863
장애인	320	381
기 타	839	1,037
합 계	4,971	7,281

자료: 노동부 내부자료.

4. 2007년도 기금 재정수지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가. 고용보험기금 적정수준의 적립금 보유

- 고용보험기금의 2007년도 적립금 규모는 8조 7,897억원, 보험료 수입대비 적립금 배수는 2.1배로 전망⁵⁾되어 적립금 수준이 과다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노동시장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사업계획을 통한 중·장기 재정 소요 및 적정적립금 산정계획 수립과 이를 반영한 고용보험요율의 합리적 설계 필요
 - 과다적립원인은 수입측면에서 보험요율 과다 산정, 지출측면에서는 고용안정사업 집행실적 부진 등이 지적됨
 - 2005년도 결산에 의하면, 고용안정사업 지출실적이 계획액(2,642억원) 대비 77% 수준이며, 5개 세부사업은 계획대비 지출실적 50% 미만임

나. 자산운용 전문성에 대한 점검 필요

- 고용보험기금은 정부의 57개 기금 중 국민연금기금 다음으로 자산운용규모가 큰 기금이지만, 외부위탁운용비중이 높고 자산운용실적도 부진하므로, 자산운용 전담조직을 정비하는 한편 자산운용의 효율성 제고 필요
 - 2007년도 누적적립금은 고용보험기금 8조 7,897억원, 산재보험기금 2조 410억원으로 전망됨
 - 2005년도 결산결과에 의하면 외부위탁운용자산 비중은 고용보험기금 72%, 산재보험기금 70%로 사회보험성기금 평균 위탁운용 비중 13%보다 높음⁶⁾
 - 2005년도 결산결과 외부위탁자산운용수익률은 고용보험기금 4.2%, 산재보험기금 4.4%로 사학연금 16.8% 등에 비해 저조함
 - 자산규모 1조원 초과 기금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 제76조에서 자산운용

5) 계정별로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3조 3,358억원(2.1배), 실업급여 5조 4,539억원(2.1배)임.

6) 2005년도에 지불한 위탁운용수수료는 총 216억원 규모임.

전담부서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고용보험기금과 산재보험기금에서는 아직까지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함

다. 장애인고용촉진기금 재정수지 안정화

- 2007년도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의 수입은 2,453억원, 지출은 2,610억원으로 수지 적자가 157억원으로 예상되어 재정수지가 불안정하므로 적절한 규모의 재원 확보가 필요함
 - 현재 2%인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기업규모별로 차별화**하여 적용하여 부담금수입 확충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장애인에 대한 분류는 신체적인 기준보다는 고용 장애인의 노동생산성을 감안하여 노동이 가능한 **장애인에 대한 개념을 재설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부표 1] 사회서비스일자리지원사업의 부처별 사업내역

	사업구분	사업명
복지부	계속	산모신생아도우미파견(바우처), 지역아동센터, 요보호아동그룹홈형태보호, 자활후견기관기능활성화, 가사간병도우미, 의료급여사례관리사, 정신보건센터운영
	신규	독거노인도우미파견, 중증장애인활동보조인(바우처), 노인돌보미(바우처), 지역복지서비스혁신사업(바우처), 방문보건사업활성화, 장애인주민자치센터도우미지원
여성부	계속	보육관련사회적일자리, 영아반인건비
	신규	아이돌보미사업(바우처), 취약계층가족 아동양육지원
산림청	계속	숲가꾸기, 산림서비스 증진사업
	신규	산림보호강화
노동부	계속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
교육부	계속	장애인특수교육보조원
	신규	특수교육인력지원확충, 깨끗한학교만들기, 방과후학교
문화관광부	계속	사회취약계층대상문화예술교육지원, 문화관광해설사, 분야별예술강사풀체운영지원, 생활체육지도자지원
	신규	도서관 등 문화시설 연장운영
청소년위원회	계속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지원,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운영
환경부	계속	생태우수지역일자리창출, 5대강환경지킴이
행자부	신규	정보화마을프로그램매니저, 자원봉사도우미
문화재청	신규	고궁연장운영, 문화재특별관리인력지원
농림부	계속	농촌여성결혼이민자 가족지원 사업
합계		계속사업 21개 사업, 18개 사업

자료: 기획예산처 내부자료.

IV. 여성가족부 소관 재정분석

1. 2007년도 재정계획안

- 여성가족부의 재정은 예산과 여성발전기금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2007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안은 1조 1,378억원** 규모로 전년대비 30.3% 증가하였고 **여성발전기금은 전년대비 13.0% 감소한 279억원**으로 계획되었음
- 2007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안을 부문별로 보면, **보육부문이 1조 446억원**으로 **여성가족부 예산안의 91.8%**를 차지하며, 전년대비 32.0% 증가하였음

[표 1] 2007년도 여성가족부 소관 재정계획안

(단위: 백만원, %)

	2006 계획	2007 계획안	증가율
일반회계	872,939	1,137,758	30.3
재정융자특별회계 ¹⁾	2,000	-	-100.0
여성발전기금	32,092	27,933	-13.0
합 계	907,031	1,165,691	28.5

주: 1) 2007년부터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전환.

자료: 1. 여성가족부, 「2007년도 예산(안) 개요」, 2006. 9.

2. 여성가족부, 「2007년도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 개요」, 2006. 9.

[표 2] 2007년도 여성가족부 소관 보육부문 예산안

(단위: 백만원, %)

	2006 예산	2007 예산안	증가율
영유아보육료 지원	438,554	594,699	35.6
기본보조금 지원	94,203	135,606	44.0
보육시설운영 지원	218,915	261,171	19.3
보육시설기능 보강	34,268	41,729	21.8
보육인프라 구축	5,335	11,363	113.0
합 계	791,275	1,044,568	32.0

자료: 여성가족부, 「2007년도 예산(안) 개요」, 2006. 9.

2.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분석

가. 철저한 사전계획 수립과 치밀한 지원기준 설정 필요

-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은 지원대상 소득 및 지원단가 등 지원기준의 완화에 따라 예산이 확대되고 있는 부문으로, **2007년도 예산안은 5,947억원** 규모로 전년대비 **35.6% 증가**하였음

[표 3] 2007년도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2006 예산	2007 예산안	증가율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273,284	409,004	49.7
만5세아 무상보육료	128,430	130,307	1.5
장애아 무상보육료	27,720	32,403	16.9
두자녀이상 보육료	9,120	21,891	140.0
입양아 무상보육료	-	1,094	순증
합 계	438,554	594,699	35.6

자료: 여성가족부, 「2007년도 예산(안) 개요」, 2006. 9.

-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은 예산집행과정에서 지원기준 변경 등으로 인하여 본 예산보다 증액·집행된 바 있음
 - 2005년도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의 지자체 실행률은 금액기준 124.4%, 아동수기준 120.4%이며, 2006년에도 8월말에 이미 지원아동수가 계획보다 약 2만명 초과하였음
-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은 정부의 재정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부문인 만큼, 보육료지원기준 변화, 지원대상가구의 소득분포, 보육시설 이용가구의 변동 양상 등을 치밀하게 반영하여 예측력 있는 사전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이 확정된 후에는 계획에 따라 예산을 집행해 나가야 할 것임

나. 저소득층 차등보육료의 적정성 검토 필요

- 2007년도 저소득층 차등보육료의 지원대상 소득은 2006년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의 70%(4층)에서 100%(5층, 2006년 4인가구기준 353만원) 수준으로 확대되었으며, 예산안은 4,090억원으로 전년대비 49.7% 증가하였음
- 저소득층 차등보육료의 지원대상 소득수준이 중산층으로까지 확대됨에 따라 지원대상 소득수준 및 지원액이 적정한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임
 - 예를 들어, 지원대상 소득수준 별로 소득대비 부모부담 보육료 비율을 보면, 소득수준 180만원 4인가구의 부모부담률이 10.0%인 반면, 350만원 가구의 부모부담율은 8.3%로 더 낮아지는 등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소득수준과 부모부담율간에 역의 관계가 일부 존재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새싹플랜」(제1차 중장기 보육계획: 2006~2010)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저소득층 차등보육료를 2009년부터는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130%까지로 확대할 계획인데,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우선순위가 높은 정책인 만큼 지원대상을 확대하기 이전에 소득계층을 세분화하는 등 프로그램 설계에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3.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기본보조금 지원 사업분석

- 기본보조금 지원사업은 민간보육시설의 서비스 질을 개선하기 위해 표준보육비용)과 민간보육시설 보육료와의 차이를 민간보육시설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임
 - 2007년도 기본보조금 사업비 예산안은 전년대비 43.8% 증가한 1,355억 원 규모이며, 2010년도에는 4,257억원에 이를 전망임

[표 4] 2007년도 기본보조금 지원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2006 예산	2007 예산안	증가율
영아(0세~만2세)	94,203	132,729	40.9
유아(만3세~만5세)	-	2,777	순증
합 계	94,203	135,506 ¹⁾	43.8

주: 1) 기본보조금사업평가 지원 예산안 1억원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표 1]과 차이가 남.
자료: 여성가족부 내부자료.

-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기본보조금 지원사업은 예산증액의 타당성에 대해 검토될 필요가 있음
 -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기본보조금의 확대는 기본보조금이 민간보육시설의 서비스 개선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인프라의 부족, 국·공립보육시설 뿐만 아니라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까지 정부가 부담할 경우 정부의 보육재정부담 등을 감안하여 신중히 검토되어야 함
 - 정부의 인식과는 달리 보육서비스는 공공재(public goods)라기보다는 가치재(merit goods)적인 성격을 가지는 재화이므로 정부가 모든 보육서비스를 담당하는 것은 시장실패를 보정하기 보다는 정부의 실패를 초래할 수 있음. 따라서 민간보육시설이 서비스 질을 제고할 수 있는 비용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육료 상한선) 현실화 방안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1)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적정비용으로 인건비, 운영비, 급식비 등으로 구성됨.

4.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사업분석

□ 2007년도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사업 예산안은 전년대비 27.0% 증가한 251억원 규모임

- 이중 국·공립보육시설 신축비가 202억원이고, 공동주택내 보육시설의 국·공립보육시설 전환 사업은 49억원 규모로 신규 도입되었음

[표 5] 2007년도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개소, %)

	2006 예산	2007 예산안	증가율
국·공립시설 신축 (개소)	19,800 (110)	20,216 (112)	2.1
공동주택 내 보육시설의 국·공립시설 전환 (개소)	- -	4,925 (237)	순증
합 계 (개소)	19,800 (110)	25,141 (349)	27.0

자료: 여성가족부 내부자료.

□ 2007년도 국·공립보육시설 신축사업 예산안은 집행실적이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과다편성된 것으로 보임

- 2006년도 여성가족부 집행률은 개소수 기준으로 110개소 대비 39개소가 지원되었으며 지자체 실집행률은 더 저조하여 23개소가 지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도에 112개소가 신축될 계획임

2) 「영유아보육법」(제38조)은 보육시설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보육료 등 그 밖에 필요경비 등을 수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2006년 현재 시·도별 민간보육시설 보육료 상한선은 0세 350,000원, 만1세 308,000~350,000원, 만2세 254,000~330,000원, 만3세~만5세 182,000~241,000원으로 표준보육비용에 미치지 못함.

- **공동주택내 보육시설의 국·공립시설 전환 사업이 국·공립보육시설 신축사업의 대안으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입주민들과 보육시설 원장의 의견 수렴 등 철저한 사전계획이 필요함**
 - 공동주택내 보육시설의 국·공립시설 전환의 경우 공동주택내 보육시설은 입주자공동의 소유이고 임대료가 발생하므로 기존의 임대수익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입주자와의 마찰 등으로 집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5. 여성발전기금 분석

- **여성발전기금은 2007년도에 복권기금 전입금 124억원, 이자수입 14억원, 민간출연금 2억원, 자금회수 245억원의 총 385억원을 조달하여, 사업비 279억원, 여유자금 예치금 39억원, 복권기금 반납액 66억원으로 운용할 계획임**
- **여성발전기금은 재원확보 및 기금사업 준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여성발전기금은 1997년부터 정부출연금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 왔으나 예산사업과 기금사업의 차별성 부족 논란으로 **2006년도부터 정부출연금이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민간출연금은 2006년 2억원, 2007년 3억원에 불과하여, 예산과는 구분되는 기금으로서의 **재원확보에 문제가 있음**
 - 여성발전기금은 2004년부터 복권기금 전입금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왔으나, **복권기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집행실적이 부진하여 2004~2005년 동안 총 187억원의 32.1%에 해당하는 60억원을 불용하였고, 융자금상환액과 이자 등을 포함한 집행잔액 66억원을 2007년도에 복권위원회에 반납할 계획임**

V. 환경 분야 재정분석

1. 2007년도 세출예산안

- 2007년도 환경 분야 재원은 전년대비 6.4% 증가한 총 4조 337억원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그중 환경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7.3% 증가한 3조 2,172억원 규모임

[표 1] 2007년도 회계별·부문별 세출예산안

(단위: 억원, %)

	2006예산 (A)	2007예산안 (B)	증 감 (B-A)	증감률
합 계	29,992	32,172 (32,201)	2,180 (2,209)	7.3 (7.4)
[회계별]				
환경개선특별회계	26,326	28,925 (28,955)	2,599 (2,629)	9.9 (10.0)
재정융자특별회계	905	-	-905	-100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776	897	121	15.6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985	2,350	365	18.4
[부문별]				
사 업 비	28,954	31,016	2,062	7.1
상하수도·수질	17,921	19,678	1,757	9.8
폐기물관리	2,761	2,735	-26	-0.9
대기보전	3,295	3,531	236	7.2
자연보전	1,594	1,940	346	21.7
환경보호 일반	3,384	3,132	-252	-7.4
인건비·기본경비 등	1,038	1,156 (1,185)	118 (147)	11.4 (14.2)

주: 1. ()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제주계정 전출금(29억원)을 포함한 규모임.

2. 2006년 예산에는 행정자치부 소관으로 편성되어 있었던 993억원 미포함.

자료: 환경부, 「2007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2006. 9.

2. 환경개선특별회계와 일반회계의 분리·운영 검토 필요

- 환경부 재정사업은 일반회계에서 수행되지 않고, 주로 「환경개선특별회계」를 통해 수행되는데,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수입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는 2005년 수질오염방지양여금이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전환된 이후 전체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에 이르고 있음
 - 환경관련 일반 공공재를 생산하는 것은 ‘국가의 일반적인 세출’에 해당하므로 향후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 분리·운영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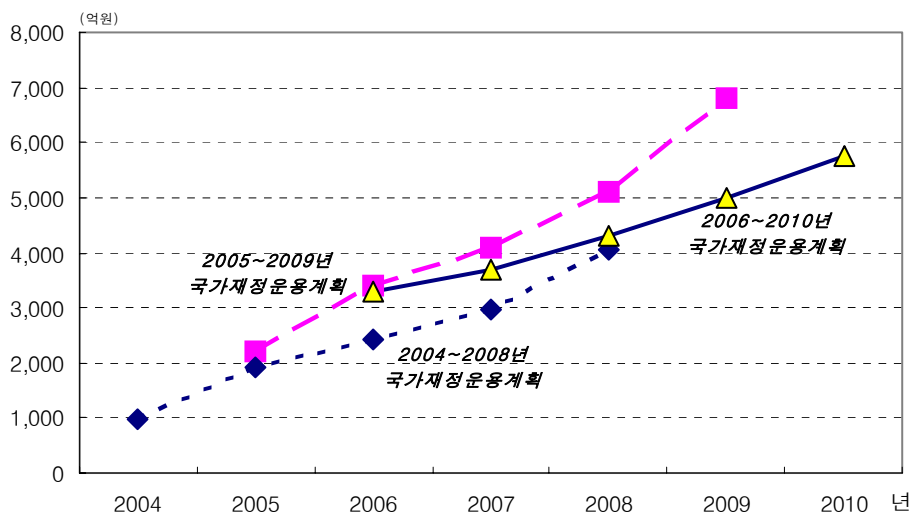
3. 교통세 개편안과 환경개선부담금제도

- 2007년 세입예산안은 2006년 만료예정인 교통세를 「교통·환경·에너지세」로 전환하는 것을 전제(관련 법률안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임)로 교통·환경·에너지세의 15%를 환경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계상하고 있음
 - 세제개편 내용을 보면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환경·에너지세와는 별도로 경유차에 대해 부과되는 기존의 환경개선부담금이 폐지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경유차 소유자에게는 ‘환경개선’이라는 동일한 목적의 이중부담으로 인식될 수 있음
 - 환경개선부담금이 교통·환경·에너지세로 완전히 대체되지 않고 경유차에 대한 부담금 부과가 계속된다면, 주행거리와 관계없이 부과되어 오염자부담원칙에 어긋나는 문제와 시군구의 채권관리 미흡으로 인한 수납 실적 저조 문제가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4.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단년도 예산안의 연계성 미흡

- 5년 단위의 중기재정계획인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작성연도별로 명확한 설명 없이 매년 다르게 작성되면서, 당초 목적인 중장기 재정운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저하되고, 단년도 예산편성과의 연계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대기부문은 「2005~20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2007년 투자계획이 4,105 억원이었으나,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중 2007년 예산안은 3,698 억 원으로 편성되고 있어 9.9% 감소되고 있고, 5년간 연평균 증가율도 32.6%에서 14.9%로 낮아져 불과 1년 만에 투자우선순위가 크게 밀려나고 있음

[그림 1] 대기부문 중기투자계획



5. 주요사업별 예산안 분석

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 예산확대와 연내 집행가능성

- 2007년도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 예산안은 전년보다 10배 증가한 1,359 억원으로 편성되고 있는데, 이는 「1996 런던협약 의정서」 발효(2006. 3) 등으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확충이 시급해졌기 때문임
 - 사업의 타당성과는 별도로, 2007년 예산안의 1/10 규모에 불과했던 과거연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현액 대비 집행비율이 2005년 57.6%, 2006년 3/4분기 현재 51.7%임을 감안하면,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10배로 확대된 2007년 예산안이 연내에 모두 집행될 수 있을지 의문시됨**

[표 2] 2007년도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개소, %)

	2006 (A)	2007(안) (B)	증감 (B-A)	증감률
금액	12,365	135,883	123,518	998.9
물량	21개소 (계속 7, 신규 14)	55개소 (계속 17, 신규 38)		

자료: 환경부, 「2007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 2006. 9.

나. 농촌·연안지역 하수도 보급 관련 예산안 분석

- **내륙농촌·연안지역의 하수도 보급률은 상대적으로 저조**(2004년 말 기준으로 경북 58.8%, 전남 57.6%, 충남 49.3%)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연안지역하수처리장 설치」, 「댐 상류하수도시설 설치」 등 관련 사업(2007안 1조 3,400억원)의 **집행실적이 부진함**
 - 관련사업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현액 대비 평균 집행비율은 2005년 46.6%, 2006년 3/4분기 현재 62.0%에 머물고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하수도 혜택에서 소외된 지역의 관련사업 **집행실적 제고대책이 필요함**

[표 3] 2007년도 하수도 보급관련 예산안 규모

(단위: 백만원, %)

	2006 (A)	2007(안) (B)	증감 (B-A)	증감률
합 계	1,297,593	1,339,902	42,309	3.3
면단위하수처리장설치	66,667	79,518	12,851	19.3
연안지역하수처리장설치	28,183	17,257	-10,926	-38.8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93,292)	115,420	22,128	23.7
댐상류하수도시설 설치	74,012	132,930	58,918	79.6
하수처리장설치	519,435	536,100	16,665	3.2
하수관거정비	490,700	436,500	-54,200	-11.0
오수처리시설 설치	4,849	1,722	-3,127	-64.5
분뇨처리시설	20,455	20,455	-	-

주: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는 2007년부터 행정자치부에서 환경부 사업이 이관되었음.

자료: 환경부, 「2007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2006. 9.

다. 지방상수도 보급 관련 예산안 분석

- 2004년 말 기준으로 면(面) 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은 35.2%로 전국평균 90.1%에 비해 현저히 낮고 읍(鎭) 지역은 82.5%에 머물고 있어서, 농촌지역에서도 **면 지역으로 갈수록 상수도 혜택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음**
 - 읍 지역 상수도 보급과 직접 관련된 「중소도시 지방상수 개발」(2007안 92억원)은 그간 집행이 부진하였으나 최근에는 집행실적이 개선(2005년 기준 지방자치단체 집행비율 85.2%)되고 있으므로, 사업의 타당성에 비추어 2003년 이후 감소추세에 있는 재정투자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함
 - 면 지역 상수도 보급과 직접 관련된 「급수취약지역 식수원 개발」(2007안 1,907억원)은 집행부진이 계속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예산현액 대비 집행비율이 2005년 67.2%, 2006년 3/4분기 현재 51.4%에 불과한 바, **집행 실적 제고대책이 필요함**

[표 4] 2007년도 지역규모별 지방상수도 보급관련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06 (A)	2007(안) (B)	증감 (B-A)	증감률
지방상수도 관련예산 전체	227,288	230,274	2,986	1.3
○ 시·읍 지역				
- 중소도시 지방상수 개발 (환특)	10,000	9,169	- 831	- 8.3
○ 면 지역				
- 급수취약지역 식수원개발 (균특)	169,778	190,671	20,893	12.3
(농어촌생활용수개발)	115,376	138,038	22,662	19.6
(도서지역 식수원개발)	54,402	52,633	- 1,769	- 3.3

자료: 환경부, 「2007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2006. 9.

라. 노후화물차 조기폐차 예산안 분석

- 2005년부터 시작된 「노후화물차 조기폐차」 사업은 집행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바, 지방자치단체 예산현액 대비 집행비율이 2005년 3.5%, 2006년 3/4분기 현재 0.9%에 머물고 있고, 차량수 기준으로도 각각 1.5%, 3.0%에 불과함
 - 2007년 예산안은 전년보다 200억원이 감액된 69억원 수준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집행부진의 직접적인 사유인 낮은 국고보조율(25%)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어서 **2007년에도 관련예산의 집행부진이 예상됨**

VI. 문화·관광 분야 재정분석

1. 2007년도 예산안 현황

- 2007년도 문화·관광 분야 재원은 전년대비 2.6% 증가한 총 2조 8,693억원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그중 **문화관광부 소관 재정규모는 전년대비 1.2% 감소한 2조 2,705억원** 규모(예산 1조 4,154억원, 기금 8,551억원)임
 - 재정규모가 전년보다 축소된 것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부지매입이 2006년에 완료되고, 「문화산업진흥기금」의 폐지를 전제로 예산안이 편성되었기 때문임

[표 1] 2007년도 문화관광부 소관 회계별·분야별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06예산 (A)	2007예산안 (B)	증감 (B-A)	증감률
합 계	2,296,995	2,270,528	-26,467	-1.2
[회계별]				
세출예산	1,368,983	1,415,462	46,479	3.4
일반회계	966,434	999,889	33,455	3.5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380,900	391,791	10,891	2.9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21,649	23,782	2,133	9.9
기금	928,012	855,066	-72,946	-7.9
문화예술진흥기금	111,237	103,122	-8,115	-7.3
지역신문발전기금	21,340	19,971	-1,369	-6.4
신문발전기금	17,590	15,800	-1,790	-10.2
관광진흥개발기금	419,889	451,220	31,331	7.5
국민체육진흥기금	260,256	264,953	4,697	1.8
문화산업진흥기금	97,700	-	-97,790	-100.0
[분야별]				
문예진흥	759,195	675,891	-83,305	-11.0
문화미디어산업	361,248	365,357	4,109	1.1
관광진흥	638,100	653,007	14,907	2.3
체육진흥	408,963	436,554	27,591	6.7
기타(타 회계전출금 등)	129,488	139,718	10,230	7.9

주: 기금은 사업비만 계상한 것이며, 기금운영비(882억원), 내부거래(209억원), 여유자금(6,920억원)은 제외함.

자료: 문화관광부, 「2007년 예산·기금(안) 개요」, 2006. 10.

- 문화관광부의 프로그램은 33개, 단위사업은 231개에 이르고, 하나의 단위사업이 여러 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어, 재정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규모로 다수사업을 수행하는 특징이 있음

2. 재정운용구조의 문제점

- 문화관광부는 3개의 회계(일반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책임운용기관특별회계) 이외에 특정 분야별로 5개의 기금(문화예술진흥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신문발전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을 보유하는 **칸막이식 재정구조**를 이루고 있음
 - 2007년에는 「한국영화발전기금(가칭)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의 신설이 계획되어 있어, 재정의 칸막이가 8개에서 10개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특정 분야(문화, 관광, 체육)별로 기금을 보유하는 재정운용은 목적구속금지의 예산원칙(non-affection)에 반하고, 국회의 재정통제 기능을 약화시키며, 예산사업과 기금사업 간 분류를 불명확하게 하므로, **향후 특별회계·기금의 정비**를 통해 재정구조를 단순화 시켜야 할 것임

3. 지역문화 거점도시 조성 예산안 분석

- 2007년도 지역문화 거점도시 조성의 지역별 관련예산안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광주) 834억원, 「영상문화도시」(부산) 30억원, 「역사문화도시」(경주) 40억원, 「전통문화도시」(전주) 30억원으로 편성되고 있음
 - 「영상문화도시」와 「역사문화도시」는 기(既) 건립된 시설의 효과적 이용을 담보할 프로그램과 인적자원에 대한 별도의 예산항목 없이, 도로정비, 조경사업 등 **인프라 측면에 자원배분**이 편중되어 있음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중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기반의 보조사업자의 예산현액 집행비율이 2005년 52.3%에 불과하고, 2006년에도 사업의 구체성 결여 등의 이유로 수시배정 되는 등 **실적이 부진함**
- 「영상문화도시」는 계속되는 설계지연으로 2005년부터 교부된 예산 99억원 (2005년 40억원, 2006년 55억원)이 지방자치단체에서 2006년 10월 현재 까지도 **전혀 집행되지 않고 있음**
- 지역문화거점도시 조성 관련 4개 사업은 사업명칭과 사업목적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관련회계, 재원, 지원방식, 지원수준이 각각 다르다는 문제**로 인해 재정지원의 형평성 시비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원칙이 필요함

[표 2] 지역문화 거점도시 조성계획 및 2007년도 예산안 편성현황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	영상문화도시 (부산)	역사문화도시 (경주)	전통문화도시 (전주)
사업기간	2004~2023 (20년간)	2004~2014 (11년간)	2005~2034 (30년간)	2006~2025 (20년간)
재정소요	2조원 이상	1,294억원	2조 3,840억원	1조 6,311억원
시행주체	문화관광부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경주시	전주시
관련회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신설예정)	균특회계	일반회계	일반회계
2007년 예산안	834억원	30억원	40억원	30억원

주: 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예산편성은 2006년까지 일반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각각 계상되었으나 2007년부터 일반회계에만 계상되고 있음.

2. 역사문화도시와 전통문화도시의 사업기간 및 재정소요는 문화관광부 잠정추계이며, 현재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임.

자료: 문화관광부, 내부자료.

4. 지역관광개발 예산안 분석

- 2007년도 지역관광개발의 사업별 예산안은 「남해안관광벨트 조성」 142억원, 「유교문화권 개발」 298억원, 「관광지개발」 286억원, 「문화관광 자원개발」 990억원,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 186억원으로 각각 편성되고 있음
 - 관련 5개 사업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현액 대비 평균 집행비율은 2005년 47.7%에 불과하고, 2006년 3/4분기 현재 49.1%로 집행되지 못한 교부금액이 총 1,449억원에 달하고 있음
 - 「관광지개발」, 「문화관광 자원개발」,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은 집행부진, 성과지표 부적절 등의 사유로 2006년 재정자율평가에서 미흡으로 분류되었음
 - 관련 5개 사업 중 2006년 3/4분기까지 집행이 가장 저조한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집행비율 29.7%)은 오히려 전년대비 40.3%(53억원) 증액 편성되고 있는 바, 과다편성 여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함

[표 3] 2007년 지역관광개발 관련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2006 (A)	2007안 (B)	증감 (B-A)	증감률
남해안관광벨트 조성	22,532	14,177	-8,355	-37.1
유교문화권 개발	29,099	29,798	699	2.4
관광지개발	33,105	28,624	-4,481	-13.5
문화관광 자원개발	102,967	99,026	-3,941	-3.8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	13,224	18,554	5,330	40.3
합 계	200,927	190,179	-10,748	-5.35

자료: 문화관광부, 「2007년도 예산안 개요」, 2006. 10.

5. 체육진흥투표권 및 경륜사업 수익금 일부의 예산외 운용

- 문화관광부는 「체육진흥투표권」 및 「경륜」사업 수익금 중 일부를 관련 법률 규정에 근거하여 적립한 ‘문화관광부 적립금’을 통해 문화관광부 장관이 인정

하는 사업에 사용하고 있으나, 예산외로 운용되어 국회심의를 받지 않고 있음

- 2006년 10월 현재 수익금 중 문화관광부 적립금 규모는 각각 체육진흥 투표권 160억 1,800만원, 경륜사업 8,800만원에 이르고 있고, 경륜사업 수익금 사용내역을 보면, 2005년 23억 5,200만원과 2006년 10월 현재 13억 3,700만원으로 기존 예산사업과 구분되지 않는 소액다건(少額多件)의 지출을 하고 있음
- 수익금 중 문화관광부 적립금과 경기주최단체지원의 경우, 국민체육진흥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반영되지 않고 있어 국회의 예산·결산심의 영역 밖에 있으나, 관련 산하단체(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운영본부)는 자금창 구역할만 수행할 뿐, 문화관광부가 실질적인 계획 및 집행을 하고 있으므로 정부지출로 보아야 함
- 문화관광부 적립금 등의 사용의 법적 근거는 국가재정법 제17조에서 정한 예산총계주의 원칙을 배제하는 조항은 될 수 없으므로 향후 관련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반영하여 국회의 예산·결산심의를 거쳐 사용해야 할 것임

[표 4] 체육진흥투표권 및 경륜사업 수익금 배분현황 및 기금반영 여부

(단위: 백만원)

	회계	용도	2006 계획 (지출)	2007 계획안	기금수입 반영여부
체육진흥 투표권 사업수익금	국민체육 진흥기금	기금수입으로 계상 후 기금사업비로 지출	57,474	62,868	○
		월드컵경기장 건립비 상환	95,790	104,780	○
	경기주체단체	투표권 발행대상 운동 경기 주체단체 지원	19,158	20,956	X
	문화관광부 적립금	문화관광부 장관이 인정하는 문화체육 사업의 지원	19,158 (200)	20,956	X
경륜 사업수익금	국민체육 진흥기금	기금수입으로 계상 후 기금사업비로 지출	21,510	12,314	○
	문화관광부 적립금	문화관광부 장관이 인정하는 공익사업	1,344 (1,337)	770	X

주: 1. 괄호 내의 지출액은 2006년 10월 현재 기준의 지출액을 의미함.

2. 당해연도 수입과 지출액과의 차이는 적립금으로 조정됨.

目次

I. 교육 분야 재정분석

1. 2007년도 교육 분야 예산안 현황

- 2007년도 정부예산안의 총 지출은 238조 5,102억원이고, 이중 교육 분야 재정은 전년대비 7.4% 증가한 30조 8,890억원이며, 총지출 대비 교육재정의 비중은 12.95%로 2006년의 12.84%에 비해 0.11% 포인트 증가함
 - 유아및초중등교육부문은 전년대비 7.8% 증가한 26조 8,783억원이며, 고등교육부문은 전년대비 4.9% 증가한 3조 5,308억원임
 - 방과후학교, 깨끗한 학교 만들기 등 신규사업을 만드는 등 유아및초중등교육 부문에서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의 재정을 크게 증가시킨 반면, 고등교육부문은 소폭 증가시킴

[표 1] 2007년도 교육 분야 자원배분 현황

(단위: 억원, %)

		2006	2007(안)	증감액	증감율
교육	유아및초중등	249,424	268,783	19,359	7.8
	고등교육	33,666	35,308	1,642	4.9
	평생교육	3,052	3,071	19	0.6
	교육일반	1,507	1,728	221	14.7
	소 계	287,650 (12.84)	308,890 (12.95)	21,240	7.4
사회	626,160 (27.94)	687,444 (28.82)	61,284	9.8	
경제	553,805 (24.72)	560,150 (23.49)	6,345	1.1	
국방	222,906 (9.95)	240,485 (10.08)	17,579	7.9	
일반행정 및 기타	550,216 (24.56)	588,133 (24.66)	37,917	6.9	
합 계	2,240,737 (100.00)	2,385,102 (100.00)	144,365	6.4	

주: 1.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한 순계 기준임.

2. ()는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기획예산처, 2006.

2. GDP 대비 교육재정의 비중과 자원배분 방향

- 2006년도에 발표된 GDP 대비 학교교육비 비중은 7.5%(2003년 기준)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나, 정부부담률은 4.6%로 OECD 국가평균인 5.2%보다 낮은 수준임
 - 반면 민간부담률은 2.9%로 OECD 평균인 0.7%보다 2.2%p 높은 수준이며, 특히 고등교육단계의 민간부담률은 OECD 국가평균의 5배에 달하고 있음
 - 고등교육단계의 민간부담률이 높은 것은 사립교육기관 재학생 비율이 80% 이상이고, 사립교육기관의 재정이 학생의 수업료¹⁾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
- GDP 대비 교육재정의 비중을 다소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고등교육부문에 대한 정부부담률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총 지출 대비 교육재정부중을 확대하되,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고등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것을 전제로 교육 분야 중 고등교육부문에 대한 지출을 확대하는 지출구조조정이 필요함

[표 2] 교육단계별 GDP 대비 학교교육비 구성(2003)

(단위 : %)

	전체 교육단계			초중등교육단계			고등교육단계		
	정부	민간	계	정부	민간	계	정부	민간	계
한 국	4.6	2.9	7.5	3.5	0.9	4.4	0.6	2.0	2.6
독 일	4.4	0.9	5.3	2.9	0.6	3.5	1.0	0.1	1.1
미 국	5.4	2.1	7.5	3.9	0.3	4.2	1.2	1.6	2.9
영 국	5.1	1.0	6.1	4.0	0.6	4.6	0.8	0.3	1.1
일 본 ¹⁾	3.5	1.2	4.8	2.7	0.3	3.0	0.5	0.8	1.3
프랑스	5.8	0.5	6.3	4.0	0.3	4.2	1.1	0.2	1.4
핀란드	6.0	0.1	6.1	3.9	n	4.0	1.7	0.1	1.8
국가평균	5.2	0.7	5.9	3.6	0.3	3.9	1.1	0.4	1.4

자료: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06.

1) 대학재정의 등록금 의존률은 국공립 42.5%, 사립 66.8%에 달하고 있음.

3. 2007년도 주요 신규사업 분석

가. 방과후학교운영

- ‘방과후학교운영사업’은 농·산·어촌 학교의 방과후학교운영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학생에게 바우처(voucher)를 지급하는 사업임
 - 2005년에는 시범적으로 48개 학교를 선정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특별교부금)으로 10억원을 지원하였고, 2006년에는 전학교로 확대하여 특별교부금 337억원을 지원함
 - 2007년도 예산안에는 교육 분야 ‘유아및초중등교육부문’의 ‘학교교육내실화 프로그램’에 포함된 신규사업으로 일반회계 885억원, 농특회계 132억원 등 총 1,017억원이 편성됨

[표 3] 2007년도 방과후학교운영 예산안의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007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농·산·어촌 방과후학교운영	일반회계	36,500	88개군×1,130백만원×36.7%
	농특회계	13,200	88개군×1,130백만원×13.3%
저소득층 바우처 지원		45,000	30만명×3만원×10개월×50.0%
도시 초등보육 지원		7,000	700개교×20백만원×50.0%
합 계		101,700	-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2007년도 예산안 세부사업 설명자료」, 2006.

- 방과후학교운영사업은 2개의 프로그램에 편성되어 성과관리에 부적합하고, 타 부처에 다수의 유사사업이 존재하여 통합·조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동일한 목적을 지닌 사업의 예산이 교육부 일반회계(885억원)와 농특회계(132억원) 등에 2개의 다른 계정과 2개의 다른 프로그램에 편성되어, 예산편성의 투명성과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문제를 지니고 있음
- 보건복지부, 청소년위원회, 여성가족부에 유사한 사업²⁾이 다수 존재하고, 교육부의 사이버가정학습체제구축사업(15억원)이 있어, 유사사업의 통합·조정체계를 구축³⁾할 필요가 있음

나. 깨끗한 학교 만들기

- 2007년도 신규사업인 ‘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은 학교 자체에서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학교시설 청소를 용역인력이 수행하도록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7년도 예산안은 239억원임
 - 5,876개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당 평균용역인력 1명에 해당하는 청소용역비를 지원하여 5,876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임

[표 4] 깨끗한 학교 만들기 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2007년 예산안	산출근거
국립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178	22개교×900천원×9개월×100%
공사립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23,708	5,854개교×900천원×9개월×50%
합 계	23,887	-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2007년도 예산안 세부사업 설명자료」, 2006.

2) 보건복지부(지역아동센터, 206억원), 청소년위원회(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120억원/청소년공부방, 18억원), 여성가족부(방과후보육, 4억원).

3) 김현미의원이 발의한 ‘학령기 아동·청소년 보호와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국무총리 소속 하에 통합·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 ‘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은 지속적 재정지출이 필요하고,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효과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 신중한 검토 필요(2007안, 239억원)
 -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첫해에만 크게 증가(5,876개)하고, 이후로는 매년 500개 정도로 소폭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보임
 - 초등학교의 보건 및 위생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주목적이라면, 전문용역업체에 청소를 의뢰할 수 있는 예산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음

[표 5] 깨끗한 학교 만들기 중기재정 소요전망

(단위: 백만원, 명)

	2007	2008	2009	2010
예산액	23,887	28,845	32,879	35,914
일자리 (추가)	5,876 (5,876)	6,388 (512)	6,900 (512)	7,539 (639)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2007년도 예산안 세부사업 설명자료」, 2006.

4.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시·도 교육청에 초·중등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7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7.2% 증가한 26조 3,730억원임
 -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연평균 8.7% 증가시킬 계획이며, 이에 따라 전체 교육재정 중 유아및초중등교육부문과 고등교육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87.0 : 11.4 에서 2010년에는 87.9 : 10.6 로 변화될 전망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취학아동수 및 교원수 감소 등의 환경적 변화를 고려하여 증가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저출산에 따른 인구학적 변화에 따른 **학령인구수 감소, 교원 수 감소** 등으로 지방교육에 대한 재정수요는 완만하게 증가할 것으로 보임
- 이러한 환경적 변화를 반영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2010년까지 연평균 8.7% 증가시키겠다는 정부의 재정운영방향은 재검토될 필요가 있음

[표 6] 유아 및 초중등교육부문 재정투자계획

(단위: 억원, %)

	2006	2007	2008	2009	2010	연평균 증가율
학교교육내실화	401	1,414	437	446	285	-8.2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45,966	263,730	292,913	316,892	343,012	8.7
e-러닝의 활성화	350	339	344	348	351	0.1
기타	2,707	3,300	1,264	1,476	1,495	-13.8
합 계	249,424	268,783	294,958	319,162	345,143	8.5

자료: 대한민국정부,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06.

5. 대학(원) 교육역량강화사업

- 국가전략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제2단계 BK21사업의 성과향상을 위한 성과관리체계 및 평가시스템 구축 강화 필요(2007년 예산안 2,900억원)
 - BK21사업은 전형적인 HRD⁴⁾사업이라는 점에서 R&D사업과는 다른 인력양성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 2006년에 BK21사업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신설된 'BK21사업 관리위원회'가 체계적인 조사·분석·평가를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4) Human Resource Development의 약자임.

- **대학구조개혁사업**은 구조개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대학에 대해 재정을 사후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 필요(2007년 예산안 600억원)
 - 2005년에 시작된 사업으로 사업준비 부족으로 **2005년 예산 실적행률이 매우 저조**하였고(8.4%), **2006년 상반기** 기준 실적행률도 매우 저조했음(0.0%)
 - 재정지원을 전제로 대학구조개혁을 추진하기 보다는 구조개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대학에 사후에 포상적 차원에서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 필요

[표 7] 고등교육부문 주요사업의 2006년도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

(단위: 억원, %)

		BK21	대학구조개혁사업	NURI	대학특성화사업
2006년 예산액(A)		2,900	700	2,600	600
2006년 예산현액(B) ¹⁾		2,900	700	3,069	600
2006년 상반기 집행 현황	1/4분기	0	0	482	2
	2/4분기	1,414	0	2,101	0
	상반기(C)	1,414	0	2,583	2
	집행률(C/B)	48.8	0.0	84.2	0.3
2006년 상반기 실집행 현황	1/4분기	0	0	64	0
	2/4분기	0	0	92	0
	상반기(D)	0	0	156	0
	실집행률(D/B)	0.0	0.0	6.0	0.0

주: 1) 2006년도 예산현액은 예산액에 2005년도 이월금을 합한 금액임.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요청에 대한 답변」, 2006.

6. 학술연구역량강화사업

- **한국학술진흥재단 출연금과 학술연구구성사업의 관계** 등 학술연구역량강화사업 예산편성의 투명성 강화할 필요가 있음(2007년 예산안 3,444억원)
 - 재단 출연금으로 운영되던 ‘**대학교수 해외방문연구지원사업(20억원)**’을 인문사회학술연구구성사업으로 이전하고, 잉여재원을 학술연구정책및성과 분석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는 바, 이를 국회에 충분히 소명할 필요가 있음
 - 사업집행을 위한 인건비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출연금과 학술연구구성

사업의 기획심사평가비 비목에 동시에 편성되고 있는 바, 투명성 강화를 위해 재단 출연금과 학술연구조성사업비 사이의 경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출연금의 이자수입⁵⁾ 사용계획서를 예산설명서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출연금의 법정과실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출연금 관련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⁶⁾

[표 8] 학술연구역량강화사업의 2007년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06	2007(안)	증감률
한국학술진흥재단출연	8,638	8,615	-0.3
기초과학학술연구조성	170,517	180,517	5.9
인문사회학술연구조성	120,491	130,491	8.3
한국학중앙연구원출연	14,320	15,605	9.0
고전국역	4,900	4,842	-1.2
국제백신연구소지원	3,423	4,308	25.9
합 계	322,289	344,378	6.9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2007년도 예산안 세부사업 설명자료」, 2006.

5) 매년 20~30억원의 이자가 발생하고 있음.

6)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등에 마련 필요.

II. 산학협력지원 예산안 분석

1. 2007년도 산학협력지원 예산안 현황

- 2003년 이후 참여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산학협력을 강조하고 있으며, 산학협력지원 재정사업은 교육부, 산자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표 1] 2007년도 부처별 산학협력지원 재정사업(단위사업) 현황

(단위: 억원, %)

	단위사업명	2005 결산	2006 예산 (A)	2007 예산안 (B)	증감	
					금액 (B-A)	비율
교육부	2단계 BK21	1,850	2,900	2,900	-	-
	지방연구중심대학	100	100	100	-	-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	2,400	2,600	2,594	-6	-0.2
	대학특성화(수도권)	600	600	600	-	-
	전문대학특성화	1,680	1,680	1,680	-	-
	산학연협력체제활성화	450	500	500	-	-
	소 계	7,080	8,380	8,374	-6	-0.1
산자부	산업기술기반구축	1,050	900	682	-218	-24.2
	산업기술인력양성	540	510	570	60	11.8
	산학협력중심대학지원	140	200	200	-	-
	지방기술혁신사업	305	335	510	175	52.2
	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	270	241	240	-1	-0.4
	테크노파크조성사업	200	200	250	50	25.0
	소 계	2,505	2,386	2,452	66	2.8
중소 기업청	산학연공동기술개발	455	531	803	272	51.2
	중소벤처창업대학원육성	20	20	20	-	-
	신기술창업인프라구축	90	88	75	-13	-14.8
	소 계	565	639	898	259	40.5
과학 기술부	우수연구센터육성	735	820	831	11	1.3
	소 계	735	820	831	11	1.3
정통부	IT전문인력양성	353	373	398	25	6.7
	IT고급인력양성	600	604	543	-61	-10.1
	IT인력고도화지원	20	101	88	-13	-12.9
	소 계	973	1,078	1,029	-49	-4.5
	합 계	11,858	13,303	13,584	281	2.1

자료: 각 부처, 「2007년도 예산안 세부사업 설명서」, 2006.

- 2007년도 산학협력지원사업의 총 예산안(은 전년대비 2.1% 증가한 1조 3,584억원이며, 부처별로는 교육부(61.7%)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다음으로 산자부(18.1%), 정통부(7.6%), 중기청(6.6%) 순임

2. 산학협력지원 예산안의 사업목적별 구분

- 산학협력지원 재정사업을 사업의 목적 기준으로 분류하면, 인력양성, 기술개발, 거점육성, 복합목적 등 4개의 목적으로 구분될 수 있음

[표 2] 2007년도 목적별 산학협력지원 예산안 현황

(단위: 억원, %)

	단위사업명	소관부처	2005 결산	2006 예산 (A)	2007 예산안 (B)	증감	
						금액 (B-A)	비율
인력양성	2단계 BK21	교육부	1,850	2,900	2,900	0	0.0
	지방연구중심대학	교육부	100	100	100	0	0.0
	IT고급인력양성	정통부	600	604	543	-61	-10.1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	교육부	2,400	2,600	2,594	-6	-0.2
	대학특성화(수도권)	교육부	600	600	600	0	0.0
	산업기술인력양성	산자부	540	510	570	60	11.8
	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	산자부	270	241	240	-1	-0.4
	IT전문인력양성	정통부	353	373	398	25	6.7
	IT인력고도화지원	정통부	20	101	88	-13	-12.9
	전문대학특성화	교육부	1,680	1,680	1,680	0	0.0
소계			8,413	9,709	9,713	4	0.0
기술개발	산업기술기반구축	산자부	1,050	900	682	-218	-24.2
	산학연공동기술개발	중기청	455	531	803	272	51.2
	소계		1,505	1,431	1,485	54	3.8
산학협력 거점육성	산학협력중심대학지원	산자부	140	200	200	0	0.0
	테크노파크조성사업	산자부	200	200	250	50	25.0
	중소벤처창업대학원육성	중기청	20	20	20	0	0.0
	신기술창업인프라구축	중기청	90	88	75	-13	-14.8
	우수연구센터육성	과기부	735	820	831	11	1.3
소계			1,185	1,328	1,376	48	3.6
복합목적	산학연협력체제활성화	교육부	450	500	500	0	0.0
	지방기술혁신사업	산자부	305	335	510	175	52.2
	소계		755	835	1,010	175	21.0
합계			11,858	13,303	13,584	281	2.1

자료: 각 부처, 「2007년도 예산안 세부사업 설명서」, 2006.

- 1) 본 분석은 주요 5개 부처의 산학협력지원 예산안을 대상으로 함.

- 2007년 산학협력지원 예산안에서 **인력양성사업이 71.5% (9,713억원)**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다음으로 **기술개발사업 10.9%**, **거점육성 10.1%**, **복합목적 7.4%** 순으로 사업목적별 비중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임

3. 단위사업별 유사성·중복성 검토

- 부처별 사업운영의 초점을 살펴보면, **교육부는 모든 학문 분야를 포함하는 인력양성사업**을, **산자부는 모든 기업체에 해당되는 기술개발기반구축과 기술인력양성**에 초점을 맞춤
 -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위주의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비 지원을, **과기부**는 우수과학자 육성을 위한 우수연구센터에 대한 지원을, **정통부**는 IT와 관련이 깊은 고급, 중견인력의 양성에 대한 지원을 중점으로 하고 있음
 - 그러나 단위사업의 사업목적과 지원대상을 검토한 결과, 유사·중복 사업이 다수 존재함
- 산학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인력양성사업은 유사사업들이 **교육부, 산자부, 정통부**에서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 경향이 있음
 - 교육부의 **BK21사업(지방우수대학원지원사업, 712억원)**과 **지방연구중심대학지원사업(100억원)**은 동일 부처 내에서 사업목적과 대상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음
 - 교육부의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2,400억원)**과 **대학특성화사업(600억원)**, 산자부의 **산업기술인력양성사업(570억원)**, 정통부의 **IT전문인력양성사업(398억원)** 등은 기업체가 필요로 하는 중견인력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중복되는 측면이 있음

[표 3] 2007년도 산학협력지원사업의 유사·중복성 검토

(단위: 억원)

	단위사업명	소관 부처	2006	2007(안)	유사·중복성
고급 인력 양성	BK21(지역우수대학원)	교육부	2,900	2,900	- 대학원 수준 고급인력양성 목표 - 정통부는 IT 특화
	지방연구중심대학	교육부	100	100	
	IT고급인력양성	정통부	604	543	
중견 인력 양성	NURI	교육부	2,600	2,594	- 학부 수준 중견인력양성 목표 - 정통부는 IT 특화 - 학부취업을 향상
	대학특성화(수도권)	교육부	600	600	
	산업기술인력양성	산자부	510	570	
	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	산자부	241	240	
	IT전문인력양성	정통부	373	398	
기술 개발	산업기술기반구축	산자부	900	682	- 산자부는 기반구축
	산학연공동기술개발	중기청	531	803	- 중기청은 기술개발
중심 대학 육성	산학협력중심대학지원	산자부	200	200	- 산자부와 교육부에서 공동으로 추진 - 실무자 교류중
	산학연협력체제활성화 (산학협력중심대학)	교육부	500 (300)	500 (300)	

자료: 각 부처, 「2007년도 예산안 세부사업 설명서」, 2006.

□ **기업체가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은 기반구축과 기술 개발로 구분하여 산자부와 중소기업청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

- 산자부의 산업기반구축사업은 기술개발의 기반이 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표준화사업이 별도 사업으로 분리되고, 연구기자재 구입 등을 지원하는 산학연공동연구사업이 16.1% 감소함에 따라 전년대비 24.2% 감소한 682억원으로 편성됨
- 반면, 중기청의 산학연공동기술개발사업은 중소기업이 애로를 겪고 있는 기술을 산학연이 공동으로 개발하는 연구비를 지원하며, 중소기업육성과 일자리 창출의 목적을 강화하기 위해 전년대비 51.2% 증가한 803억원으로 편성됨
- 두 사업 사이의 상충적(trade-off) 예산편성은 국가적 차원에서 산학연 공동연구를 위한 기반이 어느 정도 구축되었으며, 직접적인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켜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예산편성으로 이해될 수 있음

- 산학협력중심대학지원사업은 산업단지 등 지역사업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8개 권역별 거점대학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교육부와 산자부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음**
 - **교육부의 산학협력중심대학지원사업**은 산학연협력체제활성화사업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3개 4년제 대학 및 10개 전문대학 등 23개 대학 지원(300억원)**
 - **산자부의 산학협력중심대학**은 8개 권역별 **13개 4년제 대학**에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연구개발, 연구장비, 인력양성 재정 지원(**200억원**)
 - 2006년 5월, 교육부와 산자부는 대학특성화 및 산학협력활성화 등을 위한 **‘대학혁신과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로 차관보급 정책협의를 정례화하고, 과장급 교류를 실행하고 있음

4. 문제점과 개선방안

- 사업 목적과 성격이 유사한 산학협력지원사업의 부처간 연계와 조정을 강화하여, **공동으로 사업목적, 지원대상, 성과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 2006년 3월부터 교육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의 공무원과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대학특성화지원전문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으나 실질적인 협조와 조정이 미흡한 실정임
 - 유사한 세부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책임자(팀장) 수준**에서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사업목적, 지원대상, 성과목표 등을 합의할 필요가 있음**
 - 산학협력지원사업을 포함한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위한 통합지침**을 마련하여, **사업성과와 재정집행의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교원평가**에서 산학협력성과의 비중이 높여, 응용 분야를 연구하는 교원들이 산학협력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구조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대학의 교원평가²⁾는 주로 교육성과와 연구성과를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산학협력성과는 사회봉사와 함께 분류되고, 평가비중도 20% 미만에 그침
- 직무성과계약제 등을 도입하여 산학협력성과 비중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산학협력에 관심이 높은 교원에 대해서는 특허출원, 기술이전 등 산학협력성과의 평가비중을 50% 수준까지 높일 필요가 있음

□ 고가 대규모 실험장비 등을 보유하고 있는 정부출연연구소를 산학협력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이공계 출신 박사후과정을 흡수하여 고급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사업구조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 특허출원³⁾, 기술평가, 기술이전 등 대학의 산학협력과 관련된 관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산학협력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교육부의 산학협력체제활성화사업의 세부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커넥트 코리아’사업은 대학의 산학협력을 총괄하는 산학협력단의 특허관리, 기술평가, 기술이전과 관련된 관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임
- 동 사업은 2006년도에 최초로 시작된 사업으로 2007년도 예산안은 전년과 동일한 30억원이나, 대학 및 산업체에 대한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재정지원과 함께 대학이 보유한 특허기술 등을 상업화하기 위한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교육부 및 중기청에서 추진 중인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와 관련된 규정이 새롭게 마련될 필요가 있음⁴⁾

2) 일반적으로 대학의 교원평가의 성과비중은 교육성과 40, 연구성과 40, 사회봉사 및 산학협력 20 등으로 구성되고 있음.

3) 서울대 관계자에 따르면, 황우석교수의 국제특허비용으로 18억원이 사용되었다고 함.

4)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회 이군현의원 및 이주호의원 발의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산자위원회 서갑원의원 발의안) 참조.

경 제

I. 농림해양수산 분야 재정분석

1. 농림해양수산 분야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재정은 향후 2010년까지 연평균 1.6% 수준으로 증가할 예정이고, 132조원 투융자사업¹⁾의 경우 연평균 2.9% 수준으로 각각 증가할 예정임([표 1] 참조).

[표 1] 농림해양수산 분야 자원배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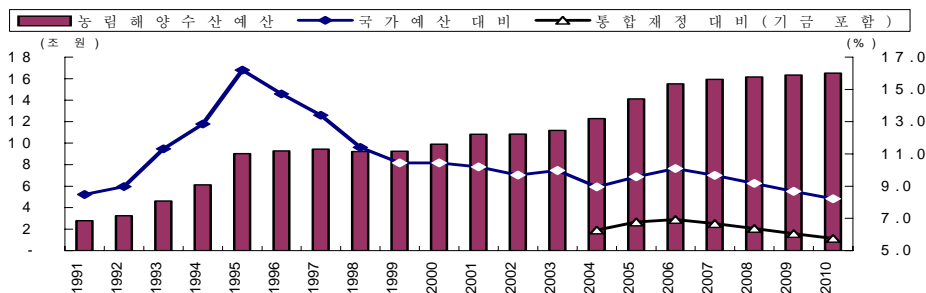
(단위: 억원, %)

	2006	2007	2008	2009	2010	연평균 증가율
농림해양수산 분야 (증가율)	155,121	159,254 (2.7)	161,540 (1.4)	163,338 (1.1)	165,234 (1.2)	1.6

자료: 대한민국정부,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06. 10.

- 통합재정(기금포함)에서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6.9%에서 2010년 5.7%로 감소할 예정임([그림 1] 참조).

[그림 1] 농림해양수산 분야 예산의 추이와 국가예산 대비 비율의 변화



자료: 1. 기획예산처 산업재정기획단, 2005. 10.

2. 대한민국정부,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06. 10.

- 1) 농업 분야 119.4조원 투융자사업과 수산 분야 12.4조원 투융자사업을 총괄한 개념임.

- 농림어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농림어업 대비 GDP 비율과 농림해양수산 분야 예산비중을 국제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음.
 - 한국 2.9배, 일본 2.2배, 미국 2.8배, 영국 0.9배, 독일 4.6배, 프랑스 1.8배임.
 - 우리나라가 독일보다는 낮지만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농림어업이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바에 비하여 농림해양수산 분야 예산이 결코 적게 배정된 것은 아님.

- 그러나 한·미FTA 등을 고려할 때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실질 재정규모가 감소하는 것은 문제이며, 농어업 분야 피해를 감안하여 적정 재정규모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2. 2007년도 농림해양수산 분야 예산안 분석

-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2007년도 예산안은 [표 2]에서 보는 것과 같이 2006년도 예산과 비교하여 3.9% 증가한 약 15조 7,664억원으로 편성하였음.

[표 2]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2007년도 예산안

(단위: 억원, %)

	2006년 예산 (A)	2007년 예산안 (B)	증가	증가율
			(A-B=C)	(C/A*100)
농업·농촌	123,515	126,455	2,939	2.4
임업·산촌	9,953	12,128	2,175	21.9
해양수산·어촌	18,222	19,082	860	4.7
합 계	151,690	157,664	5,974	3.9

자료: 농림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각 연도

- 2007년도 농림해양수산 분야 예산안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재정규모의 연평균 증가율이 1.6%로 억제되었고([표 1] 참조), 둘째 농업·농촌부문 및 해양수산·어촌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임업·산촌부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였음.
 - 셋째 농업·농촌부문의 재원배분 구조가 채무상환과 같은 경직성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넷째 농업생산기반과 같은 기반정비 관련 예산이 다소 감소하고, 농가소득·경영안정과 농촌개발·복지증진 예산이 증가하였음.
 - 다섯째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재정구조가 다소 간결해져,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 통합되고, 재정융자특별회계가 폐지되는 등 특별회계수가 2개 축소되었음.
 - 여섯째 인건비, 기본경비, 기금관리 및 운영비 등의 행정경비가 일반사업경비에 포함되어있어 특정사업의 예산이 확대되었다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고, 일곱째 농림부와 농촌진흥청의 사업 중 사업내용이 중복될 가능성이 우려되는 사업이 늘어나고 있음.

[표 3] 사업내용이 중복될 가능성이 우려되는 신규사업

농림부	농촌진흥청
자연순환농업활성화	자연순환농업기술개발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지원	탑라이스 생산 기술시범사업
농촌테마공원 조성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기존)	농촌전통테마마을 조성(기존)

자료: 농림부·농진청,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2006. 10.

- 시행된 지 2년밖에 지나지 않아 자료가 축적되지 않은 상황에서 판단하기는 빠른 감이 없지 않지만, 현행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예산편성과정에서 유효하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재정사업 자율평가 점수와 2007년도 예산안 증감률 사이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거의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3. 친환경농업 육성정책 관련 사업 분석

가. 2007년 예산안 특징

- 친환경농업 육성정책에 투입되고 있는 예산의 추이를 보면 [표 4]에서 보는 것과 같이 2007년도 예산안의 경우 2006년도 예산 대비 205억원이 증가한 약 2,190억원이 투입될 예정임.

나. 친환경농업 직불 단가 인상 필요

-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는 1999년부터 시작되었으며, 관행농업에서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한 친환경농가에 초기 소득 감소분을 보전함으로써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장려하고, 환경보전 등의 공익 기여에 대하여 보상하는 것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음. 2007년도 예산안은 2006년 대비 54.2% 증가한 175억 4,600만원임.

[표 4] 친환경농업 육성정책 관련 예산 추이

(단위: 백만원, %)

	2005년 예산	2006년 예산(A)	2007년 예산안(B)	증감 (C=B-A)	증감률 (C/A×100)
비료판매가격차손보전	24,500	42,000	42,000	-	-
친환경농업직접지불	6,938	11,377	17,546	6,169	54.2
합 계	145,426	193,976	218,985	25,009	12.9
농림부 세출 대비 비중	1.0	1.1	1.3	-	-

자료: 농림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각 연도.

- 토양의 양분과잉으로 환경오염이 심각한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토양의 양분투입을 완화하는 친환경농업의 육성은 중요함.
 -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2003년 이후 고정되어있는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단가를 인상할 필요가 있음.

다. 유기질비료지원사업 확대 필요

- 유기질비료지원(비료판매가격차손보전)사업은 농가 영농비부담 경감을 위해 비료가격을 시장가격보다 낮게 판매하고 구매가격과 판매가격의 차손을 재정에서 사후 보전해 주는 사업이고, 화학비료판매가격차손보전이 폐지된 관계로 2007년도 예산안은 2006년 대비 약 58% 감소한 420억원임.
 - 화학비료를 대체하는 친환경 자재인 유기질비료의 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유기질비료지원단가를 인상할 필요가 있음.

4. 양곡생산유통지원 관련 사업 분석

- 양곡생산유통지원 관련 사업의 2007년도 예산안은 [표 5]에서 보는 것과 같이 2006년도 대비 9.7% 증가한 약 2,298억원임.

[표 5] 양곡생산유통지원 관련 사업의 2007년 예산안

(단위: 백만원, %)

	2005 결산	2006예산		2007 예산안		증감	
		(A)	8월말 집행률	요구	조정(B)	B-A	%
고품질 쌀브랜드 육성지원	-	-	-	52,960	7,200	7,200	순증
RPC운영지원	19,110	9,600	100.0	17,210	15,810	6,210	64.7
타라이스생산 기술시범(농진청)	-	-	-	1,450	1,450	1,450	순증
합 계	212,883	209,425	92.7	270,962	229,772	20,347	9.7

자료: 농림부·농촌진흥청, “실국별·사업별·목별 대비표”, 2006. 9.

- 수입쌀 시판이 시작되면서 쌀 시장은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며, 국내산 쌀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고품질 쌀 브랜드를 확립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농림부의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사업과 농진청의 탐라이스생산 기술시범사업은 사업목적과 사업내용이 유사하여 통합할 필요가 있으며, 고가(高價) 전략을 펴는 탐라이스생산 기술시범사업은 사업타당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쌀값하락에 따른 소득 감소를 쌀소득보전제도를 통하여 재정에서 담당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미곡종합처리장 운영지원사업은 사업타당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지적에 대하여 농림부는 미곡종합처리장은 수확기 쌀 값 유지측면에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5. 해양수산부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분석

- 해양수산부의 지자체보조사업은 사업의 집행률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안편성시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왔으며, 2007년도 예산안은 [표 6]에서 보는 것과 같이 3,729억원이 편성됨.
 - 특히 해양생물연구센터의 경우 보조사업자인 지자체 단계의 실적행률 추이를 보면, 2003년 0.0%, 2004년 0.0%, 2005년 30.8%, 2006년 10월 현재 21.4%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며, 집행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소규모바다목장사업은 사업의 성격상 인공어초사업과 유사하므로 인공어초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표 6] 해양수산부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의 2007년도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

	2006년도 예산	2006년도 10월말 실적행률	2007년도 예산안	증가율
소규모 바다목장	2,000	25.0	3,100	55.0
인공어초	40,298	77.4	31,667	-21.4
해양생물연구센터건립	3,500	21.4	4,200	20.0
합 계	340,140	57.8	372,923	9.6

자료: 해양수산부,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2006. 10.

6. 산림청 자연휴양림조성사업 예산안 분석

- 자연휴양림사업의 2007년도 예산을 보면 [표 7]에서 보는 것과 같이 2006년 대비 26.1% 증액된 491억 2,700만원이 편성됨.
- 자연휴양림조성사업은 주 5일제 근무제 실시에 따라 급증하는 산림휴양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일반국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휴양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임.

[표 7] 자연휴양림사업의 2007년 예산안

(단위: 백만원, %)

	2005 결산	2006예산		2007 예산안		증감	
		(A)	6월 실적행률	요구	조정(B)	B-A	%
국 유	20,618	21,391	15.9	21,105	21,051	-310	-1.6
지자체	9,601	17,555	20.9	28,225	28,075	10,520	59.9
합 계	30,219	38,946	18.2	49,330	49,126	10,180	26.1

자료: 산림청, “실국별·사업별·목별 대비표”, 2006. 9.

- 산림청의 자연휴양림사업은 공기부족 등의 이유로 사업비가 연례적으로 이월되어왔으며, 최근 가동률이 42%선에서 정체되어 저조한 실정임.
 - 연례적 이월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며, 가동률 제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수입을 제고하기 위해서 국유자연휴양림은 시설을 보완하여 시설사용료 수입을 확대하는 경영전략을 펼칠 필요가 있음.

II. 산업·중소기업 분야 재정분석

1. 2007년 산업·중소기업 분야 예산안

- 2007년도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예산 및 기금을 합한 총 지출규모는 17조 5,383억원(예산 7조 3,676억원, 기금 10조 1,707억원)으로 2006년 대비 1.6%(2,685억원)가 증가된 규모임.

[표 1] 산업·중소기업 분야 2007년 재정 개요

(단위: 억원, %)

	2006년 (A)	2007년(안)		
		금액 (B)	증감 (C=B-A)	증감률 (C/A)
산업자원부	81,779	89,953	8,174	10.0
예산	48,794	53,902	5,108	10.5
기금	32,985	36,051	3,066	9.3
중소기업청	87,939	82,319	-5,620	-6.4
예산	20,844	16,663	-4,181	-20.1
기금	67,095	65,656	-1,439	-2.1
특허청	2,980	3,111	131	4.4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2,980	3,111	131	4.4
합 계	172,698	175,383	2,685	1.6

- 2007년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재정은 미래 성장동력 산업을 중심으로 한 전략부문에 집중 지원하고, 민간부문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며, 부문별로는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 기반 구축, 지역전략산업 진흥 등에 중점 투자될 예정임.

2. 석탄수급 안정 및 광산지역 진흥사업 분석

□ 석탄수급 안정 및 광산지역 진흥사업의 2007년도 예산안은 5,547억 7,700만원임.

[표 2] 석탄 수급안정 및 광산지역 진흥사업 2007년 예산안

(단위: 백만원, %)

	2006 예산 (A)	2007 예산안		
		금액 (B)	증감 (C=B-A)	증감률 (C/A)
탄가안정대책보조	255,620	339,000	83,380	32.6
대한석탄공사출자	45,000	51,000	6,000	13.3
석탄비축자산관리비	7,816	15,453	7,637	97.7
폐광대책비	32,660	0	순감	-
광해방지비	25,000	80,000	55,000	220.0
탄광지역개발	120,486	64,324	-56,162	-46.6
광산지역광해방지	18,322	0	순감	-
대체산업창업지원융자	10,000	5,000	-5,000	-50.0
합 계	514,904	554,777	39,873	7.7

- 「2005년도 정부산하기관 경영실적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석탄수급 안정 및 광산지역 진흥사업 관련 대부분의 사업이 정부 예산의 단순한 집행적 성격에 그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으며, 동 사업 중 탄가안정대책보조사업의 경우 2006년 예산의 49.6%, 2007년 예산안의 61.1%를 차지하고 있어 예산배분이 지나치게 편중된 양상을 보이므로, 적극적으로 주요사업 분야를 발굴하는 등 사업을 다각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이미 10여 년 전부터 수행해 온 판매 고시가격 추진체계는 시장상황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며, 연례적으로 예산부족의 문제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정부는 동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 및 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며, 광해방지사업단의 설립취지인 광해방지 업무에 보다 많은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 광해방지사업비 및 탄광지역개발사업의 경우 매년 보조사업자의 실제 집행 실적이 부진하므로, 집행실적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3. 자유무역지역조성사업 분석

- 정부는 1970년 익산과 마산을 수출자유구역으로 지정(2000년 자유무역지역으로 명칭 변경)하여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2000년 이후 추가로 군산, 대불, 동해 및 울촌 지역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여 조성·개발 중임.
 - 자유무역지역조성사업의 2007년도 예산안은 284억원임.

[표 3] 자유무역지역조성사업 2007년 예산안

(단위: 백만원, %)

	2006 예산 (A)	2007 예산안		
		금액 (B)	증감 (C=B-A)	증감률 (C/A)
군산자유무역지역조성	200	500	300	150.0
대불자유무역지역조성	18,900	18,900	0	0.0
동해자유무역지역개발	900	4,500	3,600	400.0
울촌자유무역지역개발	600	4,500	3,900	650.0
합 계	20,600	28,400	7,800	37.9

- 특히 2005년 9월 완공된 군산자유무역지역의 경우 입주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2006년 9월 말 현재).

- 대불지역의 경우 현대미포조선 등 16개 업체가 입주하여 입주율은 74.5%를 보이고 있어 어느 정도 양호한 상태이나, 군산지역의 경우 2005년 9월 완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리나마(헝가리), 퓨즈본드코리아(호주) 등 외국업체 2개사와 극동반도체 등 국내업체 5개사만이 입주되어 있어 전체 입주율이 2006년 9월 현재 2.2%에 그치고 있음.
 - 이처럼 입주율이 저조한 것은, 첫째, 인센티브 제공기준이 싱가포르·중국 등 주요 경쟁국에 비해 미흡한데 기인하며, 둘째, 경제자유구역처럼 지역 내에 학교·병원 등 복합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생활상 불편한 점이 많은 것 등에 기인함.
 - 따라서, 정부는 주요 경쟁국의 상황을 감안하여 인센티브 제공기준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권자와 관리권자가 상이할 뿐만 아니라 자유무역지역 내에서도 구분별 관리권자가 상이한 복잡한 체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법적·제도적 정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정부에서 2006년 현재 추진 중인 외자유치제도로는 자유무역지역제도 이외에도 경제자유구역제도(재정경제부), 국제자유도시제도(건설교통부), 외국인 기업 전용단지(산업자원부) 등 각 부처별로 여러 제도가 존재하고 있어 상당 부분 기능이 중복되고 있음.
 - 특히, 자유무역지역과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물류기능과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라는 점에서 매우 유사하며, 대상지역·물류기업 인센티브 및 세제 지원 등에서 기능이 상호 중복되고 있으므로, 정부는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양 제도의 통합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는 외국인 투자유치 사업 또한 통합·조정할 필요가 있음.

4. 신·재생에너지단지조성사업 분석

- 신·재생에너지단지조성사업의 2007년 예산안은 130억원임(부지조성 기반 시설비 17억원, 수소파워파크 실증시설 건립비 52억원, 테마파크 조성 61억원)
 - 전라북도 부안군에 연구·실증·교육·홍보 등 복합기능을 갖춘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를 조성하여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을 활성화 하고 새만금 사업 등 인근 관광지와 연계함으로써 지역경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총 1,000억원(국비 800억원, 지방비 200억원)이 투자되어 추진되는 사업임.

- 지방자치단체의 실제 집행내역을 보면, 그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2004년 예산액 10억원은 12월말에 가서야 배정받았고, 2005년 예산액 또한 12월말 가서야 배정받아 2006년 9월말 현재에도 7억원만이 집행된 상태이며, 2006년 예산액은 10월 현재 아직 배정받지 못한 상태임.
 - 이처럼 연례적으로 집행실적이 저조한 것은 당초 2004년 사업 시행시 기본계획연구용역과 예비타당성조사가 수행되지 못한 상황에서 예산액이 먼저 반영된데 기인함.
 - 2006년 10월 현재 2006년 예산도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교부되지 못하였고, 예산 집행의 선결조건인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농촌진흥지역 해제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황이므로 산업자원부와 해당지방자치단체는 집행실적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III. 수송·교통 및 지역개발 분야 재정분석

1. 수송·교통 및 지역개발 분야 국가재정운용계획(2006~2010)의 검토

□ 국가재정운용계획(2006~2010)의 수송·교통 및 지역개발 분야 투자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임

- 첫째, 수송·교통 및 지역개발 분야 재정투자 총액의 연평균 증가율은 1.6%로 다른 분야에 비해 가장 낮고, 수송·교통 분야 투자(연평균 증가율이 0.1%)보다 지역개발 분야의 투자(연평균 증가율이 7.9%)가 늘어날 전망이다
- 둘째, 지역 및 도시 부문은 2008년에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지원이 본격화됨으로써 전년대비 96%로 무려 1조 2,078억원으로 증가될 것임

[표 1] 국가재정운용계획(2006~2010)

(단위: 억원, %)

	2006	2007	2008	2009	2010	연평균 증가율
수송·교통 합계 (증가율)	152,862	155,439 (1.7)	154,262 (-0.8)	154,067 (-0.1)	153,739 (-0.2)	0.1
지역개발 합계 (증가율)	31,374	26,792 (-14.6)	33,336 (24.4)	39,096 (17.3)	42,490 (8.7)	7.9
총 합계 (증가율)	184,236	182,231 (-1.1)	187,598 (2.9)	193,163 (3.0)	196,229 (1.6)	1.6

주: 지역 및 도시 부문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지원 포함.

자료: 대한민국정부,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06. 10.

- 국가재정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송·교통 및 지역개발 관련 공기업의 자체 투자를 확대하고, 또한 민간투자사업으로의 대체를 확대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 그러나 정부는 공기업 부채 등의 경영상태를 점검해야 하고, 민간투자사업의 무분별한 발주를 지양하여 수송·교통 및 지역개발 투자의 계획성을 제고해야 함

2. 2007년도 건설교통부 소관 세출예산안의 검토

- 2007년도 건설교통부 소관 세출예산안의 특징은 크게 네 가지임
 - 첫째, 건설교통부 소관의 예산은 2005년에 18조 899억원, 2006년에는 18조 588억원, 2007년도 예산안은 17조 4,217억원으로 계상되었는데, **2007년도 예산안은 2006년도 예산에 비해 6,371억원이 감액되었음(-3.5%)**
 - 둘째, **2007년도 예산안이 2006년도 예산에 비해 증액된 부문은 물류 등 기타(13.8%), 지역 및 도시(12.1%), 산업단지(2.1%)**뿐임
 - 셋째, 예산안이 2006년 예산에 비해 감액된 부문은 수자원(-25.5%), 공항(-14.9%), 철도(-4.9%), 도로(-3.5%), 도시철도(-3.0%), 주택(-2.1%)임
 - 넷째, 1990년대 중반 이후 2000년까지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송·교통 및 지역개발에 대한 집중 투자가 이루어졌으나 2000년 이후 재정투자의 증가율은 점차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를 입증하는 결과임

[표 2] 2007년도 건설교통부 부문별 세출예산안

(단위: 억원, %)

	2005 예산	2006 예산(A)	2007 예산안(B)	증감 (B-A)	%
도 로	75,058	71,837	71,569	-268	-0.4
철 도	41,737	37,797	35,940	-1,857	-4.9
도시철도	12,648	13,226	12,834	-392	-3.0
공 항	4,061	3,919	3,334	-585	-14.9
물류등 기타	5,498	7,447	8,475	1,028	13.8
수자원	18,834	22,426	16,710	-5,716	-25.5
지역 및 도시	4,867	4,785	5,365	580	12.1
산업단지	3,472	3,711	3,788	77	2.1
주 택	11,724	11,440	11,202	-238	-2.1
국고채무부담행위	3,000	4,000	5,000	1,000	25.0
합 계	180,899	180,588	174,217	-6,371	-3.5

자료: 건설교통부.

3. 2007년도 건설교통부 소관 연구개발 사업 분석

- R&D사업의 2005년 예산은 1,519억원, 2006년 예산은 2,620억원, **2007년**
도 예산안은 3,379억원으로 2006년에 비해 759억원이 증액되었음(29%)
 - 그 중, 건설 분야 연구개발사업은 2006년에 비해 185억원이 증액되
었고(12.6%), 교통 분야 연구개발사업은 574억원(49.7%) 증액되었음

[표 3] 건설교통 분야 연구개발 예산현황

(단위: 억원, %)

	2005 예산	2006 예산(A)	2007 예산안(B)	증감 (B-A)	(%)
○ 건설 분야 연구개발사업	909	1,464	1,649.1	185.1	12.6
○ 교통 분야 연구개발사업	610	1,156	1,730	574	49.7
합 계	1,519	2,620	3,379.1	759.1	29.0

자료: 건설교통부.

- 연구개발 사업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조직의 경우 연구개발총괄팀이 만들어졌지만 아직도 많은 업무가 기술정책팀, 도시정책팀 등으로 분리되어 있으므로 책임성이 결여되었음
 - 둘째, 기본계획들이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건설기술혁신5개년계획 등으로 분산되어 있으므로 최근에 수립한 「R&D 로드맵」으로 통일해야 함
 - 셋째, 연구 과제를 발주하는 방식은 그 중요성과 규모에 따라 개인, 2인 이상, 산·학·연, 기타 컨소시엄 등으로 구분하여 전문성을 제고해야 함
 - 넷째,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연구 과제당 사업비가 1.2~1.7억원으로 매우 낮아 연구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견해도 있음
 - 끝으로, 건설교통부는 연구개발 사업을 ①기술 및 인프라 구축, ②표준화, ③활용 프로그램 개발, ④신기술 개발 등으로 구분해서 계획적으로 평가해야 하고, 이러한 점을 「R&D 로드맵」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4. 2007년도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사업 분석

- 2005년도 예산은 20억원(예비비)으로 19억 8,400만원이 집행되었고, 2006년도 예산은 12억 5,000만원으로 9월 말 현재까지 6억원이 집행되었고, 2007년도 예산요구액은 기반시설 설계비(100억원)를 포함한 107억 6,000만원임

[표 4]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관련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예산 과목	예산액 (안)	집행(계획) 내역	집행금액
2005	2714-151	2,000	홍보비 18억원, 기관운영비 2억원	1,984
2006	2714-211	1,250	홍보비 2억원, 여비 1억원, 연구용역비 3억원	600
2007	2714-211	10,706	기반시설설계 100억원, 홍보비 3억원, 연구용역비 3억원 등	

주: 2006년 9월 현재 기준.

자료: 건설교통부.

- 수도권에 소재하는 소속기관 67개, 정부투자·출자기관 26개, 출연기관 53개, 기타 공공법인 29개, 총 175개 공공기관을 지방의 시·도로 이전할 계획임

- 정부는 본 사업에 대한 두 가지 문제점을 유의하면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첫째, 혁신도시의 좋은 사례로 거론되는 캐나다의 오타와, 미국의 레스톤, 프랑스의 소피아 앙티폴리스는 우리나라의 경우와 비교하기 어려움
 - 세 도시 모두 대도시에 인접해 수송, 통신, 교육, 연구 등 사회적 기반에 대한 투자가 장기간 집적되어 일류 도시의 가능성을 내포
 - 둘째,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려면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이 우선 이루어져야 할 것임

IV. 하천관리 및 홍수예보 사업 예산안 분석

1. 2007년도 하천관리 및 홍수예보 사업 예산안의 특징

- 하천관리 및 홍수예보 사업의 2007년 예산안은 2006년 예산 1조 1,578억원 (추경포함 1조 8,278억원) 대비 715억원 증가한 1조 2,293억원으로 전년대비 6.2%의 증가율(추경포함 -32.7%)을 보이고 있음.
 - 2007년도 정부 총지출 증가율 6.4%에 비해 소폭 낮은 수준이며 수송·교통·지역개발 분야의 증가율 2.6%에 비하면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보임.
 - 단위사업별로 보면, 국가하천정비지원 사업이 전년대비 5.0% 증가하였으며 지방하천정비사업이 5.2%, 경인운하해지지급금의 순증으로 인해 굴포천치수 사업이 38.4% 증가하였으나, 하천편입토지보상 사업은 사업 종료에 따라 13.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며, 집행실적이 상대적으로 부실했던 수문조사 및 홍수예보지원 사업 역시 13.6% 감소되었음. 하천재해예방사업은 전년대비 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1] 하천관리 및 홍수예보사업의 2007년도 예산안

(단위: 억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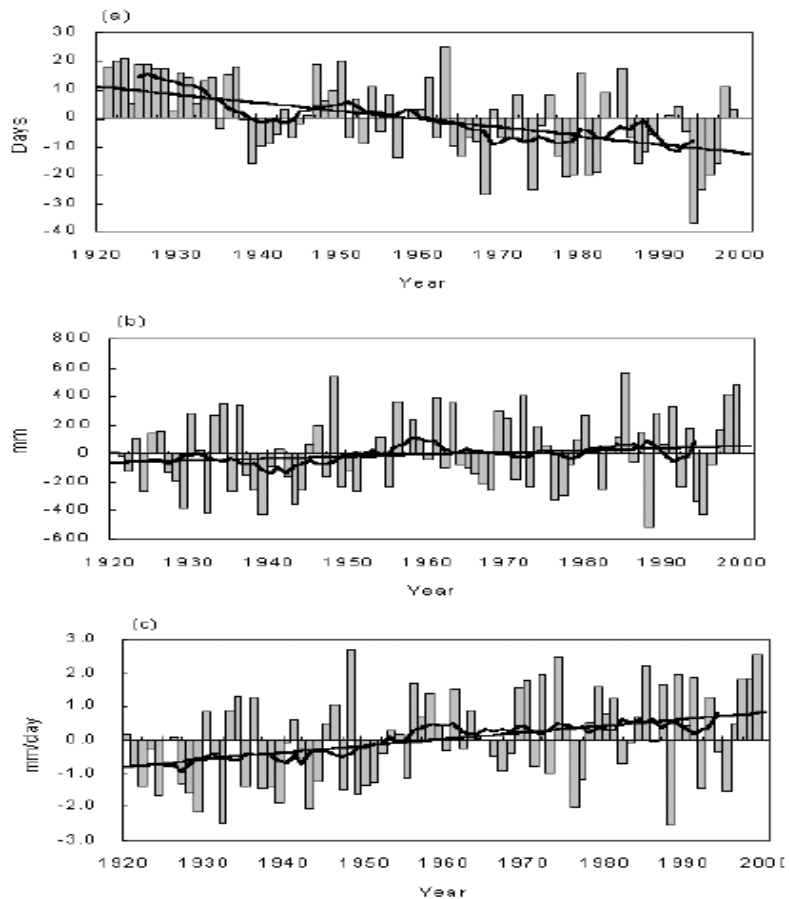
	2005년 결산	2006년			2007년 예산안	2006 대비 증감액	2006 대비 증감률
		예산	9월말 집행액	9월말 집행률			
하천관리 및 홍수 예보	12,368	11,578	8,518	73.6	12,293	715	6.2
국가하천정비지원	3,753	3,430	2,702	78.8	3,600	170	5.0
지방하천정비지원	4,141	3,280	2,446	74.6	3,452	172	5.2
굴포천치수	800	800	600	75.0	1,107	307	38.4
하천편입토지보상	705	532	22	4.2	459	-73	-13.7
수문조사 및 홍수예보 지원	200	336	149	44.3	290	-46	-13.6
하천재해예방	2,769	3,200	3,153	98.5	3,385	185	5.8

2. 하천관리 및 홍수예보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우리나라의 기온상승과 강수강도 강화를 감안할 때, 하천관리 및 홍수예보 사업의 예산 확대와 적극적 집행의 필요성이 더욱 중요해짐.

- 20세기 들어 세계적인 온난화 추세(평균 $0.6\pm 0.2^{\circ}\text{C}$ 상승)가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같은 기간 동안 평균 1.5°C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온난화의 속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 20년간 강수량(연강수량/연강수일수)은 18% 증가하고, 호우의 발생빈도 역시 증가추세를 보임.

[그림 1] 80년간 강수일수와 강수량, 강수강도의 편차 시계열



주: 그림 (a)는 강수일수, 그림 (b)는 연강수량, 그림 (c)는 강수강도의 편차 시계열임.
 자료: 기상연구소, 「한반도 기후 100년 변화와 미래 전망」, 2004, p.7.

-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양상과 향후 전망에 따르면, 앞으로 호우에 따른 피해 역시 커질 것으로 보임에 따라 하천관리 및 홍수예보 관련 사업의 예산 확대와 적극적 집행의 필요성이 더욱 중요해짐.
- 자연재해의 피해규모는 해마다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예산 배정에 대한 전향적인 접근이 필요함.
- 소방방재청의 2004년도 재해연보(2005)에 따르면 1960~1970년대의 피해 규모는 2004년 불변가격 기준으로 1천억원 수준에 머물렀지만, 지구 온난화와 함께 본격적인 산업화 궤도에 오른 1980년대 이후 피해 금액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2000년대 들어서는 5년 평균 2조 9,000여 억원 대의 막대한 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2000년~2004년 동안 치수사업의 규모는 도로투자비의 6.9~10.5% 수준에 지나지 않으며¹⁾, 하천관리 및 홍수예보 사업의 2006년도 일반회계 대비 예산규모는 0.99%로, 지리적으로 가까워 기상 조건을 공유하고 있는 일본의 2006년 일반회계 대비 치수사업 투자규모 1.63%에 비해 낮은 수준²⁾임

3. 치수계획과 도시계획의 연계 필요성

- 치수관련 대책과 도시 계획의 연계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하천 주변의 도시화와 집중화 경향으로 인해 풍수해 피해액에서 도시 지역 비중이 9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도시 기본 계획이나 도시 관리 계획 등에 구체적인 방재나 치수관련 내용이나 기본방향이 제시되지 않는 실정임.

1) 국토연구원, 「효율적인 도시홍수관리 및 제도개선방안」, 2006. 5, p.35.

2) 일본 국토교통성 2006년도 하천국관계예산총괄표 참조.

- 향후 도시계획의 수립단계에서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의 위험을 감안하고, 하수도 관련 대책과 유역 대책이 연계되는 등의 하천 관련계획과 연계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V.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예산안 분석

1. 2007년도 대도시권교통혼잡도로개선 사업 예산안의 개요와 사업내용의 검토

- 지역간 교통소통을 개선하고 혼잡비용을 절감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 대상 대도시권에 적정 간선도로망 체계를 구축하는 등 사업의 2007년도 예산안은 300억원으로 2006년 예산과 동일한 수준임.
 - 동 사업의 대상 지역은 수도권 고속도로 계획이 추진되는 수도권을 제외한 부산과 울산, 광주, 대구, 대전의 5개 광역 대도시권이며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재정사업과 민자사업을 병행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음.
 - SOC 관련 예산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보다 철저한 계획과 합리적이고 면밀한 사업 진행의 필요성이 있음.

[표 1] 대도시권교통혼잡도로개선 사업의 2007년도 예산안

(단위: 억원, %)

	2005년 결산	2006년			2007 예산안	2006 대비 증감액	2006 대비 증감률
		예산	9월말 집행액	9월말 집행률			
대도시권교통혼잡도로개선	3.66	300	0	0.0	300	0	0.0

- 2005년 중 연구 용역과 사업 대상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이후 예산당국과의 사업규모 및 재정지원규모 협의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됨에 따라 동 사업의 예산집행실적은 2006년 9월 현재 매우 저조한 상황임.

- 2004년도 집행률 56.1%, 2005년도 집행률 3.5%의 저조한 과거 집행실적을 볼 때, 동 사업의 진행에 있어서 철저한 사전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이미 대상이 확정되어 2006년 예산에 반영된 설계비(100억원)의 조속한 발주가 필요하며, 지방자치단체와의 지속적 협의를 통한 예산 확보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차질 없는 사업의 진행을 위한 보다 적극적 노력이 요구됨.

2. 사업추진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과 개선방향

- 교통혼잡을 줄이기 위한 도로망의 확충이 오히려 교통 혼잡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사업 대상 도로 인근 도로 현황에 대한 철저한 파악과 함께 향후 인근 도로 소통에 미칠 영향에 대한 예측작업이 수행될 필요가 있음.
 - 도로망의 확충이 오히려 혼잡을 유발하는 사례는 이미 국내 교통망에서 실증된 바 있음.¹⁾
-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교통수요는 도시공간에서 주요 시설물의 비치와 인적, 물적 흐름의 방향 등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에 동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향후 도시 계획²⁾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시행될 필요성이 있음
 - 동 사업의 추진을 위한 투자우선순위 평가에서는 이러한 요소의 반영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1) 엄진기 외, 「브라이스 역설에 대한 실증적 검증 - 남산2호 터널 폐쇄사례를 중심으로」, 대한교통학회지, 1999.

2)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기본계획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미래 인구에 대한 과도한 예측이 지적되고 있음. 여기에서 언급하는 도시계획은 이러한 과도한 미래 인구 추정과 이에 따른 비합리적 자본 투자 소요 예측의 문제점이 합리적으로 조정된 도시계획을 의미함.

- 동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이러한 향후 도시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따른 교통수요 유발요인을 반영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동사업의 추진계획에 따르면 민자사업 추진이 계획되어 있는 바, 이에 따른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과거 민자사업은 수요예측의 적정성과 이에 따른 과도한 운영수입 보장, 민간의 경쟁체제 도입 미흡, 높은 통행료, 민간투자대상의 부적정성, 사후관리 미흡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 향후 대도시권교통혼잡도로개선 사업에서 민간자본을 유치할 경우,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하며, 특히 수요예측 단계와 통행료 산정(BTO 방식으로 추진할 경우)이나 리스료 산정(BTL 방식으로 추진할 경우)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함.
-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접근방안의 모색이 필요함.
- 근로자의 통근교통과 관련하여 대중교통 승차권이나 통근용 수송비용 등을 기업체가 근로자에게 보조하는 비과세 대중교통수당제도와 같은 도로 수요 억제정책이 병행될 경우, 동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판단됨.
 -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비의 50%와 용지보상비 100%를 부담하는 현 사업체제(재정사업의 경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등의 이유로 투자가 부진할 경우 사업의 진행 자체가 지연되는 상황이 우려됨.
 -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협약 사업의 총투자액과 연차별 투자액, 협약기간별 연차별 투자분담액, 투자분담을 위한 중앙부처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예산항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중앙정부-지자체간 도로건설 투자협약’과 같은 제도적 접근을 통해 협약 사업의 위상과 실천력을 확보하고 사업의 적기 추진으로 동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VI. R&D 분야 재정분석

1. R&D 분야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2007년도 예산안

가. R&D 분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특징

-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9.1%의 증가율로 R&D 분야에 대한 재정투자를 늘려나갈 계획
-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기간동안 예산에 의한 투자는 크게 증가하고, 기금에 의한 투자가 감소
 - R&D 분야에 투입되는 주요 기금의 재원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지 않으므로 바람직한 조정으로 볼 수 있음

[표 1] R&D 분야 재정투자 계획

(단위: 억원, %)

		2006	2007	2008	2009	2010	연평균 증가율
R&D 분야	예산 (d)	72,283	81,274	89,103	98,309	108,328	10.6
	기금 (e)	16,813	17,169	17,731	17,479	17,799	1.4
	합계 (f) (증가율)	89,096	98,443 (10.5)	106,834 (98.5)	115,788 (8.4)	126,127 (8.9)	9.1

자료: 기획예산처,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개요」, 2006. 10.

- 「2005~20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비하여 국책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소폭 축소하는 대신 연구기관운영지원 및 연구기반조성 등은 상대적으로 투자를 확대하였음

- 출연기관의 기본사업비 비중을 제고해 나가겠다는 계획과 일치하도록 개선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나. 2007년도 R&D 분야 예산안

- 2007년도 R&D 분야 예산안은 2006년 대비 10.5% 증가한 9조 8,443억원으로 예산 8조 1,274억원, 기금 1조 7,169억원임

[표 2] R&D 분야 예산안 현황

(단위: 억원, %)

	2006(A)	2007(안)			증감	
		요구액	조정액	예산안(B)	(B-A)	(B-A)/A
예 산	72,283	83,579	77,978	81,274	8,991	12.4
기 금	16,813	17,482	17,200	17,169	356	2.1
합 계	89,096	101,061	95,178	98,443	9,347	10.5

주: 조정액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조정·배분결과임.

자료: 1. 기획예산처,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개요」, 2006. 10.

2. 국가과학기술위원회, 「2007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조정·배분결과(안)」, 2006. 8.

2. 산학연연구인력교육훈련 사업의 분석

- 산학연연구인력교육훈련 사업은 3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7년도 예산안은 35억원임

[표 3] 산학연연구인력교육훈련 세부사업의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05 결산	2006 예산(A)	2007 예산안(B)	증 감	
				(B-A)	(B-A)/A
연구원 재교육훈련사업	500	500	500	-	-
이공계 융합교육연구센터	-	300	600	300	50.0
연구인력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	-	2,400	2,400	순증
합 계	500	800	3,500	2,700	337.5

- 산학연연구인력교육훈련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연구원 재교육훈련사업 중 최신기술동향 파악 및 현장 연구 인력에 대한 재교육은 해당 분야 연구 인력들이 스스로 해야 할 업무이므로 정부 지원의 필요성이 적음
 - 이공계 융합교육연구센터는 이공계 대학생들에게 인문·사회 분야의 융합·소양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기존 대학교의 인문·사회 분야 학과의 교과과정을 활용하는 방안을 교육부와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함.
 - 연구인력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사업(신규)은 당초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부설기관으로 연구인력 교육훈련원을 설립할 계획이었으나, 프로그램 개발비와 운영비 24억원만 2007년도 예산안에 계상됨
 - 기존의 교육훈련 담당 기관 및 대학의 각종 과정을 통한 연구인력 양성 및 재교육 사업과 중복이 우려되므로 재검토 필요

3. 우주기술개발 프로그램의 분석

- 우주기술개발 프로그램의 2007년도 예산안은 2,355억원이며, 우주발사체개발 사업에 1,338억원, 우주센터건설 사업은 380억원이 계상되어 있음

[표 4] 2007년도 우주기술개발 프로그램의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06년 (A)	2007년 예산안(B)	증 감		구성비
			(B-A)	(B-A)/A	
인공위성개발	65,700	61,200	-4,500	-6.8	26.0
우주발사체개발	96,800	133,810	37,010	38.2	56.8
우주센터건설	75,300	38,000	-37,300	-49.5	16.1
우주인배출사업	2,000	2,500	500	25.0	1.1
합 계	239,800	235,510	-4,290	-1.8	100.0

- 우주발사체개발 및 우주센터건설 사업의 문제점
 - 우주발사체개발 사업과 우주센터건설 사업은 2005년도에 우주개발 중장기 기본계획 수정시에도 외국과의 기술협력 추진을 고려하여 일정을 연기
 - 우주발사체 개발은 러시아와 우주기술보호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이 지연되어 2006년 10월 17일에야 협정에 서명하였음

- 우주발사체개발 및 우주센터건설 사업의 개선방안
 - 발사체 개발 일정은 다시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우주센터 건설 사업과 관련된 예산의 소요시기와 규모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
 - 국가간 우주발사체 관련 기술이전에는 국제 미사일기술통제체제에 따른 규제를 받으며, 러시아가 발사체 1단 엔진 등의 설계와 제작을 맡을 예정이지만 상세한 기술 이전은 없을 것임
 - 외국과의 협상기간 등을 고려하여 낙관적인 일정계획 수립을 지양하고, 긴밀한 협력개발을 통해 우주발사체 독자 개발을 위한 실질적 기술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

VII. 정보화 분야 재정분석

1. 정보화 분야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예산안

가. 정보화 분야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예산안 개요

- 계획기간 중 정보화 분야에 대한 재정투자의 연평균 증가율을 1.1%로 계획하여 정보화 분야에 대한 재정투자의 연평균 증가율이 낮음

[표 1] 정보화 분야 재정투자 계획

(단위: 억원, %)

	2006	2007	2008	2009	2010	연평균 증가율
정보화 분야 (증가율)	34,343	34,560 (0.6)	34,271 (-0.8)	34,826 (1.6)	35,871 (3.0)	1.1

자료: 대한민국정부,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05. 10.

- 2007년도 정보화 분야 예산안은 2006년 대비 0.6% 증가한 3조 4,560억원으로 예산 2조 2,349억원, 기금 1조 2,211억원임

[표 2] 2007년도 정보화 분야 부문별 예산안 반영 현황

(단위: 억원, %)

	2006 (A)	2007 예산안 (B)	증감	
			(B-A)	(B-A)/A
□ IT산업 경쟁력 강화	14,737	13,987	-750	-5.1
○ IT 기반 확충	3,142	2,686	-456	-14.5
○ IT 산업육성	11,595	11,301	-294	-2.5
□ 전자정부 구현	9,165	9,699	534	5.8
□ 국민생활 정보화	9,492	9,897	405	4.3
□ 정보화역기능해소	949	978	29	3.1
○ 정보격차완화	431	413	-18	-4.2
○ 정보보호 강화	518	565	47	9.1
합 계	34,343	34,560	217	0.6

자료: 대한민국정부,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06. 10.

나. IT 산업 경쟁력 강화 부문 예산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IT산업의 경쟁력 강화 부문에 대한 투자는 2006년도에 비하여 5.1%가 감소한 1조 3,987억원으로 계획
- IT산업의 경제성장 기여율이 50%에 이르고, 전체 무역수지 흑자 대비 IT흑자 비중이 2005년 209%에 이르며, IT산업의 노동생산성 기여도¹⁾는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중 1위

[표 3] IT산업의 실질GDP 비중 및 성장기여율

(단위: 억불,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P)
실질GDP 비중	9.5	10.1	11.1	12.3	13.8	15.0
성장기여율	32.1	25.2	26.3	51.3	42.6	46.5
IT수지	215.4	155.4	212.3	281.1	439.3	483.8
무역흑자 비중	181.8	166.3	205.2	187.5	149.5	208.7

자료: 정보통신부, 「IT산업의 국민경제 기여도」, 2006. 3.

- IT 분야에 대한 투자 축소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IT 산업 분야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탄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함

다. 정보화역기능해소 부문 예산안 분석

-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과 「정보격차해소 종합계획」에 의하여 **다각적인 정보격차 해소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2007년도의 정보화역기능해소 예산안은 978억원으로 전년대비 3.1% 증가

1) OECD, *The Economic Impact of ICT*, 2004.

[표 4] 2007년도 정보화역기능 해소 부문 예산안 현황

(단위: 억원, %)

	2006 예산(A)	2007 예산안(B)	증감	
			(B-A)	(B-A)/A
정보격차완화	431	413	-18	-4.2
정보보호 강화	518	565	47	9.1
합 계	949	978	29	3.1

자료: 대한민국정부,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06. 10.

- 정보화역기능해소 부문에 대한 투자규모가 1,000억원 내외에 불과하여, 「정보격차해소 종합계획」과 큰 차이를 보임
 - 국가재정운용계획의 2007년도 정보격차완화 예산안 413억원은 「제2차 정보격차해소 종합계획(2006~2010)」 기준 소요예산의 11.0%에 불과
 -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재정투자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2007년도 정보통신부 예산안

- 통신사업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우편사업특별회계와 우체국예금특별회계를 신설

[표 5] 정보통신부 관련 회계 통·폐합에 따른 예산구조 변화

(단위: 억원)

통·폐합 이전	2006 예산(A)	2007 예산안(B)	증 감		통·폐합 이후
			(B-A)	(B-A)/A	
일반회계	1,702	7,919	-323	-3.9	일반회계
통신사업 특별회계	정통부문 6,540	30,384 18,872	5,734	13.2	우편사업특별회계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우정부문 43,522				
우체국보험특별회계	5,611	5,941	330	5.9	우체국보험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92	187	-5	-2.6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재정융자특별회계	1,701	1,256	-445	-26.2	공공자금관리기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소계	59,268	64,559 (63,303)	5,291 (4,035)	8.9 (6.8)	
정보통신진흥기금	13,590	13,840	250	1.8	
합 계	72,858	78,399 (77,143)	5,541 (4,285)	7.6 (5.9)	

주: 공자기금(1,256억원)은 재정경제부 예산안에 포함되며, ()안의 금액은 이를 제외한 금액임.

3. 모바일필드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의 분석

- 국내 모바일 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와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이동통신 단말기의 필드 테스트가 가능한 시험환경을 구축하여 운영하기 위한 사업

[표 6] 모바일필드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의 예산안

(단위: 백만원, %)

	2006 예산 (A)	2007		증 감	
		요구액	예산안(B)	(B-A)	(B-A)/A
GSM 장비 및 서브 구축	-	6,200	-		
GSM 기지국 설치	-	3,700	-		
중소기업 이용 테스트장비 구입	-	1,000	2,340	2,340	순증
중소기업지원센터 구축·운영	-	1,100	1,660	1,660	순증
합 계	-	12,000	4,000	4,000	순증

자료: 정보통신부,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2006. 10.

- 실질적으로는 대기업의 생산공장 및 연구소 내에 이미 구축된 기존 장비를 활용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용 계측장비와 테스트 공간을 정부에서 지원
 - 중소기업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기술 유출 등 보안 문제와 망 운영유지 비용의 부담과 관련하여 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음
 - 「정보화촉진기본법」 및 「전파법」을 사업 추진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포괄적인 규정에 불과하며,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의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관련 법규가 불충분
- 정보통신산업단지 지정에 의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할 필요가 있음

방
향

I. 국방 분야 재정분석

1. 2007년도 국방 분야 예산안 분석

- 정부는 2007년도 국방 분야 예산안의 주요 목표를 자주적 전쟁억제능력 확충 및 방위충분성 전력기반 구축, 군 복무여건 및 장병사기복지 증진에 두고 있음.
 - 이를 위해 정부는 2007년도 국방 분야 재정지출규모를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6년도 22조 2,906억원에 비해 7.9% 증액된 24조 485억원¹⁾을 편성하였고,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을 포괄하는 일반회계 총계규모로는 전년대비 9.7% 증가한 24조 6,967억원에 해당함.

[표 1] 2007년도 국방 분야 재정규모

(단위: 억원, %)

	2006	2007(안)	증가액	증가율
국방 분야	222,906	240,485	17,579	7.9
일반회계 총계 ¹⁾	225,046	246,967	21,921	9.7
예산	218,729	236,646	17,917	8.2
기금	4,177	3,839	-338	-8.1
BTL 투자	950	3,950	3,000	316
부문별 투자계획				
병력운영	89,188	93,591	4,403	4.9
전력유지	74,504	77,258	2,754	3.7
전력투자	57,881	68,203	10,322	17.8
병무행정	1,332	1,434	102	7.7

주: 1) 국방비 기준 : 국방부 + 방위사업청

자료: 기획예산처, 「2007 나라살림 : 예산개요」, 2006.9를 재구성.

1) 국방부(군인연금기금전출금 제외), 방위사업청, 국가안전보장회의, 병무청의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을 합한 금액임.

- 부문별로는 병력운영이 전년대비 4.9% 증가한 9조 3,591억원, 전력유지는 전년대비 3.7% 증가한 7조 7,258억원, 전력투자는 전년대비 17.8% 증가한 6조 8,203억원 그리고 병무행정은 전년대비 7.7% 증액된 1,434억 원을 차지하고 있음.
- 그러나 정부의 2007년도 국방 분야 예산안은 북한의 핵위협이 가시화되기 이전에 편성·제출된 것이므로 향후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투자의 우선순위의 조정 등 예산안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2. 방공전력 예산안 분석

- 방공이란 공중으로 공격하는 적의 유도탄 및 항공기를 파괴·무력화하거나 공격효과를 감소시키기 위한 모든 방어활동을 의미하고 이러한 무기체계로는 항공기(요격기), 지대공유도탄, 대공포 등을 들 수 있음.
- 우리 군의 2007년도 방공전력사업 예산안을 보면 전년대비 50% 증가한 5,043억 5,700만원임.
- 2007년도 방공전력사업 예산을 단위사업별로 보면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저고도 유도무기 사업예산은 방공전력 전체예산의 52.1%에 해당하는 2,626억 9,600만원이고, 중·고고도 유도무기사업은 방공전력 전체예산의 24.2%인 1,219억 400만원에 불과함.
 - 따라서 2007년도 방공전력사업 예산배분에서는 북한의 미사일위협에 실질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중·고고도 유도무기사업의 비중을 늘리고, 저고도 유도무기사업과 대공포사업의 비중은 감소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임.

[표 2] 방공전력의 단위사업별 2007 예산안 비중

(단위: 백만원,%)

저고도유도무기		중고고도유도무기		대공포		합 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262,696	52.1	121,904	24.2	119,757	23.7	504,357	100.0

자료: 방위사업청 자료를 근거로 재구성.

3. 민군겸용기술사업 분석

- 민군겸용기술은 민간부문과 군사부문에 동시에 활용되어 국가안보역량과 산업경쟁력을 함께 제고시킬 수 있는 기술로서, 탈냉전 이후 경제력 비중이 군사력보다도 커짐에 따라 주요 선진국에서는 국방비의 감축과 더불어 국가연구자원의 효율 극대화를 위한 국가기술개발전략의 요체가 되고 있음.

[표 3] 2007년도 민군겸용기술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억원, %)

	2006 예산	2007 예산안	증 감	증감율
민군겸용기술개발	76.3	119.2	42.9	56.2
규격통일화·기술이전	12.0	14.0	2.0	16.7
과제관리·운영	1.7	1.8	0.1	5.9
합 계	90.00	135.00	45.00	50

자료: 방위사업청.

- 이 사업은 예산측면에서 관련 예산편성 기준이 민·군겸용기술촉진법 시행령 제3조2)에 따라 방위사업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예산의 3% 이상이

2) 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 시행령 제3조 (시행계획의 수립) ②법 제5조제2항 후단에서 “소관연구개발사업예산의 일정비율”이라 함은 법 제2조제4호의 관계중앙행정기관이 추진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예산의 100분의 3**을 말한다.

1. 방위사업청 : 국방과학연구소법 제7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중 기술개발사업

아닌 국방과학연구소 기술개발예산의 3% 이상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 과소계상된 측면이 있음.

- 향후 민·군겸용기술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민군겸용기술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지위를 격상시키는 한편 민군겸용기술사업 관련 예산 편성 기준을 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방위사업청 소관의 경우 국방과학연구소 전체 연구비의 3% 이상을 민군겸용기술사업에 반영하여 동 사업의 예산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임.

4. 전역예정간부 전직지원사업 분석

□ 전역예정간부 전직지원사업을 살펴보면, 제대군인의 취업은 당사자의 전역 후 생활을 보장하는 동시에 현역복무자들에게도 국가에 대한 조건 없는 희생과 봉사정신을 발휘하게 하는데 필요할 뿐만 아니라 장기복무 전역자의 경우 대부분 생애최대 지출시기(45~55세)에 전역하므로 그 필요성이 더욱 인정된다고 할 수 있음.

- 국방부는 이를 위해 2007년도 예산안에 전직지원사업비를 전년대비 4.0% 증가된 77억 6,800만원을 반영하였음.
- 그러나 구체적인 사업내역을 보면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혜 대상자가 예비역 대령인 군 전임교수운영비가 유일하게 증액되었고, 예비역 중령이하 부사관들이 수혜대상인 직업보도교육비와 전직지원비는 전년과 동일한 수준임.

[표 4] 2007년도 전직지원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2006 예산(A)		2007 예산안(B)		증가액 (B-A)	증가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직업보도교육	3,001	40.2	3,002	38.7	1	0.03
전직지원	1,500	20.1	1,500	19.3	0	0
군전임교수운영	2,969	39.7	3,266	42.0	297	10.0
합 계	7,470	100.0	7,768	100.0	298	4.0

자료: 국방부, 「2007회계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를 근거로 재구성.

- 또한 직업보도교육 예산집행에서도 계급별 차등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동 사업은 예산의 배정과 집행에 있어서 부적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또한 국방부 일반회계의 제대군인 취업지원사업은 군인복지기금의 취업활동지원사업과도 중복될 뿐만 아니라 제대군인 지원사업의 주무부처인 국가보훈처의 제대군인지원사업과도 중복되어 문제가 되고 있음.
- 따라서 향후 제대군인 취업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우선 국방부와 국가보훈처의 효율적인 업무분담이 필요하고, 동시에 국방부는 군인이 군복무기간동안 자신의 업무능력과 적성에 맞는 전문보직을 관리해주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군에서 취득한 각종 자격증이 사회에서도 인정되어 취업과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5. 군 의무예산 분석

- 2007년도 군 의무관련 예산안과 관련하여 국방부는 의무체계 현대화를 위해 전년대비 **51.2% 증액된 1,261억원으로 계상**하였음. 주요 역점사업으로 의무인력 전문화, 의료시설 개선, 의무물자 및 장비 현실화, 의료지원의 접근성 및 이동성 보장 등을 들 수 있음.

- 한편 우리 군 의료체계는 사단급 의무대 등 최초 응급처치 단계에서의 처리능력 미흡, 상위단계 병원으로의 후송 과다 등 후송체계의 문제, 진료에 대한 불신, 민간위탁진료 증가 등 진료능력 부족, 예방 및 군진의학 능력 부족 등으로 장병들로부터 점차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임.
- 이렇게 볼 때 2007년도 군 의무관련 예산안은 의무체계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노력보다는 기존의 체계를 일부 보완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 문제시 되고 있음.
 - 특히 장기복무 군의관의 확보율은 편제대비 30% 미만으로 그 부족 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장기복무 군의관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보다는 2007년도 예산안에서 군의관 수당을 전년대비 50% 인상하는 데 그치고 있음.
 - 또한 1차 진료기관인 사단 의무근무대 수준은 기본적인 외과진료도 곤란할 정도로 진료수준이 취약한 상태로 군단 지원병원급 이상으로 과도한 환자후송을 야기하고 있음.
- 따라서 향후 군 의료체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적정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사단 의무대의 1차 진료능력을 보강하며, 진료체계를 축소·통폐합하고, 복잡한 후송체계를 단순화시켜야 할 것임. 동시에 지역내 민간의료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장병들이 적시에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일반행정 및 기타

I. 통일·외교 분야 재정분석

1. 통일·외교 분야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 2006~2010년도 통일·외교 분야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의하면 통일 분야에 투자될 자금은 연평균 3.7%씩 증가하여 총 6조 6,000억원 수준으로 이중 새터민교육훈련 및 정착금 지급 등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제외한 남북경제교류협력, 민족공동체회복지원 대출 및 인도적 지원사업 등에 투입될 자금은 약 4조 6,455억원 수준임.

[표 1] 2006~2010 통일·외교 분야 재정투자계획

(단위: 억원, %)

		2006	2007	2008	2009	2010	연평균 증가율
통 일	남북경제교류협력	6,250	3,480	3,971	5,037	5,559	-2.9
	민족공동체회복지원 대출	127	994	1,313	2,162	2,955	119.6
	인도적 지원사업	2,218	2,509	2,990	3,208	3,682	13.5
	기 타	5,161	3,733	3,436	3,536	3,689	
	소 계	13,756	10,716	11,710	13,943	15,885	3.7
외 교 · 통 상	개도국 개발원조	1,970	2,405	2,672	3,024	3,490	15.4
	국제기구분담금	1,567	2,300	3,043	2,269	2,411	11.4
	대외경제협력지원	2,637	3,046	3,553	4,059	4,566	14.7
	국제교류	579	578	582	592	602	1.0
	기 타	5,005	5,444	5,732	5,020	5,272	
소 계	11,758	13,773	15,582	14,964	16,341	8.6	
총 계		25,514	24,489	27,292	28,907	32,226	6.0

자료: 기획예산처,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개요」, 2006. 9.

- 2006~2010년도 외교 분야 재정투자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개발원조, 국제기구분담금, 대외경제협력지원 및 국제교류기금의 증가에 힘입어 연평균 8.6%씩 증가할 것임.
- 향후 통일 분야 예산은 남북관계의 개선 여부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방향 등 정치적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외교 분야의 예산은 우리나라의 경제력에 상응하는 국제사회에의 기여 증대 및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 확대를 목표로 함으로써 이들 대외협력비의 상승이 동 분야 예산 증가의 주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임.

2. 2007년도 통일·외교 분야 예산안 분석

- 정부는 2007년도 통일·외교 분야 예산안의 주요 목표를 남북교류협력의 활성화를 통한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와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우리나라의 경제력에 상응하는 국제사회에의 기여도 제고 및 경제통상외교에의 능동적 대응에 두고 있음.
- 통일 분야 예산은 전년대비 0.2% 증가한 7,564억원이고 외교 분야 예산은 전년대비 17.4% 증가한 1조 334억원임.
- 통일 분야의 예산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결의안과 북미관계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임. 즉,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의 결정 사항이 대북지원 및 개성공단개발사업과 금강산관광사업 등을 포함한 남북경협사업의 지속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표 2] 2007년도 통일·외교 분야 예산안

(단위: 백만원, %)

	2005결산	2006예산 (A)	2007예산안 (B)	증가액 (C=B-A)	증가율 (C/A×100)
통일부:					
남북협력기금 출연	500,000	650,000	650,000	0	0.0
새터민관련 지원 ¹⁾	35,203	45,377	43,764	-1,613	-3.5
새터민교육훈련	4,283	4,029	5,211	1,182	29.3
기타	48,760	55,787	57,443	1,656	3.0
소 계	588,246	755,193	756,418	1,225	0.2
외교통상부:					
KOICA 출연	189,377	196,971	240,455	43,484	22.1
국제기구분담금	146,413	156,665	230,035	73,370	46.8
재외동포재단출연 ²⁾	10,600	8,519	4,719	-3,800	-44.6
여권발급	41,728	28,273	58,201	29,928	105.9
일반외교활동 등 기타	535,805	489,562	500,035	10,473	2.1
소 계	923,923	879,990	1,033,445	153,455	17.4
합 계	1,512,169	1,635,183	1,789,863	154,680	9.5

주: 1) 새터민관련 지원은 새터민 정착지원금과 행정지원을 더한 금액이다.

2) 재외동포재단에 대한 출연은 국제교류기금의 재외동포재단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이다.

자료: 대한민국정부.

3. 정부 및 민간 대북지원현황(인도적 대북지원)

□ 1995년 문민정부 이후 2006년 9월까지 양곡관리특별회계보조금과 경수로사업 분담금을 제외한 대북지원에 중앙정부(남북협력기금)와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가 지출한 총금액은 약 1조 9,039억원이고, 민간이 지출한 금액은 약 5,823억원임. 따라서 지난 12년간 이 두 가지를 제외하고 인도적 대북지원을 위하여 지출된 총 금액은 약 2조 4,863억원 규모임.)

1) 여기서 대북지원은 양곡관리특별회계보조금과 경수로사업 분담금은 제외한 수치이다. 양곡관리특별회계보조금은 우리나라 농가지원과 대북지원이라는 이중적 목적을 위해 지출된 금액이므로 사실상 대북지원만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

[표 3] 정부·민간 대북지원 총규모

(단위: 억원, %)

	정 부	민 간	소 계	정부지원 비율
문민정부(1995-)	2,118	196	2,314	92
국민의정부(1998-)	6,208	2,350	8,558	73
참여정부(2003-2006.9)	10,714	3,277	13,990	77
합 계	19,039	5,823	24,863	77

- 주: 1. 정부지원 비율 = 정부 / 계 × 100
 2. 정부 = 정부직접지원 + 민간단체를 통한 정부지원 + 민간단체를 통한 지방자치단체 지원.
 3. ‘대북지원’에 협의적 정의를 적용하여, 정부직접지원액에 ‘쌀차관액’(유상지원)은 포함하고 ‘양곡특별회계 보조금’과 ‘경수로분담금’은 제외함.
 4. ‘민간단체를 통한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액’을 통일부는 ‘민간’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본 보고서는 지원재원의 출처를 고려하여 ‘정부’로 분류함.

자료: 통일부, 2006. 9.

4. 개성공단사업

- 개성공단사업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남북간 3대 경제협력사업(금강산사업, 남북철도도로연결사업, 개성사업)의 하나로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조 원 이상을 투입하여 개성시 일대에 총 2,000만평을 3단계에 걸쳐 공단과 배후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임. 2,000만평 중 800만평은 공단으로 조성하고 1,200만평은 생활·상업·관광구역으로 구성된 배후도시로 개발할 계획임.
- 일반회계와 남북협력기금을 통합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결산 및 예산(안)의 합계는 4,115억원이고, 개성공단사업을 위해 이미 지출된 2004년과

며, 경수로사업 분담금 또한 동 비용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KEDO라는 국제기구에 제공된 비용이며 사업비용의 상당부분이 한국전력공사 등에 지급되었기 때문에 대북지원액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경수로발전소 건설 분담 비율은 한국 70%, 일본 22%, EU 8%로, 2006년 10월 현재 경수로발전소 건설에 투자된 전체 공사비는 15억 6,200만 달러이고 우리 정부가 지불한 공사비는 11억 3,700만 달러이다. 이중 국내업체(한국전력공사 등)가 수주한 공사비는 전체 12억 달러 수준이다.

2005년도의 결산 총액은 722억원이며, 2006년도 1,250억원이 집행 중에 있고, 2007년도 개성공단사업 예산(안)은 2,143억원임.

[표 4] 2007년 일반회계 및 남북협력기금 통합 예산(안)

(단위: 억원, %)

	2004	2005	2006	2007(안)	합계	비율
일반회계	-	7	20	18	45	1
남북협력기금	250	465	1,230	2,125	4,070	99
계	250	472	1,250	2,143	4,115	100
연도별 비율	6	11	30	53	100	

주: 2004·2005년은 결산, 2006년은 예산, 2007년은 예산(안)임.
 자료: 통일부, 2006. 10.

5. 금강산 관광지원사업

- 금강산 관광지원에 대한 2007년도 계획은 중·고등학생, 대학생 및 통일교육 교사·교수 등을 대상으로 연 1만명 이내에서 실시할 계획이며 지원수준은 연수에 소요되는 경비를 전액 지원할 예정이고 소요예산은 약 30억 5,000만원 수준임.
- 개성공단사업과 금강산관광사업에 대해서는 북한으로 지급된 현금의 핵개발 비용 전용가능성과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제재, 유엔 안보리 결의안의 적극적인 이행을 통한 국제공조 등을 이유로 사업의 폐지·축소나 일시적으로 사업을 중지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음.
 - 반면에 두 사업은 정상적인 상거래의 일부로 보아야 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는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사업의 중지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이 없고, 남북관계가 경색될수록 남북한을 연결하는 통로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들어 사업을 지속해야 한다는 양론이 있으므로,

-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수위, 북한의 6자회담 복귀 등 북한의 추가적인 조치 등 국·내외의 상황을 감안하여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사업전반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표 5] 2007년도 정부의 금강산관광 지원계획

	대상	인원(명)	지원액 규모(천원)
중등학생	기초수급대상자, 국가유공자 자녀, 장애우, 도서벽지학교 등(20%)	1,000	296,700 × 5,000명
	각급학교 추천학생, 통일교육 시범학교	3,000	
	통일행사참가학생 (도전통일벨, 통일글짓기 등)	1,000	
	소 계	5,000	1,483,500
대학생	대학 북한학과 학생	200	311,600 × 300명
	통일행사참가학생 (대학생통일포럼, 통일논문 응모학생)	100	
	소 계	300	93,480
교사	각급학교 교사	2,800	399,300 × 3,500명
	통일교육이수교사 (사이버과정, 장기과정)	500	
	학생반 인솔교사	200	
	소 계	3,500	1,397,550
통일교육 관계자	통일교육위원, 통일교육협의회, 대학 통일강좌 담당교수 등	200	399,300 × 200명
	소 계	200	79,860
합 계		9,000	3,054,390

자료: 통일부.

6. 개도국 원조사업

- 개도국 원조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관련 부처의 협조체제 구축과 원조사업의 운용 및 관리체계가 일차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이와 아울러 중점지원 대상국을 중심으로 국별 적정지원 프로그램을 작성함으로써 수원국(受援國) 정부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원조 시스템을 확보하고 중장기적인 국별 프로그램에 자금협력과 기술협력을 결합한 원조사업의 패키지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II.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재정분석

1.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의 2007년도 총 재정투자계획규모는 전년대비 1.3% 감소한 10억 8,796억원이며 2006~2010년 기간동안 연평균 증가율은 3.1% 임.
 - 이는 같은 기간 정부총지출증가율 6.4%, 예산증가율 6.9%의 절반 수준으로 점차적으로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의 비중이 낮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1]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지출규모

(단위: 조원, %)

	2006	2007	2008	2009	2010	연평균 증가율
공공질서및 안전 분야	11.0 ¹⁾	10.9 (-1.3)	11.3 (3.6)	11.8 (4.7)	12.5 (5.4)	3.1
정부예산	153.7	164.7 (7.2)	176.2 (7.0)	188.3 (6.8)	201.1 (6.8)	6.9
정부총지출	224.1	238.5 (6.4)	253.8 (6.4)	269.9 (6.3)	287.0 (6.3)	6.4

주: 1. 1) 2006년 재해추경 제외시 2006년 예산액은 10조 1,883억원임.

2. ()는 전년대비 증가율.

자료: 대한민국정부,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06.

- 이렇게 정부는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재정지출의 증가율을 2007년도에 1.3% 감소한 것으로 발표하였으나 2005년 이전 및 2007년 이후와 균형을 맞추어 2006년도 재해추경을 제외하는 경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의 증가율은 전년대비 7.0%로 「2005~2009년 재정운용계획」의 3.7% 증가계획보다 두 배 가까이 높은 수치임.

- 2007년 예산안의 경비 별 비중을 보는 경우 인건비의 비중이 전체 경비별 예산(안)의 68.2%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증가율 면에서도 인건비 증가율이 8.2%로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예산증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의 재정계획은 인건비지출계획이 핵심적인 사항으로 보이며 따라서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인건비지출에 대한 계획을 보여 주는 것이 필요할 것임.
- 현재, 재난관리관련 사업예산은 여러 부처에 흩어져 서로 다른 재정 분야에 속해 있어 재난관리재정의 유기적이고 효과적인 운용을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국가 전체적인 재정운용에 있어 이 분야를 하나의 범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2. 대법원 사법제도 개혁 관련 예산안분석

- 대법원 사법제도 개혁관련 2007년도 예산안에는 국선변호제도운영 350억원 등 전년대비 127.3%가 증가한 총 795억 7,3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사법제도개혁관련예산안은 새롭게 시작되는 7가지 제도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예산산정근거의 불명확한 것이 많고, 제도시행에 필요한 예산이 누락되었으며, 현재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사항을 예산안에 편성하는 등 문제점이 있음.

[표 2] 2007년도 대법원 사법제도개혁관련 예산안

(단위: 백만원, %)

	2006	2007(안)	증가액	증가율
국선번호제도의 개선	35,000	35,000	-	-
공판중심주의	-	16,473	16,473	순증
공판중심주의 법정심리절차도입	-	10,413	10,413	"
민사법정구조개선	-	6,060	6,060	"
재정신청 전면확대	-	2,300	2,300	"
양형제도 개선	-	3,000	3,000	"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제도 도입	-	7,900	7,900	"
고등법원 상고부	-	8,700	8,700	"
고등법원 상고부 운영비	-	4,700	4,700	"
고등법원 법관 증원 개축예산	-	4,000	4,000	"
판결문 등 공개	-	4,600	4,600	"
전문위원 등 제도개선(하급심 강화방안)	-	1600	1600	"
합 계	35,000	79,573	44,573	127.3

자료: 대법원.

- 사법제도개혁과 관련하여 신설되는 각종위원회의 예산을 성질이 다른 위원회의 운영예산에 준하여 편성, 과다 계상된 측면이 있으며 제도변화에 대해서 업무가중에 대한 추가운영비를 산정하였는데 이에 사용된 재판 1건당 최소운영경비 및 경비증가 수준에 대한 수치는 단순한 추정치로 산정근거가 없어 전체적인 예산산정의 근거가 불명확한 것으로 보임.
- 또한, 양형제도개선과 관련하여 양형자료 조사업무 수행경비가 누락되었고, 범죄피해자보호방안과 관련하여 비공개증언을 위한 시설에 약 2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면서도 2007년도 사법제도개혁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으며 제도시행에 필요한 기획단 등의 조직이나 인력증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고려가 미흡함.
- 하급심강화방안의 일환인 전문심리위원제도운영경비가 15억 9,400만원 편성되었으나 하급심강화방안은 현재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추진중에 있는 사항으로 이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 심의시 그 법률의 시행시기를 늦추어 충분한 준비기간을 갖도록 하거나 기술적인 사항의 보완만이 필요한 제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3. 법무부 법무활동관련 예산안 분석

- 2007년도 법무부 법무활동예산은 전년대비 8.3% 증가한 378억 4,5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표 3] 2007년도 법무부 법무활동 예산안

(단위: 백만원, %)

	2006	2007(안)	증가액	증가율
국가송무수행및공익법무관운영	1,122	1,076	-46	-4.1
국제법무운영및외국법제연구	442	490	48	10.9
민상사법령의 선진화	263	599	336	127.8
국가배상	7,108	7,320	212	3
법률구조및범죄피해자보호	24,190	26,321	2,131	8.8
사법시험및군법무관임용시험관리	1,832	1,780	-52	-2.8
형사조정제도	0	260	260	순증
법무활동 합계	34,956	37,845	2,889	8.3

자료: 법무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명세서」, 2006.

- 국가송무수행관련 예산안과 관련하여 정부는 정부법무공단법안을 발의,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계류 중인데 동 소요예산을 2007년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아, 2006년도 예산안에 범죄피해자보호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이 통과되기 전에 범죄피해자보호 및 지원 예산 10억원 및 대법원의 국선변호 예산 350억원이 반영된 것과 균형이 맞지 않고 현재 변호사수

임비용이 집행부진으로 감액되는 등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국가송무수행 상황을 볼 때, 법무부는 정부법무공단의 설립에 앞서 국가송무수행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먼저 강구하여야 할 것임.

- 2006년도에 시작된 범죄피해자관련 예산은 시행 1년만인 2007년 절반가량 대폭 감액 편성되었으며 범죄피해자 무료법률구조사업예산은 100.0% 감액되는 등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으며 특히 범죄피해자무료 법률구조의 경우 2006년 1월 2일부터 시행되기 시작되어 시행 1년 만에 예산이 중단되었는데 이 사업은 31억원의 예산으로 124억원의 구조금액을 보여 비용 대비 효과면에서도 우수하므로 법무부는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 법률구조사업과 관련하여 법무부의 민사법률구조사업과 대법원의 민사소송 구조사업은 동일한 취지의 사업이며 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민사·가사사건에 있어 2005년에만 58,980건을 수행하여 717건을 수행하는 법원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많은 사건을 담당하고 있음.
 - 대법원은 개인회생·파산사건에 대한 민사소송구조를 새롭게 실시하고자 2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이는 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고, 2005년 대법원 민사소송구조 예산의 집행률은 50% 밖에 되지 않는 등 대법원 민사소송구조를 활성화하는 데에는 법적·경제적인 한계가 있으므로 민사소송구조의 경우 법원이 법률구조공단에 적극적으로 소송구조를 위탁하는 시스템이 보다 효율적일 것임.

4. 소방방재청 재해예방사업 예산안 분석

- 소방방재청의 재해예방사업 중 직접적인 재해예방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하는 **소하천정비사업과 재해위험지구사업**의 두 가지가 있으며 2007년도 재해위험지구 및 소하천정비사업 예산안은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년 대비 12.8% 증가한 1,875억원**으로 편성됨

[표 4] 2007년도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소하천정비사업예산안

(단위: 억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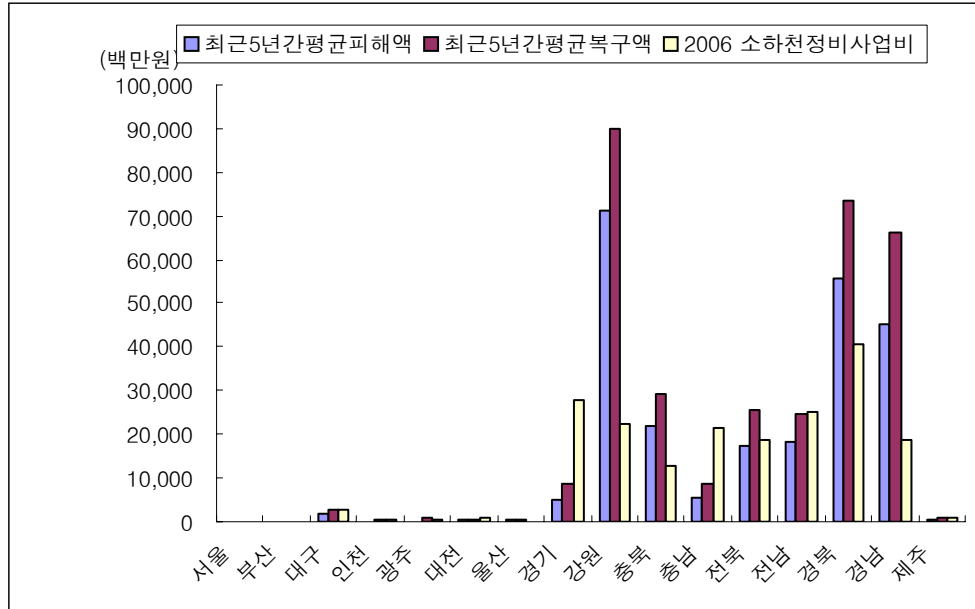
	2006	2007(안)	증가액	증가율	비 고
소하천정비사업	497	593	96	19.3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165	1,282	117	10	균특회계
합 계	1,662	1,875	213	12.8	

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예산은 별도로 분류하지 않음.

자료: 소방방재청.

- 그러나 **소하천정비사업**은 최근 5년간 소하천평균피해액과 평균복구액, 2006년도 소하천 정비사업비를 비교해보는 경우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치단체별 피해액 및 복구액과 사업비가 불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남.**
 - 소하천정비사업은 지방비를 적게 투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비를 감액하고 지방비를 많이 투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비를 증액 지원하는 Matching Fund방식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이러한 방침이 사업의 효과성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 것으로 보이며 **소방방재청은 자치단체별 소하천 피해규모를 고려하여 피해가 많은 지역에 대한 사업비배분 비율을 늘리고 우선적으로 소하천정비를 실시해야 할 것임.**

[그림 1] 최근 5년간(2001~2005년) 자치단체별 소하천 피해액·복구액·정비사업비



□ 현재 하천·소하천정비율을 보면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을 포함한 하천의 정비율은 90% 이상을 보이고 있는 반면, 소하천은 36.1%로 낮은 정비율을 보이고 있고 최근 5년간 하천피해액을 보는 경우에도 소하천의 피해가 전체 하천피해의 절반에 가까운 1조 2,201억원임에도 2007년도 예산안의 경우 하천과 소하천의 투자비율은 85 :15로 소하천에 대한 투자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정부는 소하천의 정비와 같은 지방관리시설의 방재에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현재와 같이 하천정비를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을 나누어 각각 별도의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근본적으로 투자비중이 조정될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현행 등급별·행정구역별 하천관리체계를 국가하천·지방하천·소하천을 포함한 유역별 관리체제로 전환**하고 국가·지방간 하천관리업무의 합리적 배분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소방방재청소관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과 사업목적 및 사업대상이 유사한 사업으로 건설교통부소관의 하천재해예방사업과 농림부소관의 배수개선사업이 있는데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과 하천재해예방사업은 사업을 추진하며 있어 부처 간 상호확인을 거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배수개선사업과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소하천정비사업은 사업의 중복이 나타날 우려가 있거나 연계추진의 시너지를 살릴 수 있는 분야임.

- 그러나 치수업무와 방재업무가 건설교통부, 농림부와 소방방재청소관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어 이러한 사항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바, 치수·방재업무의 유기적 연계방안을 마련하고 부처간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는물관리기본법안을 제정, 물관리 업무를 통합할 계획에 있는 것으로 밝히고 있으나 법안을 입안하는 단계에서 건설교통부와 환경부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하였고, 향후 설치하려는 국가물관리위원회에도 소방방재청장이 참여하지 않아 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방재에 관한 고려가 미흡할 것으로 보임.

III. 일반공공행정 분야 재정분석

1. 2007년도 일반공공행정 분야 예산안 분석

- 2007년 「일반공공행정 분야」 예산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42조 8,668억원으로써 2006년에 비해서 10.2%가 증가하였음.

[표 1] 2007년 일반공공행정 분야 예산

(단위: 억원, %)

	2006년 예산 (A)	2007년 예산안 (B)	증감 (B-A)	증가율
일반공공행정 분야	388,821	428,668	39,847	10.2
예 산	267,716	304,311	36,584	13.7
기 금	121,105	124,357	3,252	2.7
부문별 투자계획				
일반행정	14,548	16,469	1,921	13.2
입법 및 선거관리	5,822	7,908	2,086	35.8
재정·금융	122,077	129,082	7,005	5.7
지방행정·재정지원	220,898	251,406	30,508	13.8
부자원관리	5,256	5,512	256	4.9
국정운영	20,221	18,291	-1,930	-9.5

자료: 대한민국정부.

- 입법 및 선거관리 35.8%, 지방행정·재정지원 13.8%, 일반행정 13.2%가 증가하였고, 국정운영 9.5% 감소하였음.
- 입법 및 선거관리가 대폭 늘어난 것은 2007년 12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 관리비 1,523억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이고, 지방재정 교부금이 늘어나서 지방행정·재정지원 부문이 크게 증가하였음.

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자원배분 분석

- 2006년 우리나라의 국세 대비 지방세비율은 20.7%로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세입분권 혹은 ‘수직적 불공평성’은 이전보다(1995년의 지방세비율은 21.2%) 개선되지 못하였음.
 - 그러나 가용재원측면에 본 지방분권 즉, 세출분권 측면에서는 국가전체 재정에서 지방정부재정의 비율이 36.6%로써 지방세비율보다 높음.

[표 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총조세사용액 기준 재정배분

(단위: 조원, %)

	1985년	2000년	2006년
○ 총조세	13.6	113.5	170.6
국세(A)	11.9	92.9	135.3
지방세(B)	1.7	20.6	35.3
○ 가용재원	13.6	113.5	171.3
중앙정부(a)	8.3	57.1	70.0
지자체(b)	5.3	56.4	100.6
세입기준(A:B) 배분비율	88:12	82:12	79:21
총조세사용액 비중(a:b)	61:39	50:50	41:59

주: 국세 = 일반회계 + 특별회계

자료: 대한민국정부,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06. 10.

- 세출분권은 지자체의 자체재원 뿐만 아니라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 이전재원을 지방재정에 포함하여 계상함. 세출분권측면에서 2006년 중앙정부재정(국세 및 기타) 대 지방정부재정 비율은 63.4 : 36.6임.
 - 지방교육재정을 지방재정에 계상하여 중앙정부조세사용액과 지방정부조세사용액을 비교하여 세출분권수준을 파악하면 2006년도 중앙정부 대 지방정부의 총조세사용액 비중은 41 : 59로써 지방정부의 총조세사용액의 비율이 59%임.

- 총조세사용액 비중으로 재정분권의 세출분권수준을 파악한다면 우리나라의 지방재정분권 수준은 총조세사용액에서 60%에 가깝기 때문에 2000년에 비해서 상당히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음.
- 또한 이를 선진 여러 나라와 비교해 보면, 국가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비연방제 국가 중에서는 높은 수준임.

3. 신활력지역 지원사업 예산안 분석(행정자치부)

- 생활기반시설 확충, 정주기반 마련 등 하드웨어적인 지역개발방식이었던 기존의 낙후지역개발사업과는 달리 신활력지역 지원사업은 소프트웨어적 방법으로 지역의 혁신을 불러일으킴으로써 낙후성에서 스스로 벗어나도록 지원하는 사업임.

[표 3] 2007년 신활력지역 지원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2006년 예산 집행실적			2007년 예산안(C)	증감 (C-A)	증가율
	예산 배정액(A)	9월말 집행액(B)	실집행률 (B/A)			
계	190,000	78,437	46%	188,219	-1,781	-0.94
인센티브	19,750	-	-	2007년 지역별 배분액은 2006년 11월 중 평가를 통해서 12월에 최종 결정될 예정임.		
인 천	3,250	1,470	45%			
강 원	29,000	14,457	50%			
충 북	12,000	8,404	70%			
충 남	7,000	4,322	62%			
전 북	24,000	10,736	45%			
전 남	43,250	9,680	22%			
경 북	30,850	18,824	61%			
경 남	20,900	10,544	50%			

자료: 행정자치부, 농림부, 「2007년도 예산안 설명서」, 2006. 10.

- 2004년 낙후도를 기준으로 전국에서 하위 30%에 해당하는 70개 시·군을 신활력지역으로 선정·고시 하였고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5,800억 원의 국비를 투입할 예정임.
- 2006년 9월 말 현재, 인센티브를 제외한 예산배정액 1,702억 5천만원 중 집행액은 784억 3,700만원으로써 전체 실집행률은 46%에 불과함.
 - 이렇게 실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첫째, 사업계획이 애초의 사업취지와 맞지 않거나 계획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계획을 다시 추진하는 지역이 많기 때문이고,
 - 둘째, 낙후도에 따라서 당초에 선정된 70개 신활력 지자체들은 대부분 인구의 고령화, 절대 다수 농어업 위주의 1차산업 종사 등으로 인적 역량이 부족하고 이렇다 할 지역경제 활동이 없어서 지역의 내생적·자립적 발전역량을 강화하고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의 발굴 및 추진에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고,
- 농림부의 2007년 농촌지역개발사업 중 신활력지역 지원사업과 비슷한 취지의 사업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 농업·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 등이 있어서 이들 사업과 신활력지역 지원사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편성을 해야 할 것임.
 - 2007년부터는 농림부가 신활력지역 지원사업과 오지종합개발사업을 농촌지역개발사업 프로그램으로 편입시켜 총괄적으로 관리하게 됨.

4. 공무원 교육훈련 예산안 분석(중앙인사위원회)

- 중앙인사위원회 소관 공무원 교육훈련 사업은 다음과 같이 구성됨.
 - 국내 훈련은 국내 대학·대학원 위탁교육, 방송통신대학교 위탁교육, 외국어위탁교육, 국·과장급 장기교육으로 구성됨. 국외 훈련은 ① 단기 훈련은 개인훈련, 팀제훈련, 단체훈련, ② 장기 훈련은 국장급 훈련, 국제전문가과정, 장기 일반과정으로 구성됨.
 - 2007년도 공무원 교육훈련 예산액은 403억 4,800만원으로 전년대비 6.2% 증가한 액수임. 증가 원인은 장기 일반과정에 대한 수요 증가, 국내 훈련 학자금 단가 인상, 재외근무수당 인상으로 인한 체재비 증가 등임.
 - 교육훈련 예산액 403억 4,800만원은 국내 훈련 74억 4,200만원(전년대비 14.2% 증가), 국외 훈련 325억 6,300만원(전년대비 5.2% 증가)으로 구성되어 있음. 2007년 장기 일반과정의 예산액은 225억 9,600만원으로 전체 예산 총액의 56%에 해당하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국외 장기훈련의 지역 다양화 및 직무관련성 증대 필요성
 - 국외 장기훈련의 경우 영어권 훈련 비율이 2003년 76.9%, 2004년 72.7%, 2005년 72.9%으로, 영어권 비율이 지나치게 높음. 또한 학위과정 중심으로 이루어져 외국정부기관, 연구소 등의 훈련이 매우 적음.
 - 비영어권 훈련 증가를 위해서 우선 선발 등 선발 시 우대조치 외에도 어학연수기간 확대, 훈련기간 연장 등의 실효적 조치 강화가 필요함. 또한 학위과정 편중 해소를 위해 단순히 직무훈련 비중을 증가시키는 것보다, '1+1 연계과정 프로그램' 등 다양한 과정을 개발·확대하여 선택의 폭을 넓히고 직무훈련 시 별도의 인센티브 고안이 필요함.

- 국내 교육훈련 과정의 다양성 부족
 - 국내 교육훈련 중 외국어능력 제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어 위탁교육

과 주요역량 분야 중심인 민간위탁전문교육을 제외하면, 실제로 공무원 일반의 직무능력 제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과정에는 국내 대학·대학원 위탁교육이 해당됨.

- 현재 국내 대학·대학원 위탁교육(방송통신대 위탁교육 포함)은 국내대학원 단기과정을 제외하면 학위취득 과정이 주를 이루고 있음.
- 따라서 현재 국내 교육훈련 중 학위취득 과정에만 예산을 집중하기보다는, 현재 시행 중인 전문교육의 강화¹⁾, 각종 정책 관련 과정의 대폭 확대 등에 대하여 예산을 투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5. 한국정책방송(KTV) 운영 예산안 분석(국정홍보처)

□ 한국정책방송(KTV, 이하 KTV)은 국정홍보처 소속 영상홍보원이 운영하고 있는 방송채널로, 현재 케이블방송 및 위성방송이 송출되고 있음.

- 2007년 KTV 운영 예산액은 전년대비 19.3% 증가한 134억 1,700만원인데, KTV 방송운영 102억 4,700만원과 KTV 방송장비 관리 31억 7,0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방송장비 관리는 노후화된 방송장비 교체 및 디지털화 때문임. 한편 2007년도 국회방송 운영 예산액은 전년대비 14.6% 증가한 31억원으로, 이는 KTV 운영 예산액의 30.3%에 해당함.

□ 프로그램 다양화의 필요성

- 자체제작 프로그램은 뉴스 및 중계가, 외주제작은 정책의 단순 홍보가, 구매는 경제 분야 다큐멘터리가 주를 이룸. 즉 국민 참여형 내지 생활정

1) 국내 위탁교육 외에도 중앙인사위원회가 주관하는 전문교육이 2006년 현재 38개 과정이 있음. 그러나 대부분은 교육일정이 평균 5.8일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교육 기간이 짧고, 교육횟수도 50회에 이르는 9개 공통역량별 과정을 제외하면 평균 1.3회에 그치고 있음.

보 제공 프로그램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청자의 다양한 선호를 충족하지 못하여 시청률 저하의 원인이 됨.

- 물론 KTV가 국정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채널이므로 타 방송과 차별화할 수 있는 국정·공공 분야의 프로그램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같은 프로그램을 제작하더라도 기획력을 강화하여 국민 참여 또는 생활정보 제공 등 다양한 기능을 추가할 수 있음.

□ 시청률 저조의 문제

- KTV의 2006년 현재 시청률은 0.043%에 머무르고 있음. 국회방송의 경우 개국 초기인 2005년도에는 시청률이 KTV보다 낮았으나 2006년 이후 역전되었음.
- 이는 ① KTV라는 채널 자체의 홍보가 부족하고 ② 본방률보다 재방률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2006년 본방률은 33%, 재방률은 67%임) ③ KTV의 송출 채널이 40번 이상의 고채널이 많아서,²⁾ 40번 이하의 저채널에 비하여 노출빈도가 낮아졌기 때문임.
- 시청률 제고를 위해 ① 문화 관련 및 생활정보제공 등 다양한 성격의 프로그램 제작에 예산을 투입해야 하고, ② 현재 진행되는 채널광고 제작 등 KTV 홍보를 강화하고, 채널광고 내지 인터넷광고의 적극 활용이 필요하며, ③ 고채널에 치우친 KTV 채널을 저채널화하기 위해, 방송위원회의 행정지도, 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협조 요청 등이 필요함.

2) 영상홍보원에 의하면 2006년 9월 26일 기준으로 KTV의 40번 이상 고채널 편성비율은 29%임.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분석

제1부 총론

I.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1. 기금의 운용규모

- 2007년도 기금의 총 운용규모는 310조 895억원이며, 2006년 362조 247억원에 비해 51조 9,351억원, 14.3% 감소한 규모임

[표 1] 기금의 운영 규모 추이

(단위: 개, 조원)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기금 수	48	49	57	60	61	57
기금 운용규모	144.8	205.6	312.3	332.0	362.0	310.1

주: 2002~2005년은 결산기준, 2006년은 8월까지의 변경내역이 반영된 수치이며, 2007년은 계획안 기준임.

자료: 대한민국정부, 「기금운용계획안」, 각 연도.

-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에 포함된 기금은 총 57개이며, 6개 사회보장성기금이 100.5조원을 운용하고, 36개 사업성기금이 50.2조원, 5개 계정성기금이 128.4조원, 10개 금융성기금이 31조원을 운용할 계획임
- 2007년도 정부 총지출 규모는 238.5조원으로 일반회계가 126.7조원, 21개 특별회계가 38조원, 57개 기금이 73.8조원이며, 정부 총지출에서 30.9%를 기금이 차지하고 있음
 - 최근 정부는 재정제도 변화에 따라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의 지출에서 정부내부지출과 채무원금상환(보전지출)을 제외한 정부 총지출 개념으로 재정운용 규모를 나타내고 있음

[표 2]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개요

(단위: 조원, %)

	기금 수		운용 규모			
	2006	2007(안)	2006	2007(안)	변화액	변화율
사회보장성기금	6	6	105.3	100.5	-4.8	-4.6
사업성기금	40	36	51.7	50.2	-1.5	-2.9
계정성기금	5	5	166.2	128.4	-37.8	-22.7
금융성기금	10	10	38.8	31.0	-7.8	-20.1
합 계	61	57	362.0	310.1	-51.9	-14.3

주: 2006년 계획은 2006년 8월까지의 변경내역이 반영된 수치임.

자료: 대한민국정부, 「기금운용계획안」, 각 연도.

2. 기금의 정비

- 2006년 61개 기금에서 2007년에는 사업성 기금 4개가 감소한 57개 기금이 운용될 계획임
 - 2005년 5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발표한 「특별회계·기금 정비 방안」에 따라 「방위산업육성기금」, 「문화산업진흥기금」은 폐지되었고,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³⁾은 민간기금화, 「응급의료기금」은 폐지를 전제로 계획되었기 때문임
 - 당초 기금 정비방안에서 폐지 대상기금으로 포함되었던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과 민간기금화 대상이었던 「문화예술진흥기금」은 2006년과 마찬가지로 「2007년 기금운용계획안」에 포함되어 있음
-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2007년에 설치 예정인 기금으로는 「영화진흥기금」이 신설될 계획임⁴⁾

3)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을 광복회에서 국가보훈처로 다시 이관하는 법률안이 의원발의로 2006년 6월 21일 국회에 제출되었음.

- 영화진흥기금은 스크린쿼터 축소에 따라 영화산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2007년에 문화관광부 예산에서 국고 1,000억원을 출연하고, 영화상영관 입장권 가액의 5% 이하 범위의 부과금을 통해 400억원을 조성할 계획임

4) 「영화진흥기금」의 설치 근거를 담은 「영화진흥법」(일부개정안)이 2006년 10월 현재 국회문화관광위원회에 계류 중임.

II. 수입 및 지출 계획

1. 수입 계획

- 2007년도 57개 기금의 총수입 규모는 310조 895억원으로 2006년 362조 247억원에 비해 14.3% 감소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음

- 자체수입은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의 수입이 4.3조원 증가하여 2006년에 비해 11.0% 증가하며, 정부 내부수입은 공적자금의 국채전환 완료 등으로 36.6% 감소, 차입금은 국채발행 축소 등으로 17.8% 감소, 여유자금 회수는 국민연금의 투자채권 회수분 축소에 따라 11.8% 감소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음

2. 지출 계획

- 2007년도 57개 기금의 사업비 규모는 68조 1,121억원으로 2006년에 비해 10조 359억원, 12.8% 감소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음
 - 사회보장성 기금은 국민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등 연금·보험급여의 증가로 전년대비 4조 3,375억원, 19.0% 증가하며, 36개 사업성 기금의 사업비는 전년대비 5.8% 감소한 29조 8,760억원을 지출할 계획임
 - 금융성·계정성 기금은 공적자금의 국채전환 완료 등에 따라 전년대비 53.0% 감소한 11조 1,053억원을 지출할 계획임
 - 여유자금의 운용규모는 57개 기금에서 총 111조 1,171억원을 운용할 계획이며, 2006년 5조 9,143억원, 5.1%가 감소한 규모임

3. 기금의 수지

- 2007년도 기금 수지는 2006년 5.4조원 적자에서 16조원이 개선되어 **10.6조원 흑자**를 나타내는 것으로 계획되었음
 - 사회보장성 기금은 2006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며, 사업성 기금은 4.3조원 수지가 개선되고, 계정성 기금은 공적자금의 국채전환 완료 등으로 11.7조원이 개선되는 것으로 계획하였음

III. 분야별 운용 계획

1. 사회보장성 기금

- 사회보장성 기금은 국민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군인연금기금 등 4개 공적연금기금과 노동 분야의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으로 총 6개 기금이 운용될 계획임
- 사회보장성 기금의 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급여지출액은 총 19조 5,650억원으로 전년대비 11.9% 증가한 규모임

[표 1] 2007년도 사회보험 급여 대상인원 및 지급 계획

(단위: 천명, 억원, %)

	2006		2007(안)		증 감		
	대상 인원	급여 지급	대상 인원	급여 지급	대상 인원	급여 지급	비율
합 계	3,427	175,640	3,776	196,560	349	20,920	11.9
국민연금	1,946	42,835	2,156	51,916	210	9,081	17.5
공무원연금	233	50,870	249	55,673	16	4,803	8.6
사학연금	41	8,101	45	9,236	4	1,135	12.3
군인연금	66	17,745	69	18,796	3	1,051	5.6
실업급여	931	21,912	1,034	22,862	103	950	4.2
산재급여	210	34,177	223	38,077	13	3,900	10.2

주: 군인연금의 급여는 2006년에 「군인연금특별회계」에서 지급하였음.

자료: 대한민국정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개요」, 2006.

- 국민연금은 노령연금 지급기준의 변경 등에 따른 수급인원 증가로 2006년에 비해 대상인원은 21만명, 급여지출은 9,081억원, 17.5% 증가하여 215만 6천명에게 5조 1,916억원을 지급할 계획임
- 고용보험기금은 2007년에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훈련비를 지급하는 능력개발카드제를 신규로 추진하여 4만 3천명에게 총 218억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중소기업 근로자의 훈련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에 861억원, 실업계 고교 학생에 대한 직업지도 프로그램에 신규로 48억원, 대학 졸업생에 대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157억원 등을 지원할 계획임
- 여성근로자의 고용 및 생활안정을 위해 육아휴직 급여를 월 40만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하여 총 506억원을 지원하고, 고령자의 고용연장을 위해 임금 피크제 보전수당을 147억원, 고용안정센터 27개소 매입을 위해 2,820억원을 지원할 계획임
- 산재보험기금은 산재 요양자 및 장애인의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 재활전문센터 등에 126억원을 지원하고, 재해예방과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산재예방시설 용자지원으로 1,051억원을 투입할 계획임

2. 사업성기금

- 사업성 기금 중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정보통신진흥기금**은 고부가가치 및 파급효과가 큰 IT 성장동력 기술개발에 3,635억원을 투입하여 중점지원하고, 송도 u-IT 허브 등 동북아 IT허브 기반조성 및 소프트웨어 등 미래전략 산업 지원에 992억원을 지원할 계획임
 - **과학기술진흥기금**은 부가가치가 높은 대형 연구개발의 실용화와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R&D 사업화펀드에 600억원, 기술개발 출연 등에 2,08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은 창업, 기술개발 및 사업 구조전환 촉진을 통한 중소기업 성장 잠재력 확충 등에 8,4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1,401억원, 기술개발사업에 1,046억원을 지원하고 전력 소비구조 합리화 사업에 1,391억원을 지원할 계획임

- 사업성 기금 중 사회복지 분야의 **국민주택기금**은 다가구주택 매입임대·전세임대 지원에 2,851억원을 투입하고 전세자금 지원에 2.7조원을 투입할 계획임
 - **청소년육성기금**은 저소득층 청소년 방과 후 학교를 150개소로 확대하는 등 16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은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표준사업장 설립하기위해 100억원, 장애인 영업장소 전세금 전대사업에 100억원을 지원하고 **임금채권보장기금**은 체당금 지급 지원에 1,815억원을 투입할 계획임

- 사업성 기금 중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기금**은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으로 1조 3,112억원을 지급하고,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은 농산물 유통활성화 사업에 7,746억원을 지원, **수산물발전기금**은 수산물 양식·유통 등의 시설현대화 지원 등에 351억원을 지원할 계획임

- 사업성 기금 중 문화·관광 분야의 **국민체육진흥기금**은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1,025억원, 장애인 생활체육 및 전문체육 지원에 106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관광진흥개발기금**은 템플 스테이 사업지원에 150억원, 서민여가시설 확충에 70억원, 외래 관광객 유치활동 지원에 1,041억원을 투입할 계획임

- 사업성 기금 중 보건 분야의 **국민건강증진기금**은 민간병원의 무료예방접종 지원에 681억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에 68억원, 암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561억원, 생명노화연구 등 보건의료 연구개발 지원에 2,190억원을 지원할 계획임

- 사업성 기금 중 통일·외교 분야의 **남북협력기금**은 남북경협과 쌀·비료 등 인도적 지원 사업은 2006년 수준을 유지하고 개성공단 개발을 위해 기반시설 구축, 종합지원센터 건설 등에 대한 지원은 1,397억원을 지원하고 **대외경제협력기금**은 대개도국 차관 규모를 우리나라 경제규모에 맞게 3,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임

3. 계정성기금·금융성기금

- 계정성 기금 중 **복권기금**은 2007년 복권수익금의 60%인 4,519억원을 국민주택기금에 집중 투입하고 초·중등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가사 간병도우미 사업 등 소외계층 지원에 1,916억원을 투입할 계획임
- 금융성 기금은 중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창업·기술 혁신형 기업을 중점 지원하고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정상화를 위해 정부출연율을 6,869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임
 - **학자금신용보증기금**은 정부보증 학자금 용자제도를 통해 연간 50만명에게 990억원을 용자 지원할 계획이며, **공적자금상환기금**은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여유자금을 회수하여 공적자금의 상환에 3조원을 투입할 계획임

제2부 경제 분야

I. 공적자금상환 관련 기금

1. 2007년도 공적자금상환기금 운용계획안

가. 2007년도 운용계획안 개요

[표 1] 2007년도 공적자금상환기금 운용계획안

(단위: 백만원)

	2005년 결산	2006년 계획		2007년 계획(안)		증 감		
		당초	수정(A)	요구	조정(B)	(B-A)	%	
수입	■ 자체수입	42,415	14,200	14,200	6,300	11,600	-2,600	-183
	■ 정부내부수입	14316989	19834708	19834708	4,844,218	4,573,164	-15,261,544	-769
	■ 여유자금회수	665,869						
합 계		15025273	19848908	19848908	4,850,518	4,584,764	-15,264,144	-769
지출	■ 사업비	13,166,876	12,395,352	12,395,352			-12,395,352	
	■ 기금운영비	3	17	17	18	16	-1	-5.9
	■ 정부내부지출	1,516,697	7,453,539	7,453,539	4,850,500	4,584,748	-2,868,791	-385
	■ 여유자금운용	341,697						

자료: 재정경제부.

- 2007년도 공적자금상환기금 운용계획안은 국채발행 1조 3,000억원, 일반회계전입금 2,000억원,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조원, 우체국예금·보험특별회계 출연금 442억원 등 총 4조 6,000억원의 자금을 조달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국채) 원리금 4조 6,000억원을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나. 공적자금상환대책과 공적자금상환기금

- 2002년 말 수립된 공적자금상환대책에 필요한 재원 69조원 중 재정이 부담하기로 한 49조원을 위하여 공적자금상환기금이 설치되었음.
 - 공적자금상환기금에서는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4년간 국채발행자금을 예탁 받아 2006년까지 만기도래하는 공적자금 중 49조원(원금기준)을 상환하고(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과 부실채권정리기금에 출연), 25년간 일반회계 전입금(매년 2조원), 세계잉여금, 우체국예금·보험의 출연금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수 받은 국채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하였음.

다. 분석의견

- 2007년도 공적자금상환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당초 계획된 일반회계전입금 3조 2,000억원 중 3조원은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부터 출연 받고 나머지 2,000억원은 일반회계로부터 전입 받는 것으로 되어 있음.
 - 2006년도 및 2007년도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재정출연 계획을 보면, 2003~2005년도의 미출연분을 포함하여 계획대로 추진되는 것으로 보임.
 - 공적자금 국채전환으로 인한 국가채무의 증가로 인하여 향후 국가재정 운용이나 국민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불신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공적자금상환을 위한 재정출연계획을 준수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공적자금의 조속한 상환을 위하여 「공적자금상환기금법」에서는 전년도 세계잉여금의 100분의 30이상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2003년 이후 세계잉여금이 기금에 출연되지 않다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시 2005회계연도 세계잉여금의 30.9%인 3,818억원을 공적자금상환기금법의 취지대로 공적자금의 상환기금에 출연하였음.

- 2007년부터 시행되는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따르면 세계잉여금은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정산을 제외하고는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우선적으로 출연하도록 규정하여 세계잉여금의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은 더욱 더 강제될 것으로 보임.

2. 2007년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운용계획안

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표 2]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조달 및 운용

(단위: 백만원, %)

		2006년도 계획		2007년도 계획(안)		증감액 (C=B-A)	증감률 (C/A)
		금액 (A)	비율	금액 (B)	비율		
조달	자체수입	3,803,951	15.9	4,794,632	37.5	990,681	26.0
	정부내부수입	12,395,352	51.9	-	-	-12,395,352	-100.0
	차입금	3,800,000	15.9	4,200,000	32.9	400,000	10.5
	여유자금회수	3,897,402	16.3	3,774,224	29.6	-123,178	-3.2
	합계	23,896,705	100.0	12,768,856	100.0	-11,127,849	-46.6
운용	사업비	987,412	4.1	994,521	7.8	7,109	0.7
	기금운영비	105,294	0.4	103,971	0.8	-1,323	-1.3
	차입금원금상환	19,452,266	81.4	5,799,080	45.4	-13,653,186	-70.2
	차입금이자상환	2,538,461	10.6	1,904,318	14.9	-634,143	-25.0
	여유자금운용	813,272	3.4	3,966,966	31.1	3,153,694	387.8
	합계	23,896,705	100.0	12,768,856	100.0	-11,127,849	-46.6

자료: 예금보험공사.

-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2007년도 운용규모는 총 12조 7,688억원으로서 2006년도 23조 8,967억원보다 11조 1,278억원이 감소함. 2006년도에 비해 정부 내부수입이 없어지면서 규모가 대폭 감소하였음.

나. 분석의견

-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은 자체수입의 극대화를 통해 재정부담을 최소화 하는 것이 주요 과제가 되며, 자체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거액의 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의 매각대금 회수가 중요함.
 - 향후 우리금융지주, 서울보증보험 등의 지분매각이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됨. 대한생명의 경우 한화그룹 등에 매각한 주식과 관련하여 국제중재 조정 중에 있어 향후 공적자금 회수과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지분매각 계획은 매각 조건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한 후 금융시장 환경에 맞춰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매각시기 및 매각대금 등을 기금운용계획에 구체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그러나 정부는 금융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고, 적정한 가액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할 필요 있음.

- 매각대금 회수 이외에도 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 잔액의 0.1%를 수령하기로 한 특별기여금 수입의 실현이 중요한 과제가 됨.
 - 2002년 공적자금상환대책 마련 시 특별기여금 회수예상액 20조는 25년 동안 예금이 연 9.5% 증가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산출하였지만, 실제 예금증가율이 2~3%대 밖에 못 미치고 있어 특별기여금의 회수실적이 예상에 못 미치고 있음.
 - 2008년 공적자금 재계산시 특별기여금의 산정근거·요율, 부족분 차이 발생시 부담주체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3. 2007년도 부실채권정리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

가. 2007년도 운용계획안 개요

- 2007년도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운용계획은 총 8조 9,692억원으로 전년대비 3조 3,027억원 증가하여 58.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이는 2006년도의 16.7%보다 41.6%p 만큼 크게 증가한 수치임.

[표 3] 2007년도 부실채권정리기금 수입·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2006년 계획		2007년 계획(안)		증 감		
	당초	수정(A)	요구	확정(B)	(B-A)	%	
수입	자체수입	1,725,751	1,725,751	1,805,696	1,312,102	-413,649	-24.0
	-부실채권등처분	1,480,618	1,480,618	1,476,677	900,601	-580,017	-39.2
	여유자금회수	3,940,715	3,940,715	3,738,614	7,657,107	3,716,392	97.3
합 계		5,666,466	5,666,466	5,544,310	8,969,209	3,302,743	58.3
지출	기금운영비	58,122	58,122	56,987	52,611	-5,511	-9.5
	기금간거래 (출연금)				3,000,000	3,000,000	-
	차입금원금상환	1,700,000	1,700,000	2,300,000	2,300,000	600,000	35.3
	차입금이자상환	169,730	169,730	183,085	183,085	13,355	7.9
	여유자금운용	3,738,614	3,738,614	3,004,238	3,433,513	-305,101	-8.2

자료: 한국자산관리공사.

- 기금의 조달 측면에서는 부실채권을 매각하여 2,465억원을 회수하고 투자유가증권을 매각하여 6,541억원을 회수할 예정임. 또한 총 7조 6,571억원의 여유자금을 회수할 예정임.
- 기금의 지출 측면에서는 2003년 공적자금상환기금에서 출연 받은 3조 5,000억원 중 3조원을 우선 상환할 예정이며, 약 2조 5,000억원을 지출하여 2008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차환기금채권 원리금을 2007년에 전액 조기 상환할 예정임.

나. 분석의견

-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부실채권정리기금은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부터 출연 받은 3조 5,000억원 중 3조원을 우선 상환할 예정인데 동 3조원의 상환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 「공적자금상환기금법」이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사법이라 한다)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3조원의 상환은 법적인 문제가 없지만 공사법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임.

- 공사법 부칙 제2조에 따라 2007년 11월 22일까지인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운용기한은 부실채권정리기금이 현재 보유한 부실채권 36조 5,000억원을 효율적으로 정리하는데 부족한 기간이라고 생각됨.
 - 따라서 공사법 부칙 제2조를 개정하여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운용시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 기금 청산 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잉여금의 배분 문제가 있음.
 - 공사법 부칙 제2조에 따르면 기금청산 시 잔여재산은 기금에 출연한 기관들에게 출연 비율 등에 따라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동 규정에 따르면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자금 조성 당시 5,700억원을 출연한 금융기관들이 출연비율에 따라 잉여금을 배분받게 됨.
 - 그런데 금융위기에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할 금융기관들이 오히려 잉여금을 배분받아 이익을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 있음.
 - 2003년도에 상환 면제 되었던 특별회계 재정융자금의 상환을 위해 국고로 귀속시키거나, 공적자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있음.

- 보다 합리적이고 다양한 배분 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공사법 부칙의 개정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짐.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금융기관의 신뢰 보호 및 법적 안정성 등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II. 정부보증 관련 기금

1.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2007년도 정부보증 관련기금(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의 조달 및 운용규모는 2006년도 계획 대비 5.7% 줄어든 6조 9,252억원임

-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전년대비 19.8% 줄어든 1조 2,868억원 규모이고, 신용보증기금은 전년대비 7.1% 줄어든 3조 3,499억원 규모임
- 반면,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은 전년대비 73.7% 늘어난 1,867억원 규모이고,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전년대비 4.0% 늘어난 1조 2,465억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은 3.2% 늘어난 8,553억원 규모임

[표 1] 정부보증 관련기금의 조달 및 운용규모

(단위: 억원, %)

	2006 계획 (A)	2007 계획(안) (B)	전년대비	
			증감액 (C=B-A)	증감률(C/A)
신용보증기금	36,040	33,499	-2,541	-7.1
기술신용보증기금	16,041	12,868	-3,173	-19.8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11,984	12,465	481	4.0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8,285	8,553	268	3.2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1,075	1,867	792	73.7
합 계	73,425	69,252	-4,173	-5.7

자료: 대한민국정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6. 9.

2. 보증료율의 현실화 방안 모색

- 정부보증 관련기금들은 정부나 금융기관의 출연금 없이 스스로 그 기능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금사업으로부터의 수입이 기금의 지출을 충당할 수 있어야 함
 - 그러나 기금사업인 보증료 수입과 순대위변제액의 차이가 커서 정부나 금융기관의 출연금이 없이는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구조임
 - 최근 6년간 보증료 수입과 순대위변제액의 차이가 신용보증기금은 평균 8,786.7억원, 기술신용보증기금은 7,238.2억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은 2,669.2억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4,338.8억원임
 - 따라서 정부보증 관련기금별로 0.5%에서 3.5%까지 운용하고 있는 보증료율을 현실화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3. 부분보증 비율 확대 및 성과연동형 보증료 부과방법의 확대

- 정부보증 관련기금들이 위험을 분담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부분 보증제도(대출금액의 75~90%)의 비율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위탁보증의 사고율이 직접보증의 경우보다 높으므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직접보증으로 전환해야 함
 - 보증기업이 성공할 경우 일정한 비율을 보상받기로 약정을 맺는 성과연동형 보증료 부과방법의 확대임

[표 2]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성과연동형 보증상품 운용수익

(단위: 억원)

	2004	2005	2006. 9 현재	계
기술창업평가보증	7	12	9	28
벤처투자보증 및 신벤처투자보증	10	115	14	139
계	17	127	23	167

자료: 대한민국정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6. 9.

III. 외국환평형기금

1.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2007년도 조달 및 운용 규모는 2006년도 계획 대비 5.0% 줄어든 36조 7,567억원임

[표 1] 외국환평형기금의 조달 및 운용

(단위: 억원, %)

		2006 계획		2007 계획(안)		전년대비	
		금액(A)	비율	금액(B)	비율	증가액(C=B-A)	증가율(C/A)
조 달	자체수입	20,493	5.3	31,809	8.7	11,316	55.2
	정부내부수입 (공자기금예수금)	202,000	52.2	191,000	52.0	-11,000	-5.4
	차입금(외평채 발행)	10,000	2.6	-	-	-10,000	-100.0
	여유자금회수	154,547	39.9	144,758	39.3	-9,789	-6.3
	합 계	387,040	100.0	367,567	100.0	-19,473	-5.0
운 용	정부내부지출	47,786	12.3	62,595	17.0	14,809	31.0
	차입금원금상환	72,000	18.6	51,000	13.9	-21,000	-29.2
	차입금이자상환	21,188	5.5	17,388	4.7	-3,800	-17.9
	기금관리비	1	-	1	-	-	-
	여유자금운용	246,065	63.6	236,583	64.4	-9,482	-3.9
	합 계	387,040	100.0	367,567	100.0	-19,473	-5.0

자료: 대한민국정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6. 9.

2. 누적적자 해소방안 마련

- **외국환평형기금**은 시장개입을 위해 국채를 발행하여 재원을 조달하고, 이를 외화자산으로 운용하는 과정에서 구조적으로 이차손실이 발생하고 있음
 - 2005년 말 현재 이차손실 규모는 2조 1,118억원임
 - 또한 2004년 6조 5,874억원 및 2005년 2조 5,239억원의 외환평가손을 포함하여 2005년 말 현재 17조 8,309억원의 누적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표 2] 연도별 외국환평형기금의 이차손실 규모

(단위: 억원, %)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수취금리	7.44	7.55	5.95	6.69	4.50	2.67	2.43	2.75	3.75
지급금리	13.15	11.64	11.75	10.54	9.45	8.03	7.05	5.71	5.08
이차손실	2,064	2,380	4,661	4,153	6,090	8,895	8,864	36,331	21,118

자료: 외국환평형기금, 내부자료.

[표 3] 연도별 외국환평형기금의 누적적자 현황

(단위: 억원)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당기순이익	-10,582	-7,412	4,932	-1,606	-17,895	-5,219	-102,205	-46,357
이차손익	-2,380	-4,661	-4,153	-6,090	-8,895	-8,864	-36,331	-21,118
외환평가손익	-8,202	-2,751	9,085	4,484	-9,000	3,645	-65,874	-25,239
누적적자	-2,548	-9,960	-5,027	-6,633	-24,528	-29,747	-131,952	-178,309

자료: 외국환평형기금, 내부자료.

- 따라서 동 기금이 현행처럼 기금형태로 계속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한지, 예산에 포함시키는 형태가 바람직한지, 중앙은행의 발권력에 의존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3. 적정 외환보유액 논란 문제

- 우리나라의 2005년 말 현재 외환보유액은 2,104억 달러로 일본(8,469억 달러), 중국(8,189억 달러), 대만(2,533억 달러)에 이어 세계 4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국제적인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적정수준을 초과한 것으로 보임
 - 첫째, 경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3개월분 월 경상 지급액을 기준으로 볼 때 2005년 10월부터 2005년 12월까지의 월 경상 지급액이 896.3억 달러로 적정수준보다 1,200억 달러 이상이 초과된 상태임
 - 둘째,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의 적정 외환보유액 수준으로 보는 1년 이내에 갚아야 할 단기외채 규모 기준으로 볼 때 2005년 말 단기외채 규모가 658억 달러로 적정수준보다 1,446억 달러 정도 초과된 상태임
 - 셋째, 통상적인 국제 금융계 기준인 3개월 수입치 기준과 단기외채 기준 그리고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을 고려한 기준으로 볼 때 적정 외환보유액 수준은 1,700억 달러로서 400억 달러 이상을 초과하고 있음
 - 넷째, GDP 대비 외환보유액 비율에 있어 우리나라와 경제규모가 비슷한 나라(호주 5.7%, 멕시코 7.9%, 인도네시아 11.7%)와의 비교에서도 월등히 높은 수준임

[표 4] GDP규모가 비슷한 국가들의 외환보유액 현황(2005년 말 기준)

(단위: 10억 달러, %)

GDP(ppp) 순위	외환보유액(A)	GDP(B)	A/B
멕시코(13위)	60.9	768.4	7.9
한 국(14위)	210.4	793.1	26.5
인도네시아(15위)	32.2	276.0	11.7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06.

4. 외환보유액의 수익성 제고 방안

- **과다한 외환보유액은 금액의 문제뿐만 아니라 외환보유액을 운영하는데도 문제가 있음**
 - 2006년 9월말 현재 외환보유액은 유가증권 95.46%(2,178.5억 달러), 예치금 4.37%(99.7억 달러), 금 0.12%(2.8억 달러) 등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투자대상이 유가증권으로 편중되어 있고, 투자수익(미국채 10년물의 수익률은 2005년 말 현재 4.39%)도 낮음
 - 또한 유가증권의 경우 대부분 미 국채에 대한 운영으로 달러가 급락할 경우에는 외환보유액의 가치가 급격히 떨어질 위험이 있음

[표 5] 외환보유액의 운용 구성 현황

(단위: 억 달러, %)

	2003	2004	2005	2006. 9
외환보유액	1553.5 (100.00)	1,990.7 (100.00)	2,103.9 (100.00)	2,282.2 (100.00)
- 유가증권	1,416.9 (91.21)	1,868.3 (93.85)	2,024.7 (96.24)	2,178.5 (95.46)
- 예치금	128.2 (8.25)	113.5 (3.58)	75.0 (3.58)	99.7 (4.37)
- IMF포지션	7.5 (0.48)	7.9 (0.15)	3.1 (0.15)	2.8 (0.12)
- SDR	0.2 (0.01)	0.3 (0.02)	0.4 (0.02)	0.5 (0.02)
- 금	0.7 (0.05)	0.7 (0.03)	0.7 (0.03)	0.7 (0.03)

주: 1. ()구성비임.

2. IMF포지션은 IMF로부터 수시 인출 가능한 자산을 말함.

3. 유가증권은 R/P관련 유가증권을 포함한 수치이며, 주로 국채, 정부기관채, 국제기구채이며, 금융채, 자산유동화증권(MBS, ABS) 등도 일부 포함된 수치임.

자료: 한국은행.

- 따라서 외환보유액의 운영대상에 기존의 미 국채 등 미 달러화 표시 자산과 함께 EU, 엔화 등에 대한 점진적 다변화를 추진하여 미 달러 가치의 급락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적정수준을 초과하는 외환보유액은 충분히 위험관리가 가능하고 수익성이 보장되는 민자 SOC 투자사업에 투자하는 방안을 비롯하여 적극적으로 활용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IV. 복권기금

1. 개요

- **계정성 기금인 복권기금은** 최근의 복권판매량 감소 추세를 반영하여 2007년에는 전년대비 2,547억원, 8.7% 감소한 **2조 6,620억원**을 운용할 계획임

[표 1] 2007년도 복권기금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억원, %)

		2006 계획		2007 계획(안)		전년대비	
		금 액 (A)	비 율	금 액 (B)	비 율	증감액 (C=B-A)	증감율 (C/A)
수 입	자체수입	27,764	95.2	25,034	94.0	-2,729	-9.8
	정부내부수입	0	0.0	158	0.6	158	순증
	여유자금회수	1,403	4.8	1,428	5.4	25	1.8
	합 계	29,167	100.0	26,620	100.0	-2,547	-8.7
지 출	사업비	20,823	71.4	18,609	69.9	-2,214	-10.6
	기금운영비	21	0.1	20	0.1	-1	-4.8
	정부내부지출	7,263	24.9	6,827	25.6	-436	-6.0
	여유자금운용	1,060	3.6	1,164	4.4	104	9.8
	합 계	29,167	100.0	26,620	100.0	-2,547	-8.7

주: 2006 계획은 기금운용계획 변경분을 포함.

자료: 국무총리 복권위원회, 「2007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안」, 2006.

2. 분석의견

- **국민주택기금 배분의 적정성 문제**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복권수익금의

70%를 배분하는 공익사업 분야에서 국민주택기금에 배분하는 것은 당초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서 규정한 수익금 배분에 관한 위임한계를 동법 시행령이 벗어나고 있는 문제가 있으며, 그에 따라 복권수익금의 배분도 당초 「복권 및 복권기금법」의 취지와는 다르게 왜곡되는 측면이 있음

- 2007년도 국민주택기금으로 배분되는 규모는 4,519억원이며, 이 규모는 복권기금 설치 이전인 2003년 복권수익금의 29.2%에서 43.5% 수준임

[표 2] 복권수익금의 국민주택기금 배분 추이

(단위: 억원, %)

	2003	2004	2005	2006	2007(안)
배분가능복권수익금(A)	14,007	9,377	10,625	10,872	10,385
국민주택기금(B)	4,094	3,851	4,846	4,900	4,519
비중(B/A)	29.2	41.1	45.6	45.1	43.5

자료: 국무총리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운용계획안」, 각 연도.

□ 복권수익금 전출 형식의 부적정

- 복권위원회는 복권수익금의 배분에서 기금에 대한 전출은 출연으로 표시하고 특별회계, 자치단체, 민간 기관 등에 대한 전출과 복권위원회 직접사업에 대해서는 보조로 표시하고 있음
- 보조의 형식으로 전출되는 경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7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안에서는 오히려 출연으로 표시되어 있는 공익사업부문의 5개 기금이 2004년과 2005년의 복권수익금 사업 중 불용액을 반납하는 것으로 편성되었음
- 더구나 복권기금을 전입 받을 수 있는 기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보건복지부, 법무부, 문화재청, 소방방재청, 교육인적자원부 등 5개 부처의 사업은 형식상 복권위원회의 직접수행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보조의 형태로 표시되어 있음

[표 3] 2007년도 복권수익금 배분 계획안

(단위: 억원)

	배분처 및 기금	2007(안)	배분방식	비고
법정 배분 사업 30%	과학기술진흥기금	419	출연	
	국민체육진흥기금	344	출연	
	근로자복지진흥기금	176	출연	
	중소기업진흥 및산업기반기금	211	출연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194	보조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573	보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42	보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213	보조	
	지방자치단체(16개 시도)	573	보조	
	소 계	2,845		
공익 사업 70%	문화예술진흥기금	486	출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182	출연	
	국민주택기금	4,519	출연	
	보훈기금	357	출연	
	여성발전기금	124	출연	
	청소년육성기금	9	출연	
	한국가정법률상담소회관신축 등(법무부)	97	보조	복권위원회의 직접사업 형식으로 수행되고 있음
	복지사업(보건복지부)	1,255	보조	
	문화재 보존사업(문화재청)	211	보조	
	재해재난긴급구호(소방방재청)	50	보조	
	아동 등 보호지원(교육인적자원부)	250	보조	
	소 계	7,540		
합 계	10,385			

자료: 국무총리 복권위원회, 「2007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안」, 2006.

- 기금의 여유재원에 대한 회계, 기금간 전출입을 허용하는 「국가재정법」이 2007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를 계기로 복권기금의 수익금 배분 방식도 일관성 있고 재정운용의 원칙에 부합하는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복권기금 및 복권위원회의 역할 정립 필요

- 복권수익금 배분의 형식을 보조방식으로 하게 되면 복권수익금을 배분 받은 보조사업자의 집행실적이 부진한 경우 소관 중앙관서의 장으로서 복권위원회가 사업 성과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며, 현재와 같이 복권위원회의 직접 수행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도 사업수행기관으로서의 책임을 피할 수 없음
- 「2006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에서 복권위원회는 ‘외국인근로자, 노숙자 무료진료사업’, ‘전수교육과 상설공연 및 사회교육 프로그램’, ‘조선왕조 실록 대국민 온라인 서비스’, ‘비지정 건조물 문화재 일체조사 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한 평가를 받은 평가 결과와는 상관없이 국무조정실의 평가 대상사업으로 이 사업들이 선정된 것 자체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복권기금이 계정성 기금으로서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복권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복권위원회가 역할을 정립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제3부 산업 분야

I. 농림해양수산 관련 기금

1. 농림해양수산 분야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농림부와 해양수산부가 운용하는 기금은 8개이며, 2007년도 기금운용규모는 7조 2,207억원에 달함([표 1] 참조).

[표 1] 농림해양수산 분야 기금의 조달 및 운용

(단위: 억원, %)

		2006 계획		2007 계획안		전년대비	
		금 액 (A)	비 율	금 액 (B)	비 율	증가액 (C=B-A)	증가율 (C/A)
조달	정부출연금	8,240	9.1	12,883	17.8	4,643	56.3
	공자기금차입금	32,749	36.0	11,702	16.2	-21,047	-64.3
	부담금	5,405	5.9	5,584	7.7	180	3.3
	융자금 회수 등	24,942	27.5	27,236	37.7	2,293	9.2
	합 계	90,863	100.0	72,207	100.0	-18,656	-20.5
운용	사업비	49,950	55.0	51,798	71.7	1,848	3.7
	기금운영비	1,110	1.2	1,127	1.6	17	1.5
	정부내부지출	34,816	38.3	13,486	18.7	-21,331	-61.3
	여유자금운용	4,986	5.5	5,797	8.0	810	16.2
	합 계	90,863	100.0	72,207	100.0	-18,656	-20.5

자료: 1. 농림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2006. 10.

2. 해양수산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2006.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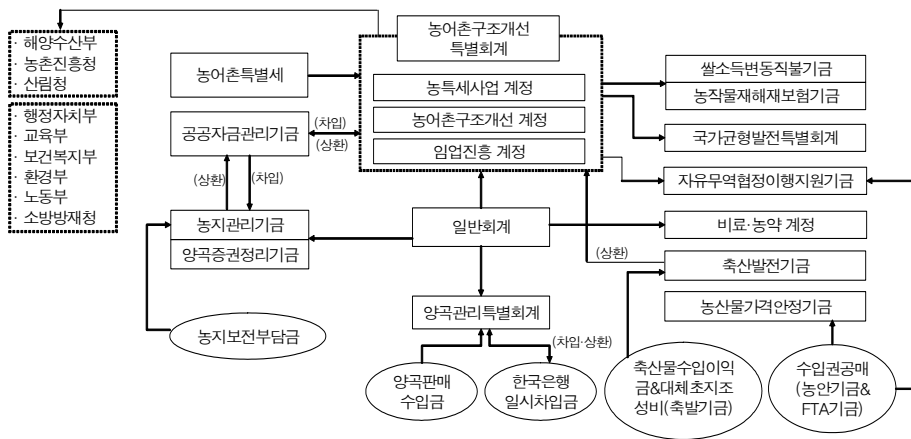
- 조달의 경우 융자금회수가 37.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운용의 경우 사업비가 5조 1,798억원으로 71.7%를 차지하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정부내부지출 1조 3,486억원, 여유자금운용 5,797억원으로 계획됨.

2. 재정구조와 문제점

가. 재정구조

- 농림부가 운영하는 7개의 기금은 일반회계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공공자금관리기금, 그리고 부담금으로부터 정부출연금, 차입금, 부담금의 형태로 자금을 조달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그림 1]에서 보는 것과 같이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

[그림 1] 농림부 재정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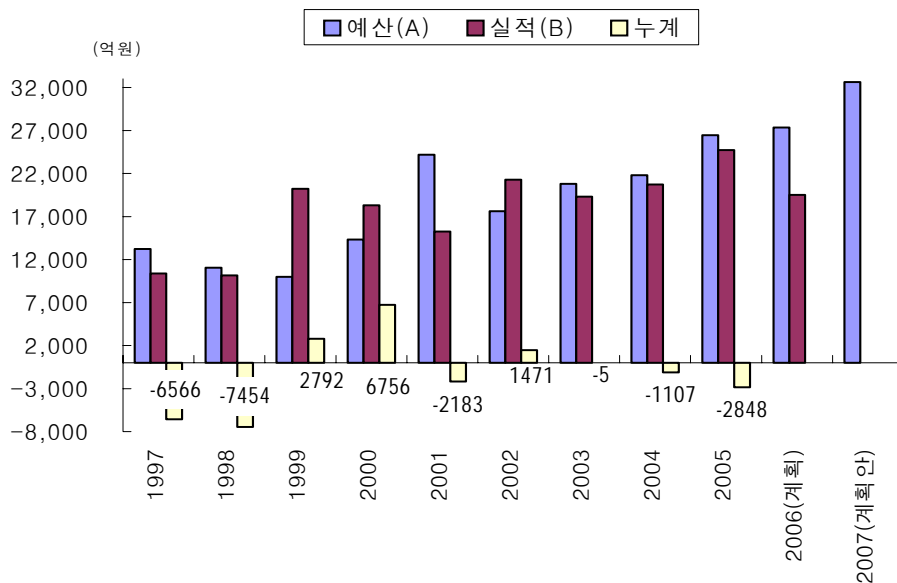
주: 농림부와 해양수산부의 “2007년도 예산안 개요”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음.

나. 재정확보의 적정성 문제

- 자금조달과 관련하여 정부출연금의 주원천인 농어촌특별세는 최근 경기 침체의 영향을 받아 세수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감소하여 누적 세수부족이 2005년말 현재 2,848억원에 달하고 있어 문제이며([그림 2] 참조), 세수확보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부담금과 관련해서 최근 농지보전부담금의 전년대비 증가율이 매우 더딘데 그에 따른 대책마련이 필요하며, WTO/DDA 농업협상에서 관세율 감축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수입공매권 수입 감소에 따른 재원조달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그림 2] 농어촌특별세의 세입현황과 누적 세수부족 추이



주: 2006년 실적은 8월까지의 실적임.
 자료: 농림부 재정기획관실, 2006. 10.

다. 여유자금 운용의 문제

- 기금 운용계획에서 축산발전기금은 [표 2]에서 보는 것과 같이 여유자금이 다른 기금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과다하게 운용되고 있고, 농협중앙회에 편중되게 예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임.
 - 투자상품의 다양화 등을 통해 기금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체계적인 여유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표 2] 기금별 여유자금의 농(수)협중앙회 예치비중

(단위: %)

	2004	2005
농지관리기금	88.3	73.0
농산물가격안정기금	55.4	46.6
축산발전기금	83.1	80.7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기금	56.3	58.1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41.9	52.2
농작물재해재보험기금	—	29.6
양곡증권정리기금	69.2	69.0
수산발전기금	66.3	26.7

주: 농작물재해재보험기금은 2005년부터 운용되었기 때문에 2004년은 운용실적이 없음.

자료: 농림부, “기금결산자료”, 2006. 5.

해양수산부, “기금결산자료”, 2006. 5.

II. 전력산업기반기금

1. 2007년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용계획안

□ 2007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조달 및 운용 총 규모는 1조 8,322억원임.

[표 1] 2007년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용계획안

(단위: 억원, %)

	2006 계획 (A)	2007 계획안			
		금액 (B)	증감 (C=B-A)	증감률 (C/A)	
조 달	법정부담금	9,470	10,599	1,129	11.9
	가산금	15	17	2	11.9
	기타수입	861	1,056	195	22.6
	정부예금회수	8,620	6,650	-1,970	-22.9
	합 계	18,966	18,322	-644	-3.4
운 용	사업비	13,120	12,831	-289	-2.22
	기금운영비	90	91	1	1.1
	공자기금 예탁	-	1,000	1,000	순증
	여유자금 운용	5,756	4,400	-1,356	-23.6
	합 계	18,966	18,322	-644	-3.4

□ 기금조달 측면에서 보면, 2007년도 법정부담금은 2006년 계획액 9,470억원 대비 11.9%가 증가한 1조 599억원으로 편성되어, 2007년 전체 조달 재원규모의 57.8%를 차지하고 있음.

- 2006년 부과율 인하 조치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07년 계획안에서는 인하 조치 이전인 2005년에 비해 그 수입이 그다지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특히 2009년 이후에는 2005년 실적에 비해 오히려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므로, 부과율을 추가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표 2] 2006년 이후 부담금 수입 계획(2005년~2010년)

(단위: 억원)

	2005년 실적	2006년 계획	2007년 계획	2008년 계획	2009년 계획	2010년 계획
법정부담금	11,310	9,470	10,599	11,245	11,931	12,659

2. 여유자금 규모 축소 필요

- 2007년도 여유자금운용은 2006년 계획액 5,756억원 대비 23.6%가 감소한 4,400억원으로 편성되어 2007년 전체 기금운용 규모의 24.0%를 차지하고 있음.
- 동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추이를 보면([표 3] 참조), 여유자금의 규모가 2005년 9,714억원, 2006년 9월말 현재 7,442억원 등에 달하고 있어 과도하게 운용되고 있으며, 계획 대비 실적 또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보다 철저한 계획수립이 요구됨.

[표 3] 연도별 여유자금 운용 추이(2002년~2006년)

(단위: 억원)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여유자금운용	1,137	3,473	2,222	5,224	6,465	7,976	5,955	9,714	5,756	7,442

- 정부는 동 기금의 여유자금이 과도함을 감안하여 국가재정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자금관리기금에 1,000억원을 예탁하기로 하였음.

- 그러나, 2006년 9월 현재 여유자금 규모가 7,000억원 이상인 점, 여유자금 수익률이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비해 낮은 상황(공자기금 5.5%, 전력기금 4.8%)인 점 및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할 경우 국가재정 측면에서 자금이 부족한 타 사업에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동 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과 아울러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규모의 추가 증액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사업의 집행실적 제고 필요

- 2007년도 계획안은 270억원으로, 소수력 42개 사업장 6억 9,600만원, 풍력 5개 사업장 188억 8,000만원, 태양광 56개 사업장 72억 4,800만원, 폐기물 1개 사업장 1억 7,600만원 등임.
-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사업은 소수력, 풍력, 매립가스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전력을 우선구매하고 적정가격으로 보전함으로써 신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여 생산한 전력량에 대하여 정부가 정한 가격인 전력구입가와 시장가격과의 차액을 보전함.¹⁾
- 동 사업의 연도별 집행율을 보면, 2004년 81.1%, 2005년 37.5%, 2006년 9월말 현재 17.0% 등 그 실적이 매우 부진한 상황임.

1) 구체적인 지원금 산식 = (정부가 정한 기준가격 - 계통한계가격(SMP)) × 발전량임. 여기서 계통한계가격(System Marginal Price)이란, 24개의 시간대별 전력가격으로, 각 시간대별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발전이 할당된 발전기별 발전가격 중 가장 비싼 값을 의미하며, 일반전력시장의 거래가격으로 사용됨.

- 이처럼 매년 집행실적이 부진한 것은 첫째, 동 사업은 정부가 정한 기준 가격과 계통한계가격(SMP) 간의 차이를 보전해 주는 사업으로, 그 특성상 SMP의 등락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이며, 둘째, 동 사업의 경우 매년 신규 사업자의 설비용량 증가분 및 발전량 증가분을 반영하여 계획안을 편성하게 되는데, 신규 발전소 건설의 경우 건설사업의 특성상 시공기간이 많이 소요되어 정부가 예상한 발전량이 줄어든 데 기인함.
- 이처럼 매년 동 사유들로 인해 집행부진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정부는 SMP를 보다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계획안 추정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으며, 신규 발전소 건립의 경우 그 수요 및 건설계획 등을 보다 엄밀히 파악하여 계획안 편성시 반영하는 등 집행실적을 제고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III. 국민주택기금

1.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특징

□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

- 첫째, 2007년도 조달 및 운용 금액의 총 규모는 2006년의 24조 63억원에 비해 6,416억원(약 2.7%) 감액되어 23조 3,647억원으로 계상됨
- 둘째, 국민임대주택은 2007년에는 일반회계에서 국민주택기금에 전입한 다음, 기금에서 다시 출자할 계획이고 2007년에 9,189억원 계상되었음
- 셋째, 용자사업비는 2006년에 13조 7,462억원에서 2007년에 10조 9,007억원으로 감액되었고, 국민임대주택 민자유치를 포함한 임대주택 지원의 경우 2006년에 1,418억원에서 2007년에 1조 3,709억원으로 증액되었음

[표 1] 국민주택기금의 조달 및 운용

(단위: 억원, %)

		2006계획		2007계획안		전년대비	
		금 액 (A)	비 율	금 액 (B)	비 율	증가액 (C=B-A)	증가율 (C/A)
조달	국민주택채권	90,000	35.7	90,000	38.5	-	-
	청약저축	14,000	5.8	19,700	8.4	5,700	40.7
	용자금회수	57,197	23.8	69,402	29.7	12,205	21.3
	일반회계전입금	-	-	9,189	3.9	9,189	-
	전년도 이월금	44,759	18.6	15,542	6.7	-29,217	-65.3
	기타	34,107	14.2	29,814	12.8	-4,293	-12.6
	합 계	240,063	100.0	233,647	100.0	-6,416	-2.7
운용	용자사업비	137,462	57.3	109,007	46.7	-28,455	-20.7
	임대주택지원	1,418	0.6	13,709	5.9	12,291	866.8
	차입금상환 등	135,583	42.0	103,719	44.4	2,997	3.0
	여유자금 운용	461	0.2	7,212	3.1	6,751	1,464.4
	합 계	240,063	100.0	233,647	100.0	-6,416	-2.7

자료: 건설교통부.

2. 「2005년도 기금운용평가보고」의 검토와 시사점

- 집행실적이나 비용절감에 치중하는 예전의 예산관리 방식에서 효과성(effectiveness)에 치중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국민임대 및 공공임대의 경우 성과지표를 예산집행률,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승인 실적, 주택보급률 등의 집행실적 중심 지표에서 장기공공주택 재고율, 임대주택수요 충족률 등의 효과성 지표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국민주택기금은 20조원 이상을 운용하고 여유자금 또한 수조 원을 상회하는 막대한 규모의 기금이므로, 반드시 자산운용 전문가를 육성해야 함
 - 건설교통부는 보건복지부 산하의 국민연금관리공단 내부에 설치된 자산운용관리 전문팀의 사례를 참조하여 여유자금 운용을 제고할 필요 있음

3. 장기임대주택 공급계획의 법제화 필요

- 장기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 50년 공공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등과 같은 임대 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임대주택임) 건설은 사회적으로 중요하고 공급이 부족하므로, 장기임대주택의 공급 및 지원을 늘려야 함
 - 우리나라의 총 재고주택 대비 장기임대주택 재고 비중은 1999년에 2.5%, 2001년 말 2.9%, 2003년 말 3.7%, 2005년 말 현재 5.0%로 증가하였음
 - 반면 영국은 20%, 프랑스는 18%, 네덜란드는 41%, 오스트리아는 21%, 스웨덴은 22%로 주거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이미 잘 갖추어져 있음
- 따라서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중기 계획의 성격인 기본계획의 수립을 신설해야 하거나 「주택법」 제7조나 제8조의 주택종합계획과 시·도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관련 계획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표 2] 우리나라의 장기 임대주택 재고 비율

(단위: 호, %)

	재고주택 수 (A)	장기 임대주택 재고 현황				비율 (B/A)
		국민임대	영구임대	50년공공	계(B)	
1999 말	11,181,000	22,727	190,077	64,814	277,618	2.5
2001 말	11,892,400	67,693	190,077	86,015	343,785	2.9
2003 말	12,668,700	190,573	190,077	92,730	473,380	3.7
2005 말	13,222,641	378,179	190,077	91,949	660,205	5.0

주: 영구임대 및 50년 공공임대주택은 재고 기준이고, 국민임대주택은 사업승인 기준.
자료: 건설교통부.

4. 기금 출자 전환에 대한 대책 강구 필요

-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예산지원은 2007년부터 재정을 기금에 전입한 후 기금에서 지원(출자)할 계획인데, 이에 대해 찬성과 반대 양론이 많은 실정임
 - 반대 논리로는 정책사업의 이미지가 퇴색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고, 찬성 논리는 국민임대주택 공급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좋다는 점임
 - 한편,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은 주택 부문의 사회안전망의 일환이므로, 기금 출자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양론을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음

5. 임대료보조 등 정책수단별 파급효과의 분석 필요

-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의 임대료보조 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면서 임대주택 정책수단별 국민경제 파급효과를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임대료보조 및 소득보조, 그리고 직접 공급에 따른 예산 투입의 차이와 사회적 후생의 차이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임

IV. 과학기술진흥기금

1.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2007년도 조달 및 운용 규모는 6,057억원으로 2006년도에 비하여 10.1% 감소한 규모임

[표 1]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조달 및 운용

(단위: 억원, %)

	2006 계획		2007 계획안		전년대비		
	금 액 (A)	비 율	금 액 (B)	비 율	증가액 (C=B-A)	증가율 (C/A)	
조 달	자체수입	1,564	23.2	1,121	18.5	-443	-28.3
	정부내부수입	4,188	62.1	3,235	53.4	-953	-22.8
	여유자금 회수	989	14.7	1,701	28.1	712	72.0
	합 계	6,741	100.0	6,057	100.0	-684	-10.1
운 용	사업비	5,024	74.5	4,752	78.5	-272	-5.4
	기금운영비	8	0.1	9	0.1	1	12.5
	정부내부지출	70	1.0	224	3.7	154	220.0
	여유자금운용	1,639	24.3	1,072	17.7	-567	-34.6
	합 계	6,741	100.0	6,057	100.0	-684	-10.1

주: 2006년도 계획은 당초 기준임.

자료: 과학기술부, 「2007년도 예산 및 기금(안) 개요」, 2006. 10.

2. 국가과학자연구지원 사업 분석

- 최고과학자연구지원사업의 명칭을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연구 논문조작 사건을 계기로 **변경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26.2% 감액된 31억원을 계상

[표 2] 국가과학자연구지원 사업의 계획안

(단위: 백만원, %)

2006		2007 계획안 (B)	증감	
당초	수정 (A)		(B-A)	(B-A)/A
6,200	4,200	3,100	-1,100	-26.2

□ 국가과학자연구지원 사업의 문제점

- 황우석 교수의 최고과학자 취소 이후 지원 조건이 변경됨
 - 1인당 연구지원비 규모 축소(30억원 → 15억원), 지원기간 연장(5년 → 6년(3+3년)) 및 연구인프라 지원(125억원) 폐지
- 지원 조건 변경 과정에서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2006년도 국가과학자 선정 공고가 8월 22일에야 이루어졌음
 - 국가과학자의 연구개시 일정이 11월 1일로 예정되어, 예산의 집행 시기에 문제가 있음

□ 국가과학자 연구지원 사업의 개선방안

- 2006년도 사업의 예산집행 시기가 11월로 예정된 만큼 **2007년도에 계획된 지원금액은 재검토 가능**
 - 2007년도 지원금액은 2006년도 지원금액과 연계하여 **최소한의 규모로 삭감후 2008년도에 사업을 정상화하는 방안**
 - 2007년도에 추가로 국가과학자를 선정하는 것을 전제로 지원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가능
- 최고과학자에 대한 연구인프라 지원이 폐지되었으나, 국가과학자 지원 사업에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과학기술투자펀드 출자지원 사업 분석

가. 사업의 개요

- 국채발행을 통하여 조성된 사업으로, 정부투자 연구개발 성과를 실용화하려는 기업 등에 투자하는 과학기술투자펀드를 결성·운영하는 사업
 - 2006년도에 400억원을 배정, 2007년도 계획안에는 600억원이 계상됨

[표 3] 과학기술투자펀드 출자지원 사업의 계획안

(단위: 백만원, %)

2006		2007 계획안 (B)	증감	
계획안	계획 (A)		(B-A)	(B-A)/A
80,000	40,000	60,000	20,000	50.0

나. 과학기술투자펀드 출자지원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당초 모태펀드를 설립하고, 펀드의 운용과 관리를 위한 전문관리기관을 설립할 계획이었으나, 직접 투자 방식의 출자사업으로 변경하였음
 - 관련법의 개정 및 계획 변경이 2006년 하반기에 이루어져 펀드 설립 일정이 지연됨
- 2006년도에 배정된 금액이 실제 투자되는 시점은 2007년 이후로 전망
 - 2007년도 사업에 600억원이 확정되면, 과학기술투자펀드의 사업 초기에 과학기술부가 출자하는 금액이 1,000억원에 이르게 됨

- 투자 수요에 비하여 **과다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 필요**
 - 출자 대상에 포함되는 **실용화 사업은 3개 사업에 불과하며, 사업기간 종료시까지 정부가 투자할 계획은 1,200억원임**
 - 사업계획상 **민간투자 유치 계획은 있었으나 펀드 구성시 의무는 없음**

□ 출자 규모에 대한 재검토와 더불어, 민간투자를 유인할 방안 마련 필요

[표 4] 대형 국가연구개발 실용화 대상 사업 현황

(단위: 억원)

	주관부처	사업기간	총 사업비	
			정부투자	
대형 위그선	해양수산부	2005~2010	1,700	850
치매치료제 개발	보건복지부	2006~2008	200	200
디지털액터 제작	정통부, 문화부	2007~2009	300	150
합 계			2,200	1,200

주: 정부투자 사업비는 해당 사업 선정당시 계획 기준임.

V. 정보통신진흥기금

1.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기금운용계획안의 개요

- 2007년도 조달 및 운용 규모는 1조 3,840억원으로 2006년도에 비하여 1.8% 증가한 규모임

[표 1]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조달 및 운용

(단위: 억원, %)

	2006 계획		2007 계획안		전년대비		
	금 액 (A)	비 율	금 액 (B)	비 율	증가액 (C=B-A)	증가율 (C/A)	
조 달	자체수입	5,156	37.9	7,636	55.2	2,480	48.1
	정부내부수입	7,962	58.6	2,139	15.5	-5,823	-73.1
	여유자금 회수	472	3.5	4,065	29.4	3,593	761.2
	합 계	13,590	100.0	13,840	100.0	250	1.8
운 용	사업비	9,630	70.9	9,431	68.1	-199	-2.1
	기금운영비	233	1.7	240	1.7	7	3.0
	정부내부지출	1,000	7.4	2,400	17.3	1,400	140.0
	여유자금운용	2,727	20.1	1,769	12.8	-958	-35.1
	합 계	13,590	100.0	13,840	100.0	250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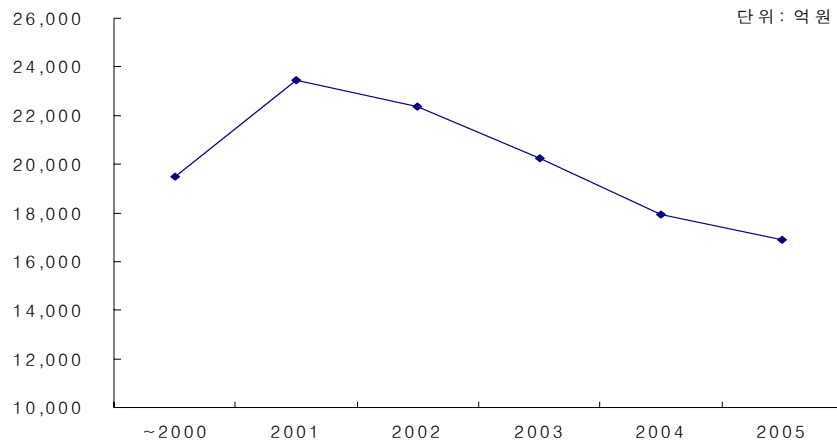
주: 2006년도 계획은 수정 기준임.

자료: 정보통신부,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2006. 10.

나. 기금재원의 감소 관련 분석

- 기금의 재원은 주로 기간통신사업자의 출연금이며, 기금의 조성액 누계는 2005년말을 기준으로 7조 4,617억원이며, 순조성액 누계는 1조 6,905억원으로 2001년말 순조성액 누계액의 72% 수준임
 - 기금의 2005년말까지의 조성액 누계의 68.8%를 민간출연금인 차지하고 있는데, 출연금 납부 실적이 감소 추세임
 - IT산업의 성장속도 둔화에 따라 통신사업자의 영업이익이 감소하고 있으며, 향후 신규서비스 발굴에 의한 민간출연금 증가도 기대하기 어려움

[그림 1]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순조성 누계 현황



- 신규 재원 확보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기금을 재원으로 수행중인 사업의 사업비 지출규모를 축소해나갈 필요가 있음
 - 2007년도 신규사업 중 일부 사업은 재검토의 여지가 있음
 - 기술개발투자지원 사업은 중단되었던 IT전문투자조합 사업을 부활하는 사업으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SW인력성장지원체계 및 IT산업인력 단기 재교육 사업은 정통부의 인력양성 사업이 지나치게 세분화되는 경향이 있음

2. 통신해양기상위성 위성통신시스템 개발 사업 분석

- 통신해양기상위성 사업은 차세대 위성통신기술과 기상관측 및 해양관측을 위한 정지궤도 위성을 개발하는 사업임
 - 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위성통신시스템 개발 사업에는 총 652.5억원이 투입될 계획이며,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는 170억원이 계상됨

[표 2] 통신해양기상위성 위성통신시스템 개발 사업의 계획안

(단위: 백만원, %)

2005 결산	2006		2007 계획안 (B)	증 감	
	당초	수정 (A)		(B-A)	(B-A)/A
9,500	17,000	17,000	16,000	-1,000	-5.9

자료: 정보통신부,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2006. 10.

- 통신해양기상위성 위성통신시스템 개발 사업의 문제점
 - **2007년도 계획안에 위성통신시스템의 활용 계획에 대한 연구가 없음**
 - 2004년에 구성된 ‘사용자 협의회’에서 4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였으나, 동 협의회는 통신탑재체의 운용계획 수립에 필요한 부처별 활용계획을 제안하는 수준으로 활용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기구는 아님
- 통신해양기상위성 위성통신시스템 개발 사업의 개선방안
 - **위성의 발사가 2008년말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통신탑재체의 활용 계획에 대한 사전 연구가 2007년도 부터는 이루어져야 함**
 - 관련 부처의 **통신망 발전 계획과 연계하여** 구체적인 활용계획을 수립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통신탑재체 활용 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비가 추가로 편성될 필요가 있음**

제4부 사회 분야

I. 국민연금기금

1.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2007년도 국민연금기금의 조달 및 운용규모는 63조 3,372억원으로 전년대비 10.7% 감소하였음
 - 2007년도 보험료수입 계획은 21조 5,268억원으로 전년대비 1.0% 증가한 규모이며, 2007년도 급여비지출 계획은 5조 1,916억원으로 전년대비 21.2% 증가한 규모임

[표 1] 2007년도 국민연금기금의 조달 및 운용

(단위: 억원, %)

		2006 계획	2007 계획안	증가율
조 달	연금보험료 수입	213,163	215,268	1.0
	운용 수입	87,062	113,593	30.5
	원금 회수	407,526	303,141	-25.6
	국고 전입금	1,332	1,370	2.9
	합 계	709,083	633,372	-10.7
운 용	사업비			
	연금급여 지급	42,835	51,916	21.2
	회관건립·복지타운 운영 등	245	200	-18.4
	소 계	43,080	52,116	21.0
	기금관리비	118	114	-3.4
	사업운영비	4,160	4,235	1.8
	여유자금 운용	661,725	576,907	-12.8
	합 계	709,083	633,372	-10.7

자료: 보건복지부, 「2007년도 국민연금기금 운용계획(안)」, 2006. 9.

2.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징수율 제고 필요

- 보험료수입 계획의 증가율이 1%에 그치는 수준으로 부진한 것은 일정부분 보험료 징수실적이 저조한 것과 관련된 것으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연체율은 2006년 7월 현재 24.1%(금액기준)에 달함**
 - 지역가입자의 연체율은 1999년 26.5%에서 큰 변동 없이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연체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는 추세임**

[표 2]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연체 현황(누적기준): 1999~2006.7월

(단위: 억원, %)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7
연체금액	6,406	11,893	19,762	27,279	37,277	45,032	55,125	59,663
연체율	26.5	25.7	26.2	24.9	24.9	24.0	24.3	24.1

자료: 국민연금관리공단 내부자료.

- 가입자종간 징수율 격차 및 연체의 장기화는 향후 심각한 **연금사각지대 문제를 초래함으로써** 국민들의 은퇴후 노후소득 상실에 대처하기 위해 도입된 **국민연금의 취지를 저해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 보험료 미납수준, 소득수준, 미납기간 등에 따라 **미납자 유형별로 차별화된 관리를 실시함으로써 보험료 연체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최고 소득등급인 45등급에 해당하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연체율도 금액기준 13.4%, 인원수기준 18.3%에 이르는 등 소득수준이 높은 등급에서도 보험료 연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3.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자 해소 필요

- 2006년 8월 현재 지역가입자 909만명중 487만명이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자로 53.6%를 차지하고 있으며, 납부예외 기간이 37개월 이상인 납부예외자가 전체 납부예외자의 50.7%를 차지하여 **납부예외가 장기화**되고 있는 경향

[표 3]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자 현황: 1999~2006.8월

(단위: 천명, %)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8
납부예외자수	5,513	4,446	4,476	4,250	4,565	4,683	4,634	4,874
납부예외율 ¹⁾	50.9	42.7	44.0	42.5	45.8	49.8	50.8	53.6

주: 1) 지역가입자 대비 비율.
 자료: 국민연금관리공단 내부자료.

-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문제는 국민연금 체납과 함께 장기적으로 연금사각지대 문제를 야기하고 제도정착에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 2003년 재정계산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 비수급자로 대표되는 사각지대비율¹⁾은 단기적으로 40%, 장기적으로 18%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 납부예외는 소득과약 곤란으로 인하여 상당수 발생하고 있는 바,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지역가입자중 과세자료 보유율은 2005년 11월 기준으로 26.2%인 239만명에 불과하므로, 향후 정부차원의 소득과약 인프라 확충 노력이 필요

1) 국민연금 비수급자수/65세이상 노인인구수

4. 가입자의 표준소득월액등급체계 개선 필요

- 국민연금의 연금보험료 및 급여산정 기준이 되는 가입자의 **표준소득월액의 전산업평균임금 대비 비율**은 2001년 73.7%, 2006년 63.0%, 2007년 61.1%로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임

- **표준소득월액이 전산업평균임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월소득액 360만원 이상 소득자도 월소득액 360만원(45등급)으로 신고하며, 표준소득월액등급체계의 상한기준소득이 1995년 이후 변경되지 않아 **가입자의 소득수준 상승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임**
 - 국민연금 가입자 중 **최고 45등급 해당 가입자 비중은 1995년 0.9%에서 2006년 8월 11.3%**로 상승하였음

- 2006년 현재 **360만원인 표준소득월액등급체계 상한선을 인상함으로써** 향후 표준소득월액이 가입자의 **소득수준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소득대체율, 보험료율 등 구체적 제도내용에 따라 상한선의 인상이 재정수지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게 나오는 결과를 고려할 때, 적정수준으로의 상한선 조정은 연금제도 개정과 함께 병행·논의되어야 함

5. 제도 내적인 재정불균형 문제의 개선 필요

- 소득대체율 60%(40년 가입기준), 보험료율 9%인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기여와 급여 간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2047년에 기금고갈이 예상되고 있어 **소득 대체율 인하 및 보험료율 인상 없이는 재정안정성 문제의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국민연금법개정법률안」 중 3개의 법률안이 재정안정화 방안을 담고 있으며, 각 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4] 주요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내용

정부개정안 (2004.6월 발의)	윤건영의원 대표발의 (2004.12월 발의)	강기정의원 대표발의 (2006.9월 발의)
[국민연금법개정안] — 적정부담·적정급여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료를 단계적 인상: 현행 9% → 2030년 15.9% • 급여수준 인하: 60% → 55% → 50%(2008년) 	[국민연금법개정안] — 국민연금을 이원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연금: 급여율 20% • 소득비례연금: 급여율 20% — 재정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연금: 조세 • 소득비례연금: 보험료 7% 	[국민연금법개정안] — 적정부담·적정급여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료를 현행 9% 유지 • 급여율 현행 60%에서 2008년부터 50%로 인하 [기초노령연금법제정안] — 고령빈곤 문제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노령연금: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월 10만원, 일반계층 월 7만원 • 재원조달방안 논의 중

- 정부개정안 등 3개의 개정안이 국민연금 장기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음
 - 정부안의 경우 2055년부터 당기수지 적자가 발생하며 적정추계기간 최종년도인 2070년말 2.6배의 적립률이 유지됨
 - 윤건영의원 대표발의안의 소득비례연금은 2070년말까지 당기수지 흑자 및 13.7%의 적립률이 유지되나, 소득대체율을 20%로 인하함에 따라 국민연금 내에서 적정 노후소득을 보장하지 못하고 이를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기초연금으로 보장해 주는 구조이며,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정부 재정부담은 노령연금의 경우 2010년 17조원, 2030년 185조원, 그리고 장애연금까지 포함할 경우 2010년 19조원, 2030년 192조원(경상가 기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강기정의원 대표발의안은 재정수지 적자 및 기금고갈 시점이 현행 제도보다 각각 3년, 5년 지연되는데 그쳐 재정안정화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초노령연금은 2010년 3조 1,137억원, 2030년 10조 6,900억원(경상가 기준)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6. 자산운용전략 개선 필요

- 국민연금기금은 2007년도 57조 6,907억원을 운용할 계획이며, 재정안정화를 고려하여 연금부채를 고려한 중장기적인 투자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수립의 근거가 되는 「중기자산배분(안): 2007~2011년」은 자산부채종합관리(Asset Liability Management: ALM) 방식에 기초하여 향후 적립금 규모와 예상 지출액을 반영하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음
 - 「중기자산배분(안): 2007~2011년」은 기금의 중기 목표수익률을 사전적으로 ‘경상경제성장률+ α ’로 설정하고 있어, 향후 장기적 ALM을 충족시키는 운용수익률을 적정한 수준의 위험 안에서 정립한 후 중장기 전략적 자산배분 계획을 작성할 필요가 있음

- 국민연금기금은 수익률 제고 및 국내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자산배분을 다양화할 필요
 - 「중기자산배분(안): 2007~2011년」에 의해 결정된 2007년도 자산배분 목표비중은 국내주식 13.6%, 국내채권 74.0%, 해외주식 2.8%, 해외채권 7.5%, 대체투자 2.1% 임
 - 국민연금은 금융자산 운용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적절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는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국내채권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²⁾ 국민연금의 매매형태가 국내 채권시장을 교란시킬 수 있으므로 금융자산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해외자산 및 대체투자의 비중을 확대해 나가야 하며, 대체투자의 경우 만기가 길어 부채 듀레이션(duration)이 긴 국민연금의 재무적 구조에 적합하고 기대수익률이 높은 자산을 발굴해 나가야 할 것임

2) 2005년말 현재 국민연금이 국내채권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7%이며, 국채시장에서는 28.1%를 차지하고 있음(액면가 말잔기준).

II. 특수지역 관련 연금기금

1. 2005년도 특수지역연금의 재정수지 결산

□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을 포함하는 특수지역연금의 2005년 결산 기준 재정수지는 1조 1,601억원 적자를 기록함

[표 1] 특수지역연금 재정수지 현황(2005년 12월 현재)

(단위: 억원)

	공무원연금 기금 ¹⁾	사학연금 기금	군인연금		합 계
			특별회계	기금	
[수 입](A)					
연금보험료	40,767	10,706	5,480	-	56,953
기여금(가입자)	20,045	5,408	2,864	-	28,317
부담금(국가/지자체)	20,722 ²⁾	1,461	2,816	-	24,999
부담금(사업자/사학)	-	3,837	-	-	3,837
퇴직수당 등 국가부담금	12,798	1,618	2,399	-	16,815
기 타(급여환수금 등)	171	20	15	-	206
소 계	53,736	12,344	7,894	-	73,974
[지 출](B)					
급여비 ³⁾	59,452	9,380	16,075	-	84,907
관리운영비	302 ⁴⁾	283	1	-	586
기 타(제경비)	78	4	-	1	83
소 계	59,832	9,667	16,076	1	85,576
[수지차](A-B)	-6,096	2,677	-8,182	-	-11,601
국고보전금 ⁵⁾	6,096	-	8,564	-	14,660
운용수익	5,077	6,122	-	154	11,353
기금증가액	5,077	8,799	-	154	14,030
누적적립금	38,295	72,407	-	2,659	113,361

주: 1) 연금회계와 재해보상 수입·지출을 포함.

2) 지자체 부담금 1조 3,686억원, 타 지역연금 이체부담금 210억원 포함.

3) 퇴직수당, 퇴직일시금, 재해보상급여 포함.

4) 타 회계 포함시 총 관리운영비 456억원.

5) 공무원연금은 국고보전금 중 선수부담금을 차감한 금액임.

자료: 각 연금기금 2005년도 결산자료, 2006.

- 상대적으로 성숙도가 높은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각각 6,096억원과 8,182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사학연금은 2,677억원의 흑자를 기록함
- 2005년도 결산 기준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국가재정에서 투입된 **국고보전금**은 각각 **6,096억원, 8,564억원 등 1조 4,660억원**임

2.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2007년도 특수직역연금 기금운용계획안 총 수입(지출)은 전년대비 13.5% 증가한 20조 944억원이며, 국고보전금¹⁾은 전년대비 11.0% 증가한 1조 9,664억원임**
 - 2007년도 공무원연금의 총 수입 및 지출은 전년대비 **13.4% 증가한 10조 8,940억원**이며, 국고보전금은 전년대비 **15.1% 증가한 9,725억원**임
 - **공무원연금 책임준비금**에 해당하는 기금회계 대차대조표 상 **자본금**은 **3조 8,295억원**이며(2005년 기준), **2007년도 손익계산서 상 당기순이익**은 전년과 비슷한 **2,612억원** 전망
 - 2007년도 **군인연금특별회계**의 총 수입 및 지출은 전년대비 **5.9% 증가한 1조 8,798억원**이며, 국고보전금은 전년대비 **7.3% 증가한 9,939억원**임
 - 2007년도 **군인연금기금**의 총 수입 및 지출은 전년대비 **51.5% 증가한 2,109억원**으로 큰 폭의 증가는 금융기관예치금회수에 기인함(443.5% 증가한 1,413억원)
 - **사학연금**의 총 수입 및 지출은 전년대비 **15.0% 증가한 7조 1,097억원**이며, 국고보전금은 발생하지 않고 있음²⁾

1) 여기서 비교기준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의 국고보전금인 1조 7,016억.

2) 사학연금은 2018년부터 수지 적자가 예상되나 아직 국고보전금 관련 규정은 없는 상태임(사학연금 내부자료 참조).

[표 2] 2007년도 특수직역연금 기금운용계획안 주요 내용

(단위: 억원)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합계
				특별회계	기금	
수입	자체수입	72,828	27,535	2,999	2,109	105,471
	정부내부수입	17,664	5,021	15,799	-	38,484
	(국고보전금)	(9,725)	0	(9,939)	-	(19,664)
	여유자금회수	18,111	38,541	-	-	56,652
	기타	337	0	-	-	337
	합계	108,940	71,097	18,798	2,109	200,944
지출	사업비	85,332	27,909	18,796	-	132,037
	기금관리비	713	534	2	-	1,249
	여유자금운용	20,305	42,654	-	2,109	65,068
	기타	2,590	0	-	-	2,590
	합계	108,940	71,097	18,798	2,109	200,944

자료: 행정자치부, 「2007년도 공무원연금기금운용계획안」, 2006.

3. 특수직역연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특수직역연금의 기금운용수익금, 국고보전금, 책임준비금에 관한 회계처리에 투명하지 못한 점이 발견되며,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공무원연금은 재정을 5개의 회계로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어 국민이 이해하기 쉽지 않고, 특히 기금운용수익금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이 상세히 기록될 필요가 있음
 -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결산서에서 초과 계상된 국고보전금의 회계처리 방식에 차이³⁾가 있어 비교가능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통일된 회계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관련법에 의해 책임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반적 회계기준에 따른 책임준비금⁴⁾이 대차대조표상에 부채로 기록되지 않고 있음

3) 공무원연금을 실제로 발생한 수치차를 결산서에 기록하는 반면, 군인연금특별회계는 예산액을 기록하고 있음.

- 국가재정으로 연금수지차를 보전하는 국고보전금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기금운용수익금을 수지차 보전에 활용하지 않고 있음
 -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국고보전금을 합한 규모는 1조 9,664억원으로 거의 2조원에 육박하고 있음
 - 2005년도 결산에서 공무원연금은 5,077억원의 기금운용수익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동 수익금을 연금급여 지출에 전혀 사용하지 않았으며,⁵⁾ 이는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따른 것임

- 향후 국고보전금으로 인한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의 국고보전금 관련규정⁶⁾을 개정하여 기금운용수익금의 일정비율을 수지차 보전에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국고보전금의 초과 계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금운용계획안에 국고보전금을 추정한 상세내역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표 3] 특수직역연금 수지차에 대한 국고보전금: 2001~2010년

(단위: 억원,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합 계	비 고
2001	599	5,514	6,113	결산액
2002	-	5,690	5,690	"
2003	548	6,313	6,861	"
2004	1,742	6,147	7,889	"
2005	6,096	8,564	14,660	"
2006	8,452	9,261	17,713	계획액
2007	9,725	9,939	19,664	계획안
2008	14,262	10,817	25,079	추정치
2009	17,967	11,684	29,651	"
2010	21,426	12,593	34,019	"

자료: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및 국방부 내부자료.

- 4) 일반적 회계원칙으로는 책임준비금에 총당부채 및 우발채무·우발자산이 포함됨.
- 5) 반면, 군인연금은 기여금, 연금부담금과 함께 기금운용수익금도 연금급여지출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 2003년 684억원, 2004년 1,370억원의 기금을 사용한 바 있음.
- 6) 공무원연금법 제69조(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및 군인연금법 제39조의2(보전금).

-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떨어지는 연금대부사업 및 주택사업의 확대로, 자산 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음
 - 연금제도의 성숙으로 연금재정이 악화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가능한 한 수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여유자금이 운용될 필요가 있음
 -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은 자금운용에서 수익성이 떨어지는 사업비중을 확대하고 있어, 7) 사업비중 조정을 축소할 필요가 있음

- 특수지역연금의 금융자산운용조직을 통합하여 규모의 경제를 활용함으로써 수익성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 2006년 9월에 국회를 통과한 국가재정법⁸⁾은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여유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여유자금운용을 통합 운영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 수익성 개선이라는 편익과 함께 기금의 공동부실화, 참여기관 사이의 형평성 문제 등 비용측면도 충분히 고려하여 통합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7)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의 연금대부사업 및 주택사업의 비중은 2006년에는 각각 31.3%, 15.3%이었으나 2007년도에는 각각 33.0%, 16.9%로 확대될 계획임.

8) 국가재정법 제81조(여유자금의 통합운용). 그러나 제76조(자산운용위원회)에서는 1조 원을 초과하는 기금에 대해 자산운용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두 조항을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음.

III. 국민건강증진기금

1.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2007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조달 및 운용규모는 총 2조 3,295억원으로 2006년도에 비해 22.1%가 증가함. 이처럼 기금의 조달규모가 2006년도에 비해 대폭 증가한 것은 **담배가격 500원 추가인상을 전제로 담배부담금 수입액을 4,758억원 증액 편성하였기 때문임**
 - 2007년도 건강증진기금의 운용규모는 정부가 운용하는 총 57개 기금 중 15번째 규모이며, 특히 36개의 사업성기금만을 보면 국민주택기금,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에 이어 3번째 규모임

[표 1]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조달 및 운용

(단위: 억원, %)

		2006		2007(안)		2006~2007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증감액	증감율
조 달	담배부담금	16,446	86.2	21,204	91.0	4,758	28.9
	이자수입	34	0.2	59	0.3	25	72.5
	경상이전수입	60	0.3	87	0.4	27	45.6
	한국은행 예치금회수	1,154	6.0	1,767	7.6	613	53.1
	금융기관 예치금회수	1,382	7.2	178	0.8	-1,204	-87.1
	합 계	19,076	100.0	23,295	100.0	4,219	22.1
운 용	사회복지	725	3.8	614	2.6	-111	-15.3
	보건의료	5,611	29.4	6,647	28.5	1,036	18.5
	건강보험	10,712	56.2	11,804	50.7	1,092	10.2
	여유자금운용	1,998	10.5	4,203	18.0	2,205	110.4
	기금운영비	29	0.2	27	0.1	-2	-6.9
	합 계	19,076	100.0	23,295	100.0	4,219	22.1

자료: 보건복지부, 「2007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 운용계획안」, 2006. 9.

2. 수입규모가 가장 큰 담배부담금의 인상 문제

- 2007년도 수입계획 기준시 정부가 운용하는 102개 부담금 중에 담배부담금 규모가 가장 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담배부담금 수입이 전년대비 **29% 증가한 2조 1,204억원** 규모로 늘어난다는 전제하에 수립되었음
 - 정부는 담배가격 500원 추가인상을 위해 2005년 8월 25일에 「국민건강증진법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였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음
 - 담배값 추가인상은 금연효과, 흡연자와 비흡연자간 형평성, 기금설치목적과 건강보험지원의 부합여부 등을 신중히 고려한 후 결정되어야 함
 - 정부는 2007년도 담배반출량을 38억갑으로 추정하였으나 최근 5년간의 반출량을 감안하면, 담배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담배반출량이 추정치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담배부담금 수입도 증대될 수 있음.

3. 건강보험 지원규모의 지속적 증가

- 건강증진기금은 2007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의 6%인 1조 1,804억원을 건강보험에 지원함. 이는 여유자금 운용을 제외한 기금사업비 1조 9,092억원의 61.8%인데, 기금을 통한 건강보험 지원규모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정부는 기금의 건강보험지원에 대한 적합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국민건강보험법개정법률(안)」에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흡연으로 인한 질병에 대한 보험급여’에 지원한다는 규정을 추가함. 그러나 **대상자별로 급여지급액이 구분 계리되지 않으므로 이는 실효성이 없음**
 - 기금사업비의 60% 이상을 진료비에 지원하는 것은 담배부담금을 재원으로 건강증진기금을 설치한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고, 또한 수익자 부담원칙에서 보면 흡연자와 비흡연자간 형평성에도 문제가 될 수 있음

4. 2005년 이후 지속되는 국고사업의 기금이관

- 2005년과 2006년에 국고사업이 건강증진기금으로 대폭 이관되었고, 2007년에도 신규로 2개 사업이 기금으로 통합되어, 2005년 이후 기금으로 이관된 총 45개 사업에 대해 2007년에 5,213억원을 지출할 예정임.
 - 담배가격 및 담배반출량에 따라 담배부담금 수입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기금의 수입규모에 따라 건강보험 지원을 제외한 기금사업들에 투자될 재원이 제약될 경우 일부 기금사업들의 차질이 우려됨
 - 국고사업의 기금이관 등에 따라 2007년도 사업비 총액 1조 9,092억원 중 90% 가량이 기금의 설치목적인 1차 예방사업과 연계성이 낮은 건강보험지원 및 보건산업진흥 R&D사업 등에 지출됨
 - 담배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담배반출량이 정부 추정치 이상 증가하면 재정부족이 발생할 가능성은 저하되기 때문에 다양한 보건복지수요에 정부가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확한 수입규모 예측이 필요함

5. 건강증진 관련사업의 확대 필요

-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련 사업비 총액인 2,498억원의 93% 정도가 10여 가지의 질병에 대한 관리 및 건강보호 등에 투자됨. 그러나 국민건강생활 보장 차원에서 불 때 마약의 위해를 포함한 여타 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해서도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음
- 건강증진관련 사업들은 주로 보건소를 통해 추진되고 있는데, 유아기부터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접근이 필요한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건강증진사업을 학교와 직장으로 확대해 나가는 사업수행이 필요함

IV.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1.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2007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이하 산재보험기금)의 운용규모는 6조 5,465억원, 사업비는 4조 5,435억원으로 계상됨

[표 1] 산재보험기금 조달 및 운용

(단위: 억원, %)

		2006 계획		2007 계획안		전년대비	
		당 초	수 정 (A)	금 액 (B)	비율	증가액 (C=B-A)	증가율 (C/A)
조 달	산재보험료	40,383	40,383	43,713	66.8	3,330	8.2
	가산·연체금 등	401,440	401,440	1,408	2.2	-33	-2.3
	재산수입 등	2,347	2,347	2,270	3.5	-77	-3.3
	일반회계 전입금	147	147	147	0.2	-	-
	공자기금 이자수입	25	25	-	-	-25	-100
	여유자금운용회수 등	22,185	22,185	17,927	27.4	-4,258	-19.2
	합 계	66,528	66,528	65,465	100.0	-1,063	-1.6
운 용	보험급여	34,177	34,177	38,077	58.2	3,900	11.4
	반환금	503	896	747	1.1	-149	-16.7
	근로복지공단 사업	2,418	2,418	2,727	4.2	309	12.8
	산업안전공단 사업	2,547	2,547	2,542	3.9	-5	-0.2
	산재예방시설 용자 등	1,200	1,200	1,283	1.6	83	6.9
	기금관리비 등	55	55	59	0.1	4	7.7
	여유자금운용	25,628	25,235	20,030	30.6	-5,205	-20.6
	합 계	66,528	66,528	65,465	100.0	-1,063	-1.6

자료: 노동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6. 10.

2. 재정수지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2007년도 산재보험기금의 적립금은 2조 410억원, 법정책임준비금은 5조 2,901억원으로 **책임준비금 부족액**은 3조 2,491억원 수준으로 전망되므로, 정확한 재정추계와 산재보험재정수지의 악화를 방지하는 대책을 바탕으로 적립금 부족액을 **단계적으로 충당**하는 방안이 필요함
 - 산재보험은 2000년 이래 적용대상 확대 등으로 인하여 급여비 지출이 연평균 16.5% 증가하면서 2003년도 이후 지속적인 적자 발생에 따라 연례적인 보험요율 상승 및 법정책임준비금 과소적립 현상이 나타남
 - 책임준비금 부족액은 2003년도의 7,435억원, 2004년도의 1조 5,501억원, 2005년도의 2조 4,398억원이었고, 2006년도에는 3조 496억원으로 계속하여 증가함

[표 2] 산재기금 적립금 현황: 2003~2007년

(단위: 억원)

	2003	2004	2005	2006	2007(안)
산재보험적립금	19,955	18,537	16,783	18,307	20,410
책임준비금	27,390	34,038	41,181	48,803	52,901
책임준비금 부족액	7,435	15,501	24,398	30,496	32,491

자료: 노동부 내부자료.

- 2007년도 산재예방사업비는 2,735억원으로 2006년도의 2,627억원 대비 4.1% 증가했지만, 시설건립비 71억원(2006년도 대비 787.5% 증가)을 차감하면 실사업비 증가율은 1.7%에 불과함

- 산재예방을 위한 실사업비 보다 시설건립비와 운영비 및 인건비 증가율 (2.3%)이 더 크다는 점은 산재예방에 대한 노동부의 의지가 부족하거나 사업에 대한 효과가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됨
 - 근로자의 복지향상과 산재보험기금의 재정누수에 대한 사전 예방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되, 동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와 함께 내실있는 사업설계를 통한 사업추진 필요
- 2007년도 산재보험운영비의 일반회계 전입금은 **60억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는 산재보험관리운영비 1,279억원의 **4.7% 수준**에 불과하므로 산재보험 운영비의 일반회계 전입금은 **과소계상**되었다고 볼 수 있음
- 보험사업의 사무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정부 재정지원 필요
- 2007년도 산재급여비는 3조 8,077억원으로 2006년도 대비 11.4% 증가했지만, 산재진료비 부당청구 등으로 인한 재정누수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실사기관의 확대 및 전담조직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 적발기관에 대한 행정 처분 수위 강화** 조치가 필요함
- 산재진료비 실사결과 2005년도 216개 실사기관 중에서 213개 기관 (98.6%)이 29억원을 부당청구 하였고, 2006년도 6월 현재 91개 실사기관 중에서 88개 기관이(96.7%) 22억원을 부당청구함
 - 산재의료기관이 4,868개 기관(2006년 9월 현재)인 점을 감안하면 재정누수 정도는 더욱 클 것으로 추정됨

V. 문화·관광 관련 기금

1.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2007년도 문화관광부 소관 5개 기금과 방송위원회 1개 기금 등 총 6개 기금으로 구성된 문화·관광 분야 기금운용규모는 총 1조 8,731억원이며, 이 중 사업비는 9,919억원 규모임
 - 문화관광부는 가칭 「한국영화발전기금」을 신설할 계획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1,000억원 편성¹⁾

[표 1] 2007년도 문화·관광 분야 기금의 조달 및 운용

(단위: 억원)

	조 달			운 용		
	부담금	이자 수입	총수입	사업비	금융기관 예치	총지출
[문화관광부]	2,970	760	16,562	8,551	7,120	16,562
문화예술진흥기금	-	210	4,747	1,031	3,589	4,747
국민체육진흥기금	368	184	5,881	2,650	2,489	5,881
관광진흥개발기금	2,602	352	5,240	4,512	722	5,240
지역신문발전기금	-	9	430	200	224	430
신문발전기금	-	5	264	158	96	264
[방송위원회]	1,461	90	2,169	1,368	494	2,169
방송발전기금	1,461	90	2,169	1,368	494	2,169
합 계	4,431	850	18,731	9,919	7,614	18,731

자료: 문화관광부, 방송위원회,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6. 10.

1) 「영화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이광철 의원 대표 발의, 제안일자: 2005. 10. 11)이 2006년 10월 현재 국회문화관광위원회에 계류 중임.

2. 기금별 분석

- 관광진흥개발기금의 관광숙박시설 건설과 개보수를 위한 **용자사업비 1,399억원**은 동 기금 사업비 5,240억원의 **25.6%**에 해당할 만큼 비중이 크지만 대기업에 대한 용자지원의 사업 실효성이 미흡한 것으로 간주됨
 - 2003~2006년 6월까지의 기간 동안 대기업이 시중은행에서 용자받을 때 보다 동 기금에서 용자를 받는 경우의 이자절감액은 **약 29억원**(연평균 약 8억 3,000만원)으로 추정되고, 용자를 받은 대기업이 18개 업체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각 업체들의 **이자절감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 동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정상태가 대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되, 용자지원 대상에 대한 보다 **철저한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대기업의 경우는 **시중은행을 통한 사업수행을 유도**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임

- 2007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 수입 중 **국외여행자납부금**은 **1,494억원**으로 계상되었고, 이는 동 기금 총 수입 5,240억원의 28.5%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지만, 매년 계속되는 계획 대비 높은 실적을 고려하여 납부금 수준의 인하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국외여행자납부금의 계획 대비 납부금 실적은 2004년 170.3%, 2005년도 117.6%로 실적 초과
 - 따라서 **초과실적**에 따른 납부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현재 공항 1만원, 항만 1천원으로 되어 있는 **국외여행자납부금 인하**를 고려할 필요가 있고, 동 납부금으로 수행되는 관광진흥개발기금 사업 중 실효성이 불투명한 사업을 정비하여 납부금 부담자의 **신뢰를 제고**할 필요 있음

- 2007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은 2006년도 5,199억원보다 8.7% 감소한 **4,747억원**을 운용할 계획이지만, 재정이 불안정하므로 안정적 재원의 확보가 필요함
 - 기금 사업비의 확대에 의해 **적립금 규모가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민간자금화**에 따른 공공재원의 확보와 재정 통제에 대한 방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음
 - 민간 자원에 의한 기금운용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함께 **재정 운용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

제5부 행정 분야

I. 군인복지기금

1.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군인복지기금은 군의 제반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 등의 운용수익금을 재원으로 장병 복지수요 충족을 통한 군의 사기 및 근무의욕을 증진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국가위기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준비태세유지에 기여할 목적으로 군인복지기금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것으로서 기금 관리주체는 국방부장관이고, 관리방식은 국방부 및 각군 부대별 독립채산제 관리방식임.
- 2007년도 군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의 조달 및 운용규모는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6년도 계획대비 6.3% 증가된 5,950억 7,400만원임.

[표 1] 2007년도 군인복지기금 조달 및 운용

(단위: 백만원, %)

	2006 계획		2007계획안		증 감		
	금액(A)	비율	금액(B)	비율	(B-A)	%	
조달	총 계	559,844	100.0	595,074	100.0	35,230	6.3
	관유물대여료	11,166	2.0	9,643	1.6	-1,523	-13.6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7,313	1.3	7,334	1.2	21	0.3
	입장료수입	75,142	13.4	76,917	12.9	1,775	2.4
	잡수입	179,934	32.1	195,425	32.8	15,491	8.6
	토지 및 무형자산매각대	0	0	9,600	1.6	9,600	순증
	용자원금회수	78,208	14.0	91,504	15.4	13,296	17.1
	정부예금회수	175,049	31.3	178,154	29.9	3,105	1.8
	전입금	33,032	5.9	26,497	4.5	-6,535	-19.8
	총 계	559,844	100.0	595,074	100.0	35,230	6.3
운용	장병복지향상	274,920	49.1	568,577	44.7	-8,777	-3.2
	장병복지향상(용자)	109,631	19.6	117,743	19.8	8,227	7.3
	통화금융기관예치	138,646	24.8	180,193	30.3	41,547	30.0
	비통화금융기관예치	36,647	6.5	30,996	5.2	-5,651	-15.4

자료: 국방부 복지관리과.

2. 사업분석

- 2007년도 군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의 주요 문제점은 사병복지 재원이 과소 책정된 것과 취업활동지원사업의 부적정에 있음.
 - 복지시설확보사업을 예로 들면 전체 사업비 257억 5,300만원의 5.9%에 해당하는 15억 3,000만원이 사병들이 주로 이용하는 충성클럽(군 매점)·중앙복지시설 개선 등에 배분되고, 나머지는 군 간부들이 주된 수혜자인 체력단련장(군 골프장) 건설·유지, 콘도회원권 구입 및 기타 시설에 투입되고 있음.
 - 따라서 2007년도 군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사병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비의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재검토될 필요가 있음.

[표 2] 2007년도 복지시설확보 사업별 자원배분

(단위: 백만원, %)

	체력단련장 건설유지		매점·식당		콘도회원권 구입		기 타		합 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2006계획	16,208	46.4	2,094	6.0	6,250	17.9	10,387	29.7	34,939
2007계획안	15,813	61.4	1,530	5.9	4,750	18.4	3,660	14.3	25,753

자료: 국방부.

- 또한 취업활동지원사업의 부적정과 관련해서는 군인복지기금에서 전역장병의 재취업 지원과 직업·사회적응 교육을 통한 취업경쟁력 제고 및 사회적응력 배양을 위해 군사문제연구원 취업지원센터 출연을 통해 전역장병의 재취업 지원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2007년도 군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는 전년대비 2.3% 증액된 10억 7,400만원이 반영되었음.

- 문제는 관리운영비가 6억 9,200만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64.4%를 차지하고 있고, 순수사업비는 35.6%에 불과하고 그나마 사업내용은 국방부와 국가보훈처에서 예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과 다수 중복되고 있다는 점임.
- 따라서 위 사업은 단기적으로는 국방부 일반회계 사업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장기적으로는 제대군인 지원업무의 주무부처이자 제대군인 취업 지원 전문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국가보훈처 사업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표 3] 취업활동지원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

	2006 계획	2007계획안	증감액	증감율
계	1,050	1,074	24	2.3
• 관리운영비	684	692	8	
- 인건비	655	663	8	1.2
- 관리비	29	29		
• 취업/창업박람회	117	166	49	41.9
• 취업지원 교육	49	49	-	-
• 취업가이드북	51	71	20	39.2
• 전산망 운영	48	21	-27	-56.3
• 홍보/구인처 개발	9	17	8	88.9
• 취업실태/조사분석	15	-	-	-
• 순회상담	23	48	25	108.7
• 직원능력개발	56	-	-	-
• 진로지도 프로그램	-	10	10	순증

자료: 국방부.

II. 보훈기금

1.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2007년도 보훈기금 운용계획안의 조달 및 운용규모는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6년도 계획대비 6.7% 감소된 3,103억 8,400만원임.

[표 1] 2007년도 보훈기금의 조달 및 운용

(단위: 백만원)

	2006년도 계획		2007년도 계획안		전년대비		
	금 액 (A)	비 율	금 액 (B)	비 율	증가액 (B-A)	증가율	
조 달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53,298	16.0	48,630	15.7	-4,668	-8.6
	관유물대여료	31	0.0	31	0.0	-	-
	잡수입	43	0.0	43	0.0	-	-
	용자원금회수	120,926	36.3	133,858	43.1	12,931	10.6
	기타경상이전수입	21,260	6.4	19,274	6.2	-1,986	-9.3
	전입금	43,568	13.1	36,004	11.6	-7,564	-17.3
	정부예금회수	93,701	28.2	65,545	21.1	-28,156	-24.8
	예수금	-	-	7,000	2.3	7,000	순증
합 계	332,827	100.0	310,384	100.0	-22,443	-6.7	
운 용	국가유공자지원자금	248,550	74.7	232,048	74.8	-16,502	-6.6
	참전유공자·제대군인 지원자금	78,046	23.4	68,525	22.1	-9,521	-12.2
	5·18민주유공자지원자금	3,117	0.9	5,225	1.7	2,108	67.7
	특수임무수행자지원자금	3,115	0.9	4,586	1.5	1,471	47.3
	합 계	332,827	100.0	310,384	100.0	-22,443	-6.7

자료: 국가보훈처.

2. 사업분석

- 2007년도 보훈기금 운용계획안의 주요 문제점으로는 대부 수요 대비 대부 사업 규모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과 대부사업추진 방식의 부적정임.
 - 우선 2007년도 보훈기금운용계획안에서 국가유공자와 체대군인 그리고 5.18 민주유공자와 특수임무수행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부사업 규모는 2007년도 총 지출액의 51.3%에 해당하는 1,593억 4,400만원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은 기금의 절대규모가 적은 이유로 대부신청자의 일부만 혜택을 받고 있고, 그나마 대부액수가 미미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

- 향후 이차보전 방식의 도입으로 국가보훈처의 대부사업을 전부 혹은 일부를 민간에 이양하고, 이를 통해 기존의 대부업무 종사 직원들은 새로운 보훈행정수요에 재배치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임.
 - 현행 국가보훈처의 대부업무 추진방식은 전국 25개 보훈(지)청에서 152명의 공무원들이 연간 63억원의 운영비를 들여서 추진 됨.
 - 대부업무 추진방식은 우선 거동이 불편한 보훈가족이 원거리 보훈관서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따르고, 신용 및 담보평가, 신용불량자 확인 등 금융권간 공조에 의한 대부 및 채권관리가 어려우며, 대부신청 또한 연중실시되지 않고 연 1~2회 일괄신청을 해야 하는 등 대부업무수행의 비합리성과 비효율성이 초래되고 있음.

III. 남북협력기금

1.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2007년도 조달 및 운용 계획안은 1조 8,364억원(남북협력계정: 1조 1,855억원, 경수로계정: 6,509억원)으로서, 2006년도의 2조 4,791억원(남북협력계정: 1조 2,289억원, 경수로계정: 1조 2,502억원)보다 25.9% 감소되었음([표 1] 참조).
 - 기금의 조달에 있어서 2006년도와 비교하여 2007년도에는 남북협력계정 및 경수로계정이 모두 감소하였음.
 - 남북협력계정은 2006년도에 비해 3.5% 감소한 1조 1,854억 9,200만원이 조달될 계획임.
 - 경수로 계정에서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이 2006년도 1조 1,808억원에서 55.8% 줄어든 5,215억 9,100만원 수준임. 이는 경수로사업 청산 등 후속조치로 인한 경수로사업 대출은 종료됐으나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대한 원리금상환은 여전히 필요하기 때문임.
 - 기금의 운용 측면에 있어서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원리금 상환이 9,263억 600만원에서 28.4% 줄어든 6,633억 8,400만원임.

2. 사업 분석

가. 남북경협사업

- 북한의 핵실험의 여파는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 기반시설건설사업지원 등 개성공단사업에 2,125억원, 금강산체험학습에 30억 5,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

[표 1] 남북협력기금 조달 및 운용

(단위: 백만원, %)

	2006 계획		2007 계획안		전년대비		
	금액(A)	비율	금액(B)	비율	증가액(B-A)	증가율	
조달	정부출연금	650,000	26.3	650,000	35.4	-	-
	재산수입	11,223	0.4	15,939	0.9	4,716	42.0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1,596,500	64.4	681,920	37.1	-914,580	-57.3
	공공기금예탁금 원금회수	-	-	60,000	3.3	60,000	순증
	운용수익(예탁금 및 예치금 이자수입)	3,600	0.1	2,528	0.1	-1,072	-29.8
	경상이전수입	1	-	100	-	99	9,900.0
	정부예금회수	205,864	8.3	407,743	22.2	201,879	98.1
	용자원금회수	11,800	0.5	18,000	1.0	6,200	52.5
	재화 및 용역판매	152	-	211	-	59	38.8
	합 계	2,479,140	100.0	1,836,441	100.0	-642,699	-25.9
운용	기금관리비	1,908	-	1,939	0.1	31	1.6
	인적왕래지원	6,000	0.2	6,000	0.3	-	-
	사회문화교류지원	11,500	0.5	11,500	0.6	-	-
	교역경협손실보조	4,600	0.2	10,000	0.5	5,400	117.4
	금융기관지원 (청산결제)	2,500	0.1	1,375	-	-1,125	-45.0
	이산가족교류지원	20,600	0.8	42,100	2.3	21,500	104.4
	인도적지원	307,800	12.4	250,940	13.8	-56,860	-18.5
	경제협력기반조성사업	476,900	19.2	254,388	13.9	-222,512	-46.7
	교역경협사업대출	71,000	2.9	82,200	4.5	11,200	15.8
	민족공동체회복 지원자금대출	167,200	6.7	291,900	15.9	124,700	74.6
	경수로사업대출	204,119	8.3	-	-	-204,119	순감
	공공자금관리기금 원리금상환	926,306	37.5	663,384	36.1	-262,922	-28.4
	여유자금운용	278,707	11.2	220,715	12.0	-57,992	-20.8
합 계	2,479,140	100.0	1,836,441	100.0	-642,699	-25.9	

자료: 통일부, 「2007년도 남북협력기금운용계획안」.

-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지속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 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의 대북제재수위와 북한의 6자 회담복귀 등 남·북관계를 고려하여 국회의 기금심의과정에서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나. 경수로사업대출에 대한 원리금상환

- 경수로사업이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에 대한 대출금 원리금상환을 국채발행을 통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에 의존하고 있으며, 원리금상환을 위해 발행된 국채에 대하여 다시 차환발행을 통해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음.
 - 문제는 국가채무의 관리여부가 아니라 이미 폐기된 사업으로 인해 국가 예산이 낭비될 소지가 있다는 점에 있음. 즉, 소멸사업에 대한 대출금 상환이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을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남북교류협력사업에 투자할 기회를 구축(crowd-out)시킬 수 있는 것임.

-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어렵더라도 중장기적으로 경수로사업 대출에 대한 원리금상환을 어떻게 소멸시킬지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임.

IV. 국제교류기금

1.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2007년도 조달 및 운용 계획안은 1,006억 3,700만원으로서 2006년도 987억 9,000만원 대비 1.9% 증가되었음([표 1] 참조).

[표 1] 국제교류기금의 조달 및 운용

(단위: 백만원, %)

		2006 계획		2007 계획안		전년대비	
		금 액 (A)	비 율	금 액 (B)	비 율	증가액 (B-A)	증가율
조 달	법정부담금	37,800	38.3	41,542	41.3	3,742	9.9
	재산수입	14,900	15.1	14,045	14.0	-855	-5.7
	재화 및 용역판매	1,090	1.1	50	0.0	-1,040	-95.4
	여유자금회수	45,000	45.5	45,000	44.7	-	-
	합 계	98,790	100.0	100,637	100.0	1,847	1.9
운 용	기금관리	5,687	5.8	5,839	5.8	152	2.7
	사업운영	2,002	2.0	1,513	1.5	-489	-24.4
	해외한국학진흥	14,097	14.3	13,392	13.3	-705	-5.0
	인적교류	3,276	3.3	3,588	3.6	312	9.5
	문화교류	5,208	5.3	4,948	4.9	-260	-5.0
	출판자료지원	3,587	3.6	3,407	3.4	-180	-5.0
	재외동포교류지원	15,600	15.8	25,080	24.9	9,480	60.8
	여유자금운용	49,333	49.9	42,870	42.6	-6,463	-13.1
합 계	98,790	100.0	100,637	100.0	1,847	1.9	

자료: 한국국제교류재단, 「2007년도 국제교류기금운용계획안」.

2. 사업 분석

- 국제교류기금의 주 수입원인 국제교류기여금은 당초 설치의 취지가 한국학 연구 및 한국문화의 해외 전파와 국제교류협력증진을 주 목적으로 여권발급 비용의 일부¹⁾를 국민으로부터 징수하는 부담금이므로 재외동포재단에 대한 지원은 비록 「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 명시되어 있더라도 이와 같은 부담금의 부과 목적에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음.²⁾

- 국제교류기여금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재화 및 용역의 판매 등 기타수입의 확대에도 노력하는 등 경영개선을 통해 수익을 증대시키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국제교류기금은 기금 적립금에 충분한 여유가 있어 단기간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기금이 부실화될 우려는 없지만 향후 정부가 재외동포재단에 대한 지원을 국제교류기금에 지속적으로 의존하고 해외한국학연구진흥 및 국제교류협력증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경우 기금 적립금의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중장기적으로 국제교류기금에 부담을 주는 재외동포재단에 대한 지원과 해외한국학진흥 및 국제교류증진사업의 상대적 위축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외교통상부와의 협의를 거쳐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임.

1) 「한국국제교류재단법시행령」 제5조제1항에 의거하여, 일반복수여권 발급비용(45,000원)중 발급수수료 3만원을 제외하고 유효기간 10년 여권의 경우 15,000원, 유효기간 5년 여권의 경우 12,000원을 징수할 수 있으며 단수여권의 경우 5,000원, 여행증명서 발급의 경우 2,000원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국제교류기금의 재외동포재단에 대한 지원이 관련법상 문제가 없고, 재외동포교류지원도 한국문화의 해외전파라는 취지에 어긋나지 않으므로 국제교류기여금을 동 재단에 지원하는 것은 부담금의 부과 목적에 타당하다는 의견임.

V. 청소년육성기금

1.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2007년도 청소년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의 조달 및 운용규모는 2,063억 8,100만원으로써 2006년도의 2,298억 7,100만원 보다 10.2% 감소하였음([표 1]참조).

[표 1] 청소년육성기금 조달 및 운용

(단위: 백만원, %)

		2006계획		2007 계획안		전년대비	
		금 액(A)	비율	금액(B)	비율	증감(B-A)	증가율
조 달	자체수입	28,761	12.5	25,071	12.1	-3,690	-12.8
	융자원금회수	4,600	2.0	5,500	2.7	900	19.6
	기타수입	24,161	10.5	19,571	9.5	-4,590	-19.0
	정부내부수입	6,750	2.9	15,810	7.7	9,060	134
	공공자금관리기금	6,750	2.9	15,810	7.7	9,060	134
	차입금	-	-	-	-	-	-
	여유자금 회수	194,360	84.6	165,500	80.2	-28,860	-14.8
	합 계	229,871	100	206,381	100	-23,490	-10.2
운 용	사업비	71,780	31.2	78,464	38.0	6,684	9.3
	경상지출	67,280	29.3	74,964	36.3	7,684	11.4
	융자지출	4,500	2.0	3,500	1.7	-1,000	22.2
	기금운영비	447	0.2	70	0.03	-377	-84.3
	기금관리비	142	0.06	70	0.03	-72	-50.7
	사업운영비	305	0.13	-	-	-305	-100
	정부내부지출	50,000	21.8	-	-	-50,000	-100
	공공자금관리기금	50,000	21.8	-	-	-50,000	-100
	여유자금운용	107,644	46.8	127,847	61.9	20,203	18.8
	합 계	229,871	100	206,381	100	-23,490	-10.2

자료: 국가청소년위원회,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2006. 10.

2. 사업 분석

가. 국가청소년위원회 일반회계와 청소년육성기금 사업의 명확화

□ 최근 몇 년간 일반회계와 기금 사업 간에 특별히 구분되지 않고 차이도 크게 없어 보이는 사업이지만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환되는 사업이 증가하고 있음.

- 2005년에는 64억 4,100만원이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환되었고 2006년에는 140억 5,000만원이 전환되었으며 2007년에도 기금사업비 증가액의 12.2%인 8억 1,600만원이 기금으로 전환될 예정임.
- 기존의 예산사업을 기금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은 국가 가용재원의 칸막이화 등 재정운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특히 청소년육성기금의 사업비를 증가시켜서 주요 수입원인 경륜사업수익 법정출연금의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금운용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일단 기금사업이 되면 다시 일반회계 사업으로 변경되지 않는 관행도 탈피하여 상호간에 융통성있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임.

나. 청소년육성기금 조성액 감소추세에 따른 대처방안 필요

□ 기금 사용액은 매년 급증하고 있으나 외부 전입재원은 급감하고 있어 조성액 규모가 2005년을 정점으로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실정임.

- 청소년 푸른성장사업의 안정적 지원을 위한 신규재원 발굴 등 청소년육성기금의 재원확충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중기 기금운용계획상 2007년부터 2010까지 청소년육성기금 사용액은 연평균 8.2%의 증가율로 증가하도록 되어 있음.

- 청소년육성기금의 유일한 수입재원인 경륜사업수의 법정출연금은 로또 복권 등의 활황과 사행산업 침체 등으로 매출액의 급격한 감소에 따라 대폭적으로 축소되고 있음.
 - 법정출연금이 2003년 708억원을 최고점으로 2005년에 246억원이었고, 2006년에는 161억원, 2007년에는 92억원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됨.
- 기금수입의 규모가 감소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는 청소년육성기금사업을 계속 증액시키고 있는 바, 2007년에는 2006년 대비 기금 사업비를 9.3% 증액시킨 784억 6,4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또한 2007년에 27억 3,300만원의 기금사업을 신규로 계상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기금 수입규모가 감소되는 현실에서 기금사업의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고 국고에서 기금으로 전환하는 사업도 부담 증가의 요인이 되므로 보다 엄격한 기준 하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분석

— 요약 —

발 간 일 2006년 11월 6일
편 집 예산분석실 경제예산분석팀
발 행 인 배철호
발 행 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9
TEL 02·2070·3114
인 쇄 처 성지문화사 (TEL 02·2273·5090)

1. 이 보고서의 무단 복제 및 전제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2. 보고서의 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회예산정책처 경제예산분석팀 (TEL 02·788·3769)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ISBN 89-6073-004-1 93350

© 국회예산정책처, 2006